

2004 연구보고서 210-11

제17대 총선에서의 여성후보 선거과정과 향후 과제

연구책임자 : 김 원 흥 (본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김 은 경 (본원 연구원)

발 간 사

우리는 거대한 세계화의 물결속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15일은 제17차 총선 날이었습니다. 여성계는 금번 총선을 맞아 연대하여 우리나라도 21세기의 지식정보화사회를 맞아 모든 정책에 여성의 시각이 반영되고, 국가발전을 위하여 여성의원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기본인식하에 정치관계법 개정 및 여성후보발굴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써 주요 정당들은 국회의원 비례대표제에 여성후보 50%이상 공천하였고, 과거에 비해 지역구에도 여성후보를 많이 공천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여성국회의원 비율이 13%로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정치관계법 개정을 통하여 정당내 여성정치발전기금이 설치된 것도 여성계의 하나의 성과입니다.

단지 아쉬운 점은 정당법에 지역구 30% 여성공천할당제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들은 후보공천에 경선제를 도입하여 여성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이 획기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총선에서의 여성후보의 선거운동과정도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본원에서는 2004년 4월 실시된 제17대 총선에서의 여성후보의 선거과정과 향후 과제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여, 참여관찰을 통하여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실효성 확보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연구보고서가 정당, 정부 관계자, 연구자 및 여성계에 널리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해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참여관찰을 위해 협조해주신 여성후보님들과 조사에 응해주신 정당내 당직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연구에 조사에 참여해주신 참여관찰자들과 조사분석에 심혈을 기울인 본원 연구진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 12월

한 국 여 성 개 발 원
원 장 서 명 선

연구요약

I. 연구개요

■ 본 연구의 목적은 2004년 4월 15일 실시된 제17대 총선과 관련하여, 정당법에 지역구 30% 여성공천할당제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들은 후보공천에 경선제를 도입하여 여성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도 획기적으로 개정되어 지역구 여성후보의 선거운동과정도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앞으로도 여성의 정치참여가 확대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후보의 경선과정과 본선과정에서의 선거운동방법에 대하여 참여관찰 조사를 실시하였다. 참여관찰조사는 구조화된 check-list 작성을 통한 여성후보의 사례별 경선과정 및 선거운동과정을 관찰하였다. 조사대상자는 경선과정에서 5명, 본선과정에서 8명으로 총 13명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선거과정에서의 여성후보 실효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였다.

■ 첫째, 여성후보의 경선과정에 관한 check-list로는 ① 지역의 사회·정치·경제적 환경, ② 후보자의 개인적 특성, ③ 경선방식과 해당 지역구의 경선 진행과정, ④ 후보자의 선거조직과 선거전략, ⑤ 여성후보의 승패 요인과 선거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둘째, 여성후보의 본선 선거과정에 관한 check-list로는 ① 지역의 정치·경제·사회적 환경, ② 후보자의 입후보 과정, ③ 후보자의 선거조직, 선거자금, 선거유세방법, 인터넷 활용 및 지역방송을 통한 후보자 토론과정, 선거전략, 선거감시 및 계도활동, ④ 선거결과 및 향후 과제를 포함하였다. 본 조사의 결과는 앞으로 당내 민주화의 요구와 관련하여 경선제의 실시는 증가될 전망이고, 정치관계법의 개정에 따른 본선에서의 여성후보들의 선거운동과정을 살펴보고, 진단하여, 향후 발전방안을 도출해냄으로

서 기초자료 및 정책대안을 마련할 것이다. 아래에서 주요 조사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결과

1. 경선 사례

가. 여성후보자의 경선참여 관찰 사례의 유형

■ 17대 총선을 맞아 주요 정당들은 당내 민주화의 일환으로 경선제를 실시하였다. 당시, 경선제의 방식으로는 “당원과 국민이 참여하는 소위 국민참여 경선”, “유권자 여론조사”와 “진성 당원을 통한 경선” 등이 있었다. 2004년 3월 22일 현재 주요정당의 경선제 실시 현황은, 열린우리당이 공천한 229개 지역중 86개(37.6%), 한나라당이 공천한 228개 지역중 15개(6.6%), 민주당이 공천한 217개 지역중 73개(33.6%) 였다.

■ 여성후보가 경선을 거친 상황은 다음과 같다. 열린우리당의 22명의 여성후보 신청자 중 7명(김선미(경기 안성), 송미화(서울 은평 을), 김은경(서울 노원), 박영자, 김윤덕(전북 전주 완산), 김수진(서울 강남 을), 류정숙(충남 당진), 이윤정(광주 동구)이었고, 경선통과자는 2명(김선미, 송미화)에 불과하였다. 한나라당의 경우 27명의 여성후보자중 경선지역이 2명(김정숙(경기 안양 동안 갑), 서정희(울산 남구))에 불과했는데, 경선을 통과한 여성후보는 없었다. 새천년민주당의 경우 공천을 신청한 19명중에 3명이 여론조사방식에 의한 경선을 실시하였는데, 양경숙(종로구), 원미정(인천 중구·동구·옹진), 김완자(전북 전주 완산) 3후보 중 원미정, 김완자 2사람이 경선을 통과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경선 특성별로 여성후보 5명의 경선사례를 살펴보았다. 경선사례로는 국민참여경선방식을 거친 열린우리당의 송미화 후보(서울 은평 을), 김선미 후보(경기 안성), 김은경 후보(서울 노원 을), 한나라당의 김정숙 후보(안양 동안 갑), 유권자 여론조사 방식을 거친 민주당의 김완자 후보(전주 완산 을) 등이다. 이들 후보들의 경선 및 본선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송미화 후보는 경선에서는 승리하였으나, 본선에서 낙선하였다. 김선미 후보는 경선과 본선에서 모두 승리하였다. 김은경 후보와 김정숙 후보는 경선에서 낙선하였다. 김완자 후보는 경선에서는 승리

하였으나, 본선에서 낙선하였다.

나. 여성후보자의 개인적 특성

■ 여성후보의 출생지와 학력, 사회·정치활동 경력, 선거경험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열린우리당의 송미화 후보, 김선미 후보, 김은경 후보와 민주당의 김완자 후보는 석사, 김정숙 후보는 교육학박사로 학력이 높은 편이었다. 이번 경선에 출마한 후보의 지역이 출생지인 사람은 송미화 후보(은평), 김은경 후보(서울), 김완자 후보(전주) 3사람이다. 나머지 2사람은 남편이 생활하는 지역에 출마한 경우로, 후보들의 지역구와 연고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후보의 사회적 경력은 언론인, 교수, 여성단체 임원, 지방의회 의원, 국회의원 등 다양했다. 이들 후보 중 송미화 후보, 김은경 후보, 김완자 후보의 경우 전직 광역의회 의원을 지낸 지역구 선거 운동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다. 김선미 후보는 26대 경기 안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한 경험이 있다. 김정숙 후보는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3선의원 출신으로 13대 때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모두 지역구 선거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다. 주민 호응도 및 인지도

■ 경선에 참여한 여성후보의 주민의 호응도 및 인지도에 대하여 참여관찰자들의 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은평 을에 출마한 열린우리당의 송미화 후보는 정치적 순수성, 정치, 행정경험, 서울시 의원을 경험하면서 지역정치활동 경험이 오래되어 가장 높은 인지도 확보가 되어 있었다고 참여관찰자는 평가하고 있다. 노원 을의 열린우리당 김은경 후보 또한 여성운동가로서 지방의회 의원의 경험자로서 정치적 순수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시의원 및 다양한 지역활동을 통해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참여관찰자는 평가하고 있다. 경기 안성의 열린우리당 김선미 후보는 16대 국회의원 남편 고 심규섭 의원을 대신해 지난 2002년 보궐선거에 출마했으나 현 국회의원 이해구 의원에 3000여표 차이로 패배하였다. 경선당시 고 심규섭 의원 미망인으로 남편의 후광을 받는다는 시각이 부정적인 인

식으로 작용할 수도 있었고, 인지도에서는 앞서나 조직 면에서는 취약한 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선에서 승리하였다는 평을 하고 있다. 전주 완산 을의 새천년민주당 김완자 후보의 경우 지역에서 여성정치발전연구소를 운영하는 등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왕성한 사회활동과 함께 오랜 기간 지역 정치활동의 경험을 토대로 지역의 현장정치에 강하다는 평을 하고 있다. 안양 동안 을에 출마한 한나라당 김정숙 후보의 경우 3선 의원 출신으로 전국적 인물로 국회 내에서 교육정책을 담당했으므로 교육전문가 평가를 받고 있었다. 김정숙 후보의 경우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한 달 전에서야 지역구 활동을 시작하여, 눈에 띄는 활동이 전무한 상태로 경선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라. 선거운동과정

■ 경선에 참여한 여성후보들의 선거운동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방의회 경력이 있는 송미화 후보, 김은경 후보, 김완자 후보의 선거캠프의 조직은 10-15명 내외의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었는데, 대체적으로 조직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경험이 있었던 김선미 후보와 13대 국회의 선거경험이 있었던 김정숙 후보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김정숙 후보는 지역구가 분구되면서, 갑자기 경선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조직을 마련할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여성후보들의 조직이 보편적으로 취약한 것을 볼 수 있었다.

■ 경선자금과 관련하여 여성후보들은 경선거탁금 700만원-2000만원까지 지출하였는데, 사무실 운영경비로는 200만원-500만원까지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선을 치를 경우 2중 부담을 지니고 있었는데 경선의 경우 후원회 운영이 안되는 상태에서 대체로 여성후보들은 부담을 지니고 있었다.

■ 선거전략에 있어 여성후보들은 정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여성의 참신성과 깨끗함을 통한 정치개혁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후보들은 자신의 홍보를 위하여 김은경 후보이외 인터넷 활용이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여성후보들은 자금이나 조직이 취약해 보였다.

마. 선거결과와 당락요인

1) 선거결과

■ 사례대상 여성후보들의 선거결과를 살펴보면, 열린우리당의 경우 전자투표방식의 선호투표를 하여 결정되었는데, 송미화 후보의 경우 2차 투표를 통하여, 당선되었고, 김은경 후보는 2차 투표에서 3등을 차지하여 패하였다. 김선미 후보는 1차 투표에서 상대 후보를 많은 표차를 내고 승리를 거두었는데, 김선미 후보의 경우 여성후보에게 주어진 가산점 20% 없이도 상대후보였던 홍석완 후보에 비하여 월등 이겼다. 김정숙 후보는 정진섭 후보에게 패하였고, 김완자 후보는 중앙당 여론조사방법 경선을 통하여 4명의 후보 중 1위 하였다.

2) 당선요인

■ 은평 을의 송미화 후보(열린우리당)의 당선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론적 배경에서 경선제도와 현직효과에 대해 언급하였듯이 송미화 후보의 경우 은평구에 40여 년간 지역에 살면서 활동한 시민운동 및 시의원 경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16대 국회가 부정부패의 이미지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참신한 여성정치의 필요성을 부각한 홍보 및 이미지 전략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40-70대까지 과거 선거운동 경험이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역량과 남편의 적극적인 지원이 당선으로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 경기 안성의 김선미 후보(열린우리당)의 당선요인으로는 열린우리당이

처음으로 실시한 경선이었는데, 상향식 공천제도인 국민참여형 경선제도에서 김선미 후보의 차별화 전략인 ‘말하는 정치보다 듣는 정치’/ ‘때묻지 않은 정치신인’의 이미지를 부각시킨 것이 크게 당선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다. 그리고, 2002년 보궐선거 이후부터 꾸준히 닦아온 인지도, 조직력, 정치참여능력 획득과 함께 16대 국회의원 남편의 돌연사로 인해 ‘미망인’이라는 동정심 유발과 ‘안성택’이라는 지역의 보수적인 정서에 호소남편의 지역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기회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 본 사례에서 조사한 후보중 경선을 통해 본선에서 당선된 사례는 김선미 후보의 경우인데, 모종린·전용주의 연구(2004)에서 나타난 비현직 후보가 경선을 거쳐 본선에 출마할 경우 후보 자신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는 이점을 충분히 살린 사례이다.

■ 전주 완산 을의 김완자 후보(민주당)의 당선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새천년민주당의 여론조사방식으로 학연이나 지연 등 조직이 약한 여성후보에게 불리했던 기존의 대의원제가 없어져 전화여론조사 경선방식을 채택한 것이 여성으로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그리고 광역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평소에 언론을 통하여 지역에서 지속적인 활동 및 인터뷰를 통해 인지도를 많이 높였고, 교육운동가(참교육학부모회의 전국회장)의 이미지 등이 부각되어 타 후보와의 차별화를 시킨 것이 당선된 요인으로 보인다, 그리고 여성이라는 참신한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가족 특히 남편(전북공업대 기계공학과 교수)의 적극적인 협조도 일조를 했다.

3) 낙선요인

■ 노원 을의 김은경 후보(열린우리당)의 낙선요인이다. 김은경 후보의 경우도 기존 선거구의 분구로 일부지역에만 연고가 있는 후보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더욱이, 김은경 후보는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촉박하여 선거운동조직의 구성에 실패한 것이 낙선의 중요변수로 작용하였다. 아울러, 선거가 주말 토요일 저녁에 실시/선거실시 2일 전 대통령탄핵사태로 많은 선거인단이 기권함으로서 조직선거의 승리를 부추기는 결과 초래 2~30대보다는 5~60대에 집중된 유권자들의 연령분포의 영향도 있었다.

■ 안양 동안 갑의 김정숙 후보(한나라당)의 낙선요인이다. 김정숙 의원은 전국구 3선 국회의원으로 지명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구의 분리·통합에 따라 16대 국회의원 심재철과의 대결을 피하기 위해 안양 동안 갑 지역구를 선택했으나 여기서 8년 간 활동한 정진섭 지구당위원장에게 패배하였다. 즉, 안양 동안 갑이 분구된 지역으로 정치적 기반이 미약하였고, 후보 차별화 전략에 실패하였던 점이 낙선의 중요 요인으로 작용

하였다.

바. 여성후보 선거운동의 시사점 및 개선방안

■ 선거인단 구성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17대 총선의 경선에 있어 주요 정당들의 선거인단 구성에 있어서의 기준은 성과 나이(40대 전후)였다. 20대와 30대는 재택비율이 낮으므로, 이 나이층의 응답자 확보에 힘이 많이 들었을 것이다. 성과 나이를 고려했고, 그 외에는 무작위성이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겠지만 그것은 순진한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확보된 선거인단의 대표성이 일그러졌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를 검토하는 아무런 장치가 없었고, 대책이 없었다. 예컨대, 경선 대부분의 경우가 그랬지만, 본 연구와 관련하여 안양 동안 갑 선거구의 선거인단 구성의 예를 살펴보자. 한나라당 중앙당에서 한국통신의 전화번호부 CD를 통해 한나라당 지지자를 추출하여 이 중 전화번호부에 이름이 기재된 당사자가 투표를 해야 했다. 선거인단 구성에 있어서 문제점은 일반적으로 전화번호부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이 세대주의 이름인 경우가 많으며 세대주는 40대 이상이 많으므로 연령별 대표성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중앙당에서 지정한 선거인단도 있었는데 이 또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된다. 단적인 예로 안양 동안 갑 선거구의 선거인단 구성에 있어서 심재철 의원 지지자 429명과 정진섭 의원 지지자 800명, 김정숙 의원 지지자 70명을 모두 합쳐 1,300여 명 중 200명을 선발한 것이다. 이 당원 중 정진섭 의원 지지자와 김정숙 의원 지지자의 비율이 11:1이 넘기 때문에 선거인단 구성에 있어 특정 후보 지지층이 많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 경선의 경우 선거운동기간이 너무 짧고, 후보를 알릴 방법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번 경선제를 통하여 정당과 관계없이 경선에 참여한 여성후보의 경우 선거운동기간이 3일정도 밖에 되지 않고, 본선의 선거운동

방법과는 달리 마스크를 활용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 후보를 알리는데 어려움이 컸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경선거간의 법제화와 다양한 방식을 통한 선거운동방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 후보자의 개인적인 조직력이나 지명도 등의 자격과 관련하여 판세와 당락에 영향력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실제, 김선미 후보의 경우 이미 16대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지명도를 확보하고, 남편의 후광이 작동하여 경선에서 쉽게 이길 수 있었다. 송미화 후보의 경우 지역토박이로서 시의원으로서 활동하여 주민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여성들 중에서 정치에 관심이 있는 경우 평소부터 지역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선제도는 지역내 인재가 당선되는데 유리하게 작용함으로써 지역의 현안에 대해 가장 잘 파악하는 인물이 지역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할 수 있다.

■ 여성후보에게 있어서 경선자금 700-2000여만 원을 마련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므로 일부 여성 후보는 경선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사퇴한 경우도 있었다. 향후 정당내 여성정치발전기금으로 보전하는 방안의 마련이 요구된다.

■ 후보진영간 경선실시 방법, 선거인단 구성 등에 있어서 후보 진영간 갈등을 야기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경선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선관위 및 선거인단 구성의 공정성 및 민주성이라고 여겨진다. 물론 민주노동당의 경우 당권만 있으면 누구나 후보가 되고 투표할 수 있다면 가장 공정하고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향식 밀실 공천의 관행에서 서서히 변화하고 있는 거대 정당의 경우 선관위의 공정한 구성과 운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 이번 경선의 투표방법과 관련하여 사례연구에서 열린우리당은 국민참여경선에서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방법을 통한 선거결과를 가지고 왔고, 새천년민주당은 여론조사방법을 통하여 후보를 선출하였는데, 선거인단의 참여가 제한적이었다. 그런데, 민노당의 경우 인터넷 투표와 우편투표를 통하여 유권자의 투표권을 확대하였다. 향후 선거인단의 투표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투표방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2. 본선 사례

가. 본선출마 여성후보자의 관찰 사례의 유형

■ 이번 17대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한 여성후보 66명 가운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여성후보의 출마특성을 고려하여 8명에 대해 참여관찰 방법을 통해 선거운동과정을 분석하였다. 참여관찰 사례의 선정기준은 지역구에 출마한 경험의 유무, 당선과 낙선, 정당별 안배를 고려하였고, 지역구 출마 경험에 대해서는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하여 초선도전과 재선도전으로 구분하였다. 본 조사에서 살펴본 8명의 사례 가운데 정당별 분포를 보면, 열린우리당 3명, 한나라당 2명, 민주당 2명, 민주노동당 1명이며, 당선사례와 낙선사례가 각각 4명으로 구분되었다.

■ 그밖에 초선여부, 선거경험의 유무, 비례대표의원의 경력이 있는가의 여부, 지역구의원으로 재선에 도전하는 경우 등의 기준이 적용되어, 본 조사의 사례유형은 첫째, 선거경험이 없으면서 초선에 도전한 경우로 이해훈(서초갑, 한나라당), 이선희(종로, 민주노동당)후보, 둘째, 지방의원 출신으로 총선에 처음 도전한 경우로 송미화(은평 을, 열린우리당), 원미정(인천 중구·동구·옹진군, 민주당)후보, 셋째, 비례대표의원으로서 총선에 처음 도전한 경우로 한명숙(일산 갑, 열린우리당)후보, 박금자(영등포 을, 민주당)후보, 넷째, 지역구의원으로서 해당 지역구에 재선으로 도전하는 경우로, 김희선(동대문 갑, 열린우리당)후보, 전재희(광명 을, 한나라당)후

보의 네 가지이다. 지방의원 출신의 경우에만 당선사례가 없이 나머지 세 유형에는 당선사례가 있었으며, 네 번째 유형인 지역구의원으로서 재선도전의 경우는 두 사례 모두 당선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나. 본선사례 여성후보자의 개인적 특성

■ 조사대상 여성후보의 개인적 특성 중 먼저 학력을 보면, 8명의 후보 중 대학졸업 이상이 4명, 대학원졸업 이상이 3명으로 후보자의 학력이 매우 높았다. 정치활동 경력을 보면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는 후보는 지방의원 출신의 2명,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지낸 후보가 2명, 현역 지역구의원 이 2명이었고, 선거경험이 없이 출마한 후보는 2명이었다.

■ 이해훈 후보는 경제학 박사, 이선희 후보는 민주노동당 여성위원장, 송미화 후보는 서울시의원을 지냈고, 원미정후보는 노동운동 출신으로 노동조합위원장, 인천시의원을 재임한 경력이 있으며, 한명숙 후보는 한국여성운동의 선구자로서 여성학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여성부장관, 환경부장관 등의 정치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박금자후보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인지도를 높여왔으며, 16대 국회말기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냈고, 김희선 후보는 한국여성의 전화 초대원장, 민주쟁취국민운동 서울본부 상임의장 등 민주화운동 인사이며, 전재희 후보는 여성최초 민선시장을 지냈으며, 시장을 지낸 광명시에서 16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였다.

다. 입후보 과정 및 주민 호응도

■ 이해훈 후보는 경선 없이 당내 심사위원회에서 9:1의 압도적 지지로 공천을 받았다. 서초갑 지역구내 정서는 내수경제 침체기에 있어 국제적 경제전문가라는 점, 참신하고 능력있는 여성정치 신인이라는 점, 그리고 탄핵에 대한 책임이 비교적 적은 정치신인이라는 점 등에서 한나라당 지지자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었다. 이선희 후보는 경선제를 통해 지역구 후보

자로 공천되었다. 종로구는 젊음의 거리 대학로와 몇 개의 대학이 있지만, 실제 거주 주민은 중장년층이 많으며, 정치적으로는 매우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지역이다. 이선희 후보에 대한 주민의 반응은 긍정적이고 좋은 편이나, 많은 관심을 갖고 크게 지지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송미화 후보는 본 연구의 경선사례조사 대상자에 포함된 후보로,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본선에 출마하였다. 주민들의 송미화 후보에 대한 평판은 지역토박이로서 서울시 의원 활동의 경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 원미정 후보는 ICN 인천방송을 통한 여론조사에서 1위 득표를 하면서 후보로 선출되었다. 깨끗하고 젊으며 서민의 입장에 선 정치가라는 이미지가 강하며, 일부 유권자들은 탄핵정국 이후에도 당을 옮기지 않은 의리 있는 여성으로 평가하고 있다. 민주당보다는 민노당의 성격이 강한 후보로 인식되고 있다.

■ 한명숙 후보는 공천이 비교적 늦게 확정된 편이었으나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점과 장관을 역임한 경험 등으로 포괄적인 선거조직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일산 갑의 분위기는 16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의 여성후보인 오양순 후보도 선전하는 등 여성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지역구이다. 초반에 한나라당 홍사덕 후보에 비해 인지도가 떨어졌지만, 기존 남성 국회의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여성 후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특히 여성 유권자들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았다.

■ 박금자 후보는 당내 공천심사를 통해 후보로 등록하게 되었다. 박금자 후보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여성, 주부 및 노령자층에서 인지도가 높았다. 따라서 비교적 서민층에서는 인지도가 낮았으며, 탄핵정국으로 박금자후보의 소속정당인 민주당에 대한 거부감이 만연해 있는 상태였다. 김희선 후보는 동대문 갑 지역구의 16대 현역 국회의원이

라는 프리미엄과 16대 회기 중 명성과 청렴한 이미지가 높이 평가된 가운데 단수공천으로 후보로 지정되었다. 전재희 후보도 마찬가지로 단독 후보였던 관계로 공식 경선 없이 총선에 입후보하게 되었다. 전재희 후보는 94년 관선 시장으로 처음 광명과 인연을 맺은 이후에 민선 시장, 지역구 의원을 두루 거치면서 청렴결백한 성품과 남다른 열성적 시정 활동으로 지역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신망을 받고 있는 분위기였다.

라. 후보자 이미지 및 선거전략

■ 선거운동 전략 두 번째는 후보자의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고 인지도를 높이는 과정이다. 본 조사의 사례 8명 후보 가운데는 후보자의 인지도에 있어서 선거전부터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고, 후보자의 이미지 홍보 전략에서도 선거의 경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 한나라당의 ‘여성 기획공천 1호’인 이해훈 후보는 인물론으로 탄핵역풍을 정면돌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후보는 경제전문가로서의 자질을 부각시키는 한편 “경제전문가가 원내에 진출해야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어진다”는 논리를 폈다. 결국 경제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의 이미지, 여성으로서의 참신성과 청렴한 이미지, 그리고 신인 정치인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주력하였다.

■ 이선희 후보와 민노당의 선거전략은 민노당의 지지율을 높이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 민노당은 전국구 비례대표를 통해 10여명의 의원을 국회에 진출시킨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보정치 뿌리내리기, 민노당 알림 등이 목표였으며, 따라서 선거전략은 특별한 것이 없었고, 직접 발로 뛰면서 서민과 직접 접촉하였다.

■ 송미화 후보는 탄핵정국의 상황에서 열린우리당의 지지율 상승에 힘입

어 정치개혁에 대한 유권자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유권자가 선호하는 깨끗한 이미지의 정치인이라는데 주력하였다. 후보자의 인지도나 유권자의 후보자 평가에서 상대후보인 한나라당 이재오 후보에게 밀리는 상황에서 인물 중심의 대립구도를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탄핵’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선거 이슈를 이용하여 구태정치 대 개혁정치의 구도를 중심에 놓고, 탄핵 비판, 인물대결, 정책 대결의 순으로 유세를 펼쳤다.

■ 원미정 후보는 인천시의원 경험을 살려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라는 이미지와 깨끗한 여성정치인이라는 점, 그리고 노동자와 서민 등 약자의 대변인이라는 인물론을 내세웠다. 민주당 소속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칙을 지키는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도 부각하려고 한듯하다. 따라서 원미정 후보의 캠페인 주요문구에도 서민의 희망, 여성이 정치참여하면 달라진다는, 원칙과 소신, 생활정치라는 문구들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 한명숙 후보는 비례대표의원과 장관을 역임한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초반부터 인지도를 높이는데 성공하였다. 환경부 장관의 경력으로 교육 및 환경 개선의 책임자임을 강조하였고, 여성후보로서 부드러운 정치를 할 수 있다는 등의 장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탄핵에 대한 심판을 정치개혁으로 호소하며 본인이 깨끗한 정치인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 박금자 후보는 정책 홍보보다는 이미지 부각에 주력하면서 자칭 ‘영등포의 대장금’을 자처하였다. 상대후보는 현역의원으로서 재선에 도전하는 후보였기 때문에, 상대 후보에 대한 차별성을 표현하는데 노력하였다. 박금자 후보는 25년 이상의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이며, 정책전문가이고, 깨끗한 여성후보임을 강조하였다. 1인 2표제에 따라 지지정당과 지역구 후보

를 개별적으로 선택하는 점을 홍보하면서, 지지를 호소하였는데, 탄핵정국에 따른 민주당 지지가 떨어진 상황에서 지역구투표는 인물을 보고 투표해 달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 김희선 후보는 탄핵에 대한 반대를 강조하면서 정치개혁을 강조하였고, 현역의원으로 있으면서 주력하였던 친일청산법과 관련하여 본인이 독립운동가의 자손임과 함께 청렴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여당인 열린우리당에 힘을 실어줘야 정치개혁이 이루어진다는 논리로 유권자에게 호소하였다.

■ 전재희 후보는 광명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빗자루 시장’으로 통했는데, 직접 거리 등을 돌면서 민원을 살피고 실제로 빗자루를 들고 청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 잘하고 부지런한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왔다.

마. 선거운동과정의 조직운영전략

■ 선거운동전략 세 번째 전략으로 선거운동 조직운영에 관한 전략을 살펴본다. 운동조직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당락이 달려있다고 할 정도로 선거운동 조직을 운영하는 일은 선거에서 매우 중요하다. 선거 캠프는 흔히 유급 선거운동원, 자원봉사자, 고문들로 이루어지며, 이들의 역할분담과 조직관리에 따라 선거운동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1) 선거캠프의 조직운영

■ 선거캠프의 운영을 볼 때 대체적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진 후보가 당선되었고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조직적인 운영이 어려운 후보는 낙선하였다. 특히 초선으로 출마하는 후보의 경우 지역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보통 가족이나 개인적 친분에 따른 사조직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혜훈 후보의 경우는 시아버지의 정치인맥을 잘

이용하였고, 시어머니의 인맥과 남편의 제자들을 자원봉사자로 많이 동원할 수 있었다. 전재희 후보의 경우는 광명을 지역에 토박이나 마찬가지로 오랜 정치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시장재임시절부터 알던 단체와 지인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와 도움을 주었고, 남편과 자녀들의 도움도 상당하였다. 또한 한나라당 시의원과의 연계망을 이용하여 시의원의 전폭적인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대부분 당선된 후보들은 이미 자신들의 조직을 갖추고 있으면서, 정당으로부터의 도움도 받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조사된 낙선후보의 사례보다는 훨씬 많은 수의 선거운동원 조직을 활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 낙선했던 사례에 속하는 이선희 후보는 자원봉사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고 지역 내 기반도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거리 유세 등에서 유세차를 운영할 수도 없을 만큼 지원인력이 부족하여, 직접 걸어 다니는 방법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중앙당 차원의 지원유세가 있을 때 합류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송미화 후보의 경우는 선거초반에 인력이 부족하여 선거캠프를 운영하는 것이 어려웠으나 선거중반이후 상대후보와의 접전이 예상되면서 인터넷 등을 통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방문하였다. 박금자 후보의 경우는 지역 내 부녀회 조직을 활용하였고 산부인과 여의사협회 회장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협회관련 인맥의 지원을 받기도 하였다.

2) 선거운동본부의 중앙당 지원 여부

■ 여성후보자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지원여부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 조사에서 사례로 살펴본 후보의 경우 중앙당 지원을 받은 후보는 공천당시에 중앙당에서 경선을 거치지 않는 식의 단독공천을 받도록 지원해준 것이 대부분이었고, 이들 후보들은 모두 당선되었다. 대부분의 경우, 선거과정 중에 중앙당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선거운동방식

■ 여성후보들이 주로 사용한 선거운동 방식은 거리유세, 전화홍보였으며, 지역방송을 통한 후보자 토론회는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방법이 었다. 지역에서 개최되는 합동연설회가 폐지되고, 각 지역의 케이블 방송 을 통해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후보자 홈페이지 구 축, 인터넷카페 등이 운영되었고, 후보자에 따라서 휴대폰을 통한 문자메 세지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부 후보들은 유권자 한사람 한사람을 만나는 맨투맨 유세를 하기도 하였으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한계를 나타낼 수밖에 없었다.

■ 총선 선거경험만이 아니라 기타 선거에 참여한 경험의 유무를 놓고 분 석했을 때, 선거경험 유무의 차이가 선거운동방식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과 일치하는 관계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다만 후보자가 사조직을 포함 하여 지역조직을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 선거결과와 당락요인

1) 선거 결과

■ 선거결과 선거경험이 없는 후보에서 이해훈 후보, 비례대표의원으로는 한명숙 후보, 그리고 지역구 현역의원인 김희선, 전재희 두 후보가 당선되 었다. 지방의원으로서 총선 지역구에 처음 출마한 송미화, 원미정 후보는 모두 낙선하였는데, 송미화 후보의 경우는 열린우리당으로 출마하여 현역 국회의원과 맞서서 선전을 펼쳤으며, 원미정 후보의 경우는 평소의 인지 도에 훨씬 못미친 수준으로 5위에 그쳤다. 비례대표의원으로 지역구에 도 전한 박금자 후보는 현역의원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펼쳤으나 낙선하였다.

2) 당선 요인

■ 이해훈 후보가 출마한 서초갑 지역구는 지역구 특성상 한나라당후보가

당선되는 특성이 있는 지역구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하였고, 탄핵정국에서 정치활동 경험이 없으며 여성이라는 점이 깨끗한 후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와 탄핵에 대한 책임이 기존 정치인에 비해 적었던 점이 당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이 밀집한 지역에서 경제전문가로서의 이미지가 경제침체기 속에서 후보의 주요한 장점으로 부각되었다. 한명숙 후보의 경우 선거 실시 이전부터 인지도가 높았으며, 탄핵정국에서 열린우리당으로 출마하여 정치개혁과 탄핵심판에 대한 의지로 유권자에게 호소하였다. 유권자의 표심은 탄핵에 대한 심판과 여성정치인으로서 장관과 국회의원을 지낸 점과 온화한 이미지가 한명숙 후보에게 당선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김희선 후보는 16대 총선당시 민주당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지역구에서 정당을 열린우리당으로 바꾸어 현역의원으로 출마하였다. 김희선 후보의 당선요인 중 가장 큰 요인은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탄핵저지에 앞장선 인물로서 인지도가 높아진 것과 현역의원이라는 점이다. 선거전 여론조사에서 다른 후보들에 비해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선거사무실 분위기는 매우 여유로웠다. 따라서 정동영 의장 사퇴 등 중앙당 차원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앙당 회의에 참석하였고, 열세지역 후보를 지원하는 등 중앙당의 행사에 다양하게 참석할 수 있었는데, 이런 과정이 TV 등 언론에 보도되면서 후보의 인지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

■ 전재희 후보는 본인이 시장을 지냈고, 또 본인이 현역의원으로 있는 지역구에 출마하면서 상당히 높은 인지도로 선거시작 전부터 당선에 예측된 후보였다. 전재희 후보의 당선요인 중 가장 큰 것은 이 같은 후보자의 정치활동 경력과 인지도이며, 의정활동에서 신뢰성과 청렴성을 두루 갖춘 정치인으로서 주민들 사이의 신망이 매우 두터웠다. 그밖에 오래된 지역구 관리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 가족들의 전폭적인지지 등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3) 낙선 요인

■ 이선희 후보는 종로구라는 지역구의 특성상 민주노동당 후보로 출마하였다는 점이 가장 취약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선희 후보의 공약 유권자층은 재래시장과 대학로등 젊은 유권자층이었는데, 보수적 성향이 강한 지역구에서 당차원의 선거공약외에 지역구에 대한 공약이 부족하였다. 또한 자원봉사의 활용이나, 여성단체나 시민단체의 지원이 부족하였다. 송미화 후보가 출마한 지역구는 3선에 도전하는 한나라당 현역의원이 출마하는 지역구였으며, 지방의원의 경험만을 가지고 있는 신진 정치인으로서 어려운 도전이었다. 그럼에도 탄핵정국 가운데 열린우리당의 지지도가 급상승하면서 박빙의 승부를 벌인 점은 매우 고무적이었다. 그밖에, 인지도가 부족한 신인 정치인이 제약적인 선거법 하에 선거운동을 한 점, 선거지원조직의 역량부족 등이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원미정 후보는 탄핵정국에서 민주당으로 출마하였는데, 일단 민주당이 열세에 몰린 상황에서 불리한 출발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원미정 후보의 낙선요인 중 첫째는 맨투맨 유세의 한계에 있다. 후보자가 직접 유권자를 1대 1로 만나 유세를 펼치는 것은 물론 매우 효과가 높은 유세방법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후보자가 모든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유권자를 만난다는 것을 불가능하다. 원미정 후보는 시의원 선거 시절부터 자신

이 직접 발로 뛰며 유권자 하나하나를 만나는 것을 선호하고 원칙으로 삼아왔지만, 시의원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는 다른 차원이었다. 또한 미디어 선거의 소극적 활용, 비체계적인 선거조직 운영, 공약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선거전략의 부재 등이 부족한 점으로 지적될 수 있었다.

■ 박금자 후보의 선거운동 결과를 볼 때 여성후보로서 지역구를 관리하는 문제가 첫 번째 난관이었다. 돈선거 관행이 여전히 만연하고 있다는 점, 지역구에 처음 출마하는 무경험자로서의 어려움이 크게 작용하였다.

사. 여성후보 선거운동의 시사점 및 개선 방안

■ 여성후보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어려움은 조직의 운영과 조직원 구성이었는데, 중앙당 차원의 지원이라는 것이 본조사의 사례에 따르면 여성후보에 대한 단독 공천을 지원해준 정도로 미미하다. 특히 정당에서 여성후보에 대한 지역구 공천을 경선 없이 지원할 경우는 유형 4의 경우와 같이 현역의원이거나, 인지도가 큰 인물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다시 말해서 당선가능성이 큰 후보의 경우에 해당되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선거운동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 지역구 현역의원인 경우와 조직적인 선거운동캠프를 운영할 수 있을 때 당선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이번 총선은 2인을 초과한 선거운동원의 거리인사가 금지되고 여러 선거운동원들이 같은 복장이나 차림을 하는 등의 단체선거운동이 불가능해지면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영역을 매우 축소시켰다. 실제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위한 자발적 선거활동을 펼치고 싶은 많은 유권자들이 까다로워진 법규정으로 동참하지 못하였다. 물론 법을 준수하면서 후보 지지활동을 하는 많은 자원봉사자들도 존재했지만 전체적으로 일반시민의 입장에서는 참여의 벽이 높았다. 한편, 자원봉사자를 구하지 못한 후보들

도 많았고, 그동안 지역구 선거의 관행을 고려할 때 진정한 자원봉사의 개념이 정착되기 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다.

■ 따라서 장기적으로 자원봉사를 제도화하고 교육시키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돈 안 드는 선거로 가려면 무보수 자원봉사가 활발해져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안 되어 있다. 대부분 이해가 부족해 자원봉사활동이 업무구분 없이 이뤄지고 있었다. 선거캠프도 선거운동전에 미리 프로그램 등을 준비한다면 자원봉사자들의 특성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든다. 시민단체에서 자원봉사자의 사조직화에 대한 감시를 하며 자원봉사 교육을 시키는 체계성을 갖춘다면, 선거가 후보자 중심이 아니라 지역구민의 축제로 선거문화를 바꾸는 과정이 될 것이다.

III. 17대 총선을 통해 본 여성후보의 선거과정 실효성 확보방안

1. 기본과제

- 공천관련위원회(예: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후보자 선정위원회, 공천 순위확정위원회)에 50%이상 여성위원 참여 보장
- 여성인력 은행 운영 및 정치교육 기회 확대
- 지역구 여성후보의 기획 공천 확대 및 지역구 30%를 지키지 못하는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삭감
- 여성의 당직활동 확대 및 NGO와의 연대 강화

2. 여성후보 경선제 실효성 확보방안

- 선거인단 구성에 있어 50% 수준의 여성선거인단 확보
- 공정한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및 일정 비율 여성참여 보장

- 정당내 여성정치발전기금을 통한 여성후보의 경선비용 지원
- 여성후보에 대한 가산점 30%로 상향 조정
- 여성후보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 지원시스템 구축

3. 여성후보 선거운동과정에서의 실효성 확보방안

- 예비여성후보의 지역활동 지원 및 여성후보의 연대활동 강화
- 여성후보의 방송출연비용 지원 및 여성친화적 프로그램 운영
- 여자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여성후보의 자원봉사자
지원시스템 구축
- 당지도부의 여성후보에 대한 선거지원 강화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방법	5
가. 연구내용	5
나. 연구방법	6
3. 연구의 제한점	10
II.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 및 선거운동에 관한 이론적 고찰	11
1. 선거과정의 개념	13
2. 후보 선출과정과 경선제	15
가. 후보 선출과정	15
나. 경선제와 현직효과	19
3. 선거운동 전략과 여성후보의 선거운동	21
가. 후보의 성별에 따른 선거운동 연구의 필요성과 방법	21
나. 선거운동 전략	24
III. 17대 총선을 통해 본 여성의 정치참여 성과 및 여성계 활동내용과 향후 과제	29
1. 17대 총선을 통해 본 여성의 정치참여 성과	31
가.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31
2. 17대 총선과 여성계 활동내용과 향후 과제	43
가.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	44
나. 후보자 발굴과 추천운동	46

다. 정책비교와 유권자운동	47
라. 기금 모으기 운동	48
마. 평가 및 향후 과제	48

IV. 17대 총선 선거과정에 있어서 주요 정당의 여성후보 지원정책 51

1. 주요 정당의 여성후보 공천의 기본방향과 여성의 대표성	53
가. 열린우리당	53
나. 한나라당	59
다. 민주노동당	65
라. 새천년민주당	69
2. 주요 정당의 여성정책 공약과 여성후보 지원정책	75
가. 열린우리당	78
나. 한나라당	78
다. 민주노동당	79
라. 새천년민주당	80
마. 소결	80

V. 여성후보의 경선 및 총선 선거운동 참여관찰 사례분석 83

1. 경선 사례	86
가. 여성후보자의 경선참여 관찰 사례의 유형	86
나. 여성후보자의 개인적 특성	87
다. 여성후보의 입후보과정	89
라. 주민 호응도 및 인지도	92
마. 선거운동과정	93
바. 선거결과와 당락요인	95
사. 여성후보 선거운동의 시사점 및 개선방안	99
2. 총선 본선 사례	101

가. 본선 참여관찰 사례의 유형과 후보자의 지역전략	103
나. 후보자 이미지 및 선거전략	113
다. 선거운동과정의 조직운영전략	120
라. 선거결과와 당락요인	125
마. 여성후보 선거운동의 시사점 및 개선 방안	137

VI. 17대 총선을 통해 본 여성후보의 선거과정 실효성

확보방안 141

1. 정당의 공천과정에서의 여성의 대표성 확보방안	146
가. 공천관련위원회(예: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후보자 선정위원회, 공천순위확정위원회)에 50%이상 여성위원 참여 보장	146
나. 여성인력 은행 운영 및 정치교육 기회 확대	146
다. 지역구 여성후보의 기획 공천 확대 및 지역구 30%를 지키지 못하는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삭감	147
라. 여성의 당직활동 확대 및 NGO와의 연대 강화	148
2. 여성후보 경선제 실효성 확보방안	149
가. 선거인단 구성에 있어 50% 수준의 여성선거인단 확보 및 선거 절차의 간소화	149
나. 후보자 경선실시 기간의 법제화	151
다. 공정한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및 일정 비율 여성참여 보장	151
라. 미디어를 통한 선거운동방법 도입	152
마. 정당내 여성정치발전기금을 통한 여성후보의 경선비용 지원	152
바. 여성후보에 대한 가산점 상향 조정	153
사. 여성후보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 지원시스템 구축	153
3. 여성후보 선거운동과정에서의 실효성 확보방안	154
가. 예비여성후보의 지역활동 지원 및	

여성후보의 연대활동 강화	154
나. 여성후보의 방송출연비용 지원 및 여성친화적 프로그램 운영	156
다. 여자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여성후보의 자원봉사자 지원시스템 구축	158
라. 당지도부의 여성후보에 대한 선거지원 강화	159
마. 후보자의 비방·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형량 가중	159
참고문헌	161
부 록	165
【부록 I】 주요정당의 여성정책공약	167
【부록 II】 17대 총선 여성후보 참여관찰보고서 총괄 : 경선사례	175
【부록 III】 17대 총선 여성후보 참여관찰보고서 총괄 : 본선사례	197

표 목 차

<표 I-1> 17대 총선 여성후보에 대한 경선·총선 참여관찰 조사일정	6
<표 I-2> 후보자의 선거과정 내용 구성	9
<표 II-1> 선거전략 종합	14
<표 III-1> 17대 총선 지역구 여성후보자 및 당선자의 정당별·지역별 분포 ..	34
<표 III-2> 지역구 여성후보 및 당선자	35
<표 III-3> 2004년 4.15총선 비례대표 여성후보자 및 당선자의 정당별 분포 ·	36
<표 III-4> 정당별 전국구 비례대표제 여성후보 및 당선자	38
<표 III-5> 인물 평가 요소	42
<표 III-6> 정당 평가 요소	42
<표 IV-1> 여성의 정치참여 관련 주요정당의 공약 비교	76
<표 IV-2> 4개 이상 정당이 공통으로 제시한 21개 공약	77
<표 IV-3> 지역구 여성후보 공천을 통한 지원	81
<표 IV-4> 비례대표 여성후보 50% 공천을 통한 지원	82
<표 V-1> 주요정당 공천현황(2004년 3월 22일 현재)	86
<표 V-2> 경선 참여관찰 사례의 유형	87
<표 V-3> 여성후보의 개인적 특성	88
<표 V-4> 여성후보의 경선방법 및 일정	91
<표 V 5-1> 지방의회 의정활동 경험이 있는 후보들	94
<표 V-5-2> 지역구 선거출마 경험 및 국회의정활동 경험이 있는 후보들 ..	95
<표 V-6> 여성후보의 경선결과	96
<표 V-7> 여성후보의 당락요인	98
<표 V-8> 총선 참여관찰 사례의 유형	102
<표 V-9> 총선 참여관찰사례 여성후보의 개인적 특성	105
<표 V 10-1> 후보자 이미지 및 선거전략 (유형 1)	114
<표 V 10-2> 후보자 이미지 및 선거전략 (유형 2)	116
<표 V 10-3> 후보자 이미지 및 선거전략 (유형 3)	118
<표 V 10-4> 후보자 이미지 및 선거전략 (유형 4)	120

<표 V-11> 총선 참여관찰 사례후보의 선거운동본부 운영조직	121
<표 V-12> 총선 참여관찰 사례후보에 대한 중앙당 지원여부	123
<표 V-13> 총선 참여관찰 사례후보의 선거운동 방식	124
<표 V-14> 총선 참여관찰 사례후보의 유형별 선거자금 사용현황	125
<표 V-15> 후보자 유형별 선거결과	126
<표 V-16> 총선 참여관찰 사례후보 당선자의 당선요인	128
<표 V-17> 총선 참여관찰 사례 후보 낙선자의 낙선요인	131
<표 V-18> 후보자 유형별 당락요인에 미친 요인	136

그림 목 차

[그림 II-1] 정당의 후보선거인단 구성의 스펙트럼	17
-------------------------------------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방법	5
3. 연구의 제한점	10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4년 4월 15일 실시된 제17대 총선이 지니는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 대통령 탄핵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선거가 진행되면서 정작 정책이나 공약에 대한 검토가 미비했던 선거였다는 점이다.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은 참패를 하였고, 한나라당 역시 의석이 늘어난 17대 국회에서 의석을 더 얻지 못하였다. 반면 탄핵에 반대했던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커다란 정치적 승리를 거두었다. 둘째, 지역주의가 상당히 해체되었다는 점이다. 이번 선거에서 자민련에 기반을 둔 충청권과 새천년민주당에 기반을 둔 호남권에서의 지역주의가 많이 완화되었다. 반면, 영남권의 지역주의는 아직도 강고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렇지만, 적어도 과거와 같이 강렬하지는 않았다. 부산/경남에서는 열린우리당이 3석을 건지고, 민주노동당도 2석을 얻었다. 앞으로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선결과제로서 정치권은 현재의 여·야간 대립적인 정치구조를 공존적 구조로 바꿔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셋째, 진보정당이 최초로 원내에 정치적 진출을 했다는 점이다. 민주노동당의 등장으로 앞으로 이 나라의 정치구도는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보수와 진보의 대립으로 변모해 갈 것으로 보여 한국 제도정치에 이념적 지도를 새로 써야 할 것이다. 넷째, 여성의 국회참여가 크게 신장되었다는 점이다. 금번 총선은 정치권이 정당법 31조의 개정을 통하여 비례대표제 여성공천할당 50%로 정하고, 지역구에도 과거보다 여성후보들이 출마하여 당선이 이루어진 선거로 제16대 총선에서 5.9%의 여성국회의원 비율이 13%로 늘어 이번 총선의 특기사항으로 기억될 수 있는 선거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번 총선이 지니는 특징으로는 정치제도적 변화로써, 정치권 내부의 변화도 있었지만, 여성의 단합된 노력도 크게 작용하였다. 실제, 여·야간은 17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정수를 16대 국회에서 227개였던 지역구를 243개로 늘리고, 비례대표제의 경우도 종전에 46석에서 56석으로 늘렸으며, 정당법 31조의 개정을 통하여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하여 지난 대선시 대통령후

보들이 제시한 국회의원 지역구 30%, 전국구 비례대표제 50% 여성후보공천을 명시하였다. 아울러 17대 총선을 맞아 여성계에서는 ‘여성의 정치참여의 원년’으로 될 수 있도록 321개의 여성단체가 모여 결성한 ‘총선여성연대’에서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여성계 리더들이 결성한 맑은 여성정치네트워크에서도 ‘여성후보 발굴’ 및 ‘여성후보지원을 위한 기금조성’ 등의 방법을 통하여 ‘여성 101인 국회보내기 운동’을 전개한 결과 제16대 여성국회의원 비율 5.9%에서 13%로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본 연구결과 보다 많은 여성들이 국회에 진출하기 위한 경선과 본선의 여성후보 선거운동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런데 17대 총선의 경우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무엇보다 탄핵변수가 선거의 정치, 환경적 변수로 가장 큰 역할을 하였다는 점이다. 여성후보의 활동에도 이러한 정치 환경의 영향이 적지 않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17대 총선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 조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대 총선이 여성계에 준 의미로는 부정부패정치로 인한 남성정치의 한계점을 드러내면서 여성정치의 중요성이 보다 강조되었다는 측면이다. 이러한 결과 17대 총선직후 김원홍·이현출·김은경(2004)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제 여성정치인을 보는 유권자들의 의식이 많이 바뀌어 여성후보들도 평소부터 지역구 활동을 오래한다면 기꺼이 여성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답변이 많이 나온 것으로도 알 수 있다.¹⁾

본 연구는 17대 총선에서 여성후보의 경선과 선거과정 및 그 결과를 조사하여 향후 여성후보 정치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일차적인 목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17대 총선에서 여성의원이 13%로 증가된 성과와 함께 정치권의 선거관련법 개정, 여성정치발전기금 설치를 위한 여성계의 노력이 어

1) 김원홍·김은경·이현출(2004),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서울: 여성부), pp.81-96.

떻게 전개되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즉,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계의 노력이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어느 정도 효과를 갖게 되었으며,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둘째, 17대 총선에 출마한 여성후보의 선거과정에 관한 내용으로서 경선의 경우 유형에 따라 여성후보가 출마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본선의 경우 여성후보가 출마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지역특성, 조직, 인력, 자금, 운동방식 등)과 관련된 활동내용을 참여관찰을 통하여 검토하고자 하였다.

셋째,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향후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본 연구를 위해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내용 및 방법을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 및 선거운동에 관한 이론적 고찰로서 ① 공직선거과정의 개념 ② 공직후보 선출과 경선제도 ③ 선거운동 전략과 여성후보를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17대 총선에서의 여성의 정치참여 성과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제4장에서는 17대 총선에서의 주요 정당의 여성후보 선거과정에 관한 지원정책으로 17대 총선에서의 주요 정당의 후보공천과정의 기본방향과 공천과정에서의 여성의 대표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제5장에서는 17대 총선에 출마한 여성후보에 대한 경선과정과 여성후보의 선거운동과정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제6장에서는 이러한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여성후보의 선거과정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을 위하여 ① 정당 공천시 여성의 대표성 확보방안, ② 여성후보 경선제 실효성 확보방안, ③ 여성후보 선거운동 실효성 확보방안을 제시하고, 제7장에 결론을 맺었다.

나. 연구방법

본 보고서의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참여관찰 조사, 관계전문가 자문 등이 다. 첫째, 문헌연구로는 선거과정과 공직후보 선출, 공직후보 선출에 있어서 경선제도, 선거운동 전략과 여성후보의 선거운동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더불어, 우리나라 정당의 여성후보공천과정에서 정당의 지원정책과 주요정당의 여성정책 공약 등에 대한 문헌연구가 있었다.

둘째, 참여관찰 조사방법을 활용하여 구조화된 check-list 작성을 통한 여성후보의 사례별 경선과정 및 선거운동과정을 관찰하였다. 조사대상자는 경선과정에서 5명, 본선과정에서 8명으로 총 13명을 조사하였다.

<표 I-1> 17대 총선 여성후보에 대한 경선·총선 참여관찰 조사일정

선거구분	후보자	지역구	소속정당	당선여부	관찰자	관찰기간	비고
경선	송미화	서울 은평 을	열린우리당	당선	문헌배	2004.2.16~2.28	
	김은경	서울 노원 을	열린우리당	낙선	문헌배	2004.3.08~3.13	
					강혜린	2004.3.08~3.13	
	김완자	전주 완산 을	새천년민주당	당선	-		
	김선미	경기 안성	열린우리당	당선	-		총선시 당선
본선	김정숙	안양 동안 갑	한나라당	낙선	기우택	2004.3.05~3.09	
	이혜훈	서울 서초 갑	한나라당	당선	김은수	2004.4.13~4.14	
	이선희	서울 종로	민주노동당	낙선	강영숙	2004.4.10~4.15	경선함
	송미화	서울 은평 을	열린우리당	낙선	장우윤	2004.3.15~4.15	경선함
	원미정	인천 동구·중구·옹진군	새천년민주당	낙선	성지연	2004.4.10~4.14	
	한명숙	경기 일산 갑	열린우리당	당선	오광민	2004.4.12~4.14	
	박금자	서울 영등포 을	새천년민주당	낙선	장윤선	2004.4.10~4.14	
	김희선	서울 동대문 갑	열린우리당	당선	기우택	2004.4.10~4.14	
	전재희	경기 광명 을	한나라당	당선	배진숙	2004.4.10~4.14	

참여관찰 사례의 선정기준은 지역구에 출마하는 경험의 유무, 당선과 낙선, 정당별 안배를 고려하였고, 지역구 출마 경험에 대해서는 다시 두가지로 구분하여 초선도전과 재선도전으로 구분하였다. 지역구 초선도전에는 선거 경험이 전무한 후보자의 경우와 지방의원 출신인 경우, 비례대표의원이었다면 경우로 세가지로 분류하였고, 재선도전에서는 지역구 의원의 재출마를 선정 기준으로 하였다. 경선의 경우 5명의 후보중 열린우리당 3명, 한나라당 1명, 새천년민주당 1명이고, 결과분석은 참여관찰한 사례를 유형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8명의 사례 중 열린우리당 3명, 한나라당 2명, 민주당 2명, 민주노동당 1명이며, 당선사례와 낙선사례가 각각 4명으로 구분되었다.²⁾ 조사결과는 참여관찰한 사례를 유형화하고 분석하였다.

셋째, 참여관찰 조사방법을 활용하여 구조화된 check-list의 내용은 <표 I-2>와 같다. 먼저, 여성후보의 경선 준비과정에 관한 질문 내용이다. 질문내용으로는 ① 후보자 출마지역의 사회·정치·경제적 환경으로서 행정조직별 선거구, 지역 경제사정 및 특성, 지역내 사회활동 현황, 지역의 정치적 성향 등에 관한 내용을 구성하였다. ② 후보자의 개인적 특성으로는 후보자의 학력, 사회활동, 정치활동, 지역주민 평판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③ 경선방식과 입후보 과정의 내용으로는 해당 지역구의 경선방식(당원 경선제, 개방형 국민경선제, 여론조사방식 등)과 해당 지역구의 경선 진행과정(선거관리위원회 구성, 후보 등록, 선거인단 구성, 선거인단 대회, 투표 방식 등)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④ 후보자의 선거조직과 선거전략에 관한 내용으로 후보자의 선거조직, 선거자금, 선거슬로건, 주요 선거전략, 주요 연설내용을 포함시켰다. ⑤ 경선승패 결과 및 개선방안의 내용으로는 여성후보의 승패 요인과 선거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다음은 본선의 여성후보의 선거과정에 관한 질문내용이다. ① 후보자 출마 지역의 정치·경제·사회적 환경에 대하여는 지역적 특성, 종전선거에서의

2) 당초 계획에는 한나라당이 3명으로 총 9명의 후보에 대한 참여관찰이 실시되었으나, 한나라당 1명의 후보에 대한 참여관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데이터화 하지 못하였음.

유권자 투표성향과 지역의 정치적 성향에 관한 질문을 포함시켰다. 후보자의 개인적 특성으로는 출신지, 학력, 후보자 개인의 사회활동, 정치활동 경력과 지역주민의 평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② 후보자의 입후보 과정에 관하여는 정당의 공천과정과 개인후보의 공천과정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③ 후보자의 선거과정에서는 후보자의 선거조직, 선거자금, 선거유세방법, 인터넷 활용 및 지역방송을 통한 후보자 토론과정, 선거전략, 선거감시 및 계도활동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선거조직과 관련된 분석 내용은 선거본부장, 선거사무장과 같은 핵심참모조직 혹은 기획, 재무, 홍보 등 일반참모조직의 구성과 그에 따른 활동내용, 자원봉사자 구성 및 활동내용, 가족을 비롯하여 친구, 동료, 공식적 및 비공식적 조직에 참여한 임원들의 지원이 해당되며, 후보자의 선거자금과 관련된 활동내용으로는 선거비용 모집방법 및 선거비용 운영방법 그리고 주변 사람의 후원회를 통한 선거자금 지원 및 비공식적 지원 내용이 포함되었다. ④ 선거결과 및 향후 과제에는 여성후보 선거운동 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선거과정에서의 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선거과정의 개선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표 1-2> 후보자의 선거과정 내용 구성

선거 구분	내용	세부내용	비 고
경선	후보자 출마지역 의 사회·정치· 경제적 환경	행정조직별 선거구	과거 선거에서의 우세 정당 및 후보
		지역 경제사정 및 특성	
		지역내 사회활동 현황	
		지역의 정치적 성향	
	후보자의 개인적 특성	학력	후보의 경력 및 활동에 대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인지도 및 평가
		사회활동	
		정치활동	
	경선방식과 입후 보 과정	해당 지역구의 경선방식	당원 경선제, 개방형 국민경선제, 여론조사방 식 등
		해당 지역구의 경선 진행 과정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후보 등록, 선거인단 구 성, 선거인단 대회, 투표 방식 등
	후보자의 선거조 직과 선거전략	후보자의 선거조직	선거조직책, 자원봉사
		선거자금	후보등록비용, 선거운영비용
		선거슬로건	
		주요 선거전략	
		주요 연설내용	
	경선승패 결과 및 개선방안	여성후보의 승패 요인	
		선거과정의 문제점	
		선거과정의 개선방안	
본선	후보자 출마지역 의 정치·경제· 사회적 환경	지역특성	인구, 행정조직, 사회단체 및 정부기관,
		유권자 분석	연령별, 지역별, 과거선거의 선거결과 분석
		지역의 정치적 성향	과거 선거에서의 우세 정당 및 후보
	후보자의 개인적 특성	출신지	후보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평가 및 인지도
		학력	
		사회활동, 정치활동	
		지역주민 평판	
	입후보 과정	후보자의 입후보 과정	정당의 공천과정, 개인후보의 공천과정
	후보자의 선거과 정	후보자의 선거조직	선거조직책, 선거운동원 구성방법
		선거자금	후보등록비용, 선거운영비용
		선거유세방법	차량유세, 거리유세, 지원유세, 전화유세
		인터넷 활용 및 지역방송 을 통한 후보자 토론과정	
		선거전략	이미지, 캠페인 방법, 주요 연설내용
		선거감시 및 계도활동	선관위 감시단, 상대후보 감시
	선거결과 및 향후 과제	여성후보 선거운동 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선거조직, 선거운동방식,
		선거과정에서의 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선거과정의 개선방안	

넷째, 관계전문가 자문 및 관계자 회의를 통하여 내용을 보완하였고, 본 연구의 내용을 2004년 5월 11일 「2004년 총선의 성과와 향후 과제」란 주제로 여성정책세미나를 개최하여, 전문가의견을 수렴하였다.

3. 연구의 제한점

첫째, 여성후보 경선제 사례연구에 대한 제한점이다. 17대 총선에서 실시한 경선의 유형으로는 열린우리당,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에서 실시한 국민참여경선 방식, 유권자 여론조사 방식이 있고, 민주노동당에서 실시한 진성당원에 의한 경선방식이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17대 총선 당시 연구의 범주를 원내 정당을 상대로 한 연구를 실시하여 민주노동당에서 실시한 진성당원에 의한 경선사례에 대한 참여관찰이 제외되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IV장에서 민주노동당의 선거과정에서의 여성후보지원정책에 내용을 보완하였다.

둘째, 여성후보 선거과정에 대한 사례연구를 수도권 중심으로 제한하였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구는 지역별 특성으로 대도시/중소도시/도농복합도시/농촌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지역별 특성에 따라 여성후보의 선거운동방법도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구진의 형편상 여성후보에 대한 사례연구를 대도시 중심으로 한정하여 조사했다는 점이다.

Ⅱ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 및 선거운동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선거과정의 개념	13
2. 후보 선출과정과 경선제	15
3. 선거운동 전략과 여성후보의 선거운동	21

Two horizontal bars at the bottom of the page. The top bar has a fine grid pattern, and the bottom bar has a denser cross-hatch pattern.

1. 선거과정의 개념

선거과정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선거법 제58조), 즉 선거운동의 전 과정을 말한다. 선거과정은 일반적으로 사전운동(입후보 준비행위), 정식 입후보 후의 선거운동, 당락 판정, 그리고 다시 사전운동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사이클로서 파악할 수 있다.³⁾ 물론 선거운동은 법률적으로는 기간의 제한 없이 무한정 허용할 경우에는 후보자간의 지나친 경쟁이 선거관리의 곤란으로 이어져 부정행위의 발생을 막기 어렵게 된다는 이유로 기간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출마를 결심하는 순간부터 위에서 언급한 사이클의 긴 여정을 거치며 지지세력의 조직화와 지명도와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과 캐나다와 같이 사전선거운동의 규제가 없는 나라들과는 달리, 현행 선거법 하에서 현직의원은 임기 내내 공식적인 직무활동으로서 지역구 관리가 가능한 반면, 신인으로 정치에 입문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선거운동 규제에 묶여 전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선거과정은 주어진 자원으로 당선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선거전략 속에 움직이게 된다. 선거전략은 선거의 초반전부터 중반전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당선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 목표영역을 근거로 짜여지게 된다. 기본영역으로는 첫째, 선거기반의 형성과 확대, 둘째, 선거간판(지명도와 이미지)의 형성, 셋째, 운동조직의 효과적 활용, 끝으로 선거자금의 효율적 조달과 지출이라는 개별영역별 기본전략이 세워지고 이를 종합하여 총괄계획이 수립되게 된다.⁴⁾ 그러나 선거자금의 경우 투명성이 많이 확보되었으나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위의 기본영역 중 나머지 3가지 영역을 종합하여 보면 선거전략을 다음의 <표

3) 이현출(2004), “선거운동에서의 공평성 확보”, 『한국정당학회보』 3권1호, pp. 224-225.

4) 이현출(2004. 5. 12), “지구당없는 선거운동: 광진 을 선거구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 춘계학술회의 발표논문.

II-1>과 같이 개념화해볼 수 있다.

<표 II-1> 선거전략 종합

기본전략	종 합 전 략				목표
	영역	초반	중반	종반	
경쟁적 지위확보	지역전략	운동원확보의 지역전략	표발형성의 지역전략	큰 표발 공약의 지역전략	선거 기반형성
철저한 차별화	홍보전략	이미지 전략	이벤트 전략	밴드웨곤전략	선거 간판형성
운동조직의 결속	조직전략	정신적 유대조직	이익적 유대조직	감정적 유대조직	선거 조직형성
전략목표		고정표	지지표	부동표	선거 목표 달성

출처: 이현출(2004. 5. 12) “지구당없는 선거운동: 광진 을 선거구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 춘계학술회의 발표논문.

이러한 기반위에 입후보 희망자는 일정한 운동조직의 대규모 확대를 모색하게 된다. 운동조직을 확대하는 데에는 정신적 유대조직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각종 직능사회단체들과의 이익적 유대의 구축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목표하는 정치를 구체화하고, 공약을 구체화하는 과정에 각종 이익집단들과 유대를 확대해 나가게 된다. 선거구내의 주요 이익집단을 자신의 지지표로 끌어들이게 되면 선거전을 보다 원활하게 이끌어 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조직활동을 강화하고 지지표를 강화하게 되면 지역별로 나뉘대로 표발을 형성하게 된다. 선거종반에 이르면 기존에 형성해온 표발이 아닌 부동표가 많고, 다른 후보들과 정신적·이익적 유대의 고리가 약한 큰 표발을 공략하는 전략을 취하게 된다.

초반전부터 꾸준히 키워온 운동조직을 종반전에 활용하는데에는 정신적, 이익적 유대로 결속된 운동원에게 감정적 유대로 강하게 결속시킴으로써 새로운 운동에너지를 부여하게 된다. 부동층 공약도 감성에 호소하여 감정적

유대로 묶어 나가게 된다. 이 때 부동표를 흡수할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철저한 차별화를 위한 홍보전략은 초반에는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는 이미지 전략에 주안점을 둔다. 아무리 지명도가 높아도 이미지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알려지면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거 중반에는 다양한 이벤트 전략을 구사하여 유권자를 끌어 모으고, 또 매스컴으로부터 주목을 끌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이러한 선거전략 속에서 지구당의 역할과 기능을 고찰하여 보면, 핵심당원 (party activists)들을 중심으로 한 정당조직은 기존의 지구당 위원장과 정신적 유대관계를 갖고, 선거초반부터 중반까지 득표활동을 함께 할 공조적이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지구당의 계선조직은 잘 훈련된 운동원이며, 당원조직은 물질적 유인이나 목적적 유인과 결부된 고정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입후보 희망자들로서는 정당의 공천을 받는 것은 곧 선거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따라서 유력한 정당의 공천을 획득하는 일은 선거전의 매우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출마를 희망하는 예비후보자들 사이에서는 공천이 반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해할 만한 일이다.

2. 후보 선출과정과 경선제

가. 후보 선출과정

정당의 후보자 선출과정은 정치충원과정의 핵심단계로서 민주주의 체제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정당공천이 갖는 첫번째 의미는, 정당은 후보선출 과정을 통해 공직에 진출하려는 사람을 효과적으로 제한하고, 유권자들은 제한된 후보를 중심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른 국가에서처럼 한국에서도 무소속 출신이 공직에 진출하기 어렵다는 점은 정당의 후보선출이 갖는 수문장 역할(gatekeepers)을 입증하는 것이다.⁵⁾ 둘째, 정

당의 후보선출과정은 당내권력관계가 표출되는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후보지명과정은 정당의 본질을 결정하며, 결국 지명권자가 정당의 주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당의 민주화와 함께 공직에서의 남녀 대표성의 균형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당의 공천과정은 선거제도 이전에 여성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과정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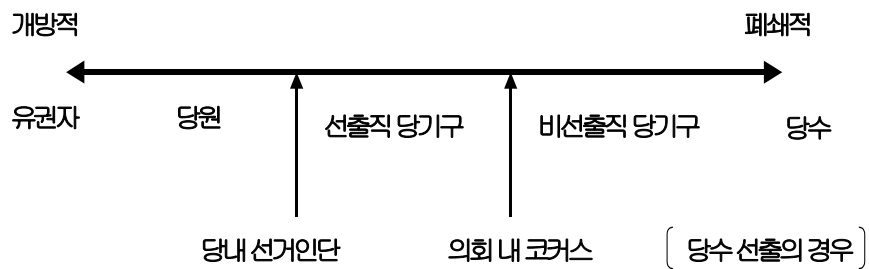
다른 한편 공직후보자 선정과정은 당내 권력관계와 정치적 고려의 산물이다. 각기 다른 나라에서 각기 다른 정당체제와 각기 다른 후보 선출과정을 채택하고 있다. 정당지도자 개인에 의한 지명에서부터 일반 당원 또는 유권자가 참여하여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후보자 선정과정은 중앙당과 지방조직과의 관계, 당원의 참여나 개방성의 정도 등에 따라 국가나 정당별로 상이하며, 그 결과 역시 다양하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공직후보선출방법은 “누가 후보가 될 수 있는냐?”, “누가 후보를 선출하나?”, “어디에서 후보를 선출하나?”, 그리고 “어떻게 후보를 선출하나?”라는 네가지 기준에 따라 분석되고 있다. 첫 번째는 공직후보 자격요건과 관계된다. 두 번째는 선출자의 자격요건, 즉 선거인단의 개방성(inclusiveness)의 정도와 관계된다. 셋째로, 어디에서 선출하느냐의 문제는 후보선출의 분권화 정도와 관계된다. 끝으로 어떻게 선출하느냐의 문제는 후보선출 방법과 관계된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네 가지 기준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공직후보 자격요건의 문제이다. 공직후보의 자격요건은 모든 시민이 정당의 공직후보로 선출될 수 있는 가장 개방적인 방법에서부터 그 반대로 당원이라는 자격뿐만 아니라 그 외에 부수적인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폐쇄적인 방법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극단적으로 벨기에 사회당의 공직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당원이어야 하며, 당보를 정기적으로 구독하여야 하며, 사회주의자 조합으로부터 매년 최소한의 구매를 하여야 하며, 자녀들은 가톨릭계가 아닌 공립학교에 보내야 하며, 부인과 자녀들이 해당되는 당의 여성 및 청년조직의 구성원이어야 한다. 당원조

5) 이현출(1997), “한국정당의 대통령후보자 선출과정의 특성과 과제,” 여의도정책논단 여름·가을호.

건에 추가적인 제약요건을 부가하게 되면 자격요건을 갖춘 인물은 더욱 줄어들게 되고 폐쇄적이 될 것이다.

[그림 II-1] 정당의 후보선거인단 구성의 스펙트럼



* 출처: Rahat, Gideon and Reuven Y. Hazan(2001), "Candidate Selection Methods: An Analytical Framework," Party Politics, Vol. 7, No. 3. London: Sage. p. 301.

둘째, 후보선출과정에서의 개방성(inclusiveness)의 문제이다. 정당의 최고 지도자에 의한 배타적 지명에서부터 일반당원 나아가 일반 유권자까지 후보 선출과정에 참여를 개방하는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고 있다. 정당의 선거인단은 한사람의 엘리트, 또는 몇몇 사람의 정당엘리트, 지도자의 위임을 받은 비선출직 당기구, 선출된 당기구, 당원 그리고 나라의 전체유권자에 이르기까지 폐쇄성과 개방성의 수준에 따라 스펙트럼상의 다양한 위치에 자리매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예비선거는 유권자 영역에 위치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개방형 예비선거(opened primary)는 좌측 끝으로, 그리고 폐쇄형 예비선거(closed primary)는 유권자 영역의 보다 폐쇄적 위치에 놓일 것이다. 한편 당원영역에서는 당내 예비선거의 경우에는 가장 좌측에 놓일 것이고, 당원참여의 제한이 많을수록 점점 폐쇄적인 위치에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당원투표 자격요건으로 최소당원기간요건, 당비납부요건 등이 제기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준이 당원영역 속에서의 위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즉, 요건이 엄격하면 더욱 폐쇄적이고 요건이 완화되면 더욱 개방적인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편투표, 전자투표 등의 방법이

개방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고려되고 있다.

그런데, 여성후보 공천에 있어 개방형 예비선거(opened primary)와 폐쇄형 예비선거(closed primary)중 어느 것이 유리하냐에 있어서, 이론적으로는 개방형 예비선거가 폐쇄형 예비선거에 비해 다소 유리하다는 연구가 있었다.⁶⁾ 그 이유로는 개방형 예비선거의 경우 여성후보자를 지지하는 여성당원의 동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한국과 같이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강한 정치문화 속에서, 이것이 얼마나 적실성이 있는지는 더 논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이다.

셋째, 어디에서 후보를 선출하느냐의 문제는 후보선출과정의 분권화(decentralization)의 문제이다. 이는 정당의 어떤 수준의 조직이 주도권을 갖고 있느냐와 관계된다. 즉, 중앙당, 시·도지부, 지구당 중에서 어느 조직이 후보선출과정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느냐의 문제이다. 중앙당이 일방적으로 후보를 결정하여 지구당에 내려 보내는 가장 집권적인 방식에서부터 지구당 스스로 후보를 공모하여 지구당의 권한과 책임으로 후보를 결정하는 가장 분권화된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정당은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지구당에만 후보선출권을 맡겨두지 않고 중앙당의 추천, 조정 또는 거부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중앙당과 지구당이 일정한 역할분담을 하며 후보를 선출하는 혼합형방식을 취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미국의 경우가 전자에 해당되는데 정당의 후보선출방식을 주 의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어 주마다 상이한 선출방식을 갖고 있다. 반면에 영국의 보수당과 같이 중앙당에서 예비후보자를 선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지역구협의회에서 후보자를 결정하도록 하는 절충형도 있다. 이에 반해 이전의 한국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과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후보자 선출권을 중앙당에서 독점하고, 지구당대회에서는 이렇게 선출된 후보를 추인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후보를 선출하나?”라는 문제는 공직후보자 선출방법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다. 후보자 선출방법을 지역별 예비선거를 통해

6) Employment & Social Affairs(1999), Electoral system in Europe: a gender-impact assessment, pp.24-27.

대의원을 선출할 것인가? 순회투표를 실시하여 표를 합산해 나갈 것이냐에 따라 대표성에는 각기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1차투표로 끝낼 것인가 아니면 상위 2인에 대한 결선투표를 실시할 것인가? 호주식 선호투표제(Australian Preferential Voting System)를 채택할 것이냐에 따라 그 정치적 결과는 달리 나올 것이다. 또한 여성전용선거구를 설치하여 여성대표성을 기하거나, 비례대표명부작성에서의 지퍼식 방법의 채택 등은 여성의 대표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나. 경선제와 현직효과

다양한 후보선출의 방식을 살펴보면 결국 핵심적인 쟁점은 바로 후보자 선출과정에서의 중앙당과 지방당 혹은 지구당간의 관계, 그리고 후보자 선출과정에서의 당원이나 일반 유권자들의 참여정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Hazan 2002; Ranney 1981). 한국의 정치구조에서 중앙당이 후보의 선출과정에 절대적인 의사결정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는데, 특히 후보자 선출과정을 소수의 인사들(예를 들어, 지구당위원장 혹은 중앙당 지도자들)이 장악해 온 현상은 정치충원과정, 나아가 정당 정치의 민주성 및 공정성을 해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지방당 조직과 당원들은 지역의 정치적 이익 표출(interest articulation)과 그를 통한 당 정책의 형성이라는 정당의 기본적인 사회통합의 기능을 수행하는 민주주의의 핵심적 기제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지난 대통령선거와 2002년 6·13 지방선거에서도 이러한 취지에서 경선을 통한 후보자 공천제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⁷⁾

7) 모종린·전용주(2004), “후보경선제, 본선경쟁력 그리고 정당민주화: 2002년 6·13 기초자치단체장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8집 1호, 2004. 봄: 하잔에 의하면 각 정당들의 후보지명 절차와 관련한 민주화 노력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필요에 의해 시도되어 왔다. 첫째는 새로운 당원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 둘째, 시민들의 전반적인 교육정도의 향상과 그에 따른 사회전체의 위계질서붕괴, 셋째, 현대정당의 탈 이념적 경향과 그에 따른 포괄성 정도의 증대, 넷째, 새로운 혹은 대표되지 않은 사회이익의 동원, 다섯째, 정당의 이미지나 정당성의 증대. 마지막으로 본선에서의 승리가능성 최대화를 들고 있다(Hazan 2002, pp. 118-119).

경선이라는 방식을 통한 후보자의 선출이라는 것은 한국정치사에 있어서 매우 새로운 것이었으며 따라서 그에 따른 많은 부작용을 낳으면서, 찬성과 반대의 여론으로 나뉘게 되었다. 예를 들어 과열 경쟁으로 인한 매표행위, 경선결과 불복과 탈당으로 인한 지구당 조직의 와해, 그리고 자격미달의 후보자선출로 인한 본선경쟁력 약화 등이 그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⁸⁾ 이로 인해 6·13 지방선거 직후 실시되었던 8·8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과 한나라당 양대 정당은 상향식 공천방식을 폐기하고 다시 하향식의 공천방식을 실시하게 된 사례는 경선제의 문제점을 부각시킨 예라고 볼 수 있다.

다른 한편, 지역주의적 균열이라는 한국정치의 환경속에서 경선제는 정당 운영의 민주화를 통한 선거 및 정당의 사회의사 통합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순기능적 측면을 갖는다는 주장(황아란 2002)과 주민 참여 경선제를 통해 특정 이익이 아닌 일반적인 국민들의 정치적 선호(political preference)를 충족시켜 정당이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나아가 참여를 통한 유권자들의 정치적 효능감(political efficacy)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주장(박효종 2002)은 긍정적 전개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처럼 한국정치사에 있어 경선방식을 통한 후보자선출에 대한 결론이 현재로서는 유보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선에 의한 후보자선출이 광범위한 당원 및 주민이 참여하는 형태로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정당 본연의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연구인 경선제도와 후보자의 당선경쟁력을 설명하고자 한 모종린·전용주(2004)의 연구에서는, 후보자의 경쟁력을 “현직효과”(incumbent advantage)와 경선여부의 관계로 살펴보고, 비현직후보의 경우 상향식 경선

이와 같이 이념보다는 선거에서의 승리를 최대 목표로 하는 정당들의 선거주의(electoralism)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을 조정해 온 것도 사실이다. 우선 정당들의 정책이 이념보다는 ‘중위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호에 조응하는 방향으로 수렴됨으로써 정당간 정책차이가 없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유권자들에게 다양한 정책선택의 기회를 부여하지 못하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Erickson and Carty 1991: Scarrow et al. 2000).

8) 한국일보 2002년 7월 15일.

제에 의해 지명된 후보가 본선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선거에서의 당락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로 증명되어온 현직효과란 현직을 가진 후보자가 재출마할 경우 당선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현직후보의 경우 재임기간 중 해당 지역의 활동을 통해 인지도가 매우 높은 상태이며 따라서 비현직후보 보다는 정치자금모금과 같은 여러 가지 점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장선거에서도 이러한 현직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 예를 들어 1998년 6·4 지방선거에서 총 194명의 현직후보 중 76.8%인 148명이 당선됨으로써 상당히 높은 재선율을 보인 바 있다(황아란 1999, 356). 또한 하잔은 민주주의 국가 정당들의 경우에서 현직후보자들이 다시 재지명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Hazan 2002, 155). 따라서 현직효과는 선거에서의 당선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라고 할 것이다.

여성후보의 지역구 출마에 있어서 상당부분은 현직의원과의 경쟁이 될 것이고, 당내 경선을 거친다해도 당내 현직의원을 대체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이다. 경선제가 일반적으로 여성후보에게 정치권으로 진입하는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 여론이었다.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경험 사례를 보아도 경선제가 여성에게는 그다지 유리한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경선제가 향후 선거에서 폐기되는 제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성후보의 당선가능성과 본선경쟁력을 예측하는 차원에서 현직과 비현직의 의원의 경선제를 통한 본선 당선가능성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3. 선거운동 전략과 여성후보의 선거운동

가. 후보의 성별에 따른 선거운동 연구의 필요성과 방법

공직에 출마하는 여성들이 늘어남에 따라, 후보자의 성별에 따른 선거운동 전략에 차이와 전략구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와 이해를 발전시키는 것

이 중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 선거운동의 실제 과정을 전반적으로 분석하는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정치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남녀의 스타일에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 두가지 다른 연구결과가 있다.⁹⁾ 첫 번째는 여성의 의사결정방식이 남성과 달리 비위계적이며 합의와 상호존중에 따른다고 보는 것으로,¹⁰⁾ 비(非)배타적인 정치수행 방식이 정치에 대한 일반적인 냉소주의를 극복하는데 필요하다는 견해와 더불어 더 많은 여성 공직자들이 선출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다. 즉 여성들은 지방 정부 부서들에서 그녀들이 “권력이란 강제와 지배가 아닌, 기존의 남성적 정치 관행에 대치되는 가사와 육아의 특징인 합의에 기초한 협동과 상호 존중이라는 공통의 이해”를 발전시켰다¹¹⁾는 주장이다.

두 번째 견해는 남성과 여성이 정치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¹²⁾ Verba 역시 여성적 스타일의 몇 가지 증거를 발견했지만, 그 요소들이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에는 회의적이었다. 미국에서 여성 또한 남성과 거의 동일한 정치적 환경조건과 전통적인 행동 양식, 교육 시스템, 대중 매체에 맞춰 살아야 하며, 결국 “정치적 행위의 규범을 정의하는 하나의 정치 문화를 공유”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외부의 사회 운동에서 공유되는 것과 전혀 다른 스타일을 요구하는 주류 정치권 내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필적할 만한 활동을 하고 경력을 쌓기를

9) Joan E. Mclean, "Campaign Strategy", Susan J. Carroll ed., *Women and American Politics: New Questions, New Directio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pp. 53-71.

10) Carroll, Susan J., Debra L. Dodson, and Ruth B. Mandel. 1991. "The Impact of Women in Public Office: An Overview", New Brunswick, NJ: Center for the American Woman and Politics, Rutgers University.

11) Flammang, Janet A. 1985. "Female Officials in the Feminist Capital: The Case of Santa Clara County." *Western Political Quarterly* 38: 94-118.

12) Kirkpatrick, Jean J. 1974. *Political Woman*. New York: Basic Books; Schlozman, Kay Lehman. 1990. "Representing Women in Washington: Sisterhood and Pressure Politics." In *Women, Politics and Change*, ed. Louise A. Tilly and Patricia Gurin.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Verba, Sidney. 1990. "Women in American Politics." In *Women, Politics and Change*, ed. Louise A. Tilly and Patricia Gurin.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원하는 이상, 남성과의 유사성은 장기적으로 증가하게 된다는 견해이다 (Verba 1990, 566-67). Scholzman은 Washington에서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89개 여성단체를 연구했지만, “여성들이 규칙을 더 잘 따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부관련 업무에서 단일한 여성적 스타일을 특징짓는 것”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Verba 1990, 360). 여성국회의원의 행동에 대한 Kirkpatrick(1974)의 관찰을 되풀이하듯이, Scholzman은 이익집단 정치에서 여성은 “남자들처럼 행동한다”고 언급했다.

한국의 정치환경에서 최근 여성의 정치참여가 증가하고 있지만, 남녀 정치인의 행태를 비교할만큼의 충분한 사례가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공직에 출마하는 여성후보의 수가 많지 않은 것도 한 요인이며, 후보자 중심의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학계의 분위기도 이를 반영한다.

선거운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선거운동의 방법과 전략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역구에 출마하는 여성후보들이 경험하게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남녀후보자가 공정한 방법으로 선거를 치르도록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더 고위직에 출마하고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한 후보일수록, 더 충실한 선거운동 전략과 전문적인 스태프를 필요로 하며, 이미 공직의 경험이나 선거 경험이 있는 후보일수록, 더욱 정교한 (특히 선거자금 충원에서) 선거 계획을 구성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유경험자 후보들은 충분한 크기의 선거자금의 확보의 중요성만이 아니라, 그 자금을 빨리 충원하고 현명하게 써야할 필요성 또한 더 잘 이해하는 경향이 있으며, 여기에는 자세한 계획과 시간제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¹³⁾

선거운동을 관찰하는 방법으로는 후보와 스태프들에 대한 설문조사나 인터뷰를 조사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보통 이런 조사는 의사결정의 순간이나 직후에 실행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결정중이거나 실행중인 민감한 의사결정에 대한 질문에 후보와 스태프들이 대답을 꺼릴 수 있으며, 설령 대답을 얻을 수 있는 경우라도, 이런 방법으로는 다양한 후보들의 사례는 고사하

13) Joan E. Mclean, Op.cit., p. 55.

고 한 명의 사례를 연구하기에도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선거후에 선거 참가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거나 선거후 결과보고 회의에 참석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어왔다. 물론 이런 방법에는 기억 자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선거 참가자들이 자신의 입장에서 과거 의사결정을 평가할 위험이 있으므로, ‘실시간’ 사례 연구와 선거 후 조사를 혼합하는 조사 설계가 실용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나. 선거운동 전략

선거운동 전략은 몇가지 범주로 구분되는데, 먼저 선거운동 전반에 걸쳐 의사결정의 문제, 공약유권자층을 정하는 문제, 선거전략 또는 공약 등을 결정해야하는데, 이는 출마한 지역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역전략으로 볼 수있다. 두 번째는 후보자의 이미지와 지지도를 획득하는 과정으로 인터넷 또는 미디어를 이용하는 방법에 따른 것으로 홍보전략이다. 세 번째는 선거캠프의 운영과 선거운동원의 구성, 선거자금 모금 등에 선거과정 전반에 관한 것으로 조직운영전략이다. 이 세가지 전략을 기준으로 선거운동 전반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1) 지역전략

입후보자는 선거구 단위에서 스스로 강세인 지역과 약세인 지역이 있고, 그 속에서 큰 표발 공약을 위한 전략이 무엇인지 고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선거운동 전략의 궁극적인 목표는 충분한 표를 얻어서 당선되는 것인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선거 캠프는 목표 유권자를 설정해야 한다. 물론 모든 캠프가 자신들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목표 유권자를 설정해야겠지만, 여성 후보들은 일반적으로 더 많은 여성이 공직에 진출할 필요가 있다는 유권자들의 긍정적인 태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득을 보아왔다. 미국의 경우 여성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노년층, 저학력층, 비화이트칼라, 젊은 백인남성, 남부 백인여성이라고 한다¹⁴⁾. 다시

말해서, 젊은연령층, 고학력층, 화이트칼라, 진보적 이념성향을 가진 유권자들은 여성후보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2) 홍보전략

유권자에게 후보를 알리는 과정으로서 지명도를 확보하고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는 활동을 말한다. 후보자는 어떠한 이미지로 유권자들에게 파고들며, 어떻게 상대 후보자와 차별화를 시도하여 경쟁적 지위를 확보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당의 이미지와 자신의 이미지를 어떻게 접목시키는지, 특히 이번 총선의 경우 탄핵이라는 쟁점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등은 중요한 선거운동의 관찰 포인트가 될 것이다.

홍보전략을 세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선거 캠프가 목표로 한 유권자들에게 다양한 메시지를 성공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캠프가 만들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초기 선전 메시지는 유권자들에게 후보가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납득시키는 것이다. 특히 여성 후보들은 남성 후보에 비해 정치를 할만한 자격이 떨어진다고 가정¹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초반에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종종 여성 후보들은 자신들의 공식적인 약력을 강조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직을 대비하여 어떤 삶의 경험을 해왔는지를 설명해야 한다.¹⁶⁾

후보자간의 합동연설회 방식에 대한 사례 연구와 내용 분석에 기초한 조사 설계도 남녀 후보자의 특성을 고려해서 계획될 필요가 있다.¹⁷⁾ 첫째, 자신들

14) Joan E. Mclean, p. 65.

15) Devitt, James. 1999. "Framing Gender on the Campaign Trail: Women's Executive Leadership and the Press". New York: Women's Leadership Fund. (<http://www.womensleadershipfund.org/programs/study.pdf>)

16) Kern, Montague, and Paige P. Edley. 1994. "Women Candidates Going Public: The 30-second Format." *Argumentation & Advocacy* 31:80-95; 정치 분석가인 Charlie Cook은 "내가 후보들을 만났을 때, 여성 후보들은 내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말하려고 하고, 남성 후보들은 내게 자신들의 약력을 읽어주려고 했다. 바른 방식으로만 한다면, 나는 이것이 실제로 여성 후보들의 강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Women's Leadership Fund 1999).

17) Ibid., p. 62.

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선거 캠프가 사용하는 의사소통의 경로에 남녀 후보자의 특성이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둘째, 토론 형태가 남녀 후보자에게 공정한 토론방식인가 하는 점이다. 예를 들면, 남성 후보들이 공개적인 발표에 익숙하도록 훈련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식적인 토론 프로그램에서 남성들이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으며, 반대로 여성들은 주고받는 대화의 형식에 익숙하도록 사회화되었기 때문에, ‘토크쇼’ 형식에서 남성에 비해 더 자신의 논점을 분명히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규칙을 준수하고” 주어진 질문에만 대답하고 발언 시간을 지키는 경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정치에 참여한 여성의 수가 적었기 때문에 후보자간 합동토론회의 방식은 남성의 특성에 맞도록 계획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양한 후보자의 특성을 고려한 토론회 방식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법정선거운동의 범위와 기타 매스미디어의 주목을 끌기 위하여 어떠한 이벤트를 전개하여 지지표를 확대해 나가는지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소선거구 하에서 중반에 부동표 흡수를 위한 대책 등도 중요한 관찰 포인트가 될 것이다. 홍보전략 중에는 정책활동에 대한 관심으로 선거공약을 어떻게 득표활동과 접목시키는지도 주목할 만하다.

(3) 조직운영 전략

운동조직을 어떻게 결속하고 확대해 나가는지에 대한 전략으로 무엇보다 초반에는 법정선거운동이 허용하는 선거운동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거 캠프에서는 흔히 유급 선거운동원, 자원봉사자, 고문들로 이루어지는데, 이들의 혼합 형태는 목표하는 공직의 지위, 자금 동원력, 그리고 업무분담에 대한 후보의 선택에 달려 있다. 지방 공직에 출마한 경우는, 대상 유권자 수와 동원 자금이 작기 때문에, 선거 캠프 구성에서 자원봉사자에 더 의존하게 되며, 이런 캠프에서는 누가 어떤 일을 하는지가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반면 더 전국단위의 선출직, 국회차원의 공직에 입후보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자신들의 캠프 구성을 위해 유급 선거운동원들과 고문들에 더 의존한다. 유

급 스태프들은 캠프 매니저, 공보 담당관, 기금 모집원, 일정관리자, 그리고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등으로 일을 맡아서 활동을 하고, 고문들은 전반적인 전략 개발을 보조하고, 미디어와 모금 계획을 수립하고, 여론조사를 실행하도록 고용된다. 자원봉사자들은 캠프 본부의 스태프, 홍보물 발송과 유세, 후보와 함께 이동하면서 후보자의 건강도 돌보고, 투표기권을 방지하는 등 주로 유급 선거운동원들과 고문들의 보충하는 일을 담당한다. 스태프 구성 패턴이 어떤가에 관계없이, 잘 운영되는 캠프의 후보와 스태프들은 선거의 각 단계에서 “누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와 “그들이 언제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 이를 위해서, 캠페인 매니저 또는 집행조정위원과 함께 후보는 정기적으로 활동의 우선 순위를 재배치하고 책임을 위임해야 한다.

그러나 여성후보의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위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후보들은 고위직을 목표로 할수록 선거에 불리하게 된다.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하지 못하고, 남성 경쟁자들에 비해 과도한 일상적인 업무에 치이게 되는 여성 후보는 선거운동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가족과 친구들 중심의 자원봉사자들에 의존해서 지역 공직에 출마했던 경험이 있는 여성 후보들은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하고, 선거 전문가들을 고용하고, 책임을 분할하라는 정당 등 외부의 충고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며, 뒤늦게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간적, 금전적 여유가 없게 될 것이다.¹⁸⁾

선거초반에는 가족, 당 조직 등 정신적 유대에 기초한 고정표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목표가 된다. 일차적으로 공조직으로서 당원확대와 이들의 교육 및 연수활동 등을 통하여 고정표를 확산해 나간다. 그리고 후보자는 선거기간 이전에 이미 지연, 학연, 혈연, 동갑내기 집단들을 통하여 정신적 유대를 함께하는 사조직들을 활성화해나가게 된다. 후보자로서는 이러한 층이 두터울수록 선거환경이 보다 유리하게 될 것이며, 각 정당은 이러한 득표기반을 일차적으로 고려하여 공천에 반영하게 되는 것이다.

18) Ibid., pp. 57-58;오레곤 주의 공직에 출마했던 Jewell Lansing의 일화(1991, 54)

선거조직에 있어서 운동원의 역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선거자금이다. 남녀 후보자가 동일한 선거자금을 모으는데 동일한 시간과 노력이 드는지에 대해서는 조사된바가 없다. 선거 자금을 있어서 선거 운동에 투자할 수 있는 후보 개인의, 또는 가족의 자금이 문제인데, 남성 정치인들은 여성들에 비해 자신의 돈을 더 쉽게 투자하는 경향이 있으며¹⁹⁾, 남성 후보들은 또한 선거 자금 조달 이전에 벌이는 선거 활동에 더 충분한 지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남녀 후보에 따른 이런 차이는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남성 후보들에 비해 여성들은 개인 재량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가족의 소득이 적고, 그 결과 더 풍족한 남성 후보들에 비해 더 신중하게 지출하게 된다는 점, 둘째, 여성 후보들은 가족의 전체 소득에 기여한 바가 적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가족의 재정을 사용하는데 남성만큼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²⁰⁾ 가정이다.

선거자금과 관련한 또 다른 주제는 모금의 타이밍이다. 더 많은 여성을 공직에 당선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는 그 자금모금의 시기는 초기의 자금 조달이 캠프의 활동력을 확보하는데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늠한다.

선거운동 조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신적 유대조직을 기초로 각종 직능 사회단체들과의 이익적 유대의 구축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목표하는 정치를 구체화하고, 공약을 구체화하는 과정에 각종 이익집단들과 유대를 확대해 나가게 된다.

19) Mandel, Ruth B. 1981. *In the Running: The New Woman Candidate*. New York: Ticknor and Fields; McLean, Joan E. 1994. "Strategic Choices: Career Decisions of Elected Women" Ph.D.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Staton and Hughes. 1993. "To be Continued: Majority Council Summary." Washington, DC: EMILY's List.

20) Carroll, Susan J. 1994. *Women as Candidates in American Politics*. 2nd ed.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Ⅲ



17대 총선을 통해 본 여성의 정치참여 성과 및 여성계 활동내용과 향후 과제

1. 17대 총선을 통해 본 여성의 정치참여 성과	31
2. 17대 총선과 여성계 활동내용과 향후 과제	43

Two horizontal bars at the bottom of the page. The top bar is thin with a light gray cross-hatch pattern. The bottom bar is thicker with a darker gray cross-hatch pattern.

1. 17대 총선을 통해 본 여성의 정치참여 성과

가.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1) 정당법에 여성공천할당제 도입

정치권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등의 연구를 통하여 2000년 제16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여성할당 30% 정당법에 명문화하였고, 2002년 제3차 동시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하여 광역의회 비례대표제 당선권 범위 내 여성 50%이상을 공천하고, 광역의회 지역구 할당제 30%를 노력사항으로 공천할 것으로 정치관계법에 명시하도록 하였다. 이후, 정치권은 2004년 4월 15일 실시한 제17대 총선을 앞두고, 정당법 31조의 개정을 통하여 국회의원 지역구 30%, 비례대표제 50% 여성할당을 명시하였다.

(2) 정당내 여성정치발전기금의 도입

정부는 매년 정당에 국고보조금으로 경상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금년부터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중 10%를 여성정치발전기금으로 의무적으로 활용하도록 되어있다. 그간 여성들이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에 출마하기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로 ‘돈과 조직의 부족’과 ‘정당의 지원부족’ 등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어떤 정당도 여성후보육성 및 선거지원을 위한 여성정치발전기금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그러다, 제17대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매년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중 경상보조금의 10%를 여성정치인 육성 기금으로 활용하도록 되었다.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으로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으로 지급되는데, 경상보조금은 분기별로 1년에 4번, 선거보조금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또는 정당의 후보 추천이 가능한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지급하고 있다. 계상 근거는 가장 최근에 실시했던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800원으로, 제3차

동시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2002년에 정부가 정당에 지급한 국고보조금 총액은 1,134억원 규모이다. 2002년 주요정당이 받은 국고보조금은 한나라당이 531억원(경상보조금 119억원, 선거보조금 412억원), 민주당이 495억(경상보조금 112억원, 선거보조금 383억원), 자민련이 73억원(경상보조금 22억원, 선거보조금 51억원), 민주노동당 9억원(경상보조금 4억원, 선거보조금 5억원) 등이다.²¹⁾ 정당에 지급된 보조금중 경상보조금의 경우 ① 인건비 ② 사무용품 및 소모품비 ③ 사무소설치·운영비 ④ 공공요금 ⑤ 정당개발비 ⑥ 당원 교육훈련비 ⑥ 조직활동비 ⑦ 선전비 ⑧ 기타 정당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⑨ 선거관계비용 ⑩ 여성정치발전기금 등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다. 선거보조금의 경우는 후보의 기탁금, 선거지원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정치자금법 제17조의 2(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에 근거하여 광역의회 여성공천 30%이상 지킨 정당에 대하여 선거권자 총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을 주도록 되어있다.

(3) 여성국회의원의 비율 증대

금번 제17대 총선에서는 39명(13.0%)의 여성의원이 탄생되었는데, 이는 역대 총선 중 탄생한 여성의원 중 가장 많은 숫자이다. 제17대 총선에서 지역구 및 전국구 비례대표제 여성후보 및 당선자 상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구이다. 이번 제17대 총선의 지역구 여성후보는 전체 1,175명의 후보중 66명(5.6%)이며, 당선자는 10명(4.1%)이다. 여성후보를 가장 많이 공천한 정당은 민주노동당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총선에서 66명의 지역구 여성후보 중 12명(21.2%)의 여성후보를 공천하였다. 그러나 당선된 여성은 없었다. 열린우리당은 243개 선거구 중에서 229명의 지역구 후보 중 11명(4.5%)의 여성후보를 공천하였고, 이중 5명이 당선되었다. 한나라당은 228명의 지역구 후보 중 8명(3.7%)의 여성후보를 공천하였고, 이중 5명이 당선되었다. 금번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의 경우 대통령탄핵사건이 선거에 많은 영향

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제공.

을 미쳤으나, 많은 여성후보를 공천해 주었다는 평가할 수 있다. 실제, 열린우리당의 경우 유명세가 큰 은평 갑의 이미경 후보와 동대문갑의 김희선 후보, 고양 일산 갑의 한명숙 후보, 익산 을의 조배숙 후보를 공천하여 삼선, 재선, 재선, 재선의 기쁨을 맛보게 했다. 그리고 새로운 여성후보 발굴에도 노력을 기울여 안성의 김선미 후보를 공천했고, 당선토록 하였다. 금번 총선에서 비록 국회진출에 실패는 하였으나, 김진애 후보(용산), 송미화 후보(은평을), 노혜경 후보(부산 연제), 박선아 후보(대구 달서), 허운나 후보(성남구 분당갑), 양승숙후보(논산시 계룡시 금산)들은 2등으로 낙선하였지만 선전하였다.

한나라당은 16대 총선 당시 지역구에 225명의 후보 중 5명(2.2%)의 여성후보를 공천하였던 것보다 다소 많은 228명의 지역구 후보 중 8명(3.7%)를 공천하였다. 이중 유명세를 달리하는 대구 달성의 박근혜 후보, 광명 을의 전재희 후보, 고양 일산을의 김영선 후보를 공천하였다. 한나라당은 새로운 여성후보 발굴에도 노력을 기울여 서초 갑 이해훈 후보와 부산 연제에 김희정 후보를 공천하여, 당선토록 하였는데, 당선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여성을 공천하였다는 평가를 할 수 있겠다. 한나라당의 경우도 금번 총선에서 비록 국회진출에 실패는 하였으나, 양경자 후보(도봉 갑), 김을동 후보(성남 수정)후보들이 매우 선전하여 2등으로 낙선하였다.

민주노동당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여성후보는 없으나, 3등으로 낙선된 후보가 5명이나 되었다. 실제, 김미희 후보(성남 수정), 유덕화 후보(수원 권선), 최미란 후보(인천 서구 강화 을), 김은진 후보(부산 남구 갑), 안상연 후보(광주 동구)이다.

새천년민주당의 경우 추미애 의원을 당 선거대책본부장에 영입하고, 지역구에 182명의 후보 중 8명(4.4%)의 여성후보를 공천하였으나, 당선된 사람은 없었다. 대통령탄핵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아깝게도 추미애 후보(서울 광진 을)와 김완자 후보(전북 전주 완산 을)가 2등으로 낙선하였고, 박금자 후보(서울 영등포 을), 신낙균 후보(경기 남양주 갑)가 3등으로 낙선하였다.

자민련의 경우 7명, 사회당 4명, 녹색사민당 2명의 여성후보를 공천하였으나, 당선된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무소속의 경우 14명의 여성후보가 나왔으

나, 당선된 사람은 없었다<표 Ⅲ-1, 2 참조>.

결론적으로 제17대 총선에서 각 정당의 공천과 무소속으로 출마한 여성후보는 66명으로 정당법 31조에 명시되어 있는 30%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나, 과거에 비하여 진일보한 상황이다. 앞으로도 지역구 여성후보 확대를 위한 제도의 개선 및 여성후보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마련이 요구된다.

<표 Ⅲ-1> 17대 총선 지역구 여성후보자 및 당선자의 정당별·지역별 분포

정당 지역	한나라당		새천년 민주당		열린 우리당		자민련		국민통 합21		녹색 사민당		민주 노동당		사회당		무소속		전체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서울	2	1	2		4	2	2				0		4		0		1		15	3
부산	1	1	1		1		0				0		1		1		2		7	1
대구	1	1	1		1		2				0		0		0		2		7	1
인천	0		1		0		1				0		1		0		0		3	0
광주	0		0		0		1				0		1		0		0		2	0
대전	0		0		0		0				0		0		0		0		0	0
울산	0		0		0		1				0		0		1		0		2	0
경기	3	2	2		3	2	0				1		3		1		3		16	4
강원	0		0		0		0				0		0		1		0		1	0
충북	0		0		0		0				0		0		0		0		0	0
충남	0		0		1		0				1		0		0		3		5	0
전북	0		1		1	1	0				0		0		0		0		2	1
전남	1		0		0		0				0		0		0		1		2	0
경북	0		0		0		0				0		1		0		1		2	0
경남	0		0		0		0				0		1		0		1		2	0
제주	0		0		0		0				0		0		0		0		0	0
전체 (%)	8	5	8		11	5	7				2		12		4		14		66	10
여성																				
정당 전체 (%)	218 (3.7)	100 (5.0)	182 (4.4)	5	243 (3.9)	129 (3.9)	123	4	3	1	28		123	2	6		224		1175 (4.1)	243 (4.1)

* 정당전체후보자중 민주국민당(7명), 가자회당(1명), 공화당(5명), 구국초연합(1명), 기독교당(9명), 노년권익보호당(2명)제외됐음.

<표 Ⅲ-2> 지역구 여성후보 및 당선자

소속 정당	후보 및 지역구	당선 여부	소속 정당	후보 및 지역구	당선 여부
열린우리당	김진애(용산구)		민주노동당	안상연(광주 동구)	
	김희선(동대문 갑)	당선		윤택화(경기 수원 권선)	
	이미경(은평 갑)	당선		김미희(성남 수정)	
	송미화(은평 을)			정경화(고양 덕양 갑)	
	노혜경(부산 연제)			김숙향(경북 포항 북구)	
	박선아(달서 병)			김미영(경남 진주 을)	
	허운나(성남 분당 갑)		자민련	황정수(성동 갑)	
	한명숙(고양 일산 갑)	당선		곽민경(동대문 을)	
	김선미(안성)	당선		이명숙(대구 동구 을)	
	양승숙(논산·계룡·금산)			윤언자(대구 달서 을)	
	조배숙(익산 을)	당선		이경자(인천 연수)	
				유봉희(광주 북구 갑)	
한나라당	양경자(도봉 갑)			김린경(울산 남구 을)	
	이혜훈(서초 갑)	당선	사회당	용진희(부산 서구)	
	김희정(부산 연제)	당선		이향희(울산 중구)	
	박근혜(대구 달성)	당선		양부현(안양 안안)	
	김을동(성남 수정)			전미선(강원 원주)	
	전재희(광명 을)	당선	녹색사민당	임이자(안산 상록 갑)	
	김영선(고양 일산 을)	당선		곽금미(충남 천안 갑)	
	김상아(전남 여수 갑)				
새천년민주당	박금자(영등포 을)		무소속	한승민(동대문 갑)	
	추미애(광진 을)			김영수(부산 사하 갑)	
	도정옥(부산 남구 갑)			김정희(부산 수영)	
	최경순(대구 북구 을)			임은경(대구 서구)	
	김완자(전북 전주 완산 을)			박인숙(대구 북구 갑)	
	원미정(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이미경(경기 수원 영통)	
	박정희(광명 을)			이영성(성남 중원)	
	신낙균(남양주 갑)			민원통(김포)	
				엄금자(천안 갑)	
민주노동당	이선희(종로)			김현숙(논산·계룡·금산)	
	김혜련(중랑 갑)			정봉자(고흥·보성)	
	정현정(서대문 갑)			임진출(경주)	
	홍승하(영등포 갑)			성말순(김해 갑)	
	김은진(부산 남구 갑)			김옥순(충남 보령 서천)	선거전 사퇴
	최미란(인천 서구·강화 을)				

둘째, 비례대표제이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전체 56명을 선출하는 비례대표 의원에 각 정당은 전체 190명의 후보 중 91명(47.89%)의 여성후보를 공천하였는데, 이는 제16대 총선 당시 여성후보 공천비율 25.7%에 비하여 22%포인트 이상 높아진 것이다. 정당별로 비례대표 여성후보자 및 당선자를 살펴보면 <표 III-3>과 같다.

<표 III-3> 2004년 4.15총선 비례대표 여성후보자 및 당선자의 정당별 분포

정당명	전체후보자수	여성후보자수	전체당선자수	여성당선자수
열린우리당	51	26(51%)	23	12(52%)
한나라당	43	21(48%)	21	11(52%)
민주노동당	16	8(50%)	8	4(50%)
새천년민주당	26	15(57%)	4	2(50%)
자민련	15	5(33%)		0
가자희망2080	6	2(33%)		0
국민통합21	4	2(50%)		0
공화당	2	0(0%)		0
구국총연합	2	1(50%)		0
기독당	14	7(50%)		0
노년권익보호당	3	0(0%)		0
녹색사민당	6	3(50%)		0
민주화합당	1	0(0%)		0
사회당	1	1(100%)		0
합 계	190명	91명(47.89%)	56명	29명(51.78%)

열린우리당의 경우 전체 51명의 후보 중 26명(51%)의 여성후보를 공천하였고, 이중 12명이 당선되었다. 당선된 여성의원인 장향숙 한국장애인연합 공동대표, 김명자 전 환경부장관, 이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홍미영 인천시의원, 박영선 전 MBC 앵커, 김현미 전 청와대 정부2비서관, 김영주 전

전국금융노련 상임부위원장, 강혜숙 청주대 무용학과 정교수, 이은영 한국외국어대 법대 교수, 윤원호 부산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유승희 열린우리당 총괄조직실장, 장복심 대한여약사회 회장이다.

한나라당은 43명의 비례대표 후보 중 21명(48%)의 여성후보를 공천하였고, 이중 11명이 당선되었다. 당선된 여성의원은 김애실 전 대통령자문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위원, 박찬숙 KBS 보도 방송위원, 송영선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소장, 전여옥 전 KBS 기자, 이계경 여성신문사 명예회장, 나원경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영숙 전국초등학교 여자교장협의회 회장, 고경화 한나라당 보건복지 수석전문위원, 진수희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안명옥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 박순자 한나라당 안산당원지구당 위원장이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전체 16명의 후보 중 8명(50%)의 여성후보를 공천하였고, 이중 4명이 당선되었다. 당선된 여성의원은 심상정 전국금속노동조합 사무처장, 이영순 울산 전 동구청장, 최순영 민주노동당 부대표, 현애자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회장이다.

새천년민주당의 경우 전체 26명의 후보 중 15명(57%)의 여성후보를 공천하였고, 이중 2명이 당선되었다. 당선된 여성의원은 손봉숙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이사장, 이승희 전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이다.

자민련은 15명의 비례대표 후보 중 5명(33%)의 여성후보를 공천하였으나, 당선권에 든 여성후보는 없었다. 이외에도 가자희망2080은 전체 6명의 비례대표 후보 중 2명(33%)을 공천하였고, 50%의 공천기준을 지킨 기타 정당으로는 국민통합21, 구국총연합, 기독교 및 녹색사민당, 사회당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정당은 각각 2명(50%), 1명(50%), 7명(50%), 3명(50%)을 공천하였다. 여성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기타 정당에는 공화당, 노년권익보호당이 있었다 <표 Ⅲ-4>.

<표 Ⅲ-4> 정당별 전국구 비례대표제 여성후보 및 당선자

소속정당	후보 및 공천순위	당선 여부	소속정당	후보 및 공천순위	당선 여부
열린우리당	장향숙(1)	당선	한나라당	문경숙(42)	
	김명자(3)	당선	민주노동당	심상정(1)	당선
	이경숙(5)	당선		이영순(3)	당선
	홍미영(7)	당선		최순영(5)	당선
	박영선(9)	당선		현애자(7)	당선
	김현미(11)	당선		이주희(9)	
	김영주(13)	당선		송경아(11)	
	강혜숙(15)	당선		석수경(13)	
	이은영(17)	당선		이정미(15)	
	윤원호(19)	당선	새천년민주당	손봉숙(1)	당선
	유승희(21)	당선		이승희(3)	당선
	장복심(23)	당선		김송자(5)	
	서혜석(25)			김강자(7)	
	신 명(26)			이재희(9)	
	나도선(28)			김경천(12)	
	윤선희(30)			송정숙(13)	
	박정호(32)			이금라(15)	
	노복미(34)			안희옥(17)	
	고연호(36)			이윤자(18)	
	김원자(38)			최연자(19)	
	류진숙(40)			안성례(21)	
	전혜숙(42)			장영숙(24)	
	박효경(44)			임정지(25)	
	김희숙(46)			김영애(26)	
	정숙경(48)		자민련	이희자(6)	
	최은규(50)			신은숙(7)	
한나라당	김애실(1)	당선		오영자(13)	
	박찬숙(3)	당선		김용희(14)	
	송영선(5)	당선		권경애(15)	

소속정당	후보 및 공천순위	당선 여부	소속정당	후보 및 공천순위	당선 여부
	전여옥(7)	당선	국민통합21	박원경(2)	
	이계경(9)	당선		이숙자(3)	
	나원경(11)	당선	가자희망2080	이인학(4)	
	김영숙(13)	당선		안혜진(6)	
	고경화(15)	당선	구국총연합	명승희(1)	
	진수희(17)	당선	기독교당	황산성(1)	
	안명옥(19)	당선		윤계숙(6)	
	박순자(21)	당선		서경옥(7)	
	문 회(23)			안행강(9)	
	권혁란(25)			성명선(10)	
	이양자(27)			김효정(12)	
	오경자(29)			유정숙(14)	
	정은숙(31)		녹색사민당	정영숙(3)	
	차원갑(33)			최해경(4)	
	임춘자(35)			여경미(6)	
	이정은(37)		사회당	박진희(1)	
	최경희(39)		합 계	후보 총91명 중 29명당선	

17대 총선에서 지역구 및 전국구 후보로 공천되거나 당선된 여성후보들의 직업으로는 여성운동가, 학계, 법조계, 언론계, 정치인 등으로, 상당수가 정당 안에서 당직자로 활동해 온 사람들이다. 당선된 39명의 여성국회의원의 연령 층은 30대 2명, 40대 19명, 50대 13명, 60대 이상 5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학력은 대부분 대학졸업 출신으로 전체 39명 중 대졸이상자가 89.7%(35명)를 차지하고 있다. 전공으로는 법학, 행정학, 교육학, 정치학, 철학, 여성학, 간호학, 전자공학 등 다양한 전문분야를 가진 사람들이 진출했다. 17대 국회의 여성의원 비율은 13%로 여성의원 수가 30~40%에 달하는 선진국 수준엔 못 미치지만 2004년 3월 현재 세계 평균(15.4%)에 근접하고 있다. 2004년을 가히 여성 정치의 원년으로 볼 수 있는데, 여성의원들이 세력화되면 고질적인 남성 중심의 정치문화를 변화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등 대부분의 정당들이 17대 총선을 앞두고 여성유권자의 표를 인식해 여성

후보 공천 및 여성정책의 개발에 있어 매우 고심한 흔적을 보여 왔다.

(4) 여성후보에 대한 남녀유권자의 지지 확대

최근까지 각 정당은 여성후보가 남성후보에 비해 선거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평가해왔다. 이런 평가를 하는 근거는 ‘당선 가능성’이었으며, 바로 당선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내세우다보니 여성후보가 적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16대 총선과 이번 17대 총선에서 여성후보들의 선거결과를 보면, 여성후보의 당선 경쟁력이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거 여성이 공직선거에 거의 출마하지 않았고, 특히 지역구에 출마하는 여성이 극소수였을 당시, 여성이 여성에게 투표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정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여성정치인의 수가 적은 원인을 여성유권자에 있다고 보아왔다. 그러나 점차 여성후보자가 증가하고, 여성유권자 뿐 아니라 남성유권자들도 여성후보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 같은 원인은 첫째, 17대 총선을 앞두고 부정부패와 연루된 남성정치인에 대한 실망과 함께 여성이 정치를 하면 더 잘 할 수 있다는 여성 스스로의 자신감과 도전의식, 둘째, 남성정치인 일색인 정치권에 여성정치인이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한 남녀 유권자들이 여성후보자를 지지한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16대 총선 후 한국여성개발원(2000)²²⁾이 여성후보자가 출마한 수도권 지역의 남녀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남녀유권자가 여성후보를 선택할 때는 ‘소속정당’과 ‘평소의 지역구 활동’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있었다.²³⁾ 또한 다음번 총선에 여성이 출마할 경우, 남성의 85.3%, 여성

22) 학술진흥재단의 학술연구비지원과 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한국여성개발원의 김원홍·김민정·김혜영·김은경(2000),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23) 16대 총선직후 한국갤럽이 전국에서 실시한 조사에 나타난 후보 지지이유를 보면, 후보자의 ‘인물 됴됨이와 경력’(47.7%)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정당’(16.4%), 지역발전 기대(11/6%), 공약(5.6%), 지연(4.3%) 등의 순으로 나타나, 개인의 능력이 나 자질이 투표후보 결정의 최우선 기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인물/경력’에 남성 50%, 여성 45.5%, ‘정당’에 남성 15.9%, 여성 16.9%로

의 90%가 ‘능력이 있는 후보라면 지지하겠다’고 응답을 하였고, 여성유권자가 투표후보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90년대에 비해 가족과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투표하는 경향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번 17대 총선직후, 한국여성개발원이 여성부의 의뢰로 여성후보가 출마한 수도권 지역의 남녀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²⁴⁾. 조사결과 여성후보가 출마한 의미에 대해 남녀유권자 모두 남녀평등실현에 기여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아 남녀 각각 42.3%, 50.4%로 나타나 여성후보의 출마가 남녀평등의 상징적 의미로 보여지고 있으며, 남정보다는 여성이 남녀평등 실현이라는데 좀더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후보자에 대한 관심도 및 정보와 관련하여, 지역구에 출마한 여성후보에 대해, 남성 45.5%, 여성 53.5%가 17대 총선 이전부터 알고있었다고 하여 여성유권자의 경우 17대 총선 이전부터 여성후보를 알고있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번 조사에서 여성후보에 투표한 응답자는 남성 32.4%, 여성 37.3%로 여성유권자가 남성유권자보다 여성후보에 더 많이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17대 총선후 경기도에서 여성후보가 출마한 지역을 대상으로 경기도 여성정치세력연대의 오유석 박사의 조사²⁵⁾에 따르면, 남성(34.4%)유권자보다는 여성(38.0%)유권자가 여성후보에게 투표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고, 여성후보에게 투표한 가장 큰 이유도 남성유권자(11.6%)보다는 여성유권자(15.4%)들이 ‘여성이기 때문에’ 찍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점차 여성유권자들이 여성후보에게 투표하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어떤 기준으로 여성후보에 투표하였는가에 대해, 남성 응답자와 여성 응답자 모두 인물과 정당을 함께 고려한 경우가 남녀 각각 37.2%, 42.9%

남녀유권자간에 큰 차이없이 모두 인물과 정치경력을 큰 요인으로 보고 있었다(한국갤럽(2000): 326); 한국갤럽은 2000년 4·13 총선에서 사전·사후조사를 전국 만 20세 이상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조사 사례수는 2,046명이었다.

24) 김원홍·이현출·김은경(2004), 『17대총선에서의 남녀유권자 정치의식과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여성부.

25) 오유석(2004. 5 17), “4·15 총선과 경기도 남녀유권자 투표행태 연구”, 「경기도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토론회 자료집, pp.4-10

로 가장 많았다. 인물평가에서 가장 많이 고려한 요소는 남성 36.5%, 여성 44.2%로 ‘평소의 지역구 활동’을 가장 많이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후보자 인지도 및 명망성, 후보자 학력 또는 정치경력 등의 순이었다<표 Ⅲ-5>.

<표 Ⅲ-5> 인물 평가 요소

단위 : 명(%)

	남성	여성	전체
평소의 지역구 활동	35(36.5)	61(44.2)	96(41.0)
후보자 인지도 및 명망성	30(31.3)	37(26.8)	67(28.6)
후보자 학력 또는 정치경력	13(13.5)	24(17.4)	37(15.8)
여성후보이기 때문에	5(5.2)	11(8.0)	16(6.8)
출신지역 때문에	5(5.2)	1(0.7)	6(2.6)
기타	8(8.3)	4(2.9)	12(5.1)
계	96(100.0)	138(100.0)	234(100.0)

한편, 정당 평가에 고려된 요소들에 대해서 남녀 각각 30.4%, 32.8%가 정치개혁을 주도하는 정당을 중요시 여기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정당의 공약이나 정견을 평가 요소로 응답하였다<표 Ⅲ-6>.

<표 Ⅲ-6> 정당 평가 요소

단위: 명(%)

	남성	여성	전체
정당의 공약이나 정견	27(29.3)	27(23.3)	54(26.0)
정치개혁을 주도하는 정당	28(30.4)	38(32.8)	66(31.7)
정당의 탄핵 주도 정도	16(17.4)	18(15.5)	34(16.3)
향후 진보적 정당 출현 필요	15(16.3)	29(25.0)	44(21.2)
기타	6(6.5)	4(3.4)	10(4.8)
계	92(100.0)	116(100.0)	208(100.0)

여성후보에게 투표한 응답자의 34.1%가 진보적이라고 응답한 반면, 남성 후보에게 투표한 응답자의 34%는 보수적이라고 응답하여, 여성후보에게 투표한 사람은 스스로를 다소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였다. 여성 국회의원이 지금보다 더 증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응답자중 남성 59.4%, 여성 69.6%가 지금보다 더 증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지금이 적당하다는데 대해 남성 36.5%, 여성 26.8%가 의견을 나타내었다.

17대 총선에서는 고양·일산갑에서 열린우리당 한명숙 후보가 한나라당 홍사덕 후보를 이겨 당선되었고, 용산구에서 한나라당 진영후보와 맞서 열린 우리당 김진애 후보가 아깝게 낙선하였고, 은평을에서는 열린우리당 송미화 후보가 3선에 도전하는 한나라당 이재오 후보와 맞서 접전을 펼쳤으나 낙선 하였다. 이러한 선거결과를 놓고 볼 때, 여성후보가 남성후보에 비해 후보로서의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과, 남녀 유권자들의 여성후보에 대한 지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성유권자의 세력화가 요구되며, 이 과정에서 보다 많은 여성들의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질 때 성숙된 남녀평등사회를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정당들은 다음 총선을 대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정치인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당내 여성인력뱅크와 여성교육·훈련 시스템의 구축과 함께 설치되는 여성정치발전기금을 잘 활용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2. 17대 총선과 여성계 활동내용과 향후 과제

이번 제17대 총선 과정에 있어서 가장 특이할 만한 여성운동의 특징으로 개별적인 여성단체의 활동 뿐 아니라 연대활동이 두드러졌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특히, 2003년에 발족된 ‘총선여성연대’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사업과 여성 후보들에 대한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표명하며 여성운동 연대 활동의 중심이 되었고,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와 같

은 개인중심의 연대조직도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두 단체에 관한 설명을 조금 첨부하자면, 총선여성연대는 각계 여성단체 대표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범여성 조직으로, 전국적인 규모로 모였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 합의하는 과정을 세 차례 거쳤고 이를 위한 실무회의를 두 차례 가졌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별, 직능별 여성들을 대표하는 광범위한 321개의 여성단체가 참가하는 총선여성연대가 2003년 출범하게 되었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운동, 유권자 운동, 정보공개운동을 기본 사업방향으로 설정했다. 다음으로 맑은넷의 구성 취지 및 과정을 살펴보면, 17대 총선을 맞아서 여성연합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에 주력하면서 여성 후보 추천 및 지지운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별도의 조직을 추동하기로 하였다. 그러한 배경에서 전·현직 여성의원을 제외하고 성평등주의와 개혁성을 갖춘 여성인물 후보군과 지지그룹이 중심이 되어 ‘맑은넷’을 구성하게 된다. 여성연합이 제안하는 방식으로 2003년 10월에 2차례의 준비 간담회를 열어 여성원로, 언론계, 학계, 지역 여성단체 대표 등의 명의로 맑은넷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2003년 11월 6일 준비위원회 회의를 거쳐 조직 명칭, 사업 내용, 운영위원회 구성 등을 확정된 후 발족 기자회견을 가졌다. 운영위원회는 언론, 법조, 문화, 장애, 노동, 학계, 과학, 여성단체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3명의 책임간사를 선정하여 회의 운영과 사업을 추진하고 여성연합이 사무국을 맡았다.

다음으로, 17대 총선에서의 여성계의 주요 활동내용인 선거법 개선을 위한 노력, 후보자 발굴과 추천운동, 정책비교와 유권자운동, 그리고 기금 모으기 운동 등에 관해 살펴보자.

가.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

2004년 총선을 맞이하여 구시대적 인물 청산 뿐 아니라 구조적 개선을 통한 정치개혁의 완결과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환경조성과 제도개선을

가장 큰 목적으로 삼았던 총선여성연대는 여성 정치진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했다.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정치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고(2003/11/12), 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서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 등에 제출했다(2003/11/19). 특히, 토론회를 통해서 선출직과 비례직을 2:1로 하고 비례직 중 여성을 훌쩍 순번으로 50% 할당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정당에 대해서는 선관위 접수를 불허하고, 지역구 30% 여성 공천 의무화 및 당내경선에서 여성의 경우 득표수에 20% 가산점제도 도입을 각 당에 권고하고, 이를 실천한 경우 국고보조금 확대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국고보조금 중 10% 여성정치인 양성기금으로 사용하는 등에 관한 내용이 논의 되었다.

뿐만 아니라 총선여성연대는 총 21회에 걸쳐 국회 정치개혁특위 및 소위(정당법, 선거법) 방청 활동도 했다. 또한 수차례의 집회를 통해서 기존 정치인들이 여성의 정치참여확대에 대한 어떠한 고려도 없이 그들의 기득권 수호를 위해 추진하고자 했던 정치관계법 개악 시도를 저지·규탄하고자 했다. 총선여성연대에서 추진한 각종 집회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치개혁 실현을 촉구하는 시민, 여성, 민중 학계 공동 기자회견 개최(2003/12/22)’, ‘지역구 늘리기, 날치기 통과 시도 규탄 여성 집회 개최(2003/12/24)’, ‘정치개악 추방과 정치개혁 실현을 촉구하는 시민, 민중, 종교, 여성, 학계, 단체 공동 집회 개최(2003/12/24)’, 그리고 ‘정치개악 저지 규탄 농성(2003/12/24)’을 가졌다. 특히 2004년 1월 20일에는 <정치개악규탄 여성비상 시국회의>를 열어서 각 정당들이 자신들의 당리당락에만 관심을 가지고 정치개혁특위에서 정치적으로 소외된 계층인 여성을 우선 희생시키려는 반여성적 논의를 진행²⁶⁾한 것에 대한 대책 협의를 했다. 또한 총선여성연대는 정치개혁과 여성정치참여 확대

26) 2004년 1월 15일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정당법 소위를 열고 비례대표 후보자 여성 50% 할당과 지역구 후보자 여성 30% 할당 의무화 방안은 “정당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반대로 당시 정당법 개정에 포함하지 않고, 현행대로 비례대표 여성 30% 할당 의무화 조항만 두기로 했다. 그리고 총선여성연대 측은 16일 최병렬 대표와의 면담에서 한나라당의 당론이 “지역구 16명을 증가시키는 대신, 비례를 16명 줄이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를 위한 각종 제도개선 제안서와 성명서 등을 당대표 면담 등을 통해서 각 당에 전달했다.

이처럼 범여성계가 단결하여 정치관계법 개정 과정에 밀착해서 정치권을 감시하고 압박 했기 때문에 이번 17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수의 증가와 50% 여성할당 법제화가 성취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그러한 제도개선이 여성의원 진출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겠다.

나. 후보자 발굴과 추천운동

또 2004년 3월 25일 경에는 총선여성연대가 비례대표 후보선정 기준에 대한 총선여성연대의 제안서를 각 당에 전달했다. 이를 통해 총선여성연대는 그 동안 공천헌금, 밀실공천과 명망가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바람직하지 못한 공천의 관행을 수정하고, 소수정당 및 여성, 장애인 등 소수그룹의 정치진출을 보장하기 위한 비례대표제 본래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비례대표 선정에 있어서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총선연대가 제안한 비례대표 후보가 갖추어야할 자질로는 도덕성과 성실성, 전문성, 민주성과 개혁성, 그리고 양성평등의식이었다.

총선여성연대의 그러한 노력 못지않게 여성인재를 발굴해서 추천하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맑은넷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 발족 선언문을 통해서 ‘여성 100인 국회로 보내기’ 캠페인 전개를 선언한 맑은넷은 기성정치인, 전·현직의원, 장관은 이미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제외하였으며, 나머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 온 능력 있는 여성들을 발굴하여 각 정당에 추천하는 운동을 통해 ‘능력 있는 여성이 없다’며 여성후보 공천을 기피해 온 정당에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또한 각 분야에서 국가사회발전과 양성평등을 위해 오랜 기간 일해 온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정치 분야에서 펼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고자 했다.

먼저 13명의 ‘여성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여성후보 추천받는 일을 시작했다. 맑은넷 홈페이지와 여성신문, 우먼타임즈, 여성단체 안내공문 등

을 통해 홍보를 시작하고 2003년 11월 15일부터 12월 6일까지 1차 추천을 받았고 2003년 12월 25일까지 2차 추천을 받아 서류심사를 통해 ‘여성후보 추천위원회’에서 2차례의 회의를 통해 101명의 맑은넷 여성후보를 확정하였다. 선정기준은 도덕성, 전문성, 양성평등의식 및 민주적 리더쉽 등이다. 101명 명단 중에는 출마를 구체적으로 희망하는 여성도 있었지만 맑은넷의 ‘등 떠밀기’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수락한 여성들도 있었다. 101명의 여성 중에서 지역구를 희망하는 여성이 많지 않았다. 조직과 재정에서 열세인 여성들이 경선을 거쳐 지역구 공천을 받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임을 드러내 준다. 비례직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많았지만 비례직 의석이 46석에서 30석으로 줄어들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성후보 추천운동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비례직이 56석으로 증가하면서 맑은넷 여성후보 리스트는 각 정당에서 중요 참고자료가 되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17대 총선에서 선출된 39명의 여성의원 중에 지역구 10명 중 3명, 비례직 29명 중 18명이 맑은넷 추천 여성 후보였다는 점은 상당히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하겠다.

다. 정책비교와 유권자운동

여성계는 처음에는 이번 17대 총선이 정책선거 중심이 될 거라는 예상을 하고 각 당의 여성공약을 비교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계획하였으나, 각 당 대표들의 불참 의사를 표현함에 따라 결국 그 계획은 무산되었다.

2004년 4월 12일에는 총선여성연대가 대한 YMCA연합회에서 각계 신문기자들을 초빙하여 여성정책의 관점에서 정당 여성공약 평가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러한 각 당 여성공약 비교 검토하는 과정에서 선심성 공약 및 베끼기 작업도 있었지만, 보육이나 모성보호법 등 여러 면에서 각 당의 공약들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많아졌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탄핵사건 이후 정책비교 작업에 힘이 실리지 못했다.

또한 총선여성연대는 공천부적격 반여성후보 명단을 발표했는데, 16대 국

회 회의록 분석에 기초하여 양성평등관련 법안 및 정책 찬반여부, 여성 비하적 발언여부, 가부장적 여성상 강화 발언여부 등을 기준으로 총 8명의 공천 부적격 후보 명단을 발표했다(2004/02/04).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공천 부적격·반여성 후보들의 낙선율이 매우 적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이 부재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겠다.

또한 명동과 윤중로 등에서 꽃씨나 책자를 배포하며 “잘 보자! 잘 찍자! 확보하자!”라는 모토 아래 여성유권자를 통한 정치개혁을 이루어보자는 캠페인을 벌였다. 맑은넷은 여성의원이 맑은정치, 평등정치의 대안임을 부각시키고자 했으나 대통령 탄핵사건으로 ‘여성정치’에 대한 관심 또한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또한 선거법에서 단체의 선거참여 금지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서 규제하여 캠페인을 다양하게 추진하기 어려웠다는 점 또한 지적되었다.

라. 기금 모으기 운동

남성정치인들에 비해 자금력과 조직력이 부족한 여성정치인들을 후원함과 동시에 여성의 힘으로 ‘투명정치’를 앞당기자는 취지에서 여성재단과 맑은넷 총선여성연대가 주축이 되어서 기금 모으기 운동을 실시했다. 결과적으로 큰 액수의 기금 조성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여성들 스스로가 나서서 소액의 금액으로라도 여성 후보를 지지하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불법자금 조성과 같은 과거 선거의 고질적인 관행을 깨뜨리고 깨끗한 지원금이 형성되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마. 평가 및 향후 과제

17대 총선에서의 성과 중의 하나가 바로 여성연대 활동을 통한 정당법 31조에 지역구 30%, 비례표제 50% 여성공천할당제와, 국고보조금중 10%를 여성정치발전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성과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하여 유권자들의 여성후보에 대한 인식 개선이 다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

는데, 17대 총선에서의 여성운동의 성과로는 다른 시민운동의 영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운동은 예외이지 않았나 생각한다. 2000년도 16대 총선은 낙천·낙선운동을 중심으로 하였는데, 2003년에 321개의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총선여성연대를 발족시키면서 17대 총선에서는 여성후보들에 대한 지원에 적극 나섰다. 그리고 ‘맑은 여성정치네트워크’를 조직하여 101명 여성후보 리스트를 작성하여 각 당에 보내고 각 당 대표에게 건의하고, 지역이나 비례대표에 넣어달라고 압력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활동이 얼마나 영향력을 주었는지는 앞으로 연구해야겠지만 맑은넷 추천후보가 상당수 진입, 특히 전원직 의원까지 합하면 거의 80%까지 되는데 이러한 것이 여성계가 중점적으로 한 일로서 그 어느 때 선거보다 여성운동 활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던 선거였다. 그리고 여성운동이 전개한 사업으로는 정책비교와 유권자운동을 들 수 있다. 정책비교운동의 경우 2004년 1월까지 제도 개선 운동을 마무리하고 후보추천운동을 끝내고 2, 3월부터 공약비교작업을 할 계획이었으나, 탄핵사건이후 정책비교작업이 약해졌다. 이번 총선에서 각 정당들은 선언적이고 선심성 공약 및 베끼기 작업도 있었지만 보육이나 모성보호법 등 여러 면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이 진일보하였다. 그리고 총선여성연대는 선거 기간 중 여성유권자들을 통해서 정치개혁을 이루어보고자하는 뜻에서 ‘잘보고 잘 찍자, 그래서 확 바뀌버리자’는 구호로 포크와 돋보기 등을 게시물로 가지고 갔고, 명동과 윤중로 등에서 캠페인의 한 방법으로 꽃씨, 캠페인 책자 등을 나누어 주었다. 마지막으로 여성재단과 맑은넷·총선여성연대에서 한 기금모으기 운동이 있었다.²⁷⁾

그러나 문제점도 도출되었는데 먼저 321개 단체가 모였지만, 사실 실제 활동단체는 몇 안 되었고 321개 단체가 모였을 때 단체 회원들까지 하면 정말 많은 여성들이 같이 일할 수 있었는데 명목상으로는 많이 모였다고 하지만,

27) 본 내용은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의 조현옥대표, 김영옥 전 사무국장, 하정은 사무국장의 의견 및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2004), 「여성 100인 국회보내기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 17대 총선을 위한 여성연대(2004), 「17대 총선을 위한 여성연대 활동보고 자료집」을 김원홍(여성개발원), 배진숙(연세대 국제대학원 졸업)이 정리한 것임.


실제 중심에서는 몇몇 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동원의 문제가 노출되었다. 즉, 여성운동의 대중화에는 한계점이 컸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여성단체의 회원들의 정당참여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가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그간 우리나라의 정당문화상 여성단체의 회원들이 정당인으로 참여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여성의 정치참여가 보다 활성화되고, 여성의 힘으로 정치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는 여성단체 회원들의 적극적인 정당 참여 또한 요구된다는 점이다. 독일의 녹색당의 경우 당초 시민운동적 차원에서 정당을 결성하여, 이념을 함께 하는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후보를 발굴하고, 선거운동도 지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어렵다는 것을 또 한번 느낀 선거였다는 점이다. 앞으로 정치에 관심이 있는 여성단체의 경우 선거에 임박하여 정당에 후보자명단을 제시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으나, 1-2년전부터 단체 회원들을 정당에 참여시켜 정당활동을 하면서 후보로 나서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총선여성연대나 맑은 정치 네트워크가 정치운동을 하는 조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하여 전혀 논의를 못한 것은 여성운동의 한계로 보여진다.

IV



17대 총선 선거과정에 있어서 주요 정당의 여성후보 지원정책

1. 주요 정당의 여성후보 공천의 기본방향과 여성의 대표성	53
2. 주요 정당의 여성정책 공약과 여성후보 지원정책	75



1. 주요 정당의 여성후보 공천의 기본방향과 여성의 대표성

가. 열린우리당²⁸⁾

(1) 열린우리당의 17대 총선시 후보공천의 기본방향

열린우리당은 17대 총선에 맞추어 “국민참여 경선은 필수적”인 것이며, “정치신인을 배려해야” 한다는 상향식 공천의 틀을 제시했다. “기존의 현역 국회의원의 프리미엄이나 지구당위원장의 기득권을 포기하도록 만드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당중앙에 당안팎의 인사 20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예비후보자에 대한 사전검증을 실시하고, 도덕성이나 범죄사실, 여론조사 등의 기준으로 후보자들이 경선을 치르도록 한 것이다. 즉, ① 2개 이상의 선거구에 중복신청한 자, ② 다른 당의 당적을 보유한 자, ③ 당선되더라도 법령에 의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 ④ 신청시 학력, 이력, 기타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자, ⑤ 경선불복 등 해당행위를 한 자, ⑥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 파렴치 범죄, 부패범죄, 공직자의 직무상 범죄, 기타 중대한 범죄의 전력이 있는 자, ⑦ 당의 강령 및 기본정책에 명백히 어긋나는 행위를 한 자, ⑧ 기타 공직후보자로 추천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자, ⑨ 여론조사결과 등 객관적인 근거에 비추어 명백히 당선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등은 부적격자로 정하였다.

또한 정치신인을 등용이나 정치개혁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한 여론조사에서 과거처럼 단순 인지도만 묻지 않도록 정치신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배려하였으며, 당헌·당규에서 “정치신인의 인지도가 낮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밖에 열린우리당은 국민의 직접적인 정치참여를 꾀하기 위해 기득권적 요소가 강한 당원의 선거인단 포함 비율을 없앴 완전개방형의 국민참여경선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선거인단 구성은 해당 선거구의 모든 유권자를 대상

28) 열린우리당 당헌당규 http://www.eparty.or.kr/info/info_06_01.asp?menu=2 참조할 것

으로 여론조사표본추출방식으로 구성하였고, 이에 원칙적으로 선거인은 우리 당을 지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선정하되, 부득이한 경우 지지정당이 없다는 의사표시를 한 유권자도 선거인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일반국민의 참여를 보다 확대했으며, 선거인단 구성시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비례를 고려하여 대표성의 균형을 꾀했다. 아울러 공직후보자 선출 시 유능한 인재를 폭넓게 발탁하기 위하여 국민추천제도를 시행하도록 당헌/당규에서 규정하고 있다.

(2) 열린우리당의 17대 총선의 후보공천 절차

열린우리당의 17대 총선에 있어 후보공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단계 : 후보자 공모, 영입
- 2단계 : 공직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의 부적격자 심사
- 3단계 : 전략공천지역 선정 및 경선후보군(2~3인) 선정(여론조사, 실태조사 등)
- 4단계 : 국민참여경선
 - 선거인단 구성 : 해당 선거구 모든 유권자 대상의 여론조사표본추출 방식으로 구성
- 5단계 : 최종 후보자 확정(당 중앙위원회 의결)

(3) 17대 총선과 열린우리당의 공직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열린우리당은 17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후보공천을 위한 공직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와, 비례대표 후보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추천을 위한 순위확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자 선정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공직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는 당내 인사와 당외 인사를 동수로 하여 16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의 이념과 취지에 비추어 후보자가 되기에 부적합하다거나, 여론조사 결과 등으로 당선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등의 경선 참여자격을 제한하고 심사하게 하였다. 즉 ① 심사를

거쳐 부적격자를 배제하고, ② 공직후보자는 상향식 경선을 통해 선출하며, ③ 경선결과에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에서 결정하게 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비례대표 후보선정에 있어서는 선정위원회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추천을위한순위확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사하게 하고 있다. 선정위원회는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는 30인 이상 5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내인사와 당외인사를 각각 동수로 구성하며 또한 순위확정위원회는 중앙위원, 국회의원, 시·도지사등의 위원과 중앙위원회가 선임하는 동수의 당외 인사로 구성한다고 밝히고 있다. 선정위원회는 공정성을 기해 부적격자를 우선 배제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를 선정한 후,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서류심사, 정견 발표, 후보자에 대한 인터뷰, 후보자간 집단토론 등을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순위확정위원회는 선정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국회의원비례대표후보자명부에 등재되는 순위를 확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서류심사, 정견 발표, 후보자에 대한 인터뷰, 후보자간 집단토론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연임한 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가 될 수 없고,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 중 여성을 50% 추천하며 홀수순번에 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지역구 국회의원 경선후보자 추천

열린우리당 공직선거의 경선후보자는 공직후보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2일 이내로 선거기탁금, 서류와 함께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경선방식은 기간당원경선 또는 국민참여경선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기간당원경선방식의 경우 선거인단은 기간당원만으로, 국민참여경선방식의 경우 기간당원은 30% 이상 50% 이하로 하는 등의 방식을 취한다. 그러나 17대 총선의 경우 국민참여경선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구성은 여론조사 표본 추출방식과 신청자 모집 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성되었다. 투표방식은 직접투표와 선호투표방식이 있는데, 당헌/당규에서는 선호투표방식에 의해 제1순위 득표수를 계산하여 유효투표자 수의 과반수

득표자를 국회의원후보자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제1순위 득표수가 최하위인 후보자는 탈락시키고, 그 후보에게 1순위로 기표했던 투표지의 2순위 기표를 해당 후보자에게 분배하여, 각 후보자별로 합산하며, 합산한 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저득표자를 탈락시키고 최저 득표자를 1순위로 기표했던 투표지의 차순위 기표를 해당 후보자에게 분배하여, 각 후보자별로 합산하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여성의 경우에는 위의 과정 중 최종 2인의 후보자가 남을 때까지 탈락하지 않을 경우 당헌 제102조 제2항에 따라 그 여성후보의 득표수에 20%를 가산한 득표수가 그 여성후보의 득표수가 된다고 밝히고 있다.

지역구에서도 전략공천지역과 경선지역을 선정되게 되는데 중앙위원회는 후보자를 단수추천하는 전략공천지역(이하 전략공천지역이라고 한다)을 선거구 총수의 30% 이내에서 선정할 수 있다. 이는 공직후보자심사위원회가 정하는 당세가 취약한 지역, 유력한 후보자가 없는 지역, 선거전략 상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지역 등을 기준으로 전략공천지역을 선정하여 당의장이 상임 중앙위원회와 협의하고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데, 경선지역 선정 이전에 선정하여 공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 중앙위원회의 의결로써 예외를 둘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경선에 대한 불복의 조치로서, ① 공직후보자추천선거의 결과에 불복하여 당해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간 복당을 할 수 없고, ② 공직후보자추천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는 일정액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공탁하고, 선거결과에 불복하여 당해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그 후보자의 공탁금을 몰수하는 선거공탁금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등의 방안을 규정하였다.

(5) 17대 총선에서의 열린우리당 후보공천과 여성의 대표성²⁹⁾

(가) 지역구

열린우리당은 지역구 후보공천을 위하여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29) 열린우리당 여성국 자료 제공.

18명의 위원중 여성이 3명이었다. 심사위원장으로 김광웅 서울대 교수가 임명되었고, 당내 이우재, 남궁석, 김태홍, 임채정, 김한길, 박병석, 이창복, 김희선(여) 16대 국회의원과 이강철 영입추진단장, 윤원호 중앙위원과 당외 김문환 서울대 교수, 권만학 경희대 교수, 김주영 소설가, 박재동 화백, 윤지희(여) 전 참교육실천학부모 회장, 이재철 변호사, 조기숙(여) 이화여대 교수가 위원이었다. 열린우리당은 243개 선거구에서 229명의 지역구 후보 중 11명(4.5%)의 여성후보를 공천하였고, 이중 5명이 당선되었다. 열린우리당의 여성후보가 공천된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당에서 자체 여론조사를 통하거나 공천심사위원회의 판단에 의하여 공천 신청후보가 우세하다고 판단된 경우 단수후보로 결정한 경우, 당차원에서 여성후보를 특별히 공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전략지역, 후보자간 경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경선지역이 있고, 여성후보가 공천을 신청한 후 비례대표 신청으로 자발적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방식 1. 단수후보 결정

후보사례 : 이미경(서울 은평 갑), 김희선(서울 동대문 갑), 조배숙(전북 익산 을), 허운나(경기 성남분당 갑) ⇒ 당선자: 이미경, 김희선, 조배숙

◇ 방식 2. 전략지역 선정 후 전략후보 결정

후보사례 : 한명숙(경기 일산 갑), 김진애(서울 용산), 노혜경(부산 연제구), 양승숙(충남 논산·계룡·금산), 박선아(대구 달서 병) ⇒ 당선자: 한명숙

◇ 방식 3. 경선

후보사례 : 김선미(경기 안성), 송미화(서울 은평 을), 김은경(서울 노원), 박영자, 김윤덕(전북 전주 완산), 김수진(서울 강남 을), 류정숙(충남 당진), 이윤정(광주 동구) ⇒ 경선 통과자: 김선미, 송미화 ⇒ 당선자: 김선미

※ 여성 지역구 공천신청자 중 당내 경선 심사과정에서 제외되거나 탈락된

사례:

- ◇ 공천신청 후 비례대표 신청으로 자발적으로 전환한 사례
 - 고은광순(서울 서초 갑), 홍미영(인천 부평 갑), 윤원호(부산 북강서 을)
- ◇ 전략지역 선정으로 경선에서 제외된 사례
 - 이지숙(서울 서초 을), 이미경(경기 수원 영통)
- ◇ 경선심사과정에서 탈락된 사례
 - 이명례(충남 보령 서천)

(나) 비례대표

열린우리당은 비례대표 공천에 있어서 후보 선정위원회와 후보 순위확정 위원회를 이원적으로 가동하였다. 순위확정위원회에 당내외 인사를 균등하게 참여시켜, 민주적으로 투표를 통하여 후보를 결정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후보선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순위확정위원회 선거인단으로 당내외 각각 100인씩, 200인으로 구성하고, 비례대표 후보자의 정견발표와 투표를 통해 순위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순위는 상임중앙위원회가 먼저 전략후보자 12명의 순번을 정하고(순위지정후보), 순위확정위원회는 나머지 후보 순번을 득표수에 따라 정하도록 하였다. 1인 4표를 행사하되, 남녀 각 2인을 투표하도록 하였으며, 그 순서는 1번에서 25번까지 여성이 홀수순위에, 남성을 짝수순위에 배정하며, 26번부터 40번까지는 남성이 홀수순위에, 여성을 짝수 순위에 배정하도록 하였다. 이는 비례대표 후보의 선출에 있어 민주화를 기하였지만, 선거운동 기간과 방법을 지나치게 제한하였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열린우리당의 비례대표제 후보로는 경우 전체 51명의 후보 중 26명(51%)의 여성후보를 공천하였고, 이중 12명이 당선되었다. 당선된 여성의 원은 장향숙 한국장애인연합 공동대표, 김명자 전 환경부장관, 이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홍미영 인천시의원, 박영선 전 MBC 앵커, 김현미 전 청와대 정부2비서관, 김영주 전 전국금융노련 상임부위원장, 강혜숙 청주대 무용학과 정교수, 이은영 한국외국어대 법대 교수, 윤원호 부산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유승희 열린우리당 총괄조직실장, 장복심 대한여약사회 회장이다.

나. 한나라당³⁰⁾

(1) 한나라당의 17대 총선시 후보공천의 기본방향

한나라당은 17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기성 정치권에 대한 냉소·혐오가 심각한 상황에서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총재 1인 주도의 공천권을 당원과 국민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상향식 공천과 절차적 민주주의 발전을 기하고 공천의 객관성·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건전한 보수 세력의 중심에 있으면서 가치중립적인 성향의 명망가들을 공천심사위원회에 절반 참여 시키는 방향으로 나간다”는 기본원칙을 수립하여, 2004년 1월 9일 한나라당의 17대 총선의 후보공천 기본방향을 밝혔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나라를 바로세우고 경제를 살리며 변화를 선도할 유능한 인재를 후보로 추천하는 것이 한나라당의 공천 목표라는 것이다.

둘째, 공직자의 엄격한 도덕성은 국민이 이 시대에 요구하는 최우선적 가치라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나라당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공직 후보자로서의 부적격요인으로 판단하여 공천에서 우선적으로 배제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①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자, ② 파렴치한 범죄 전력자, ③ 부정·비리 등에 관련된 자, ④ 탈당·경선불복 등 해당 행위자, ⑤ 유권자의 신망이 현저히 부족한자로 정하였다. 아울러 다음의 원칙에 충실한 분을 한나라당 후보로 공천하게 될 것임을 밝히고 있다. ① 개인의 이익보다 국익을 우선시킬 사람, ② 깨끗한 정치를 선도할 사람, ③ 경제를 살릴 사람, ④ 사회의 소외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⑤ 나라를 바로 세워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사람, ⑥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이념을 충실히 실천할 수 있는 사람, ⑦ 건전한 보수와 안정적 개혁의 시대정신을 계승할 사람을 한나라당의 후보로 공천하는 것이 목표로 하면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하여 지역구 30% 공천과 비례대표 50%이상, 홀수 순번에 공천하도록 하겠음을 밝히고 있다.

30) 한나라당 당헌당규 <http://www.hannara.or.kr/hannara/info/rules/rules.jsp> 참조할 것

셋째, 참신하고 유능한 정치신인을 적극 등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전국구의 전원을 정치신인으로 충원하고, 향후 국가의 자산이 될 젊은이의 열정과 도전정신이 성취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밝히고 있다.

넷째, 정치신인의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후보공천에 있어 공정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지구당 위원장직의 사퇴를 결의하고, 현역 지구당 위원장은 후보등록시 위원장직 사퇴서도 함께 제출토록 하고, 지구당 위원장의 기득권적 요소가 강한 당원의 선거인단 포함 비율을 최소화(당원 10%, 일반국민 90%)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선거인단수의 규모를 인구의 5% 규모로 대폭 확대 위해 선거법개정을 노력중에 있다 하였다.

다섯번째, 공천과정에 있어 경선시 후보의 불법을 엄단하기 위하여 혼탁, 불법 경선을 엄단하고, 불법부정 확인시 경선 당선자라도 사후에 탈락시킬 수 있도록 당규에 명문화한다는 것이다.

여섯번째, 비례대표에는 경제, 국방·안보, 교육, 과학기술, 방송, 문화·예술, 보건복지, 시민운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와, 소외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인재를 등용하겠다는 밝힌 바 있다.

(2) 한나라당의 17대 총선의 후보공천 절차

한나라당의 17대 총선에 있어 후보공천에 있어 6단계의 절차를 거치게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단계 : 후보자 공모
- 2단계 : 공천심사위원회의 부적격자 심사(벌금형 이상의 범죄경력조회 등)
- 3단계 : 단수후보 추천지역 선정 및 경선후보군(2~3인) 선정(여론조사, 실태조사 등)
- 4단계 : 국민참여선거인단 대회(경선)
 - 선거인단 구성 : 당원 10%와 일반국민 90%의 비율
- 5단계 :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 결과심사
 - 경선시 부정한 선거운동이나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되었을 경우 경선1

위자의 후보자격 박탈

- 6단계 : 최종 후보자 확정(당 운영위원회 의결)

(3) 17대 총선과 한나라당의 후보공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한나라당은 제17대 총선을 앞두고, 2003년 12월 26일 공직후보자추천규정을 만들었다. 여기서는 각급선거에 있어 후보공천과 관련하여 당헌 제63조(구성)에 근거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다. 공천심사위원회는 ① 당 소속 각급 공직후보에 대한 공모, ② 당 소속 각급 공직후보에 대한 심사 또는 선정, ③ 당 소속 각급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에 대한 선정, ④ 사고지구당 판정과 조직책 선정의 기능을 지니고 있다. 공직후보자의 추천은 공모, 자격심사에 의한 단수 또는 복수의 후보자 선정,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 결과심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공직후보자의 추천과 관련하여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추천은 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는 공천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국민참여형 지구당선거인단대회의 선출 과정을 거쳐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되며 당대표가 추천한다. ② 지구당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선출할 수 없다고 공천심사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확정한다. ③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30%는 여성으로 하도록 한다. ④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출 및 추천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등이다. 그리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서는 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공천심사위원회에서 후보자와 그 순위를 정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추천한다. ②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지역·직능 등의 균형적 안배 및 당내 기여도를 고려하여 선정하고, 여성이 50%이상 포함되도록 하며 그 순서는 성별 교차식으로 한다. ③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대상자 선정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등이다.

그리고, 경선후보자의 경우 공직후보자를 추천하는데 있어 공모하여, 자격심사에 의한 단수 후보가 아닌 복수의 후보자가 경선후보로 선정된 경우 경선후보로 확정·의결한 자 중 해당 선관위에 후보자등록을 필한 자로 하여금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를 거쳐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 결과심사를 거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4) 지역구 국회의원 경선후보자 추천

한나라당의 공직선거의 경선후보자는 공직후보 추천신청자 중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경선후보로 확정·의결한 자로서 선거기간 개시일 전 5일에(이하 ‘후보자등록신청일’이라 한다) 중앙당 선관위에 경선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경선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중앙당선관위가 정한 서류와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선거인단의 구성은 ① 국민참여 지역구 선거인단은 당원 10%와 일반국민 90%의 비율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② 국민참여 선거인단의 규모 등 기타사항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선거기간 및 선거일의 경우 ① “선거기간”이라 함은 선거인단 명부 확정일 후 1일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하며 6일 이내로 한다. ② 선거일은 공천심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지역구 경선후보자가 확정·공고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구당선관위가 공고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당선관위의 승인을 얻어 선거일공고를 변경할 수 있다. 공직후보자의 추천 확정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공천심사위원회는 국민참여 선거인단대회의 결과를 존중하여 공직후보자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 경선결과에 영향을 미친 불법선거운동이나 현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② 공천심사위원회는 제2조와 제8조에 의하여 단수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여 공천심사위원회가 지역구 국회의원후보자로 추천한 자는 중앙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로 최종 확정된다.

(5) 17대 총선에서의 한나라당 후보공천과 여성의 대표성³¹⁾

(가) 지역구

한나라당은 17대 총선에서 후보공천과 관련하여 공모와 영입 방법을 병행하였다. 공모의 경우는 자발적 참가이나, 심사위에서 공모한 인사만으로 적합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적당한 인물을 영입하는 방식이었다. 한나라당의 경우 야당으로 영입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정치권에 대한 불신뿐 아니라, 이번 경우에는 탄핵바람으로 더욱 어려웠다. 영입후에도 공천심사위에서 단독후보일지, 경선을 할지 결정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제17대 총선에 지역구 공천심사위원회에 김문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강만수, 이계경을 부위원장으로 하였으며, 강혜련, 김석준, 김성조, 김영수, 나경원, 심규철 안강민, 이문열, 이방호, 이성현, 이춘호, 홍준표 등을 위원으로 하였다. 실무간사로 고흥길 16대 국회의원이 있었다.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16대 총선 당시 지역구에 225명의 후보 중 5명(2.2%)의 여성후보를 공천하였던 것보다 다소 많은 228명의 지역구 후보중 8명(3.5%)를 공천하였다. 이중 유명세를 달리하는 대구 달성의 박근혜 당선자, 광명읍의 전재희 당선자, 고양 일산율의 김영선 당선자를 배출하였다. 한나라당도 새로운 여성후보 발굴에도 노력을 기울여 서초갑 이해훈 후보와 부산 연제에 김희정 후보를 공천했고, 당선토록 하였다. 한나라당의 경우도 금번 총선에서 비록 국회진출에 실패는 하였으나, 양경자 후보(도봉 갑), 김을동 후보(성남 수정)후보들이 매우 선전하여 2등으로 낙선하였다. 여성후보가 공천된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당에서 공천심사위원회 판단에 의하여 여성공천신청후보가 우세하거나 특별한 대안이 없다고 판단하여 단수후보로 결정한 경우, 당차원에서 여러 후보를 대상으로 공개토론을 실시하여 우세후보로 여성이 공천에서 선출된 경우, 당차원에서 여론조사를 통하여 우세후보로 선정한 경우 여성후보가 포함된 경우, 공천심사운영위원회에서 일차로 후보로 다른 후보가 선발되었다가, 재심의 과정에서 여성이 후보로 선발된 경우, 경선지역이 있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31) 한나라당 여성국 및 공천심사관련 담당자 면접조사.

◇ 방식1. 단수후보 결정 - 여론조사예외지역

후보사례: 박근혜(대구 달성군), 김상아(전남 여수) ⇒ 당선자: 박근혜

◇ 방식2. 공개토론우세후보

후보사례: 김희정(부산 연제), 이혜훈(서울 서초 갑) ⇒ 당선자: 김희정,
이혜훈

◇ 방식3. 여론조사우세후보

후보사례: 김을동(경기 성남 수정), 전재희(경기 광명), 양경자(서울 도봉 갑), 김영선(경기 고양 일산 을) ⇒ 당선자: 전재희, 김영선

◇ 방식4. 운영위원회 의결 재심의 지역

후보사례: 이혜훈(서울 서초 갑), 양경자(서울 도봉 갑) ⇒ 당선자: 이혜훈

◇ 방식5. 경선지역

후보사례: 김정숙(경기 안양 동안 갑), 서정희(울산 남구) ⇒ 경선 패배

(나) 비례대표

한나라당의 경우 중앙당의 공천심사위원회에 전권을 부여하여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였다. 당시 비례대표 공천심사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세일 공동 선대위원장이 맡았고, 김광원 의원, 김주영 변호사, 남경필 의원, 양경자 전 의원, 엄영석 전 동아대 총장, 이승훈 서울대 경제학 교수, 이연숙 전 제2정무 장관, 이영란 숙대 법과교수, 이윤성 의원, 차광은 포천중문의대 부총장이 있었다. 한나라당은 43명의 비례대표 후보 중 21명(48%)의 여성후보를 공천하였고, 이중 11명이 당선되었다. 당선된 여성의원인 김애실 전 대통령자문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위원, 박찬숙 KBS 보도 방송위원, 송영선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소장, 전여옥 전 KBS 기자, 이계경 여성신문사 명예회장, 나원경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영숙 전국초등학교 여자교장협의회 회장, 고경화

한나라당 보건복지 수석전문위원, 진수희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안명옥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 박순자 한나라당 안산 단원 지구당 위원장이다.

다. 민주노동당³²⁾

(1) 민주노동당의 17대 총선시 후보선정의 기본방향

민주노동당은 17대 총선에서 “민중이 배제된 소수 특권층의 정치, 시장의 횡포에 의한 소수의 풍요와 다수의 빈곤”을 비판하고 “민중의 정치”, “환경과 인간의 공존”,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인재를 후보의 주된 기준으로 삼았다.

민주노동당의 후보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당성(민주노동당 강령 이행 여부 등)이며, 공천의 방식이 아니라 당원직선에 의해 후보가 선출된다. 즉 당권을 보유한 진성당원을 통해 뽑는 것이지 후보에 관해 중앙의 차원에서 정하는 것은 없으며, 후보자격에 대한 심사도 당원들 자체적인 판단에 맡긴다. 성폭력 혐의자와 같은 당행적이 좋지 않은 사람은 공론화됨으로써 당원들이 알아서 판단하게 하는 당원 자율적인 심사방법이다.

(2) 민주노동당의 17대 총선의 후보선정 절차

- 1단계 : 후보들의 자제적 후보등록
- 2단계 : 단수후보지역, 경선후보지역 결정
 - 토론회, 후보검증작업, 당내 여론화, 각자 선전 등으로 지구당별 후보결정
- 3단계 : 당원투표
 - 직접투표, 인터넷 투표, 우편투표 등의 방식으로 후보자 결정
- 4단계 : 최종 후보자 확정(당 중앙위원회)

32) 민주노동당 당헌당규 참조할 것

http://www.kdnp.org/index.php?kdnp_act=kdnp&kdnp_act2=content&content=const00

http://www.kdnp.org/index.php?kdnp_act=kdnp&kdnp_act2=content&content=rules00

(3) 후보공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모든 후보의 공천은 진성당원 직선에 의한다. 중앙의 차원에서 별도의 후보공천심사위원회가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후보자격에 대한 심사도 당원들 자체적인 판단에 맡긴다.

보통 중앙당 선관위, 시도당 선관위, 지구당 선관위가 있는데, 주로 지구당 차원에서 처리된다. 중앙당은 큰 틀로 시기를 정해주면, 시도당이나 지구당에서 알맞게 조절하여 운영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서울의 서대문 갑 지구당이라 하면 후보들이 당원추천 100인 이상을 받아 후보등록하는 방식이다. 자체적으로 지구당에서 결정하는데 다수인 경우 후보 토론회 등을 거친다.

다시 말해 토론회, 후보검증작업, 당내 여론화, 각자 선전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당원들의 직접투표(지구당 등), 인터넷 투표, 우편투표 등의 방식으로 후보자가 결정된다. 실제 80~90%는 인터넷 투표이고, 지구당 투표는 근처에 살거나 간부들에 의해 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다수의 득표를 한 후보자가 선정되지만 한 후보자가 전체투표수의 과반수를 얻지 못하는 경우는 재투표한다.

(4)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정

민주노동당은 2003년 3월 1일에 당헌 제8장과 당규 제3호에서 공직선거에 대한 규정을 개정했는데, 후보선정과 관련하여 지역구후보는 당해 지구당 전체 당원의 직선으로 선출하며, 중앙위원회에서 인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비례대표 후보는 당원직선으로 선출하고, 여성에 50%이상을 할당하며,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선거관리와 선출방식 등 국회의원 후보 선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하고 있다.

이 때 공정한 후보자 선출을 위하여 선거운동과 선거에 관한 사항을 중앙당 공직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 및 지구당 공직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다. 즉 선거관리위원회는 ① 투·개표 등 선거관리 업무, ② 선거관련 유권해석, ③ 선거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④ 선거운동 관리업

무, ⑤ 기타 선거에 관련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또한 이에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의 기능을 통합·관리하며, 시·도 및 지구당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지휘·조정한다.

지역구 후보의 경우 후보등록기간은 등록개시일로부터 5일로 하며, 등록은 후보자등록신청기간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한다. 이 때 선거운동기간은 15일 이내로 정해지며, 공직선거 후보자의 선거전체 일정은 당해 선거일전 30일까지 실시된다. 당원직선에 의해 후보가 선출되는데, 당권을 보유한 진성당원들이 해당 지구당에서 직접 투표하거나, 인터넷 투표, 우편투표를 통해 후보를 결정한다.

비례대표 후보의 경우에도 후보등록기간은 등록개시일로부터 3일로 하며, 3개 광역시도지부에 걸쳐 선거권이 있는 당원 100명~200명의 추천을 받아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다. 총 선거운동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되, 선거운동에 관련한 일체의 사항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다. 투표와 명부 작성 방법에 있어 전 당원 직선으로 후보자를 결정하는데, 당원은 여성명부와 일반명부에 각각 1인 2표씩 행사하고, 종다수로 명부를 작성하며, 여성을 정당명부의 홀수 순번에 배정한다.

(5) 17대 총선에서의 민주노동당 후보공천과 여성의 대표성³³⁾

(가) 지역구

민주노동당은 중앙당차원의 공천심사위원회의 구성없이 공직 후보뿐만 아니라 당직자를 선출하는데 진성당원에 의하여 선출한다. 이에 따라 17대 총선에서도 진성당원을 통한 후보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하였는데, 여성이라고 특별히 가점을 주는 제도는 없다. 후보경선이나, 공천의 절차로는 보통 중앙당 선관위, 시·도당 선관위, 지구당 선관위가 있는데, 주로 지구당 차원에서 처리된다. 중앙당은 큰 틀로 시기를 정해주면, 시·도당이나 지구당에서 알맞게 조절하여 운영하는 방식이다. 후보자 추천은 자체적으로 지구당에서

33) 민주노동당 여성국장 면접조사결과 정리

결정하는데 다수인 경우 후보 토론회 등을 거친다. 경선의 방식으로는 토론회, 후보검증작업, 당내 여론화, 각자 선전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당원들의 직접투표(지구당 등), 인터넷 투표, 우편투표 등의 방식으로 후보자를 결정한다. 실제 80~90%는 인터넷 투표이고, 지구당 투표는 근처에 살거나 간부들에 의해 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다수의 득표를 한 후보자가 선정되지만 한 후보자가 전체투표수의 과반수를 얻지 못하는 경우는 재투표한다. 민주노동당은 총243개 선거구에 123명(3월31일 현재)의 후보가 결정되었으며, 이들 중 12명(9.7%)의 여성후보를 공천하였다. 김미영(경남 진주 을), 김미희(성남 수정), 김숙향(포항 남구), 김은진(부산 남구), 김혜련(서울 중랑 갑), 이선희(서울 종로), 유덕화(수원 권선), 정경화(고양 덕양 갑), 정현정(서울 서대문 갑), 최미란(인천 서구 강화 을), 홍승하(서울 영등포 갑), 안상연(광주 동구)들이다. 열린우리당(4.5%)이나 한나라당(3.5%)에 비해 두 배 이상의 공천비율을 보였으나 당선된 이는 아무도 없었지만, 3등으로 낙선된 후보가 5명이나 되었다. 실제, 김미희 후보(성남 수정), 유덕화 후보(수원 권선), 최미란 후보(인천 서구 강화 을), 김은진 후보(부산 남구 갑), 안상연 후보(광주 동구)이다.

(나) 비례대표

민주노동당은 다른 정당과 달리 진성당원이 직접·무기명 투표로 비례대표를 선정하였다. 민주노동당은 지도부가 내세우는 선정기준은 없고,³⁴⁾ 후보들이 전국을 돌며 당원을 대상으로 정책을 설명하고 5만 당원이 직접 지지도를 투표해 순번을 정하였다. 타 정당과 달리 ‘홀수번 여성배정과 짝수순번의 남녀구분 철폐’, ‘1인4표제(여성명부 2표, 남녀구분없는 일반명부 2표제)’를 도입, 여성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전체 16명의 후보 중 8명(50%)의 여성후보를 공천하였고, 이중 4명이 당선되었다. 당선된 여성

34) 민주노동당은 당원들에게 총선후보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설문을 하였다. 그 결과 당 공헌도와 계급·부문별 할당이 우선시 되었으며 전문성과 대중적 인지도, 지역 대표성, 연령, 세대대표성, 여성의 교차할당 등이 선정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밖에 후보자 개인의 청렴성과 성품 등도 거론되었다.

의원은 심상정 전국금속노동조합 사무처장, 이영순 울산 전동구청장, 최순영 민주노동당 부대표, 현애자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회장이다.

라. 새천년민주당³⁵⁾

(1) 새천년민주당의 17대 총선시 후보공천의 기본방향

민주당은 17대 총선을 앞두고 총선의 성패는 깨끗하고 유능한 ‘경쟁력있는 인물’을 공천하는데 달려있다는 인식하에 상향식 공천제도의 기본틀을 지켜 나가면서 ‘투명한 절차확보’, ‘최선의 인물선택’, ‘경선부작용 극소화’에 중점을 두어 원칙을 수립하였다. 2004년 1월 6일 민주당의 17대 총선의 후보공천 기본방향을 밝혔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당에서는 반독재민주화 운동의 전통을 이어받아 민주발전을 주도하고 중산층과 서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인재를 후보로 추천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① 민주주의 발전에 공헌이 많은 사람, ② 국가 및 지역 사회 발전에 공헌이 많거나 헌신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람, ③ 지도급 인사로서 도덕성과 덕망이 높으며 청렴결백을 생활의 기본자세로 삼는 사람, ④ 당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⑤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 ⑥ 기타 공직후보자자격심사특위의 의결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천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둘째, 깨끗하고 유능한 경쟁력 있는 인물을 등용시키기 위해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부적격자로 판단하여 배제됨을 밝히고 있다. ①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② 같은 종류의 선거에 있어 2개 이상의 선거구에 중복신청한 때, ③ 후보자가 당적을 이탈, 변경한 때, ④ 2 이상의 당적을 보유하고 있을 때, ⑤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 제①항 제3호에 의거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자, ⑥ 후보 등록시 이력서에 학력, 이력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기재한 자가 그에 속한다.

셋째, 정치신인들을 보다 등용하려 하고 있다. 특히 비례대표에 있어서 직

35) 새천년민주당 당헌·당규 <http://www.minjoo.or.kr/minjoo/danglaw.html>

능별 대표성, 지역별 대표성, 당에 대한 기여도, 네티즌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추천위원들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각계인사들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이를 심의하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에는 3회 연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여성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에 50%이상과, 홀수 순번에 공천하도록 하고 있다.

(2) 새천년민주당의 17대 총선의 후보공천 절차

민주당의 17대 총선에 있어 후보공천에 있어서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단계 : 후보자 공모, 영입
- 2단계 : 공직후보자자격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적격여부의 심사
- 3단계 : 단수후보 추천지역 선정 및 경선후보군(2~3인) 선정
- 4단계 :
 - △당원과 일반국민이 50대50으로 구성되는 국민참여경선(유권자 총수의 1% 이상 참여)
 - △전당원경선(당원 총수 10% 이상, 500명 이상 참석)
 - △당원과 당원이외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50대50의 비율로 하는 여론조사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 5단계 : 국민참여경선의 결과에 대한 심사
 - 경선시 부정한 선거운동이나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되었을 경우 경선1위자의 후보자격 박탈
- 6단계 : 최종 후보자 확정(당 중앙위원회 의결)

(3) 17대 총선과 새천년민주당의 공직후보자자격심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민주당은 2003년 11월 5일 공직후보에 대한 자격심사를 위해 공직후보자자격심사특별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만들었다. 공직후보자자격심사특별위원회는 당헌 제23조에 의거하여 당대표가 상임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

위원회의 의결로써 확정된 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직후보자자격심사특별위원회는 ① 각급 공직후보자의 인준, ②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원대회 및 선거인단대회 참가 당원의 자격기준 부여, ③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관리 등을 할 수 없는 지구당의 공직선거 후보자의 선정, ④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 후보자의 심사·의결, ⑤ 공직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명백한 부정선거행위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선거 결정 및 후보자 교체 결정 권한 등의 기능을 지니고 있다. 특히 공직후보자의 추천은 공모, 자격심사에 의한 단수 또는 복수의 후보자 선정, 국민참여경선과 그 결과의 심사,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추천은 공직후보자자격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와 국민참여경선의 선출과정을 거쳐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이 때 후보자를 심사, 의결함에 있어 공신력있는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등 당원과 유권자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구당이 사고당부(지구당위원장 직무대행 지역 포함)이거나 영입인사 지역 등으로 지구당 상무위원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의 선출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다른 방법으로 정하며, 이에도 불구하고 지구당에서 공직후보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직접 심사 의결한 후보를 상임중앙위원회의 의결과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공직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의 관리는 당규에 의하고, 당원자격 확정 등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직 후보자 자격심사 특별위원회에서 경선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비례대표에 있어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추천을 위한 추천위원회가 직능별 대표성, 지역별 대표성, 당에 대한 기여도, 네티즌 대표성 등을 고려한 대상자를 제안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추천을 위한 선정위원회에서 후보자와 그 순위를 확정하여 당대표가 추천한다.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후보에 3회 연임은 불가하며, 여성이 50% 이상, 홀

수 순위에 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추천을위한추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는데,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는 2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위원 선출에 있어 당내인사와 당외인사를 각각 동수로 구성하여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수의 1.5배를 추천한다. 이 때 현직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추천위원에서 배제된다. 추천명단에 있어서 정해진 순위에 따라 1순위부터 10순위까지의 대상자를 1급조로 편성한다. 이 때 10순위 안에 여성이 5인 미만일 때는 11순위 이하 대상자 중 가장 높은 순위를 얻은 여성의 순서대로 포함시킴으로써 10명 중 최소한 5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구성한다. 같은 방법으로 전체 대상자를 각급 조로 편성하고 있다.

(4) 지역구 국회의원 경선후보자 추천

민주당의 공직선거 경선후보자는 당헌 제98조, 제9조, 제100조, 제101조에 규정한 방법에 의하여 국민참여경선 또는, 전당원경선에서 비밀투표로 선출되거나 여론조사방식으로 선출하여 당대표가 추천한다. 여기서 국민참여경선은 지구당상무위원회에서 경선방법을 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이미 당원이 된 자와 경선방법이 결정된 이후 새로이 당원이 된 자의 비율이 50:50로, 전체 유권자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전당원경선은 전체 당원의 10% 이상, 500인 이상이 투표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선거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여론조사방식은 당원과 당원을 제외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50:50의 비율로 각각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합산하는 방법으로 하거나, 당원과 비당원의 구분 없이 당해 선거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법을 택한다. 이에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국민참여경선, 전당원경선 또는 여론조사방식에 의한 선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하고 있다.

경선일정은 각 지구당 상무위원회에서 정하되, 경선방법은 경선일로부터 25일 전까지 결정하며, 입당원서는 경선일로부터 20일 전까지 마감하고, 선거인 명부 작성은 경선일 12일 전까지 완료, 경선에 참여할 후보등록은 경선일 7일 전에 실시한다.

중앙위원회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에 있어 여성이 30% 이상 반영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여성이 남성후보와 공동 1위인 경우, 여성을 후보자로 결정한다. 또한 여성이 2위인 경우에는 해당 득표수의 20%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참여경선에서 선거인단은 경선방법 결정일 이전에 당원이 된 기존당원선거인과 이후 5일간 당원으로 가입한 신규당원선거인을 50:50으로 하는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며, 선거인단의 수는 당해 선거구 전체 유권자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화여론조사인 경우 당원과 당원을 제외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50:50의 비율로 당원은 당원명부에 등재된 당원을 대상으로 하고, 당원을 제외한 유권자는 해당 지역 전화국에 가입한 가정용 전화번호부를 근거로 당원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밖에 당원과 비당원의 구분 없이 당해 선거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할 때에는 해당 지역 전화국에 가입한 가정용 전화번호부를 근거로 실시한다. 여론조사는 상대당 지지자들에 의한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민주당의 지지여부를 물으며, 그 비용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참여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여론조사에서도 공직후보자를 선정할 수 없을 시에는 공직후보자격심사위원회에서 직접 심사 의결한 후보를 상임중앙위원회의 의결과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여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로 최종 확정한다.

(5) 17대 총선에서의 새천년민주당 후보공천과 여성의 대표성³⁶⁾

(가) 지역구

새천년민주당은 강운태 민주당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직후보자 자격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김성순, 조성준, 송훈석, 최영희 등 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박강수 전 배제대 총장, 정오규 부산시 지부장, 차범석 전 예술원 원장, 김송자 전 노동부차관, 김경준 딜로이트컨설팅 상무이사, 김성남 전 부패방지위원회 위원 등을 위원으로 하였다. 또한, 새천년민주당은 추미애의원을 당 선거대책본부장에 영입하고, 지역구에 182명의 후보중 8명

36) 새천년민주당 여성국장 및 공천심사담당자 면접조사 결과 정리.

(4.4%)의 여성후보를 공천하였으나, 당선된 사람은 없었다. 대통령탄핵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새천년민주당의 여성후보공천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당 심사위원회에서 단수후보로 결정한 경우, 경선방식에 의한 경우, 지역구 후보로 결정되었으나 탄핵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후보를 사퇴한 경우가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방식1. 단수후보 결정

후보사례: 추미애(광진 을), 박금자(영등포 을), 도종옥(부산 남구), 박정희(경기 광명시), 안상현(강원 원주), 배영애(경북김천) ⇒ 당선자: 없음

◇ 방식2. 경선

후보사례: 양경숙(종로)<경선탈락>, 원미정(인천 중구·동구·옹진)<경선 승리>, 김완자(전북 전주 완산)<경선 승리> ⇒ 당선자: 없음

◇ 기타. 사퇴

후보사례: 최미란(도봉 갑), 이미애(양천 을), 정봉화(부산 남구), 김경천(광주 동구), 허영순(수원 팔달)

(나) 비례대표

새천년민주당의 경우 비례대표 공천심사특별위원회는 지역구 공천심사특별위원회가 겸하였다. 즉, 강운태 민주당 사무총장이 위원장으로 하고, 김성순, 조성준, 송훈석, 최영희 등 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박강수 전 배제대 총장, 정오규 부산시 지부장, 차범석 전 예술원 원장, 김송자 전 노동부차관, 김경준 딜로이트컨설팅 상무이사, 김성남 전 부패방지위원회 위원 등을 위원으로 하였다. 비례대표 후보의 공천절차로는 선정위원회에서 후보를 공모하고, 순위를 결정한 후 후보를 확정하여 중앙위 의결을 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여성후보의 순위를 결정하였다. 새천년민주당의

비례대표후보의 경우 전체 26명의 후보 중 15명(57%)의 여성후보를 공천하였고, 이중 2명이 당선되었다. 당선된 여성의원은 손봉숙 한국정치연구소 이사장, 이승희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이다.

2. 주요 정당의 여성정책 공약과 여성후보 지원정책

여성의 정치참여는 결국 전반적인 여성의 사회적 권한확대를 위한 것이다. 여성의 사회적 권한제고의 중요성 및 그 역할 증대에 대한 강조는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있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 과거의 가치관 및 관행, 제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여 여성의 사회적 권한 확대의 실질적인 발전이 지연되고 있다.

여성의 정치참여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첫째, 사회 전반의 모든 의사결정과정 및 생활 영역에서 양성의 동등한 참여 없이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는 점, 둘째 발전의 과정 및 목표형성과정에서 여성의 참여 없이 발전목표의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이다.

여성의 사회적 권한은 주로 여성의 정치 및 정책참여기회로 대표되는데, 이에 대한 지표로 고위직 여성공무원 및 관리직 비율, 국회의원의 여성비율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한 주요정당의 공약내용³⁷⁾은 <표 IV-1>과 같다.

37) 한국정책학회,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정책공약 비교분석집」(2004년 3월 29일)과 제17대 총선여성연대가 정당의 공약을 비교분석한 자료에 근거하였음.

<표 IV-1> 여성의 정치참여 관련 주요정당의 공약 비교

정당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관련한 주요정당의 공약사항
열린우리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구 후보 경선 시 여성에게 20% 가산점 부여 - 2006년 지방자치선거에서의 여성 진출의 지원 확대(정당보조금의 10%를 「여성정치발전기금」으로 조성) - 당내의 「여성정치리더십센터」의 설치를 통한 여성지도자 양성
한나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정치 참여의 확대(각급 선거에서의 비례직 준수 및 지역에서의 여성 30%달성을 위한 여성후보에 20%의 가산점 부여) - 여성권리 향상 위한 국가기구 확충(공천심사기구에 여성 30% 참여보장 및 각급 당직 및 위원회의 여성 참여 30% 의무화 추진) - 여성 정치 지원의 확대(정당보조금 10%를 여성정치발전기금으로의 확보 및 지방자치단체 부 단체장 1명을 여성으로의 의무화) - 장기적인 여성에 대한 정치교육 강화
민주노동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을 1:1로 조정. - 여성의 정치활동 기회 확충(정당의 각 조직체계에 30% 여성할당 실시 및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강화) - 여성의 공직사회 진출의 기회 확대(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의 목표치의 상향조정 및 공기업 30% 여성채용 목표제의 시행) - 여성농민정책 전담부서 설치 및 여성농민의 지위 보장(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실의 여성국으로의 승격 및 지방자치단체에 여성농민정책 전담부서의 설치 및 공동농업경영주로서의 여성을 위한 법 개정)
새천년 민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선출직의 지역구 30%할당제 도입(2006)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위직에의 여성임용의 확대 (공공부문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 상향조정 및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20% 제고)

<표 IV-1>에서 보듯이 각 정당들이 여성의 사회적 권한향상을 위한 공약으로 제시한 정책 중 대표적인 것이 여성할당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당에서 할당제를 공약사항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적극적으로 여성의 정치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에서는 여성정치발전기금의 명시화를 통한 금전적 지원과 교육지원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할당은 각 정당들이 제시한 비율도 30-50%까지 비교적 폭이 넓은 편이다. <표 IV-2>는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민주노동당 등 4개 이상 정당이 공통으로 제시한 21개 공약의 내용이다.

<표 IV-2> 4개 이상 정당이 공통으로 제시한 21개 공약

(한 : 한나라당, 민 : 민주당, 열 : 열린우리당, 자 : 자민련, 노 : 민주노동당)

12개 분야 및 공통공약		한	민	열	자	노
① 보육정책	1. 보육서비스의 다양화	○	○	○	○	○
	2. 보육교사 처우 개선	○	○	○	○	○
	3.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	○	○	○	○
② 모성보호 관련 정책	4. 산전후 휴가급여 사회분담 확대	○	○	○	○	○
	5. 육아휴직급여의 상향 조정	○	○	○	○	○
	6. 모성보호제도 적용대상을 비정규직, 가내노동자, 저소득 자영업 여성, 농촌여성까지 확대	○	○	×	○	○
	7. 임신,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중 계약해지 등 성 차별적 행위 규제	○	×	○	○	○
③ 호주제 폐지	없음	○	○	○	×	○
④ 양성평등한 가족정책	8. 부부공동재산법 제정	○	○	○	○	○
	9. 합의이혼시 자녀 부양의무 명시 및 부양비용 선 지급 및 구상권 행사	○	○	○	×	○
	10. 한부모 가족에 대한 경제적·정서적 지원	○	○	○	×	○
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보호정책	11.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확대적용	○	○	○	○	○
	12.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근로감독 관 증원, 행정지도 강화	○	○	○	○	○
⑥ 여성일자리 창출 정책	13. 여성창업지원(보육)센터 강화	○	○	○	○	○
	14. IT 등 첨단 분야 등에 여성일자리 창출	○	○	○	○	×
	15.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을 위한 지역 사회복지시 설 확충 등 공공서비스분야의 여성전문직종 개발	○	○	○	×	○
⑦ 성인지시스템 구축	없음					
⑧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 정책	없음					
⑨ 이주여성 정책	없음					
⑩ 여성농민 정책	16. 농가도우미제도 적용범위와 기간, 지원금 확대	○	○	○	×	○
	17. 여성농업인센타 확대 설치	○	○	○	×	○
⑪ 여성장애인 정책	18.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지원을 위한 가 정도우미 파견	×	○	○	○	○
	19.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 근절 및 피해자 지원체 계 마련	○	○	○	×	○
⑫ 여성폭력예방, 피 해자 보호 정책	20.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	○	○	○	○
	21. 성매매 전담반 설치 및 수사지침 강화	×	○	○	○	○
총 계		18	20	20	15	20

자료: 제17대총선여성연대, 「정당 여성공약 평가 발표 기자회견」, 2004. 4. 12.

가. 열린우리당

(1) 공약

열린우리당은 2006년 지방선거시 여성의 진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을 공약사항으로 하여, 정당보조금의 10%에 해당하는 일부를 여성정치발전기금으로 조성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당내에 여성정치리더십센터의 설치를 통해 차세대 여성정치지도자 양성을 위한 공약을 제안하였다.

(2) 당차원의 선거운동지원정책

열린우리당의 경우 여성후보 지원과 관련하여 당선가능성이 높은 지역구에 공천하지는 않았다. 이는 열린우리당이 창당하는 과정에서 탄핵이전에 우세한 지역을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성후보 지원과 관련하여 당차원에서 모든 행사를 할 때마다 여성후보를 가장 앞쪽에 배치하고, 여성후보들만의 홍보용 기자회견을 가졌다. 선대위 발족식에서도 여성후보의 얼굴이 드러나게 배려하거나 행사 중에 여성을 배치하는 등의 전략이 있었다. 또한 당차원에서 유세지원 등도 여성후보에게 있었다. 여성위원회 차원에서는 열린우리당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여성후보 사이트를 별도로 운영하면서 여성후보를 홍보하였고, 당사 내부에 여성후보를 홍보하는 대형 현수막을 걸어두어 출입기자 등 관계자들에게 알리기도 하였다. 한편, 비례대표 여성후보들이 지역구에 출마한 여성후보 지원을 위해 방문유세 지원이 있었다.

나. 한나라당

(1) 공약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과 마찬가지로 지역구 30% 여성할당제 달성을 위해 경선시 여성후보에게 20%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공약을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정당 내 의사결정기구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각급 당직 및 위원회에 여성 참여 30%를 의무화하고, 공천심사기구에도 여성참여 30%를

보장하는 등 여성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기구의 확충을 공약으로 발표하였다. 또한 정당보조금의 10%를 여성정치발전기금으로 확보하는 안과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1인을 여성으로 임명하는 것을 의무화하자는 안을 제안하였다.

(2) 당차원의 선거운동지원정책

한나라당의 여성후보지원정책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당선가능성이 높은 지역구에 여성후보를 공천한 것이다. 한나라당의 우세지역이었던 부산 연제구에 김희정 후보를, 서울 서초구 갑에 이해훈 후보를 각각 공천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음으로 박근혜 대표를 비롯하여 인지도가 높은 여성대변인 등 스타급 의원으로 구성된 선거드림팀을 구성하여, 여성후보가 출마한 지역을 방문하여 지원유세를 하였다.

다. 민주노동당

(1) 공약

정당의 각 조직체계에서 30% 여성할당제 실시와 국회의원과 지역구 시도의회 선거시 지역구와 비례의원 비율을 1:1로 한 것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매우 발전적인 공약이다. 다만, '정당법에 여성할당조항 의무화, 국고보조금 차등지급' 공약은 이번 정당법 개정안에 포함된 사항이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여성농민의 지위향상정책을 내세워 다른 정당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2) 당차원의 선거운동지원정책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의 경우 여성후보에 대한 지원정책으로는 언론에서의 여성후보에 대한 홍보와 총선직전 민주노동당 여성후원회를 통해 모금한 자금(1000만원 안되는 정도)을 지역구 여성후보 12인에게 동일하게 배분하였다. 또한 다른 정당과 마찬가지로 비례대표 여성후보들이 여성후보가 출마한 지역을 순회하며 지원유세를 하였다.

라. 새천년민주당

(1) 공약

모든 선출직에서 지역구 30% 여성할당제를 실시하겠다는 공약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고위직에 여성임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공약이 중점내용이다.

(2) 당차원의 선거운동지원정책

새천년민주당은 사실상 열린우리당으로 당원의 인력이 분리되면서 소수정당으로 총선을 맞이하게 되었고, 탄핵을 주도하면서 당시 유권자의 표심이나 정치적 상황은 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당시 추미애 대표가 삼보일배로 한나라당의 ‘박근혜 바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였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지역구에 출마한 여성후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기도 어려웠다. 다만 다른 정당과 마찬가지로 비례대표 후보순위에 여성과 남성을 번갈아 올리며 비례대표제를 통한 여성후보의 당선에 주력하였다.

마. 소결

주요정당의 여성후보에 대한 지원은 경선과정에서 단수후보로 공천하거나 정당차원에서 전략후보 또는 우세후보로 판단하여 지역구에 전격 공천한 정도이다. 우리나라 선거에서 정당의 공천이 주는 의미는 선거과정을 비롯하여 당락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경선과정을 치르지 않고 본선에 바로 출마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여성후보에 대한 배려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단수후보나 전략·우세후보로 선정된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대부분 지명도가 큰 인물로 지역구 내에서 이미 인지도를 쌓은 후보들이거나, 전국 지명도가 있는 인물로서 영입인사인 경우가 있었다. 선거의 당선가능성을 놓고 볼 때 정당의 결정으로는 당연한 조치라고 볼 수 있으나, 정당의 신인후보 발굴과 여성후보에 대한 지원정책이라고 했을 때는 좀더 적극적인 차원에서의 후보지원이 필요하다.

<표 IV-3> 지역구 여성후보 공천을 통한 지원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새천년민주당
단수후보	이미경 김희선 조배숙 허운나	박근혜 김상아	-	추미애 박금자 도종옥 박정희 안상현 배영애
전략후보 · 우세후보	한명숙 김진애 노혜경 양승숙 박선아	김희정 이혜훈 전재희 김영선 김을동 양경자	-	-
경선과정 (여론조사포함)을 통해 공천된 후보	김선미 송미화	-	여성후보 12명 전원	원미정 김완자
총 여성 공천자 수	11명	8명	12명	8명

또한 정당은 일단 공천한 이후에 선거과정에서의 조직운영이나 선거원을 통한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번 17대 총선을 치르면서 정당차원에서는 여성당대표 혹은 여성대변인의 지원유세와 여성정치인에 대한 필요성을 유권자에 호소하는 전략 정도로 지역구에 출마한 여성후보를 지원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역구에 출마한 여성후보는 선거캠프를 운영하는 가운데 새로이 운동원을 조직하고 조직책을 구성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선거를 치르게 된다. 정당은 선거운동원으로서 지역조직의 운영과 인적·물적·경제적 자원 등에 대한 정보를 출마한 후보와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인적·물적·경제적 자원 등에 대한 이중의 투자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비례대표 후보에 여성후보 50%를 공천해야하는 정당법 개정사항에 따라 각 정당에서는 비례대표 후보에 여성을 50% 공천하였다. 비례대표 순위

에 있어서도 여성을 홀수번, 남성을 짝수번에 배치시켰다. 이러한 결과 비례대표를 통한 여성후보 당선자가 16대에 비해 크게 증가하여 29명이 되었다.

<표 IV-4> 비례대표 여성후보 50% 공천을 통한 지원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자	26명(51%)	21명(48%)	8명(50%)	15명(57%)
비례대표 당선자	12명	11명	4명	2명

주요 정당의 여성관련 공약은 보육정책, 모성보호관련 정책, 호주제폐지, 여성비정규직노동자, 여성폭력예방 및 피해자보호정책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공통적인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정치분야에서 여성의 정치참여확대와 관련해서 주요정당은 정당보조금의 10%에 해당하는 기금을 여성정치발전기금으로 조성하는데 대해 공통적인 의견을 나타내고 있었고, 각 정당별 주안점으로는 열린우리당의 경우는 차세대여성정치지도자 육성, 한나라당은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1인의 여성 임명, 민주노동당은 여성농민의 지위향상정책, 새천년민주당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고위직에 여성임용확대를 각각의 세부 중요사항으로 제시하였다.



여성후보의 경선 및 총선 선거운동 참여관찰 사례분석

1. 경선 사례	86
2. 총선 본선 사례	101

17대 총선과정과 결과를 놓고 볼 때, 여성의원 수가 16대 당시 5.9%에 비하여 2배 이상 되는 13%로 되었다. 이렇게 여성국회의원 비율이 늘어난 것은 정당법 31조에 비례대표제 여성공천 50% 할당을 명시하고, 정당들이 과거보다 지역구에도 많이 공천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의 영향도 있었지만, 보다 강력한 정치개혁법을 만든 것도 영향이 컸다고 보아진다. 17대 총선의 정치개혁법의 기본방향은 “후보자의 돈이 많이 드는 선거를 지양하고, 유권자에게 알릴 기회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① 지구당을 폐지하고, ② 합동연설회, 정당연설회를 폐지하고 TV 후보토론을 실시하였고, ③ 정치자금 후원방법을 변경하고, 기부금액을 축소하고, ④ 후보자 측으로 부터 음식대접을 받거나, 돈을 받는 경우 50배를 물어내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였다. ⑤ 정당정치의 제도화를 위하여 1인2투표제가 처음으로 실시하였고, ⑥ 경선불복자의 출마도 금지하였다. 이러한 17대 총선시 정치개혁법의 제정과 함께 주목을 끄는 것 가운데 하나는 각 당 공천 방식의 다양성이다. 지금까지 하향식·밀실 공천은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 폭을 제한하고 정당 개혁의 발목을 잡아 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의 극복방식으로 정당들은 상향식·개방 공천 방식을 제시했다. 경선방식은 당원 직접 경선부터 당원과 국민이 참여하는 소위 국민참여 경선, 당원과 시민을 아예 구분하지 않는 완전 개방형 국민경선, 유권자 여론조사, 심지어 인터넷 공모, 후보자 토론방식까지 여러 가지였다. 선거인단의 규모도 천차만별이다. 3000여명에 이르는 곳도 있지만 500명밖에 되지 않은 곳도 있다. 실제 투표에 참여한 선거인단은 적은 경우 150명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100표도 못 미치는 득표로 당선이 결정된 곳도 있다. 경선을 거친 여성후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의 상황이었다. 열린우리당의 경우 229개 공천지역 가운데 86곳(37.6%), 민주당은 217개 공천지역 중 73곳(33.6%)에서 경선제를 실시하였고, 한나라당의 경우 228개 공천지역 가운데 단지 15곳(6.6%)에서 경선제를 실시하였다<표 V-1>.³⁸⁾

38) 중앙일보 2004년 3월 25일(목)(목포대 김영태 교수).

<표 V-1> 주요정당 공천현황(2004년 3월 22일 현재)

구분	한나라	민주	열린우리
전체	228	217	229
단일후보 공천지역	213	144	143
경선(예정)지역	15	73	86
경선비율	6.6%	33.6%	37.6%

자료: 각당 자료 참조

1. 경선 사례

가. 여성후보자의 경선참여 관찰 사례의 유형

정당별로 경선제를 거친 여성후보는 다음과 같다. 열린우리당의 경우 지역에 공천을 신청한 22명의 여성후보 신청자 중 경선방식을 거친 사람은 7명 <김선미(경기 안성), 송미화(서울 은평 을), 김은경(서울 노원), 박영자, 김운덕(전북 전주 완산), 김수진(서울 강남 을), 류정숙(충남 당진), 이윤정(광주 동구)> 이었는데, 경선통과자는 2명(김선미, 송미화)에 불과하였다. 한나라당의 경우 27명의 여성후보자중 경선지역이 2명(김정숙(경기 안양 동안 갑), 서정희(울산 남구))에 불과했는데, 경선을 통과한 여성후보는 없었다. 새천년민주당의 경우 공천을 신청한 19명중에 3명이 여론조사방식에 의한 경선을 실시하였는데, 양경숙(종로구), 원미정(인천 중구·동구·옹진), 김완자(전북 전주 완산) 3후보 중 원미정, 김완자 2사람이 경선을 통과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선 특성별로 여성후보 5명의 경선사례를 살펴보았다. 경선사례로는 국민참여경선방식을 거친 열린우리당의 송미화 후보(서울 은평 을), 김선미 후보(경기 안성), 김은경 후보(서울 노원 을), 한나라당의 김정숙 후보(안양 동안 갑), 유권자 여론조사 방식을 거친 민주당의 김완자 후보(전주 완산 을) 등이다. 이들 후보들의 경선 및 본선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송미화 후보는 경선에서는 승리하였으나, 본선에서 낙선하였다. 김선미 후보는 경선과 본선에서 모두 승리하였다. 김은경 후보와 김정숙 후보는 경선에서 낙선하였다. 김완자 후보는 경선에서는 승리하였으나, 본선에서 낙선하였다<표 V-2>.

<표 V-2> 경선 참여관찰 사례의 유형

후보자	정당	지역구	경선방식*	경선결과	총선결과
송미화	열린우리당	은평을	국민참여경선제	당선	낙선
김은경	열린우리당	노원을	국민참여경선제	낙선	-
김선미	열린우리당	경기 안성	국민참여경선제	당선	당선
김정숙	한나라당	경기 안양 동안갑	국민참여경선제	낙선	-
김완자	민주당	전주 완산을	유권자여론조사	당선	낙선

*경선방식에서 후보 5명 모두 여성후보 인센티브로 20% 가산점을 부여받음.

나. 여성후보자의 개인적 특성

여성후보의 출생지와 학력, 사회·정치활동 경력, 선거경험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열린우리당의 송미화 후보, 김선미 후보, 김은경 후보와 민주당의 김완자 후보는 석사출신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고, 김정숙 후보는 교육학박사의 학력을 지니고 있었다. 이들 여성후보들의 학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경선에 출마한 후보의 지역이 출생지인 사람은 3사람 있었다. 송미화 후보(은평), 김은경 후보(서울), 김완자 후보(전주)이다. 나머지 2사람은 출생지는 아니더라도 남편이 생활하는 지역에 출마한 경우로, 후보들의 지역구와 연고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들 후보의 사회적 경력은 언론인, 교수, 여성단체 임원, 지방의회 의원, 국회의원 등 다양하였는데, 정당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나타났다. 이들 후보 중 송미화 후보, 김은경 후보, 김완자 후보의 경우 전직 광역의회 의원을 지낸 지역구 선거운동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다. 김선미 후보는 26대 경기 안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한 경험이 있었다. 김정숙 후보는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3선의원 출신으로 13대 때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모두 지역구 선거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다<표 V-3>.

<표 V-3> 여성후보의 개인적 특성

후보자	출생지	학력	사회·정치활동 경력	선거경험
송미화 열린우리당 은평을	1961년 서울 은평	1985년 덕성여대 국어국문학과 2002년 고려대 정책대학원 행정학 석사	-1985-1989: 월간 무역운송, 주간관세정보 기자 -1988-현재: 한국, 서울 YWCA활동 -평민당, 새정치국민회의 은평을 지구당활동 -1998-2002: 제5대 서울시의원 -2003-2004: 열린우리당 중앙당 중앙위원	지역구 광역의회(당선)
김은경 열린우리당 노원을	서울 1956년	1982년 고려대 경영학과 2003년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도시행정학 수료	-한국외환은행근무 -대구폐놀사태시민대표 -한국여성민우회환경위원장 -노원구, 서울시 의원 -노무현 대통령후보 환경특보 -열린우리당 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역구 기초의회, 광역의회 선거출마(당선)
김선미 열린우리당 경기 안성	광주 1961년	· 숙명여대 약학과 · 숙명여대 대학원 약학과	-한국 청년지도자연합회부인회 회장 -경문대학 환경공업과 전임강사 -대한적십자회 남부봉사관 안성비봉봉사회 회원 -안성 개나리 로타리클럽 회원 -새천년민주당 안성시 지구당위원장 제16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출마(낙선) -제16대 대통령후보 새천년민주당 안성시 지구당 선거대책위원장 -열린우리당 국민참여운동본부 본부장	16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출마(낙선)

후보자	출생지	학력	사회·정치활동 경력	선거경험
김정숙 한나라 당 경기 안양 동안갑	1946년 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문학석사 · 미국 조지워싱턴대 교육학 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려대 총 교우회 부회장/사범대 교우회 회장 -한국걸스카우트 연맹 부총재 -한국관광포럼 회장 -미 조지워싱턴대한국총동창회 부회장 -한국대학교육발전포럼 공동대표 -정무장관(제2)실 차관 -국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운영위원 회운영 -한나라당 당무위원, 여성위원장 -제16대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부위원장 -제14대,제15대,제16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여성위원장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상임대표 -(사)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이사장 -아태 여성정치센터(CAPWIP)총재 -한나라당 최고위원 	13대 국회의 원 지역구 선 거출마(낙선)
김완자 민주당 전주 완산을	전북 전주 1957년	1980년 청주사대 지리교육과 2001년 전북대 대 학원 정치학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청소년마을전북지부장 -교육개혁시민연대회의 공동대표 -전북 NGO국제교류추진위원 -전북여성정치발전센터대표 -새정치국민회의 전북도지부 여성위원장 -전북도의회 의원 	지방의회

다. 여성후보의 입후보과정

여성후보들의 입후보 과정은 후보들이 출마한 정당의 경선방침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IV장에서 보았듯이 열린우리당은 선거인단의 규모를 유권자수의 0.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표성확보를 위해 성별, 지역별, 40세

전후 인구비례에 따라 할당하며 이 경우 $\pm 10\%$ 의 오차범위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인단 모집방법은 지구당선거위가 직접 모집하는 방식과 외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모집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 선거인단은 돈과 조직의 위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화를 통한 ‘무작위 표본 추출방식’을 활용하여 구성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열린우리당의 방침에 근거하여 송미화 후보는 개방형 국민경선제의 방법으로 여론조사기관(중앙당선정)에 의한 무작위 선거인단 추출을 통한 1,100명 모집하고, 경선후보심사와 지구당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선거일 공고/후보등록, 선거운동, 후보토론회를 거쳐 선거인단대회를 개최하고 전자투표방식의 투표를 거쳐 당선되었다. 열린우리당의 김은경 후보와 김선미 후보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

한나라당의 경선기본방침은 선거인단 규모를 2,000명 이내로 하고 당원과 일반국민의 구성 비율을 10% 대 90%로 하여 일반국민들의 참여비율을 넓혀 두었다. 그리고 선거인단 구성에 있어서 여성과 만45세 이하(농촌지역은 55세) 연령층에 50%씩을 배정하도록 하여 대표성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마찬가지로 선거인단은 한나라당 지지자와 무당파층에서 모집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한나라당의 경선원칙에 입각하여 김정숙 후보가 출마한 경기 안양 동안갑의 경우도 지역구에 거주하는 당원 200명과 2003년 11월에 만들어진 한국통신 전화번호부 CD를 통한 지역구 주민 1800명을 한나라당 중앙당에서 무작위 추출하여 경선제를 실시하였다. 선거절차는 후보등록, 지구당 선거관리위원회구성, 선거운동, 선거인단 투표 및 개표의 과정을 거쳤다.

민주당의 경선방식은 국민참여경선 또는, 전당원경선에서 비밀투표로 선출되거나 여론조사방식을 하였다. 국민참여경선은 지구당상무위원회에서 경선방법을 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이미 당원이 된 자와 경선방법이 결정된 이후 새로이 당원이 된 자의 비율이 50:50로, 전체 유권자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전당원경선은 전체 당원의 10% 이상, 500인 이상이 투표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선거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여론조사방식은 당원과 당원을 제외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50:50의 비율로 각각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합산하는 방법으로 하거나, 당원과 비당원의 구분 없이 당해 선거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김완자 후보가 출마한 새천년민주당의 전북 전주 완산 을의 경우 후보자간 합동연설회 후 여론조사방식을 선택하였다. 따라서 후보들은 후보초청간담회/합동연설회를 5회하고, 중앙당차원에서 전화여론조사를 통하여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을 거쳤다.

정당과 관계없이 이들 후보들이 참여한 경선제의 경우 모두 선거운동기간이 3일정도 밖에 되지 않아, 후보를 알리는데 한계가 있었고, 경선실시 방법, 선거인단 구성 등에 있어서 후보 진영간 갈등을 야기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이의 극복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한 구성과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표 V-4>.

<표 V-4> 여성후보의 경선방법 및 일정

후보자명	경선내용 및 일정
송미화 후보	개방형 국민경선제 - 여론조사기관(중앙당선정)무작위 선거인단 추출을 통한 1,100명 모집 · 2004.2.13-경선후보심사 · 2004.2.15 -지구당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2004.2.19 -선거일 공고/후보등록 · 2004.2.26-28 -선거운동 · 2004.2.27 -후보토론회 · 2004.2.28 -선거인단대회개최
김은경 후보	개방형 국민경선제 -여론조사기관(현대리서치)가무작위 선거인단 추출을 통한 1,056명 모집 · 2004.3.2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중앙당 공직자 자격심사위 결과 경선 후보 4인으로 결정) · 2004.3.4 -후보 예비등록, 기호추첨 · 2004.3.5 -후보등록, 선거일 공고 · 2004.3.11 -선거 공보발송 · 2004.3.11-13 -선거운동 · 2004.3.13 -선거인단대회개최

후보자명	경선내용 및 일정
김선미 후보	개방형 국민경선제 -전화면접원을 통한 참여신청자 모집
김정숙 후보	국민경선제 -지역구에 거주하는 당원 200명과 2003년 11월에 만들어진 한국통신 전화번호부 CD를 통한 지역구 주민 1800명을 한나라당 중앙당에서 무작위 추출 · 2004.2.27 -후보등록 · 2004.2.27 -지구당 선거관리위원회구성 · 2004.3.6-2004.3.9 -선거운동 · 2004.3.9 -선거인단 투표 및 개표
김완자 후보	· 후보자간 합동연설회 후 여론조사방식 -후보초청간담회/합동연설회 5회/ 방송연설/20일 전화여론조사/현직 시의원으로서 경선관리위원회를 조직하고 이들은 합동연설회 등 일정이나 세부사항을 정함

라. 주민 호응도 및 인지도

경선에 참여한 여성후보의 주민의 호응도 및 인지도에 대하여 참여관찰자들의 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은평 을에 출마한 열린우리당의 송미화 후보는 정치적 순수성, 정치, 행정경험, 서울시 의원을 경험하면서 지역정치활동 경험이 오래되어 가장 높은 인지도 확보가 되어 있었다고 참여관찰자는 평가하고 있다. 노원 을의 열린우리당 김은경 후보 또한 여성운동가로서 지방의회 의원의 경험자로서 정치적 순수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시의원 및 다양한 지역활동을 통해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참여관찰자는 평가하고 있다. 경기 안성의 열린우리당 김선미 후보는 16대 국회의원 남편 고 심규섭 의원을 대신해 지난 2002년 보궐선거에 출마했으나 현 국회의원 이해구 의원에 3000여표 차이로 패배하였다. 경선당시 고 심규섭 의원 미망인으로 남편의 후광을 받는다는 시각이 부정적인 인식으로 작용할 수도 있었고, 인지도에서는 앞서나 조직 면에서는 취약한 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서에서 승리하였다는 평을 하고 있다. 전주 완산 을의 새천년민주당 김완자 후보의 경우 지역에서 여성정치발전연구소를 운영하는 등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왕성한 사회활동과 함께 오랜 기간 지역 정치활동의 경험을 토대로 지역의 현장정치에 강하다는 평을 하고 있다. 안양 동안 을에 출마한 한나라당

김정숙 후보의 경우 3선 의원 출신으로 전국적 인물로 국회 내에서 교육정책을 담당했으므로 교육전문가 평가를 받고 있었다. 김정숙 후보의 경우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한 달 전에서야 지역구 활동을 시작하여, 눈에 띄는 활동 전무한 상태로 애시 당초 경선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평을 하고 있다.

마. 선거운동과정

경선에 참여한 여성후보들의 선거운동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V 5-1>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지방의회 경력이 있는 송미화 후보, 김은경 후보, 김완자 후보의 선거캠프의 조직은 10-15명 내외의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었는데, 대체적으로 조직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5-2>에서 볼 수 있듯이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경험이 있었던 김선미 후보와 13대 국회의 선거 경험이 있었던 김정숙 후보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김정숙 후보는 지역구가 분구되면서, 갑자기 경선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조직을 마련할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여성후보들의 조직이 보편적으로 취약한 것을 볼 수 있었다.

경선자금과 관련하여 여성후보들은 경선탁금 700만원~2000만원까지 지출하였는데, 사무실 운영경비로는 200만원~500만원까지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선을 치를 경우 이중 부담을 지니고 있었는데 경선의 경우 후원회 운영이 안되는 상태에서 대체로 여성후보들은 부담을 지니고 있었다.

선거전략에 있어 여성후보들은 정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여성의 참신성과 깨끗함을 통한 정치개혁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후보들은 자신의 홍보를 위하여 김은경 후보이외 인터넷 활용이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여성후보들은 자금이나 조직이 취약해 보였다.

<표 V 5-1> 지방의회 의정활동 경험이 있는 후보들

후보자	선거전략*	선거캠프와 스텝 구성	선거자금
송미화 은평 을, 열린 우리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혁, 토박이론 · 정치개혁의 필요성 · 현역의원과의 경쟁력 부각(부지런함, 순수성, 여성, 성공적인 시의원활동을 통한 검증된 정치신인, 은평 발전에 대한 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계적인 조직구분이 없이 40대에서 70대까지 지역적 연고를 배경으로 한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15명 내외(과거 선거 유경험자 중심) · 기획 및 사무는 후보개인과 1-2명으로 최소화하고 나머지 자원봉사자들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짧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 대면 및 친분 활동 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등록비용 2천만원 · 기타 홍보물 인쇄비 및 사무실 운영 경비 5백만원 <p>(후보등록비용은 최종 결산 후 선관위에서 일부 환급 예정임)</p>
김은경 노원 을, 열린 우리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개혁 · 여성/주부 · 탄핵정국의 문제제기 · 정치개혁의 필요성: 정치 부패근절, 생활정치실현, 화합의 정치 · 환경관련 지역활동과 환경전문가로서의 이미지 부각 · 구의원, 시의원 재직 당시 재정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정치구현 · 복지분야의 다년간 경력을 부각시켜 지역 내 환경, 복지현안을 해결 · 어머니이자 전문가로서의 이중적인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계적인 조직구분이 없으며 기존 당원 중심의자원봉사자 10명 내외/ 여성개발원 모니터 봉사자 2명 · 기획 및 사무는 후보개인과 1-2명의 역할로 최소화되고, 나머지 자원봉사자들은 그 특성상 역할이 제약될 수밖에 없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등록비용 2천만원 · 기타 홍보물 인쇄비 및 사무실 운영 경비 5백만원
김완자 전주 완산 을, 민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자로 확 바꾸자 · 개혁/부정부패근절 · 무능부패 정치는 깨끗한 여성들이 정계에 진출할 때만이 청산할 수 있음 · 남성위주의 정치문화에서 비롯된 각종 문제점을 여자로 확 바꾸자고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캠프에 10여명/전주 축구협회 회원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후보별 700만원 정도 소요-전국 여론조사기관 중 선정해서 가격을 나누고, 기타 운영비용(합동연설회 5회 등)이 포함

*세후보 모두 주요공약사항은 없었음.

<표 V-5-2> 지역구 선거출마 경험 및 국회의정활동 경험이 있는 후보들

후보자	선거전략	선거캠프와 스텝 구성	선거자금
김선미 경기 안성, 열린 우리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개혁(말하는 정치 보다는 듣는 정치) · 여성/정치신인(때 묻지 않은 정치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자원봉사자 10명 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등록비용 1천만원 · 기타 홍보물 인쇄비 및 사무실 운영경비 2백만원
김정숙 안양 동안 갑, 한나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전략 부재 · 선거인단을 투표장에 오도록 설득하는데 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계적인 조직을 만들 시간이 부족하여 후보의 기존 지지층과 보좌진을 중심으로 한 선거조직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등록비용 2천만원 · 기타 홍보물 인쇄비 및 사무실 운영경비는 대외비(후보등록비용은 최종 결산 후 선관위에서 일부 환급 예정)

바. 선거결과와 당락요인

(1) 선거결과

사례대상 여성후보들의 선거결과를 살펴보면, 열린우리당의 경우 전자투표방식의 선호투표를 하여 결정되었는데, 송미화 후보의 경우 <표 V-6>에 서와 같이 2차 투표를 통하여, 당선되었고, 김은경 후보는 2차 투표에서 3등을 차지하여 패하였다. 김선미 후보는 1차 투표에서 홍석환 후보를 많은 표차를 내고 승리를 거두었는데, 김선미 후보의 경우 여성후보에게 주어진 가산점 20% 없이도 상대후보였던 홍석환 후보에 비하여 월등하게 이겼다. 김정숙 후보는 정진섭 후보에게 패하였고, 김완자 후보는 중앙당 여론조사방법 경선을 통하여 4명의 후보 중 1위 하였다.

<표 V-6> 여성후보의 경선결과

	은평 을 열린우리당 송미화 당선	노원 을 열린우리당 김은경 낙선	전주 완산 을 민주당 김완자 당선
지방의원 경험	-1위 송미화 (1차:210/2차 267.6) -2위 최창환 (1차:192/2차:223) -3위 유병학 (1차:28)	-1위 고용진 (1차:122/2차:139/3차: 178) -2위 김은경 (1차:76/2차:85) -3위 우원식 (1차:130/2차:136/3차:182) -4위 이종훈 (1차:32)	중앙당 여론조사에 의한 김완자 승
지역구 출마 또는 국회의정경험	경기 안성 열린우리당 김선미 당선 -1위 김선미(271) -2위 홍석완(91)	안양시 동안 갑 한나라당 김정숙 낙선 -1위 정진섭(437) -2위 김정숙(249)	

(2) 당락요인

(가) 당선요인

은평 을의 송미화 후보(열린우리당)의 당선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론적 배경에서 경선제도와 현직효과에 대해 언급하였듯이 송미화 후보의 경우 은평구에 40여 년간 지역구에 살면서 활동한 시민운동 및 시의원 경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16대 국회가 부정부패의 이미지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참신한 여성정치의 필요성을 부각한 홍보 및 이미지 전략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40~70대까지 과거 선거운동 경험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역량과 남편의 적극적인 지휘원이 당선으로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 경기 안성의 김선미 후보(열린우리당)의 당선요인으로선 열린우리당이 처음으로 실시한 경선이었는데, 상향식 공천제도인 국민참여형 경선제도에서 김선미 후보의 차별화 전략인 ‘말하는 정치보다 듣는 정치’, ‘때묻지 않은 정치신인’의 이미지를 부각시킨 것이 크게 당선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다. 그리고, 2002년 보궐선거 이후부터 꾸준히 닦아온 인지도, 조직력, 정치참

여능력 획득과 함께 16대 국회의원 남편의 돌연사로 인해 ‘미망인’이라는 동정심 유발과 ‘안성택’이라는 지역의 보수적인 정서에 호소남편의 지역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기회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 본 사례에서 조사한 후보중 경선을 통해 본선에서 당선된 사례는 김선미 후보의 경우인데, 모종린·전용주의 연구(2004)에서 나타난 비현직 후보가 경선을 거쳐 본선에 출마할 경우 후보 자신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는 이점을 충분히 살린 사례이다.

세번째, 전주 완산 을의 김완자 후보(민주당)의 당선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새천년민주당의 여론조사방식으로 학연이나 지연 등 조직이 약한 여성후보에게 불리했던 기존의 대의원제가 없어져 전화여론조사 경선방식을 채택한 것이 여성으로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그리고 광역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평소에 언론을 통하여 지역에서 지속적인 활동 및 인터뷰를 통해 인지도를 많이 높였고, 교육운동가(참교육학부모회의 전국회장)의 이미지 등이 부각되어 타 후보와의 차별화를 시킨 것이 당선된 요인으로 보인다, 그리고 여성이라는 참신한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가족 특히 남편(전북공업대 기계공학과 교수)의 적극적인 협조도 일조를 했다.

(나) 낙선요인

노원 을의 김은경 후보(열린우리당)의 낙선요인이다. 김은경 후보의 경우도 기존 선거구의 분구로 일부지역에만 연고가 있는 후보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더욱이, 김은경 후보는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촉박하여 선거운동조직의 구성에 실패한 것이 낙선의 중요변수로 작용하였다. 아울러, 선거가 주말 토요일 저녁에 실시/선거실시 2일 전 대통령탄핵사태로 많은 선거인단이 기권함으로서 조직선거의 승리를 부추기는 결과 초래 2,30대보다는 5,60대에 집중된 유권자들의 연령분포의 영향도 있었다.

안양 동안 갑의 김정숙 후보(한나라당)의 낙선요인이다. 김정숙 의원은 전국구 3선 국회의원으로 지명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구의 분리·통합에 따라 16대 국회의원 심재철과의 대결을 피하기 위해 안양 안동 갑 지역구

를 선택했으나 여기서 8년 간 활동한 정진섭 지구당위원장에게 패배하였다. 즉, 안양 동안 갑이 분구된 지역으로 정치적 기반이 미약하였고, 후보 차별화 전략에 실패하였던 점이 낙선의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표 V-7>.

<표 V-7> 여성후보의 당락요인

당선 여부	후보명	지역구 소속정당	선거경험유무	당락요인
당선	송미화	은평을 열린우리당	지방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여년간 지역구 토박이로 시민운동 및 시의원 경력 · 조직동원력 · 후보 홍보 및 이미지 전략으로 타 후보와의 차별성 부각(여성적인 특성을 반영한 ‘조강지처론’) · 지역 연고를 배경으로 40-70대까지 과거 선거운동 경험이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역량 · 가족의 적극적인 지원
	김선미	경기 안성 열린우리당	보궐선거출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향식 공천제도인 국민참여형 경선제도 · 후보 차별화 전략 -‘말하는 정치보다 듣는 정치’/ ‘때묻지 않은 정치신인’ 부각 · 2002년 보궐선거 이후부터 꾸준히 닦아온 인지도, 조직력, 정치참여능력 획득 · 16대 국회의원 남편의 돌연사로 인해 ‘미망인’이라는 동정심 유발과 ‘안성댁’이라는 지역의 보수적인 정서에 호소 · 남편의 지역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기회
	김완자	전주 완산 을 민주당	지방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후보에게 불리했던 기존의 대의원제가 없어지고 전화여론조사 경선방식의 이점 · 지역내 지속적인 활동 및 인터뷰를 통해 인지도 높임 · 교육운동가(참교육학부모회의 전국회장)의 이미지 등이 부각되어 타 후보와의 차별화 · 여성이라는 참신한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작용 · 가족 특히 남편(전북공업대 기계공학과 교수)의 적극적인 협조

당선 여부	후보명	지역구 소속정당	선거경험유무	당락요인
낙선	김은경	노원을 열린우리당	지방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선거구의 분구로 일부지역에만 연고가 있는 후보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 · 체계적이지 못한 준비과정(조직구성실패) ·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원봉사자들 모집 · 전화홍보와 선거당일 연설에만 치중 · 선거가 주말 토요일 저녁에 실시/선거실시 2일 전 대통령탄핵사태로 많은 선거인단이 기권함으로서 조직선거의 승리를 부추기는 결과 초래 · 20,30대보다는 50,60대에 집중된 유권자의 연령분포
	김정숙	안양 동안갑 한나라당	비례대표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전용선거구제의 무산 · 정치적 기반 미약 -지역구의 분리·통합에 따라 16대 국회의원 심재철과의 대결을 피하기 위해 갑 지역구를 선택했으나 여기서 8년 간 활동한 정진섭 지구당위원장에게 패배 · 후보 차별화 전략 실패 · 여성후보에 대해 보수적 성향 · 3선 국회의원이라는 점이 개혁을 원하는 유권자들에게 호소력을 갖지 못함 · 짧은 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 시작 10일 전에 등록하였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 부족 · 체계적이지 못한 조직 및 자원봉사자 구성

사. 여성후보 선거운동의 시사점 및 개선방안

앞에서 살펴본 사례에 비추어보면, 여성후보들은 17대 총선을 맞아 당내 민주화의 일환으로 실시된 경선제의 방식, 즉 “당원과 국민이 참여하는 소위 국민참여 경선”, “유권자 여론조사”와 “진성 당원을 통한 경선” 등을 통해 정치에 참여는 물론 정계에 진출할 수 있었다. 여성들이 경험한 경선사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겠다.

첫째, 선거인단 구성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17대 총선의 경선에 있어 주요정당들의 선거인단 구성에 있어서의 기준은 성과 나이(40대 전후)였다. 20대와 30대는 재택비율이 낮으므로, 이 나이층의 응답자 확보에 힘이 많이 들

었을 것이다. 성과 나이를 고려했고, 그 외에는 무작위성이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겠지만 그것은 순진한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확보된 선거인단의 대표성이 일그러졌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를 검토하는 아무런 장치가 없었고, 대책이 없었다. 예컨대, 경선 대부분의 경우가 그랬지만, 본 연구와 관련하여 안양 동안 갑 선거구의 선거인단 구성의 예를 살펴보자. 한나라당 중앙당에서 한국통신의 전화번호부 CD를 통해 한나라당 지지자를 추출하여 이 중 전화번호부에 이름이 기재된 당사자가 투표를 해야 했다. 선거인단 구성에 있어서 문제점은 일반적으로 전화번호부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이 세대주의 이름인 경우가 많으며 세대주는 40대 이상이 많으므로 연령별 대표성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중앙당에서 지정한 선거인단도 있었는데 이 또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된다. 단적인 예로 안양 동안 갑 선거구의 선거인단 구성에 있어서 심재철 의원 지지자 429명과 정진섭 의원 지지자 800명, 김정숙 의원 지지자 70명을 모두 합쳐 1,300여 명 중 200명을 선발한 것이다. 이 당원 중 정진섭 의원 지지자와 김정숙 의원 지지자의 비율이 11:1이 넘기 때문에 선거인단 구성에 있어 특정 후보 지지층이 많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둘째, 경선의 경우 선거운동기간이 너무 짧고, 후보를 알릴 방법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번 경선제를 통하여 정당과 관계없이 경선에 참여한 여성후보의 경우 선거운동기간이 3일정도 밖에 되지 않고, 본선의 선거운동방법과는 달리 매스컴을 활용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 후보를 알리는데 어려움이 컸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경선기간의 법제화와 다양한 방식을 통한 선거운동방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셋째, 후보자의 개인적인 조직력이나 지명도 등의 자격과 관련하여 판세와 당락에 영향력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실제, 김선미 후보의 경우 이미 16대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지명도를 확보하고, 남편의 후광이 작동하여 경선에서 쉽게 이길 수 있었다. 송미화 후보의 경우 지역토박이로서 시의원으로서 활동하여 주민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여성들 중에서 정치에 관심이 있는 경우 평소부터 지역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선제도는

지역내 인재가 당선되는데 유리하게 작용함으로써 지역의 현안에 대해 가장 잘 파악하는 인물이 지역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할 수 있다.

넷째, 여성후보에게 있어서 경선자금 700~2000여만 원을 마련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므로 일부 여성 후보는 경선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사퇴한 경우도 있었다. 향후 정당내 여성정치발전기금으로 보전하는 방안의 마련이 요구된다.

다섯째, 후보진영간 경선실시 방법, 선거인단 구성 등에 있어서 후보 진영간 갈등을 야기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경선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선관위 및 선거인단 구성의 공정성 및 민주성이라고 여겨진다. 물론 민주노동당의 경우 당권만 있으면 누구나 후보가 되고 투표할 수 있다면 가장 공정하고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향식 밀실 공천의 관행에서 서서히 변화하고 있는 거대 정당의 경우 선관위의 공정한 구성과 운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여섯째, 이번 경선의 투표방법과 관련하여 사례연구에서 열린우리당은 국민참여경선에서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방법을 통한 선거결과를 가지고 왔고, 새천년민주당은 여론조사방법을 통하여 후보를 선출하였는데, 선거인단의 참여가 제한적이었다. 그런데, 민노당의 경우 인터넷 투표와 우편투표를 통하여 유권자의 투표권을 확대하였다. 향후 선거인단의 투표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투표방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2. 총선 본선 사례

이번 17대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한 여성후보 66명 가운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여성후보의 출마특성을 고려하여 8명에 대해 참여관찰 방법을 통해 선거운동과정을 분석하였다. 참여관찰 사례의 선정기준은 지역구에 출마한 경험의 유무, 당선과 낙선, 정당별 안배를 고려하였고, 지역구 출마 경험에 대해서는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하여 초선도전과 재선도전으로 구분하였다. 본 조사에서 살펴본 8명의 사례 가운데 정당별 분포를 보면, 열린우리당

3명, 한나라당 2명, 민주당 2명, 민주노동당 1명이며, 당선사례와 낙선사례가 각각 4명으로 구분되었다.³⁹⁾

사례선정과 유형을 구분함에 있어서 정당의 기준 이외에, 초선여부, 선거 경험의 유무, 비례대표의원의 경력이 있는가의 여부, 지역구 의원으로 재선에 도전하는 경우 등의 기준이 적용되었다. 따라서 본 조사의 사례유형은 후보자의 출마형태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표 V-8). 첫째, 선거 경험이 없으면서 초선에 도전한 경우(유형1), 둘째, 지방의원 출신으로 총선에 처음 도전한 경우(유형2), 셋째, 비례대표의원으로서 총선에 처음 도전한 경우(유형3), 넷째, 지역구 의원으로서 해당 지역구에 재선으로 도전하는 경우(유형4)의 네 가지이다. 지방의원 출신의 경우에만 당선사례가 없이 나머지 세 유형에는 당선사례가 있었으며, 네 번째 유형인 지역구 의원으로 재선도전의 경우는 두 사례 모두 당선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표 V-8> 총선 참여관찰 사례의 유형

지역구 출마	선거경험에 따른 유형	후보자	정당	지역구	지역구 상황*	선거결과
초선	유형1 선거무경험	(1) 이해훈	한나라당	서초 갑	공석	당선
		(2) 이선희	민주노동당	종로	공석	낙선
	유형2 지방의원	(3) 송미화	열린우리당	은평 을	현역 도전	낙선
		(4) 원미정	민주당	인천 중구·동구· 옹진군	공석	낙선
	유형3 비례대표의원	(5) 한명숙	열린우리당	일산 갑	공석	당선
		(6) 박금자	민주당	영등포 을	현역 도전	낙선
재선	유형4 지역구의원	(7) 김희선	열린우리당	동대문 갑	현역	당선
		(8) 전재희	한나라당	광명 을	현역	당선

* 지역구상황 : 공석(open seat)-현역의원이 출마하지 않는 지역구 현역(incumbency)-후보자 본인이 현역으로 재출마 현역도전 - 상대후보가 현역의원으로 재출마하는 상황에서 도전하는 지역구

39) 당초 계획에는 한나라당이 3명으로 총 9명의 후보에 대한 참여관찰이 실시되었으나, 한나라당 1명의 후보에 대한 참여관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료화 하지 못하였음.

가. 본선 참여관찰 사례의 유형과 후보자의 지역전략

선거운동전략의 첫 번째는 지역구 특성과 후보자 개인의 특성을 연결시키는 전략이다. 참여관찰 조사대상자 가운데 지역구에 도전하는 형태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6대 의원이 출마하지 않아 공석인 상태(open seat)에서 출마하는 경우는 서초갑의 이해훈, 종로의 이선희, 인천중·동구·옹진군의 원미정, 일산갑의 한명숙 후보가 해당된다. 다음은 16대 현역의원이 출마하는 지역구로서 조사대상 여성후보가 현역의원에 도전해야하는 상황의 지역구로서 은평을의 송미화, 영등포을의 박금자 후보가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조사대상 여성후보 자신이 현역의원으로서 본인의 지역구에서 재출마하게 된 경우로 동대문갑의 김희선, 광명을의 전재희 후보 경우가 있었다.

(1) 개인적 특성

조사대상 여성후보의 개인적 특성 중 먼저 학력을 보면, 8명의 후보 중 대학졸업 이상이 4명, 대학원졸업 이상이 3명으로 후보자의 학력이 매우 높았다. 정치활동 경력을 보면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는 후보는 지방의원 출신의 2명,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지낸 후보가 2명, 현역 지역구의원이 2명이었고, 선거경험이 없이 출마한 후보는 2명이었다. 한편, 후보가 출마한 지역과 동일한 지역적 특성에 맞게 출마한 후보는 영남출신이면서 한나라당 우세지역에 출마한 이해훈 후보와 전재희 후보 정도였다.

이해훈 후보는 영남출신의 경제학 박사, 전문직의 경력, 대통령경제특보라는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이후보의 경력은 서초갑 지역구가 유권자 80%이상이 대졸이상 학력의 중산층이 몰려있다는 점과 연결하여 볼 때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특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선희 후보의 경우는 민주노동당 소속으로 성균관대학교 과학생회장, 노동조합위원, 민주노동당 여성위원장, 중앙위원 등 노동자와 젊은 연령층에 호소력이 있는 특성을 갖추고 있는 후보이다. 하지만 이선희 후보가 출마한 종로구의 특성은 중·장년층의 인구가 많고 정치일번지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민주노동당 후보로서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출마하였다고 볼 수 있다. 송미화 후보는 서

울시의원을 역임하고 YMCA 환경위원, 열린우리당 정치개혁위원, 수도권균형발전기획부단장 등의 경력이 있다. 송미화 후보가 출마한 은평을 지역은 대표적인 저개발 지역으로 60세이상 노년층 인구가 많았는데, 이런 특성을 고려하여 송미화 후보는 ‘은평의 며느리’라는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원미정후보는 노동운동 출신으로 노동조합위원장, 인천여성노동자회 운영위원, 인천여성의전화 정책자문위원과 인천시의원을 재임한 경력이 있다. 이번 총선에서 원미정 후보가 출마한 지역구는 50세 이상의 노년층 인구가 많은 편이고 보수적 성향이 있는 지역구인데, 사실상 이런 지역적 특성과 유권자층을 겨냥하여 보면 원미정 후보의 정치활동 경력이 다소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한명숙 후보는 평안남도 출신으로 한국여성운동의 선구자로서 여성학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여성운동의 산실이었던 크리스찬아카데미 출신이다. 또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였으며, 여성부장관, 환경부장관을 지냈고, 새천년민주당 신당창당 발기인, 새천년민주당 제16대국회의원선거 중앙선대본부 부분부장 및 여성위원장, 16대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라는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명숙 후보의 지역구에 출마가 정치권에서는 큰 관심사였고 이번에 출마한 일산갑의 경우도 여성유권자들이 상당한 지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박금자후보는 충남 서산출신으로 오랫동안 산부인과 의사로서 인지도를 높여왔다. 16대 국회말기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냈고, 새천년민주당 중앙위원, 서울의사회 부회장 등의 경력이 있다. 김희선 후보는 평안남도출신으로 한국여성의전화 초대원장, 민주쟁취국민운동 서울본부 상임의장 등 민주화운동 인사이며, 열린우리당 창당위원, 열린우리당 전국여성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김희선 후보가 출마한 동대문갑 지역은 김희선 후보가 16대 국회의 현역의원으로서 당선된 지역구이기 때문에 지역 내 인지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전재희 후보는 경북 영천출신으로 여성최초 행정고시 합격자이며, 여성최초 관선시장을 거쳐 여성최초 민선시장을 지냈으며, 시장을 지낸 광명시에서 16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였다. 전재희 후보가 출마한 광명을은 전통적으로 한나라당이 강세인 보수적 성향의 지역구이다.

<표 V-9> 총선 참여관찰사례 여성후보의 개인적 특성

	출생지	학력	사회·정치활동 경력
(1) 이해훈 한나라당	부산	· UCLA에서 경제학박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	영국 레스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미국랜드(Rand)연구소 연구위원 UN 정책자문위원 OECD 경제정책위원회 한국대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한나라당 이회창 전 대통령후보 정책특보
(2) 이선희 민주노동당	충북 충주 (1965)	· 성균관대학교 국문과 졸	1983년 대해상사 근무 1988년 성균관대 국문과 학생회장 1991년 AMK노동조합 조직차장, 구로해고자복지투쟁위 1998년 '8.15통일대축전' 행사기획단 실무총괄 1999년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원탁회의 실행위원 2000년 민주노동당 여성위원장, 중앙위원, 전국집행위원, 상집위원 2003년 민주노동당 종로지구당 위원장, 서울특별시학교급식조례제정 종로구운동본부 상임대표 2004년 민주노동당 민생보호단 부단장, 420장 애인차별철폐공동기획단 공동대표
(3) 송미화 열린우리당	(1961)	· 고려대 정책대학원 졸 · 덕성여대 국문학과 졸	서울시의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상근 자문위원 YMCA 환경위원 열린우리당 윤리위원, 정치 개혁위원, 수도권균형발전기획부단장
(4) 원미정 민주당	경기도 (1960)	· 인천대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 한국방통대 행정학과 졸	인천세창물산 노동조합 위원장 인천 여성노동자회 운영·자문위원 인천 여성의 전화 정책 자문위원회 인천 정신지체인 애호협회 자문위원 인천 농아인협회 자문위원 동구 자활후견기관 운영지원위원 제1대 인천시의회 의원 야권단일후보 인천광역시의회 2대·3대 (운영위원장) 의원 새천년민주당 중앙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출생지	학력	사회·정치활동 경력
(5) 한명숙 열린우리당	평남 평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대학원 여성학 석사 · 한국신학대학교 선교신학대학원 신학 석사 · 이화여대 불문학과 졸업 	한국크리스찬아카데미 간사 크리스찬아카데미 사건 구속 수감 한국여성단체연합 가족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국여성민우회 회장 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통일부 교류협력분과위원회 정책자문 위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여성부 장관 환경부 장관 새천년민주당 신당창당 발기인, 준비위원회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새천년민주당 제16대국회의원선거 중앙선대본부 부분부장 및 여성위원장 새천년민주당 여성위원장 열린우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제16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6) 박금자 민주당	충남 서산 (19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세대대학원 의학과박사 · 연세대 의과대학 졸업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새천년민주당인권특별위위원장 새천년민주당 중앙위원, 상설특별위 간사 새정치여성연대 상임대표 서울의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대표 박금자 산부인과 원장
(7) 김희선 열린우리당	평남 평원 (19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 충남 대전여성 명예졸 	한국 여성의 전화 설립, 초대원장 민주쟁취국민운동서울본부 상임의장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 위원회간사위원 국회 과거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위원회 간사위원 열린우리당 창당위원 열린우리당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장 열린우리당 전국여성위원장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 회장
(8) 전재희 한나라당	경북 영천 (19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수료 · 영남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여성 최초 행정고시 합격 노동부 노동보험국장 노동부 직업훈련국장 제 10대 광명시장(여성최초 관선시장) 제 12대 광명시장(여성최초 민선시장) 제 16대 국회의원(전국구) 제 16대 국회의원(보궐, 경기광명)

(2) 후보별 입후보 과정과 지역전략

① 이해훈 후보 (서초 갑, 당선, 한나라당)

(가) 입후보 과정

이해훈 후보는 경선 없이 당내 심사위원회에서 9:1의 압도적 지지로 공천을 받았다. 후보자가 젊다는 점, 경제전문가라는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서울지역에서 한나라당의 안정의석이라고 할 수 있는 서초 갑에 여성이 공천된다는 것에 대해 당내에서는 반발이 심했다. 서초갑 지역은 16대 현역의원인 한나라당 박원홍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평가가 다소 긍정적이지 못한 상황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원홍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한 후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하자, 지역구 일부에서는 여성후보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있었다. 특히 박원홍 의원의 거센 반발로 재심을 거치게 되었는데,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에 참여한 여성위원들과 여성계가 각 당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여성후보를 기획 공천할 것을 요구했으며, 한나라당이 최종적으로 이를 수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박원홍 전 의원이 출마를 포기하자 지역구의 정서는 다시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를 보이기 시작했다.

(나) 주민 호응도 및 평판

서초갑의 경우, 아파트촌이 밀집한 중산층 거주 지역으로, 가구수의 45% 안팎이 영남 출신이며, 한나라당이 강세인 '강남벨트'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지역으로 꼽힌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열린우리당의 지지도가 급상승하였으나 '박근혜 바람'의 영향 등으로 곧 한나라당 지지 세력의 재집결을 강하게 보여주었다. 이에 내수경제 침체기에 있어 국제적 경제전문가라는 점, 참신하고 능력있는 여성정치 신인이라는 점, 그리고 탄핵에 대한 책임이 비교적 적은 정치신인이라는 점 등에서 한나라당 지지자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이선희 후보 (종로구, 낙선, 민주노동당)

(가) 입후보 과정

민주노동당에서는 전국적으로 지역구 후보를 선출할 때 경선제를 실시하

였으며, 총 11명의 여성후보가 경선으로 지역구 후보자로 공천되었다. 이선희 후보도 경선으로 공천

민노당의 당원으로서 활동사항, 인지도 등으로 후보를 선정하고 이들끼리 경선을 통해 의원후보로 출마하였다.

(나) 주민 호응도 및 평판

종로구는 상업과 업무용 지역 확장으로 상주인구는 감소 추세이며, 주간활동 인구는 200여만명 내외, 호적인구는 140여만 명 내외로 주민등록 인구 약 19만명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이다. 젊음의 거리 대학로와 몇 개의 대학이 있지만, 실제 거주 주민은 중장년층이 많으며, 정치적으로는 매우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지역이다.

이선희 후보에 대한 주민의 반응은 긍정적이고 좋은 편이나, 많은 관심을 갖고 크게 지지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남성후보에 비하여 웃는 얼굴로 편하게 다가가서인지 큰 거부감 없이 인사를 받으며, 일부 주민은 자신의 정치에 관한 생각들을 말하기도 하며, 격려를 해 주는 모습도 종종 있었다.

여성으로서의 의원 출마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으나, 종로구에서는 이선희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보다 민노당을 지지하는 세력이 더 많은 것 같았다.

③ 송미화 후보 (은평 을, 낙선, 열린우리당)

(가) 입후보 과정

송미화 후보는 본 연구의 경선사례조사 대상자에 포함된 후보이다. 송미화 후보는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본선에 출마하였으며, 경선사례에서 자세한 입후보 과정을 다루었다.

(나) 주민 호응도 및 평판

은평구는 서울 외곽의 대표적인 저개발 지역으로, 최근까지 그린벨트의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어 인구규모에 비해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이다. 지역토박이 비율이 높고, 지역적 인간정서 및 네트워크가 여타 지역보다 강한 편이다. 강한 연고주의 현상이 특징이며, 60세 이상 노년층의 인구 규모가 타지역에

비해 높고, 정치적 성향은 보수적이며, 전통적인 가족관계가 강하다. 재정자립도 면에서 서울시에서는 최하위 수준이며, 사업체 수와 종업원 수도 인구규모에 비해 서울지역 중 하위 수준이다. 주민들의 송미화 후보에 대한 평판은 지역토박이로서 서울시 의원 활동의 경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④ 원미정 후보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낙선, 민주당)

(가) 입후보 과정

원미정 후보는 ICN 인천방송 조사에서 16.6%의 지지율로 김영주 후보(8.2%)와 강승훈 후보(7.1%)에 비해 크게 앞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후 당 내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2위와 2배 이상의 지지율 차이를 보이며 후보로 선출되었다.

(나) 주민 호응도 및 평판

2대에 걸친 동구 지역 시의원 생활로 동구지역에서는 인지도가 높은 편이나 중구와 옹진군에서는 낮은 편이다. 깨끗하고 젊으며 서민의 입장에 선 정치가라는 이미지가 강하며, 일부 유권자들은 탄핵정국 이후에도 당을 옮기지 않은 의리 있는 여성으로 평가하고 있다. 민주당보다는 민노당의 성격이 강한 후보로 인식되고 있다.

인천 중구·동구·옹진군의 경우, 중·동구는 인천의 주변부로 타지역에 비해 낙후되어 있으며, 특히 주변 재래시장(신포시장)의 장기화된 침체, 동인천 지하상가의 경기 악화 등으로 이 지역의 생활환경만족도는 인천시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옹진군은 섬으로만 이루어진 선거구로서 육지에 비해 낙후되어 있으며, 해양관광지 개발사업이 희망이다.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인구수 비례 선거인수 비율이 높은 편이며, 50대 이상의 노년층 인구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바,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노인 인구층이 두터운 지역으로서 대체적으로 친여 성향의 보수적인 성향이 있다.

지방선거 제 1·2회에서 시의원으로 민주당 여성후보인 원미정 후보가 당선되었던 사실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17대 총선을 기하

여 탄핵정국 이후 대통령에 대한 동정심과 야당에 대한 반발로 열린우리당에 대한 호응이 높아졌다. 정책이나 후보자의 전문성 보다는 지역토박이로써 오랜 기간 동안 지역 사업에 많은 투자와 주민들에게 인심을 베풀어 온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 즉 후보 선택에 있어 정책이나 공약보다는 온정주의적 정서가 강한 지역이다.

⑤ 한명숙 후보 (일산 갑, 당선, 열린우리당)

(가) 입후보 과정

한명숙 후보는 2004년 3월 3일 열린우리당 고양일산갑의 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이후, 비교적 늦게 총선 준비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점과 장관을 역임한 경험 등으로 한명숙 후보는 포괄적인 선거조직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었다.

(나) 주민 호응도 및 평판

일산 갑의 경우 한나라당이 전통적으로 강세이며 구청장 및 시의원들 다수가 한나라당이다. 16대 국회의원은 민주당 정범구 의원이었고, 당시 한나라당의 여성후보인 오양순후보도 선전하는 등 여성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지역구이다.

초반에 한나라당 홍사덕 후보에 비해 인지도가 떨어졌지만, 기존 남성 국회의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여성 후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특히 여성 유권자들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았다.

⑥ 박금자 후보 (영등포 을, 낙선, 민주당)

(가) 입후보 과정

민주당의 영등포 을 지역에는 박금자 국회의원, 조경철 박사, 김민석 전 국회의원(비공개) 등이 공천을 신청하였다. 김민석 전의원은 대선 당시 탈당하였다가 민주당으로의 복당을 신청한 상태였다. 중앙당에서 일부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영등포 을 지역의 민주당 비대위 투표결과 94%가 김민석 전의원의 복당에 찬성하였다. 민주당의 영등포 을 지역구의 공천은 사실상

박금자 의원과 김민석 전의원의 양자 구도였으며, 민주당 내에서는 박금자 의원 지지파와 김민석 전 의원 복당파로 양분되었다. 박금자 국회의원은 여성정치인의 역할과 전문성을 부각하였고, 김민석 전 의원은 지역의 인지도와 정치감각을 강조하였다. 결국 당내 공천심사를 통해 김민석 전 의원이 영등포 갑 지역구로 수평이동하였고, 을에서는 박금자 의원이 후보로 등록하게 되었다.

(나) 주민 호응도 및 평판

영등포구는 다만 압도적인 득표율로 15대, 16대에 연달아 민주당의 김민석 후보가 당선 되었으나, 2002년의 보궐선거에서부터 17대까지 총선과 지방선거 모두 한나라당이 석권한 것이 특징이다. 박금자후보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여성, 주부 및 노령자층에서 인지도가 높았다. 따라서 비교적 서민층에서는 인지도가 낮았으며, 탄핵정국으로 박금자후보의 소속정당인 민주당에 대한 거부감이 만연해있는 상태였다.

⑦ 김희선 후보 (동대문 갑, 당선, 열린우리당)

(가) 입후보 과정

김희선 후보는 동대문 갑 지역구의 16대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프리미엄과 16대 회기 중 명성과 청렴한 이미지가 높이 평가되었다. 이에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해당 지역구의 유력후보라는 이유로 단수공천으로 지정하였다. 이는 동대문 갑 지역구의 열린우리당 경선에 후보로 출마할 경쟁자가 없었다는 것도 단수공천에 큰 작용을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주민 호응도 및 평판

동대문구의 경우, 세대수는 서울시에서 13위, 인구밀도는 2위인 고밀도 지역으로 교통과 상권이 발달된 서울 동부의 중추 도시로, 산업연구원, KAIST 등 전문 연구시설 8개소가 집중되어있다. 40대층이 적고 유동인구가 많아, 재개발 아파트 단지에서도 기존 거주자는 1/3 정도에 불과하다. 15대 총선에서는 야당이, 16대에는 여당이 석권하였다.

동대문 갑 지역구에서는 총 7명의 후보가 출마했으나 열린우리당의 김희선 후보와 한나라당의 장광근 후보의 양자대결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주당을 비롯해 다른 5명의 후보들은 상대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인지도를 얻지 못하였다.

김희선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점과 언론에 많이 부각된 점, 독립군 집안의 후손이라는 점과 16대 국회에서의 성과(친일청산법, 거짓말 안하는 정치인 베스트 5 선정 등)로 인해 지역에서의 평판이 우수한 편이며 중앙당에서도 이 지역구를 우세 지역구로 낙점해 놓은 상황이었다. 한나라당의 장광근 후보 역시 16대 국회의원이며 인지도 역시 높은 편이지만 전국구 의원 이기에 지역구에서의 활동이 미비하며 김희선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지도가 약한 편이었다.

⑧ 전재희 후보 (광명을, 당선, 한나라당)

(가) 입후보 과정

한나라당의 경우 지역구 후보가 경선을 통해서 결정되지만, 이번 제 17대 총선에서 광명을 지역구의 경우는 전재희 후보가 단독 후보였던 관계로 공식 경선 없이 총선에 입후보하게 되었다.

(나) 지역주민의 호응도 및 평판

광명 을의 경우, 전체 산업 인구 가운데 85%가 넘는 비율이(1999) 제조업 종사, 전체 유권자 11만2,000여 명 중 40대 이하가 70%를 차지할 만큼 젊은 층이 두텁고 유동 인구가 많은게 특징이다.⁴⁰⁾ 광명을 지역구는 서울로 출근하는 30~40대 아파트 주민들의 표심이 선거를 좌우하며, 충청과 호남 출신이 50%를 차지해 지역표도 무시할 수 없다.⁴¹⁾

전재희 후보는 94년 관선 시장으로 처음 광명과 인연을 맺은 이후에 민선 시장, 지역구 의원을 두루 거치면서 청렴결백한 성품과 남다른 열성적 시정 활동으로 지역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신망을 받고 있는 듯 했다.

40) 한국일보, 2004/04/06.

41) 시사저널, 2004/04/01, 753호.

나. 후보자 이미지 및 선거전략

선거운동 전략 두 번째는 후보자의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고 인지도를 높이는 과정이다. 본 조사의 사례 8명 후보 가운데는 후보자의 인지도에 있어서 선거전부터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고, 후보자의 이미지 홍보 전략에서도 선거의 경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후보자의 홍보전략과 관련해서 선거경험 유형에 따라 살펴보기로 한다.

(1) 선거경험이 없이 지역구 초선도전 경우(유형1)

(가) 이해훈 (서초 갑, 당선, 한나라당)

한나라당의 '여성 기획공천 1호'인 이해훈 후보는 인물론으로 탄핵역풍을 정면돌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후보는 영국 레스터대 경제학과 교수와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등을 거친 경제전문가로서의 자질을 부각시키는 한편 "경제전문가가 원내에 진출해야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어진다"는 논리를 폈다. 또한 정치신인으로서 탄핵안 가결의 책임에 대해서도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한나라당도 내부적으로 쇄신하고 있다"고 호소하며 전통적으로 한나라당 지지층의 표심을 자극하였다. 결국 경제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의 이미지, 여성으로서의 참신성과 청렴한 이미지, 그리고 신인 정치인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주력하였다.

(나) 이선희 (종로, 낙선, 민주노동당)

이선희 후보와 민노당의 선거전략은 민노당의 지지율을 높이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 민노당은 전국구 비례대표를 통해 10여명의 의원을 국회에 진출시킨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보정치 뿌리내리기, 민노당 알림 등이 목표였으며, 따라서 선거전략은 특별한 것이 없었고, 직접 발로 뛰면서 서민과 직접 접촉하였다.

민노당은 깨끗하고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하였다. 인지도가 약한 이선희 후보가 정치일번지 종로에 출마하여, 한나라당

과 열린우리당의 의원에 가려져 큰 관심을 얻지 못하였지만, 다음 총선을 위해 후보자를 알리고 좋은 이미지를 주려는 노력으로 이번 선거에서 당선을 목표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웠다.

<표 V 10-1> 후보자 이미지 및 선거전략 (유형1)

후보자	공약대상 유권자	선거전략 (후보자 이미지)	인터넷·미디어	주요공약
(1)이혜훈	중산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전문가로서의 인물론 · 여성의 청렴성 · 정치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전문가이자 젊은 여성으로서 우먼타임스, 연합뉴스 등 여성 네트워크의 추천율이 높았고, 홈페이지나 카페를 운영하며 게시판 관리를 통해 선거 홍보전에 주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지역간 재정평준화 저지 ②경부고속터미널-시설 지하화, 지상녹지화 추진 ③잠원지역고등학교 신설 추진 ④서리풀공원-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 저지 ⑤정보사길-지하터널조기마무리
(2)이선희	서민층 젊은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깨끗하고 서민을 위한 정치인 · 진보정치 뿌리내리기, 민노당 홍보 · 비례대표제를 통한 민노당 의원 배출 · 다음 선거를 위한 후보자 인지도 홍보 얼굴 알리고 좋은 이미지를 주려는 노력으로 발로 뛰는 전략을 펼쳤다고 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선희후보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자신의 경력과 민노당의 공약, 선거유세기간의 일정에 대하여 일지를 기록하여 올리는 형식을 취함. · 종로구 케이블방송을 통해 다른 후보자들과 토론을 함. 	

(2) 지방의원의 경험으로 지역구 초선도전 경우 (유형2)

(가) 송미화 (은평 을, 낙선, 열린우리당)

송미화 후보는 탄핵정국의 상황에서 열린우리당의 지지율 상승에 힘입어

정치개혁에 대한 유권자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유권자가 선호하는 깨끗한 이미지의 정치인이라는데 주력하였다. 조직 중심의 선거보다는 홍보중심의 선거전략을 폈고, 17대 총선을 즈음한 여성정치인에 대한 선호도 증가를 송미화 후보의 기회요소로 분석하였다. 반대로 민주당과 지지층이 분할되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한나라당 성향의 역대 선거 결과와 상대후보가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점, 그리고 선거중반으로 가면서 성대결 양상으로 가는 구도 등을 부정적인 요소로 보았다. 이러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양당구도의 선거전략과 열린우리당이라는 정당의 이점과 정치적 입장을 중심으로 한 대립구도를 설정하였다.

후보자의 인지도나 유권자의 후보자 평가에서 상대후보인 한나라당 이재오 후보에게 밀리는 상황에서 인물 중심의 대립구도를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탄핵’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선거 이슈를 이용하여 구태정치 대 개혁정치의 구도를 중심에 놓고, 탄핵 비판, 인물대결, 정책 대결의 순으로 유세를 펼쳤다.

(나) 원미정 (인천구 중구·동구·옹진군, 낙선, 민주당)

원미정 후보는 민주당 출신으로 인천시의원을 재임한 후보로서 인지도에 있어서는 앞서있는 후보였다. 그러나 탄핵정국과 맞물려 민주당의 지지가 열세에 몰렸고, 선거운동의 전략이나 분위기가 많이 침체된 상황에 있었다. 원미정 후보는 인천시의원 경험을 살려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라는 이미지와 깨끗한 여성정치인이라는 점, 그리고 노동자와 서민 등 약자의 대변인이라는 인물론을 내세웠다. 민주당 소속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칙을 지키는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도 부각하려고 한듯하다. 따라서 원미정 후보의 캠페인 주요문구에도 서민의 희망, 여성이 정치참여하면 달라진다, 원칙과 소신, 생활정치라는 문구들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표 V 10-2> 후보자 이미지 및 선거전략 (유형2)

후보자	공약 대상 유권자	선거전략	인터넷·미디어	주요공약
(3)송미화	노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태정치 대개혁정치의 구도 · 탄핵비판 · 인물대결 · 정책대결 · 여성정치인 (은평의 며느리) 		
(4)원미정	젊은층 여성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자, 서민의 대변인 · 깨끗한 여성정치인 · 부지런한 일꾼 (시의원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활용은, 홈페이지가 있었지만, 구성이나 내용면에서 다소 형식적인 느낌을 주며 업데이트가 자주 이루어지지 않아 정보성이 떨어지는 편임. 네티즌의 시선을 끌만한 참신하고 독특한 아이템이나 화면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아있음. ·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선거운동 전송 방식은 없었음. · 타후보들에 비해 홈페이지 상에서 네티즌 유권자들과의 교류가 적음. · 인천방송 후보자토론과정(4월 10일 밤9시 방영)에 참가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도심권 활성화 방안 (해양관광도시,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재래시장 지원특별법, 친수공간 확보를 통한 깨끗한 인천) · 소외받는 사람들의 복지정책 (출산휴가급여 사회보험으로 전환,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법,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관련법, 고령화 사회대책기본법)

(3) 비례대표의원의 경험으로 지역구 초선도전 경우 (유형3)

(가) 한명숙 (일산 갑, 당선, 열린우리당)

한명숙 후보는 비례대표의원과 장관을 역임한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초반부터 인지도를 높이는데 성공하였다. 환경부 장관의 경력으로 교육 및 환

경 개선의 책임자임을 강조하였고, 여성후보로서 부드러운 정치를 할 수 있다는 등의 장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탄핵에 대한 심판을 정치개혁으로 호소하며 본인이 깨끗한 정치인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선거운동기간 내내 자원봉사단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했고, 학연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전화로 지지를 호소하며, 조직활용을 최대한으로 하였다. 모바일 문자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여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 등을 활용하였다.

(나) 박금자 (영등포 을, 낙선, 민주당)

박금자 후보는 정책 홍보보다는 이미지 부각에 주력하면서 자칭 ‘영등포의 대장금’을 자처하였다. 상대후보는 현역의원으로 재선에 도전하는 후보였기 때문에, 상대 후보에 대한 차별성을 표현하는데 노력하였다. 박금자 후보는 25년 이상의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이며, 정책전문가이고, 깨끗한 여성후보임을 강조하였다. 1인 2표제에 따라 지지정당과 지역구 후보를 개별적으로 선택하는 점을 홍보하면서, 지지를 호소하였는데, 탄핵정국에 따른 민주당 지지가 떨어진 상황에서 지역구투표는 인물을 보고 투표해 달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선거 중반전에는 부분적 네가티브(negative)전략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영등포을 지역구내에 유권자의 지지정당이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의식하여 열린우리당 후보에 대한 자질론을 들어 비판하기도 하였다. 또한 옛 민주당 지지자에 대한 호소를 위해 추미애 선대위원장의 지원과 3보1배를 강조하기도 하였다.

<표 V 10-3> 후보자 이미지 및 선거전략 (유형 3)

후보자	공약 대상 유권자	선거전략	인터넷·미디어	주요공약
(5)한명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의원 및 장관 역임한 정치인 · 깨끗한 여성후보 · 부드러운 정치인 · 환경개선의 책임자 · 정치개혁의 선두주자 		
(6)박금자	중산층 지식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등포의 대장금이라는 여성후보의 이미지 강조 · 보건복지 정책전문가 · 깨끗한 여성후보 · 인물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을 통한 홍보는 후보자 개인의 홈페이지 활용 · 지역방송 한강 케이블TV 홍보 · 지역신문 ‘푸른영등포’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길동 뉴타운사업의 환경친화적 개발 · 특목고 유치 · 평생교육시스템 · 보육시설 확충 · 여성 창업지원센터 건립 · 여성복지회관 설립 · 성폭력 피해 여성의 무료진료/법률/경찰지원의 원스톱 지원활동 · 성폭력위기센터의 적극적인 조직망 확충 · 장애인 및 노인전문요양시설의 확대등 노인복지 강화 · 예방질병관리시스템 확충 · 여의도와 신길동의 관광·문화벨트 조성 · 교통문제의 해결 여의도와 신길지역의 육교 건설 등 · 리모델링 등을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

(4) 지역구 현역의원으로 지역구 재선도전 경우 (유형4)

(가) 김희선 (동대문 갑, 당선, 열린우리당)

김희선 후보는 동대문갑에서 16대 총선시 민주당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현역의원으로서 이번 선거에서는 열린우리당으로 재출마하였다. 탄핵에 대한 반대를 강조하면서 정치개혁을 강조하였고, 현역의원으로서 있으면서 주력하였던 친일청산법과 관련하여 본인이 독립운동가의 자손임과 함께 청렴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여당인 열린우리당에 힘을 실어줘야 정치개혁이 이루어진다는 논리로 유권자에게 호소하였다.

(나) 전재희 (광명 을, 당선, 한나라당)

전재희 후보도 광명을에서 16대 총선시 한나라당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현역의원이며, 광명시장을 지낸 경험 등 지역구내에서 인지도는 탄탄하였다. 광명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빗자루 시장’으로 통했는데, 직접 거리 등을 돌면서 민원을 살피고 실제로 빗자루를 들고 청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 잘하고 부지런한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정국에서 위기감을 느꼈으며, 선거운동 초기에는 기본적인 홍보 전략을 세우는데도 많은 혼란이 있었다. 예를 들면, 탄핵에 대해 정면 승부를 할 것이냐 아니냐, 그리고 후보차원에서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인가 말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선거운동 사무실 내에서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탄핵 가결안 동의에 앞서서 한나라당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죄하는 방향으로 탄핵에 대한 기본 입장을 세우고 선거운동에 전념하였다.

<표 V 10-4> 후보자 이미지 및 선거전략 (유형 4)

후보자	공약 대상 유권자	선거전략	인터넷 · 미디어	주요공약
(7)김희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핵심판 · 정 치 개 혁 을 위한 여당에 힘써 주기 · 친 일 정 산 법 통과를 통한 독립운동가 자손으로서의 청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책특권 등 국회의원의 과도한 권한제한 · 비리의원 국민소환 제도 도입 · 불법자금 국고환수법 제정 ·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 규명법 개정 · 일본 역사왜곡과 군국주의 부활 저지 · 노인 틀니 건강보험적용관철 · 경로당 지원금과 경로연금 대상 증진 · 미아찾기법 추진, 무인 카메라 설치 권장 · 아파트관리비 부가세 면제 · 도시가스 부과세 면제 · 핸드폰 기본료 50%인하 · 보육료 소득공제액 확대 · 주부 보험혜택 현실화 · 재래시장 특구지정, 대규모 지원 유치 · 과학고, 잉글리쉬존 유치로 교육여건 개선 · 청량리 민자역사를 금강산 출발역으로 개선 · 정신병원 이전, 홍릉 임업연구원 개방 · 이문로 확장, 전철 지하화
(8)전재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 핵 정 국 에 대해 사죄로 입장정리 · 현 역 의 원 과 광명시장경험을 살린 일꾼 정치인 (빗자루 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창출 노사화합을 통한 실업난 극복 ·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의 경쟁력 강화 · 양성평등사회, 어린이를 보호하는 사회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 · 고속 철도시대! 경기도의 중심도시 광명! · 재건축,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환경친화적 개발 · 교육 경쟁력 강화로 국제화 시대 인재양성 · 복지정책은 전국에서 광명이 최고

다. 선거운동과정의 조직운영전략

선거운동전략 세 번째 전략으로 선거운동 조직운영에 관한 전략을 살펴본다. 운동조직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당락이 달려있다고 할 정도로 선거운동 조직을 운영하는 일은 선거에서 매우 중요하다. 선거 캠프는 흔히 유급 선거운동원, 자원봉사자, 고문들로 이루어지며, 이들의 역할분담과 조직관리에 따

라 선거운동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1) 선거캠프의 조직운영

체계적인 선거운동본부를 조직·운영한 경우와 선거운동본부가 비체계적인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선거운동결과를 함께 비교해보면, 선거운동본부가 체계적으로 운영된 후보는 모두 당선되었고, 그렇지 못한 경우의 후보는 낙선하는 결과가 일치하였다.

<표 V-11> 총선 참여관찰 사례후보의 선거운동본부 운영조직

유형	후보명	내 용	체계적 운영여부
유형1	이혜훈	상주보좌관 5-6명, 사무원 3명, 선거운동원 28명 유급 선거운동원 5명, 전화홍보자 20명	○
	이선희	자원봉사위주의 구성, 비체계적 운영 자원봉사자들의 소극적 활동	×
유형2	송미화	기획과 사무운동원 4-5명 선거사무장 부재 각 동별로 3명의 선거운동원이 전화홍보와 거리홍보역할 부담 인력부족으로 홈페이지 개편 작업 지연	×
	원미정	체계적인 조직구분 부재 자원봉사자위주의 선거운동원 20명 대부분이 가정주부로 선거운동경험이 거의 없음	×
유형3	한명숙	체계적인 업무분담 및 조직적 운영 자원봉사자단 전문관리	○
	박금자	선거운동본부 조직 결성 자체에서 어려움 업무분담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음	×
유형4	김희선	16대 총선에서 활용한 기존 선거사무소 직원, 자원봉사자 중 양당의 지지자 및 후보 개인의 지지자들로 조직	○
	전재희	상주보좌관 4명, 선거운동원 24명 총무팀, 수행팀, 홍보팀으로 구성 · 총무팀—후보의 스케줄관리와 선거 인원을 관리·담당하는 사무국장과 보조 사무장, 회계담당 비서 · 수행팀— 선거운동원 10명 · 홍보팀— 인터넷 팀(방송국 PD 출신)과 전화홍보팀(웹디자이너)	○

선거캠프의 운영을 볼 때 대체적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진 후보가 당선되었고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조직적인 운영이 어려운 후보는 낙선하였다. 특히 초선으로 출마하는 후보의 경우 지역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보통 가족이나 개인적 친분에 따른 사조직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혜훈 후보의 경우는 시아버지의 정치인맥을 잘 이용하였고, 시어머니의 인맥과 남편의 제자들을 자원봉사자로 많이 동원할 수 있었다. 전제희 후보의 경우는 광명을 지역에 토박이나 마찬가지로 오랜 정치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시장재임시절부터 알던 단체와 지인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와 도움을 주었고, 남편과 자녀들의 도움도 상당하였다. 또한 한나라당 시의원과의 연계망을 이용하여 시의원의 전폭적인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대부분 당선된 후보들은 이미 자신들의 조직을 갖추고 있으면서, 정당으로부터의 도움도 받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조사된 낙선후보의 사례보다는 훨씬 많은 수의 선거운동원 조직을 활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낙선된 사례에 속하는 이선희 후보는 자원봉사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고 지역 내 기반도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거리 유세 등에서 유세차를 운영할 수도 없을 만큼 지원인력이 부족하여, 직접 걸어 다니는 방법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중앙당 차원의 지원유세가 있을 때 합류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송미화 후보의 경우는 선거초반에 인력이 부족하여 선거캠프를 운영하는 것이 어려웠으나 선거중반이후 상대후보와의 접전이 예상되면서 인터넷 등을 통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방문하였다. 박금자 후보의 경우는 지역 내 부녀회 조직을 활용하였고 산부인과 여의사협회 회장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협회관련 인맥의 지원을 받기도 하였다.

(2) 선거운동본부의 중앙당 지원 여부

여성후보자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지원여부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 조사에서 사례로 살펴본 후보의 경우 중앙당 지원을 받은 후보는 공천당시에 중앙당에서 경선을 거치지 않는 식의 단독공천을 받도록 지원해준 것이 대부분이었고, 이들 후보들은 모두 당선되었다. 대부분의 경우, 선거과정 중에 중앙당

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2> 총선 참여관찰 사례후보에 대한 중앙당 지원여부

유형	후보명	내 용	중앙당 지원여부
유형1	이혜훈	당내 심사위원회의 9:1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공천	○
	이선희	당 차원의 지원 부재	×
유형2	송미화	상대후보가 현역의원으로 당선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정당차원의 지원 받지 못함	×
	원미정	방송여론조사와 당내부 여론조사를 통해 2위 후보와 2배 이상의 지지율 차이를 보이며 후보로 선출되었으나 이후 선거운동본부의 조직과 자금 모두 원미정 후보의 부담으로 이루어짐	×
유형3	한명숙	단독후보로 경선없이 공천	○
	박금자	단독후보로 공천받음. 해당 지역의 공천을 둘러싸고 박금자 후보와 김민석 후보의 양자구도를 보이면서 공천심사를 통해 입후보한 뒤에도 김민석 후보와의 갈등으로 지지세력 약화	○
유형4	김희선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해당 지역구의 유력후보로 인정되어 단독으로 공천	○
	전재희	단독후보로 공식 경선 없이 입후보	○

(3) 선거운동방식

여성후보들이 주로 사용한 선거운동 방식은 거리유세, 전화홍보였으며, 지역방송을 통한 후보자 토론회는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방법이었다. 지역에서 개최되는 합동연설회가 폐지되고, 각 지역의 케이블 방송을 통해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후보자 홈페이지 구축, 인터넷 카페 등이 운영되었고, 후보자에 따라서 휴대폰을 통한 문자메세지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부 후보들은 유권자 한사람 한사람을 만나는 맨투맨 유세를 하기도 하였으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한계를 나타낼 수밖에

에 없었다.

총선 선거경험만이 아니라 기타 선거에 참여한 경험의 유무를 놓고 분석했을 때, 선거경험 유무의 차이가 선거운동방식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과 일치하는 관계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다만 후보자가 사조직을 포함하여 지역조직을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V-13> 총선 참여관찰 사례 후보의 선거운동 방식

유형	후보명	내 용	선거방식의 다양성
유형1	이혜훈	거리유세, 지역방송을 통한 후보자 토론 과정, 홈페이지와 카페 운영	○
	이선희	맨투맨 유세, 케이블 방송, 홈페이지 운영	×
유형2	송미화	거리유세, 전화홍보, 홈페이지 운영	○
	원미정	맨투맨 유세	×
유형3	한명숙	거리유세, 전화홍보, 모바일 문자 서비스	○
	박금자	거리유세, 지역방송을 통한 연설·토론회, 공영방송의 인터뷰, 지역신문을 통한 홍보, 홈페이지 활용	○
유형4	김희선	거리유세, 전화홍보, 홈페이지 관리, 중앙당 행사 및 타후보의 유세지원 등 공중파를 통한 이미지 제고	○
	전재희	거리유세, 전화홍보, 홈페이지 관리(게시판, 동영상) 등	○

(4) 선거자금

선거자금 모금과 지출의 사용현황을 보면, 선거의 경험이 있는 후보자가 그렇지 않은 후보보다 모금의 액수도 많고 모금방법도 체계화되었으며, 더 많이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선거자금의 문제는 후보자들이 공개하기를 가장 꺼려하는 부분인데다 참여관찰 조사자가 자금의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이 있었다. 다음은 후보자별 선거자금 사용현황에 관한 비교표이다.

<표 V-14> 총선 참여관찰 사례 후보의 유형별 선거자금 사용현황

유형	후보자	선거자금 사용현황
유형1	이혜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한도액은 1억5천8백만원 · 4월13일 현재 1억원 미만인 9천만원정도 소비한 것으로 발표
	이선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원후보 등록비 : 일천오백만원 · 민노당을 지원하는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선거운동에 참여한 모든 사람은 100% 자원봉사로 지원
유형2	송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등록비: 2000만원, 기타 홍보물 및 사무실 운영경비 500만원, 선거운동에 참여한 사람 대부분이 자원봉사로 지원
	원미정	모든 선거자금은 후보의 부담으로 이루어짐. 후원회 등을 통한 모금은 없었으며 선거공영제(15% 이상 투표시 선거 관련 비용 100% 국가에서 환급)에 기대를 걸고 약간의 선거운동원을 고용한 상태
유형3	한명숙	4월 13일 후원제한금액 1억5천만원 모금 마감
	박금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비와 공식적 후원회를 통해 조달. · 후원회는 2004. 2. 24.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개최 (후원회장: 송자 전 연세대 총장) · 후원자의 대부분은 의사회, 지인, 분유회사와 제약회사 등이었으나, 지역 내 지지자들의 현물후원이 선거수행과정에서 도움 · 선거비용 제한액의 약 73% 지출
유형4	김희선	수입총액 40,850,000원 지출총액 29,483,480원 잔 액 11,366,520원
	전재희	수입총액 61,807,000 지출총액 56,752,500 잔 액 5,054,500

라. 선거결과와 당락요인

(1) 선거결과

선거결과 선거경험이 없는 후보에서 이혜훈 후보, 비례대표의원으로는 한명숙 후보, 그리고 지역구 현역의원인 김희선, 전재희 두 후보가 당선되었다. 지방의원으로서 총선 지역구에 처음 출마한 송미화, 원미정 후보는 모두 낙선하였는데, 송미화 후보의 경우는 열린우리당으로 출마하여 현역국회의원

과 맞서서 선전을 펼쳤으며, 원미정 후보의 경우는 평소의 인지도에 훨씬 못미친 수준으로 5위에 그쳤다. 비례대표의원으로 지역구에 도전한 박금자 후보는 현역의원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펼쳤으나 낙선하였다.

<표 V-15> 후보자 유형별 선거결과

유형1 선거경험 없음	한나라당 이해훈 서초 갑 당선	민노당 이선희 종로구 낙선
	1위 한나라 이해훈 후보: 54,103(56.4%) 2위 열우당 함종길 후보: 28,318(29.5%) 3위 무소속 배선영 후보: 12,769(13.3%) 4위 자민련 김우수 후보: 710(0.7%)	1위 한나라당 박진 후보: 37,431표(42.8%) 2위 열우당 김홍신 후보: 36,843표(42.1%) 3위 민주당 정홍진 후보: 9,614(11.0%) 4위 민노당 이선희 후보: 2,950표(3.4%)
유형2 지방의원	열린우리당 송미화 은평 을 낙선	민주당 원미정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낙선
	1위 한나라당 이재오후보 53,107표(45.3%) 2위 열우당 송미화 후보 50,566표(43.1%) 3위 민주당 이성일 후보 6,064표(5.2%) 4위 민노당 정태연 후보 4,957표(4.2%) 5위 자민련 임왕혁 후보 1,036표(0.9%) 6위 무소속 이용준 후보 774표(0.7%) 7위 민주기독교당 민승 후보 627표(0.5%) 8위 민주공화당 김명환 후보 232표(0.2%)	1위 열우당 한광원 후보 29,005표(35.6%) 2위 한나라당 서상섭 후보 25,873표(31.8%) 3위 무소속 이세영 후보 13,435표(16.5%) 4위 민노당 문성진 후보 7,021표(8.6%) 5위 민주당 원미정 후보 5,327표(6.5%) 6위 자민련 이수일 후보 522표(1.0%)
유형3 비례대표의 원	열린우리당 한명숙 일산 갑 당선	민주당 박금자 영등포 을 낙선
	1위 열우당 한명숙 후보 48,286표(49.00%) 2위 한나라당 홍사덕후보 45,936표(46.60%) 3위 민주당 박태우 후보 3,473표(3.50%) 4위 무소속 최윤기 후보 840표(0.90%)	1위 한나라당 권영세 41,432표(43.4%) 2위 열린우리당 김종구 39,798표(41.7%) 3위 민주당 박금자 12,674표(13.3%) 4위 자민련 이중식 1,594표(1.7%)
	열린우리당 김희선 동대문 갑 당선	한나라당 전재희 광명 을 당선
	1위 열우당 김희선 후보 43,228표(44.1%) 2위 한나라당 장광근후보 40,210표(41.0%) 3위 민주당 지용호 후보 6,136표(6.3%) 4위 민노당 김영준 후보 4,310표(4.4%) 5위 무소속 한승민 후보 2,444표(2.5%) 6위 무소속 이경희 후보 934표(1.0%) 7위 자민련 김영환 후보 804표(0.8%)	1위 한나라당 전재희 36,029표(47.2%) 2위 열우당 양기대 32,713표(42.8%) 3위 민노당 김연환 3,835표(5.0%) 4위 민주당 박정희 3,793표(5.0%)

(2) 당선 요인

이번 총선 참여관찰 사례후보의 경우, 개인적 특성과 지역구의 특성과의 관계, 선거운동조직, 선거운동방법, 중앙당지원, 지역구 공약 등의 요인이 당선과 낙선에 영향을 미쳤으며, 당선된 후보들은 위의 요소들이 모두 잘 활용된 사례들이었다.

(가) 이해훈 (한나라당, 서초 갑, 당선)

이해훈 후보가 출마한 서초갑 지역구는 지역구 특성상 당선후보는 바뀌지만 소속 정당은 모두 한나라당후보가 당선되는 특성이 있는 지역구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하였고, 현역의원이 출마하지 않는 경우였다. 따라서 이해훈 후보는 총선 본선보다 경선과정에서 오히려 더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했던 경우이다.

열린우리당의 후보가 김홍신에서 함종길로 뒤늦게 교체되면서 상대당 후보의 정책적인 준비가 이해훈 후보보다 미비했던 것도 성공요인의 하나로 작용하였으며, 탄핵정국에서 정치활동 경험이 없으며 여성이라는 점이 깨끗한 후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와 탄핵에 대한 책임이 기존 정치인에 비해 적었기 때문에 이 역시 당선요인의 하나였다. 또한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이 밀집한 지역에서 경제전문가로서의 이미지가 경제침체기 속에서 후보의 주요한 장점으로 부각되었다.

이외에 한나라당의 박근혜 바람의 영향으로 주춤하던 한나라당 지지도가 다시 올라갔고, 가족의 지원도 절대적이었다. 후보자 남편(연세대 김영세 교수)의 지원과 시아버지인 김태호 前 한나라당 의원의 후광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에 여성단체나 미디어에서 경제전문가이자 젊은 여성후보로 주목을 받았던 점도 긍정적이었다.

<표 V-16> 총선 참여관찰 사례 후보 당선자의 당선요인

유형	후보자	정당/지역구	당선 요인
유형1	이혜훈	한나라당 서초 갑	한나라당 강세 지역구에 한나라당으로 출마 탄핵에 대한 책임이 적은 정치신인 경제침체기에 유능한 국제적 경제전문가의 이미지 구축 상대 정당의 후보 교체로 인한 우위 획득 가족을 비롯한 광범위한 선거운동조직기반 형성
유형3	한명숙	열린우리당 일산 갑	장관으로서의 높은 인지도 탄핵심판, 깨끗한 정치인임을 표방 체계적인 선거운동조직 활용 민주당 지지기반의 진보적 성향의 지역구
유형4	김희선	열린우리당 동대문 갑	현직 지역구의원으로서의 현직효과 16대 국회 의정활동에서 보여준 성실하고 청렴한 이미지 지역구에 다양한 공약제시 탄핵심판, 정치개혁의 선두주자 이미지
	전재희	한나라당 광명 을	현직 지역구의원으로서의 현직효과 시장 재직으로 높은 인지도 16대 국회 의정활동에서 보여준 성실하고 청렴한 이미지 시정활동을 통해 형성한 인맥 네트워크

(나) 한명숙 (열린우리당, 당선, 일산 갑)

한명숙 후보의 경우 선거 실시 이전부터 인지도가 높았으며, 탄핵정국에서 열린우리당으로 출마하여 정치개혁과 탄핵심판에 대한 의지로 유권자에게 호소하였다. 상대후보는 한나라당의 홍사덕 후보로서, 당시 탄핵사건의 핵심적 인물이었으나, 유권자의 표심은 탄핵에 대한 심판과 여성정치인으로서 장관과 국회의원을 지낸 점과 온화한 이미지가 한명숙 후보에게 당선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김희선 (열린우리당, 당선, 동대문 갑)

김희선 후보는 16대 총선당시 민주당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지역구에서 정

당을 열린우리당으로 바꾸어 현역의원으로 출마하였다. 김희선 후보의 당선 요인 중 가장 큰 요인은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탄핵저지에 앞장선 인물로서 인지도가 높아진 것과 현역의원이라는 점이다.

탄핵에 대한 적법성을 강조하는 상대후보인 한나라당의 대변인 장광근 후보와 탄핵의 찬성과 반대로 후보자간에 입장이 첨예하게 분리되었고, 상대적으로 김희선 후보의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보임으로서 두 사람의 이미지가 고착화되었다.

두 번째, 김희선 후보는 16대 국회에서 친일청산법을 만들어 통과시켰으며 ‘거짓말 안하는 정치인 베스트 5’(천정배, 오세훈, 김홍신, 정범구, 김희선)에 선정되었고, 평화통일후보 30인 선정, 총선연대 지지후보 54인에 선정되는 등 국회 및 다양한 단체에서 개혁성, 전문성, 성실성, 지역발전 기여도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았으며 이러한 의정활동이 유권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세 번째는 일제하 독립군의 자손이라는 프리미엄이 있었다. 김희선 후보는 할아버지(김성범)가 독립군 자금책이었고, 작은 할아버지(김학규)가 광복군 제3지대장이었으며 아버지(김일련)는 한독당 비밀청년당원으로 김구 선생의 명으로 중국 천진에서 활동하다 행방불명된 후 벨로야스크 감옥에서 생애를 마쳤다. 김희선 후보는 이같이 일제 하에서의 전형적인 독립군 자손이었으며 이 때문에 돈이 없어 고등학교를 중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유권자에게는 또 하나의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선거전 여론조사에서 다른 후보들에 비해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선거사무실 분위기는 매우 여유로웠다. 따라서 정동영 의장 사퇴 등 중앙당 차원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앙당 회의에 참석하였고, 열세지역 후보를 지원하는 등 중앙당의 행사에 다양하게 참석할 수 있었는데, 이런 과정이 TV 등 언론에 보도되면서 후보의 인지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

(라) 전재희 (한나라당, 당선, 광명 을)

전재희 후보는 본인이 시장을 지냈고, 또 본인이 현역의원으로 있는 지역

구에 출마하면서 상당히 높은 인지도로 선거시작 전부터 당선이 예측된 후보였다. 전재희 후보의 당선요인 중 가장 큰 것은 이 같은 후보자의 정치활동 경력과 인지도이며, 의정활동에서 신뢰성과 청렴성을 두루 갖춘 정치인으로서 주민들 사이의 신망이 매우 두터웠다.

두 번째 요인은 오래된 지역구 관리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에 있었다. 전재희 후보의 인적자원에는 자원봉사자와, 선거운동 조직, 그리고 광명을 지역의 시의회 의원들까지 가세하여 후보를 지원하였다. 전재희 후보 선거 사무실을 드나드는 중년의 여성들은 대부분이 광역시 내의 크고 작은 단체의 단체장을 역임한 사람들이었다. 주로 이들은 전재희 의원이 관선 시장으로 있을 때부터 인맥을 유지해 온 사람들이었다. 또한 시의회 의원들 대부분이 한나라당 소속이어서 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시의원 조직을 활용하는 것은 지역의 그 어떤 조직을 활용하는 것보다 큰 효과를 가져 온다는 점에서 전재희 후보는 충분한 선거조직을 운영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⁴²⁾

세 번째는 가족들의 전폭적인 지지이다. 전재희 후보의 남편 김형률(조달청 근무)씨는 이번 17대 총선을 맞아서는 휴직계를 내고 전 후보를 위해서 여성후보가 다닐 수 없는 사우나 등 주로 남성들이 모여 있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돌면서 유세를 하고, 선거 사무실을 방문하는 손님들을 후보대신 맞이하기도 했지만, 선거 캠프에서 남자임을 앞세워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 남편으로서 전재희 후보를 정치인으로서 인정하고 그 능력과 자질을 신뢰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전재희 후보의 자녀들도 선거사무실이나 길거리 유세, 지하철 역 아침, 저녁 인사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방

42) 전재희 후보의 선거 캠프 자체가 이미 이전에 선거를 경험한 참모들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선거 캠프보다도 업무 분담이나 조직화에 있어서 뛰어났다는 생각이 든다. 수행팀과 사무팀 그리고 홍보팀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지난 2002년 선거에도 참여를 했던 사람들이라서 일 처리가 신속하며 또한 자신의 일에 대한 남다른 노하우와 프라이드가 있었다. 또한 자원 봉사자들의 상당수도 이전 선거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봉사자들이 재결집한 경우가 많았다.

법으로 후보를 도왔다⁴³⁾.

(3) 낙선 요인

낙선요인은 앞의 당선요인과 대조적으로 개인적 특성과 지역구의 특성과의 관계, 선거운동조직, 선거운동방법, 중앙당지원, 지역구 공약 등의 요인에 있어서 후보자와 각 개별 요인이 적절하게 결합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V-17> 총선 참여관찰 사례 후보 낙선자의 낙선요인

유형	후보자	정당/지역구	낙선 요인
유형1	이선희	민주노동당 종로	민주노동당의 정당득표율에 초점을 둔 선거운동 지역구에 관한 공약부족 여성단체, 사회단체의 지원세력 부재 인지도 부족, 소극적 선거운동
유형2	송미화	열린우리당 은평 을	현역의원을 상대로 도전 체계적인 선거운동조직 미비 낮은 인지도 구체적인 공약 부족
	원미정	민주당 인천 중구·동구· 옹진군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강세지역에 민주당으로 출마 소극적인 선거운동 체계적인 선거운동조직 미비
유형3	박금자	민주당 영등포 을	현역의원을 상대로 도전 남성중심의 지구당 조직 및 지역조직 체계적인 선거운동조직의 미비

(가) 이선희 (민주노동당, 낙선, 종로구)

이선희 후보는 본 조사에서 실시한 사례 중 이혜훈 후보(한나라당, 서초

43) 선거 운동이 끝난 마지막 날 밤에 남편은 이런 말을 했다. “참여자 정치인의 가족들은 힘든 것 같아요. 엄마가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가족들이) 희생해야 할 부분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친족의 범위도 더욱더 넓어지는 것 같고요. 남자 정치인들은 아내가 있고, 그래서 그 아내가 일정부분 상당 내조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여성 정치인은 아내가 없으니 그 부분을 자녀들이 떠맡게 되는 것 같아요. 여성 정치인에게는 가족들의 지지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인터뷰-1남(28살) 1녀(26살).

갑)와 마찬가지로 선거출마 경험이 없이 초선에 도전한 후보자이다. 하지만, 정치일번지인 종로구라는 지역구의 특성상 민주노동당 후보로 출마하였다는 점이 가장 취약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이선희 후보측에서도 원래의 목표는 당선이 아니라, 전국 15%의 민주노동당 지지 투표율을 달성하는 것이었는데, 선거결과 15%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선희 후보의 낙선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라고 평가하였다.

이선희 후보의 공약 유권자층은 재래시장과 대학로등 젊은 유권자층이었는데, 보수적 성향이 강한 지역구에서 당차원의 선거공약외에 지역구에 대한 공약이 부족하였다. 또한 자원봉사의 활용이나, 여성단체나 시민단체의 지원이 부족하였다.

(나) 송미화 (열린우리당, 낙선, 은평을)

송미화 후보가 출마한 지역구는 3선에 도전하는 한나라당 현역의원이 출마하는 지역구였으며, 지방의원의 경험만을 가지고 있는 신진 정치인으로서 어려운 도전이었다. 그럼에도 탄핵정국 가운데 열린우리당의 지지도가 급상승하면서 박빙의 승부를 벌인 점은 매우 고무적이었다.

낙선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인지도가 부족한 신인 정치인이 제약적인 선거법 하에 단기간의 선거운동기간동안 인지도를 높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이번 개정된 선거법은 후보자를 제외한 선거운동원들의 어깨띠 착용과 명함 배부 금지, 선거운동원 그룹인원을 2명으로 제한하는 등, 전반적으로 선거열기를 반감시키고, 무명의 정치신인들에게는 인지도를 올리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했다.

두번째 낙선요인은 선거지원조직의 역량부족을 들 수 있다. 상대 후보캠프에서는 엄청난 조직력을 발휘하는데, 송미화후보 캠프의 실무자들은 선거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부족한 인력으로 선거전반에 관한 일들을 나누어 처리하다보니 여러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깊이 있고 친근하게 파고 들어가는 것이 상대당 후보보다 부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전한 결과가 나온 것은 지역을 떠나 도처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의 활약과 온라인 선거

전의 승리, 송미화 후보의 거리유세와 가족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들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개정된 선거법이 돈선거를 막는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자원봉사자의 활동제약이 많았다는 점은 아쉬운 점이다.

세번째 낙선요인은 공약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은평을 내 진관내외동에서 무려 1,500여 표로 졌는데, 서울시에서 3월말 원주민 재입주율 100%를 보장할 듯 발표한데 대해서, 송미화 후보 캠프에서 이러한 은평 뉴타운과 관련하여 세심한 정책적 대응이 부족했던 영향이 컸다고 본다.

그밖에 젊은층을 공략하는데도 실패하였는데, 인터넷이나 홍보물로도 인지도를 높이는데 부족하였고, 선거운동기간 후반부의 열린우리당 지지도가 주춤하면서 한나라당 현역의원의 지지도가 올라갔고,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당내 단합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총력을 투입하지 못한 점이 패배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다) 원미정 (민주당, 낙선,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원미정 후보는 탄핵정국에서 민주당으로 출마하였는데, 일단 민주당이 열세에 몰린 상황에서 불리한 출발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원미정 후보의 낙선요인 중 첫째는 맨투맨 유세의 한계에 있다. 후보자가 직접 유권자를 1대1로 만나 유세를 펼치는 것을 물론 매우 효과가 높은 유세방법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후보자가 모든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유권자를 만난다는 것을 불가능하다. 원미정 후보는 시의원 선거 시절부터 자신이 직접 발로 뛰며 유권자 하나하나를 만나는 것을 선호하고 원칙으로 삼아왔지만, 시의원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는 다른 차원이었다.

두 번째는 미디어선거의 소극적 활용이다. 모든 선거에서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인지도는 선거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총선을 포함한 지방선거일수록 인지도는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기 마련이다. 이번이 초선인 원후보의 경우, 넓은 지역구에서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미디어 이용이 필요했다. 또한 원미정 후보의 열악한 자금사정 하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릴 통로는 미디어였지만, 미디어

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젊은 유권자들에게 호소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세번째는 비체계적인 선거조직 운영이다. 원미정 후보의 선거캠프는 대부분 자원봉사자들로, 가족같이 친밀한 유대관계가 돋보였다. 하지만 이 점이 오히려 효율적인 선거운동을 펼치는 데에는 다소 장애물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대부분이 가정주부이며 선거운동 경험이 많지 않아 시간배분과 현실적 선거운동에서 자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이 크지 않았음에도 이들을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지도력이 부재했다.

네번째는 공략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선거전략의 부재이다. 사무장과의 인터뷰를 통한 정보에 의하면, 원미정 후보 캠프의 타겟 유권자는 젊은층과 여성층이다. 하지만 원미정 후보의 발로뛰는 선거운동 방식상 실제 후보가 거리에서 만나본 유권자들은 그들이 타겟팅한 유권자와 다른 층이 많았다. 물론 모든 성격의 유권자층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원미정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는 마인드를 지닌 특정 유권자층을 집중 공략하는 것이 부족했다고 판단된다. 원미정 후보의 강점인 깨끗한 이미지와 여성후보라는 참신성, 그리고 그의 유권자중심의 선거운동 방식을 높이 평가할 유권자층은 상대적으로 젊고 진보적이며 이성적으로 후보를 판단할 수 있는 높은 정치수준을 지닌 유권자층이다. 하지만 그들과 가장 경제적이고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인터넷 상의 만남의 장을 활용하지 않았다.

다섯째는 지역주의에 기댄 전화유세이다. 호남 향우회 연락망을 통한 전화유세는 지역주의에 기댄 원미정 후보 캠프의 원칙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선거운동이었다. 어쩌면 선거 막바지에 이르러 다급한 원후보 캠프가 내놓은 방책일 수도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분열(열린우리당 창당)이후 1년이라는 시간동안 충분한 정치적 논의가 펼쳐진 것으로 평가되는 호남지역 주민들 혹은 호남출신의 유권자들에게 민주당 이미지의 부각은 일부 민주당 골수파를 제외한 유권자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라) 박금자 (민주당, 낙선, 영등포 을)

박금자 후보는 15대총선시 민주당이 승리하고, 16대에 한나라당이 승리한

지역구에 민주당으로 출마하였다. 현역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면서 지역구 도전은 처음이었으나, 가장 큰 변수는 탄핵정국이었고, 그 가운데 민주당은 유권자의 지지를 얻는 것이 어려웠다.

박금자 후보의 선거운동 결과를 볼 때 여성후보로서 지역구를 관리하는 문제가 첫 번째 난관이었다. 기존 남성중심의 정치문화는 지역구 관리에 있어서도 여성후보자에게는 어려운 과정이었다. 소위 지역 유지를 자처하는 지역내의 협의회 조직과 지역모임은 대부분 남성중심으로 구성되어 친분이 적은 여성후보자가 접근하기에 어려웠으며, 후보자 자신이 술자리 문화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두 번째는 돈선거 관행이 여전히 만연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금자 후보 선거보좌관에 따르면 선거 지원을 자원봉사가 아닌 일자리로 여기면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였으며, 남성의 경우 그 정도가 더욱 심하였다. 세 번째는 지역구에 처음 출마하는 무경험자로서의 어려움이다. 선거 경험이 전무할 경우 지역유권자에게 후보자를 알리는 것이 관건인데, 이때는 지역조직을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정치신인에게 지역조직 조차 생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조직을 운영 할 경우 돈선거로 직결되는 부분인데, 박금자 후보의 경우 사조직을 구성하지 않았다. 15대와 16대 총선에서 민주당 김민석 전 의원이 당선된 지역이므로 민주당내의 당시 지역조직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었으나, 김민석 전의원과의 지역구 공천을 둘러싼 내분으로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

한편 선거조직에 있어서 선거운동원의 역할분담이나 인력의 효율적 운영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4)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8명 후보의 선거운동을 정리해보면, 8명의 후보는 선거경험에 따른 유형으로 나뉘어 지며, 후보자의 인지도 및 지역구 특성, 후보자가 출마하는 지역구의 상황이 현역의원이 출마하느냐에 따라서도 유리한지 불리한지의 여부가 결정되며, 선거캠프의 조직체계, 중앙당차원의 지원여부, 선거운동방식 등 다양한 요인이 혼합되어 당락이 결정되었다.

<표 V-18> 후보자 유형별 당락요인에 미친 요인

유형	후보자	지역구 형태	선거캠프 체계적운영	중앙당 지원	선거운동방식의 다양성	선거 결과
유형1	이혜훈	공석	○	○	○	○
	이선희	공석	×	×	×	×
유형2	송미화	현역 도전	×	×	○	×
	원미정	공석	×	×	×	×
유형3	한명숙	공석	○	○	○	○
	박금자	현역 도전	×	○	○	×
유형4	김희선	현역	○	○	○	○
	전재희	현역	○	○	○	○

본 조사가 참여관찰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고, 참여관찰 과정에서 다소 관찰자의 주관적 입장이 반영된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유형별 분석을 놓고볼 때 지역구형태나 선거캠프의 체계적 운영, 중앙당 지원 등이 선거결과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위의 표에서 제시한 요인 이외에, 후보자의 인지도, 지역구 유권자의 성향, 선거자금 등 객관화할 수 없는 요인도 중요한 당락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이 같은 요인은 본 조사에서 객관화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한편, 여성후보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어려움은 조직의 운영과 조직원 구성이었는데, 중앙당 차원의 지원이라는 것이 본조사의 사례에 따르면 여성후보에 대한 단독 공천을 지원해준 정도로 미미하다. 특히 정당에서 여성후보에 대한 지역구 공천을 경선 없이 지원할 경우는 유형4의 경우와 같이 현역 의원이거나, 인지도가 큰 인물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다시 말해서 당선가능성이 큰 후보의 경우에 해당되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선거운동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 지역구 현역의원인 경우와 조직적인 선거운동캠프를 운영할 수 있을 때 당선가능

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마. 여성후보 선거운동의 시사점 및 개선 방안

(1) 여성후보의 차별성

17대 총선에서는 유권자의 여성정치인에 대한 비하 또는 과소평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남성정치인들 중심의 국회파행에 대한 반작용으로 신인정치인과 여성정치인에 대한 기대가 컸던 선거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여성계에서는 여성의 정계진출이 여성 및 소외 계층에 대한 정책 개발과 연결되기를 기대하였다.

한편, 선거를 치르면서 여전히 지역주의의 병폐로 출신지역에 따른 후보의 선호문제라든가, 정책 우선이 아닌 감정 우선의 선거풍토로 총선이 치러졌던 것은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2) 여론조사 발표시기의 문제

이번 17대 총선에서 여론조사 발표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4월1일 이전까지만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선거기간 중에 정확한 여론조사 결과를 알 수가 없었다. 이는 계속 지적되듯이 후보선택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에 대해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각 후보 캠프의 효율적인 선거전략 수립을 위한 공식적 정보의 흐름을 차단하는 것이기도 하다. 후보캠프 내의 여론조사는 인력과 자원 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선 여론조사 발표가 선거를 과열시키고 이성적인 판단을 흐릴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사실상 박빙의 승부처 외에서는 그 영향력이 매우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여론조사의 발표시기 등 유권자가 후보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3) 인터넷·미디어 선거

개정된 선거법으로 역대 총선과 비교하여 선거자금이 대폭 축소되어 돈 안

드는 선거를 했지만, 정치 신인들에게는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수단이 부족했다. 합동연설회 등이 사라지고 미디어 선거방법이 주류를 이루면서 새로운 선거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일부 유권자층은 상대적으로 후보에 대한 적은 정보를 접하는 등 자신들의 알권리를 충분히 찾지 못하였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이 확산되고 인터넷 상에서 많은 정보가 제공되는 현실에서 세대간의 정보격차는 심화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의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이유로 공정하지 못한 비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후보자의 홈페이지나 당 홈페이지, 언론 홈페이지 등에 인터넷 설명제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미디어 선거를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합동연설회, 정당연설회를 폐지하는 대신 도입한 지역방송의 토론회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들면, 은평구의 경우 4월 8·9일에 갑·을구가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생중계를 했다는 것에 만족한 뿐 지지율이 낮은 무소속이나 군소정당 후보들에게는 토론회에 참석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고, 일부 구민들도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또한 토론회 방송시간대가 시청률이 높지 않고, 녹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재방송이 안 되었으며, 후보자 연설통상은 높은 제작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엄두를 못내는 등의 미디어 선거로 가는 과정에 개선이 필요하다. 케이블 방송과 같은 지역방송에서 자체적으로 후보들 간의 정책토론이나 연설회 등을 개설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 주민들의 호응도나 요구에 따라 그 횟수나 방법을 달리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선거자원봉사자 교육과 활용

이번 총선은 2인을 초과한 선거운동원의 거리인사가 금지되고 여러 선거운동원들이 같은 복장이나 차림을 하는 등의 단체선거운동이 불가능해지면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영역을 매우 축소시켰다. 실제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위한 자발적 선거활동을 펼치고 싶은 많은 유권자들이 까다로워진 법규정으로 동참하지 못하였다. 물론 법을 준수하면서 후보 지지활동을 하는

많은 자원봉사자들도 존재했지만 전체적으로 일반시민의 입장에서는 참여의 벽이 높았다. 한편, 자원봉사자를 구하지 못한 후보들도 많았고, 그동안 지역구 선거의 관행을 고려할 때 진정한 자원봉사의 개념이 정착되기 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자원봉사를 제도화하고 교육시키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돈 안 드는 선거로 가려면 무보수 자원봉사가 활발해져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안 되어 있다. 대부분 이해가 부족해 자원봉사활동이 업무구분 없이 이뤄지고 있었다. 선거캠프도 선거운동전에 미리 프로그램 등을 준비한다면 자원봉사자들의 특성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든다. 시민단체에서 자원봉사자의 사조직화에 대한 감시를 하며 자원봉사 교육을 시키는 체계성을 갖춘다면, 선거가 후보자 중심이 아니라 지역구민의 축제로 선거문화를 바꾸는 과정이 될 것이다.

VI



17대 총선을 통해 본
여성후보의 선거과정 실효성
확보방안

1. 정당의 공천과정에서의 여성의 대표성 확보방안	146
2. 여성후보 경선제 실효성 확보방안	149
3. 여성후보 선거운동과정에서의 실효성 확보방안	154

Two horizontal bars with a cross-hatch pattern at the bottom of the page.

본장에서는 IV장과 V장을 중심으로 정당들의 선거과정으로서 공천과정, 경선과정, 본선 선거운동과정의 특징을 요약정리하고, 향후 실효성 확보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17대 총선과정과 결과를 놓고 볼 때, 여성의원 수가 16대 당시 5.9%에 비하여 2배 이상 되는 13%로 되었다. 이렇게 여성국회의원 비율이 늘어난 것은 정당법 31조에 비례대표제 여성공천 50% 할당을 명시하고, 정당들이 과거보다 지역구에도 많이 공천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정치참여는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수준에 맞추어 보다 확대 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나타난 공천과정에서의 여성대표성에 나타난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17대 총선에서 주요 정당들은 대부분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원내외 인사로 심사위원을 구성하였고, 여성의 참여를 독려했던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측면이 강하였다.
- ② 여성정치인 인력풀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17대 총선으로 인하여 고비용의 정치구조가 파괴되었고, 정치인하면 특정한 사람이 하거나, 부정부패라는 도식이 많이 완화되었다. 이제는 다양한 여성인력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 ③ 주요정당들은 대부분 비례대표에 여성할당 50% 공천은 지켰으나, 정당법 31조에 명시된 지역구 30% 여성공천은 요원하다는 것이다.
- ④ 여성들도 많이 공천되기 위하여 자발적인 정당 활동과 함께 당직자로서 참여할 기회가 여성들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금번 총선에서 주요정당이 실시한 경선 비율은 35% 대 이하로 낮았지만, 앞으로 당내 민주화의 요구와 관련하여 경선제의 실시는 증가될 전망이다. 금번 총선을 맞아 정당들이 실시한 경선제의 경우 여성후보들은 상당수가 낙선을 경험하였다. 여기에는 경선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들고, 전화응답자의 확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젊은 층 확보가 어렵고, 선거인단의 대표성

문제점 등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른 여성후보들의 준비도 있어야 할 것이다. 경선제 사례를 통하여 나타난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선거인단 구성에 있어서의 문제점이다. 17대 총선에서 보았듯이 아직 경선제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경선에서는 당원 및 유권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선거인단을 구성하고, 그 구성은 전화조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선거인단 대표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아울러, 투표방식에 있어 민노당을 제외하고, 직접 투표장에 선거인단이 나가서 투표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투표율이 낮게 나타났다.
- ② 민노당의 경선방법을 제외하고,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에서 실시한 경선방식에 있어 3~4일 밖에 안 되어 선거기일이 너무 짧고, 후보를 알릴 수 있는 방법도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 ③ 후보자의 개인적인 조직력이나 지명도 등의 자격과 관련하여 판세와 당락에 영향력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정치에 관심있는 여성의 경우 평소부터 인지도를 높이는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며, 경선의 방법도 개방형 국민경선과 여론조사의 방식을 병행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 ④ 보편적으로 자금력이 취약한 여성들에게 경선비용은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경선은 본선보다 자금이 있어 부담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경선자금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 ⑤ 후보진영간 경선실시 방법, 선거인단 구성 등에 있어서 후보 진영간 갈등을 야기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경선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중의 하나가 선관위 구성의 공정성 확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다음은 본선 선거운동과정에 대한 참여관찰 사례조사의 결과로 나타난 특징 및 문제점이다.

- ① 이번 선거에서는 여성후보의 차별성이 부각되면서 여성후보라는 것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 남성중심의 국회운영이 파행을 거듭하였고, 탄핵정국과 맞물려 정치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정치신인에 대한 유권자의 기대감이 여성정치인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② 본선과정을 통해본 또 하나의 특징은 앞의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여성후보의 당락요인에는 개인적 특성과 함께 선거운동조직의 체계적 운영전략, 후보자의 이미지 홍보전략, 선거운동방법 등의 요인이 작용하였다. 본선 사례 후보의 선거경험 유무와 선거운동조직의 운영이나 선거운동방법이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으며, 후보자 개인이 선거운동원 조직을 구성하는 능력에 따라 조직적 운영과 비조직적 운영으로 구분되었으며, 중앙당의 지원은 경선을 거치지 않고 공천해주는 방법이 결정적이었으며, 선거과정 중에 중앙당 차원의 지원은 거의 없었다.

한편, 본선과정을 통해 몇가지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 ① 여론조사 발표시기가 본격적인 선거운동기간 이전까지만 허용되고 운동기간동안에는 금지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혼란이 컸으며, 이는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도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 후보캠프의 효율적인 선거전략 수립을 위한 공식적 정보의 흐름을 차단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론조사 발표시기 등 유권자가 후보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정보는 최대한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② 미디어 선거를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합동연설회, 정당연설회를 폐지하는 대신 도입한 지역방송의 후보자 합동토론회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토론회 방송시간대가 시청률이 높지 않고, 녹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재방송이 안 되었던 점이나, 주민들의 호응도나 요구에 따라 그 횟수나 방법을 달리하는 것도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 ③ 자원봉사자의 교육과 활용이다. 대부분의 여성후보자들은 인력의 부족

으로 선거운동에 어려움을 겪었다. 장기적으로 자원봉사를 제도화하고 교육시키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여기서는 이러한 특징의 정리와 함께 공천과정에서의 여성의 대표성 확보방안, 여성후보의 경선제 실효성 확보방안, 여성후보의 본선에서의 선거운동 실효성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정당의 공천과정에서의 여성의 대표성 확보방안

가. 공천관련위원회(예: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후보자 선정위원회, 공천순위 확정위원회)에 50%이상 여성위원 참여 보장

17대 총선에서 보았듯이 각 정당들은 그간 정당의 후보공천과 관련하여 총재가 낙점을 찍는 방식을 개선하고자, 일정비율 당내외 인사가 포함된 공천관련위원회(예: 상임위원회,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후보자 선정위원회, 공천순위확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도자 일인만의 의중이 아니라 유권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공천과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확대되었고, 공천심사위원회에 일정 비율 여성위원의 참여시켜 공천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앞으로도 각급 선거의 공천관련위원회에 50%이상 여성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에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금번 총선에서 일부 정당들의 경우 비례대표후보 선정에 있어 여러 가지 불만들이 터져 나왔는데, 향후 비례대표제 후보의 선정에 있어서도 객관성과 합리성이 요구되는데, 이의 대안으로 일정수의 당내외 인사로 구성된 순위확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출하는 방법을 권하고자 한다.

나. 여성인력 은행 운영 및 정치교육 기회 확대

17대 총선을 앞두고 여성계는 2003년 8월 321개의 여성단체로 결성된 17대

총선여성연대를 발족하여 지역구에 여성공천 30%를 할 수 있도록 지역 내 경쟁력을 가진 여성인재를 발굴하려는 노력을 기하였으나,⁴⁴⁾ 쉽지만은 않았다. 17대 총선이후 한국여성개발원이 여성후보가 출마한 수도권지역의 1000명의 남녀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해본 결과 이제는 유권자들은 남녀후보 관계없이 평소부터 지역에서 활동한 후보를 선호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각급 선거에 여성의 진출 확대를 위하여 지역구에 출마할 여성후보 집단을 늘려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하여 여성계는 연구와 홍보를 통하여 정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분야라는 정치문화의 개선을 위한 노력과 함께 전·현직 여성국회의원, 전·현직 여성지방의회의원, 여성기업인, 여교수, 여성공무원, 여성단체 임원, 여성당직자 등 모든 분야의 여성 인재풀을 구성하고, 구성된 인재풀에 대하여는 평상시에는 시민단체의 리더십교육을 통해 정치의 장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자세 및 정치의 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들을 익히게 하고 실질적인 기술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후보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거시에는 출마의사를 파악하여 정당에 연계하여 주어 선거에서 일정비율 공천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지역구 여성후보의 기획 공천 확대 및 지역구 30%를 지키지 못하는 정 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삭감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당선가능성이 높은 서초갑의 이혜훈 후보와 부산 연제구에 김희정 후보를 기획공천하였고, 두 후보들의 열성적인 선거운동 결과 당선의 기쁨을 맛보았다. 그리고, 열린우리당의 경우 창당하는 과정에서 기획공천을 못하였지만, 여러 명의 여성후보를 공천하여 주었다. 정당법에 명시된 지역구 30% 여성공천할당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도 정당들은 당선가능성이 높은 지역구에 여성후보를 보다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당법 31조에 명시되어 있는 지역구에 여성공천 30%를 지키지 못하는

44) 17대 총선을 위한 여성연대 발족 기자회견 자료집.

정당에 대하여 정당회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을 50%까지 삭감하는 방향으로 정당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 여성의 당직활동 확대 및 NGO와의 연대 강화

한국여성개발원이 2003년 연구한 “지방의회 여성의원의 국회진출 활성화 방안 연구”를 보면, 15대, 16대 국회의원 중 당선된 사람 중 과반수가 초선이었다. 그러다 보니 기회가 있으면,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 받는 일이 다른 직업에 비해 보다 용이한 것으로 보였다.⁴⁵⁾ 반면, 여성들의 경우 지구당에서 비중의 정도가 적은 당직을 담당하고 있으며, 중앙당차원의 당직을 맡는다 해도 형식적 수준으로 비중이 낮은 당직을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여성들은 공천과정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컸고, 그것이 현실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12월 현재 열린우리당 중앙당 당직의 여성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상임고문 0.0%(0명), 상임중앙위원 25%(1명), 중앙위원 11.6%(10명), 국회의원 10%(6명), 지구당 위원장 3.2%(3명), 실·국장 8.0%(2명)이다. 그리고 한나라당의 여성당직 참여도는 2004년 12월 국회의원 13.2%(16명/121명), 상임고문 0%(0명/16명), 지도위원 3.1%(1명/32명), 운영위원 19.6%(10명/51명), 대변인 50%(1명/2명), 부대변인 0%(0명/9명), 실·국장 0.9%(1명/11명) 등으로 여성의 비율이 지극히 낮은 실정이다.⁴⁶⁾ 이러한 현실은 정당에서 여성들이 자기발전을 하는데 한계를 가지면서, 주요 당무나 국정 운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게 되고, 또한 공직 선거 시 여성들이 공천과정에서 배제되어 여성의 의회진출에도 장애요인으로 남게 된다. 아울러, 시민단체 회원들의 정당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간 우리나라의 정당문화상 여성단체의 회원들이 정당인으로 참여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보다 여성의 정치참여가 활성화되고, 여성의 힘으로 정치문화를 개선하

45) 김원홍·김민정·이현출·김혜영(2003), 「지방의회 여성의원의 국회진출 활성화 방안」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pp.7-16.

46)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여성국 자료 제공.

기 위하여는 여성단체의 회원들도 적극적인 정당 참여가 요구된다. 앞으로 정치에 관심이 있는 여성단체의 경우 선거에 임박하여 정당에 후보자명단을 제시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으나, 1-2년전부터 단체 회원들을 정당에 참여시켜 정당활동을 하면서 후보로 나서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여성후보 경선제 실효성 확보방안

가. 선거인단 구성에 있어 50% 수준의 여성선거인단 확보 및 선거 절차의 간소화

선거인단 구성에 있어서는 주요정당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선거인단의 규모를 유권자수의 0.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표성확보를 위해 성별, 지역별, 40세 전후 인구비례에 따라 할당하며 이 경우 $\pm 10\%$ 의 오차범위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고려는 기존 한국정당의 당원 구조가 '40대 이상, 자영업자, 남성'에 치중하고 있어, 연령별, 성별, 직능별로 유권자 구조와 비대칭 상태에 있기 때문에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⁴⁷⁾ 그러나 선거인단 모집방법은 지구당 선관위가 직접 모집하는 방식과 외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모집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 선거인단은 돈과 조직의 위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화를 통한 '무작위 표본 추출방식'을 활용하여 구성하도록 하였다. 열린우리당 지지자와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파층을 대상으로 모집하도록 하여 역선택 방지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선거인단 모집은 쉽지 않았다.⁴⁸⁾ 아울러 후보자간 합

47) 한겨레신문. 2001/12/06

48) 서울 강서 을의 경우, 공명선거실천시민협의회 회원을 중심으로 한 실무진 60명이 3만 3,000여 통의 전화를 걸어 열린우리당 지지자와 무당파 유권자들을 먼저 파악한 뒤 경선에 참가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 최종적으로 995명의 선거인단을 구성하였다. 경기 안성의 경우에도 30여명의 전화도우미가 3만여 통을 걸어 537명의 선거인단을 구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선지역으로 선정되면 전화 착신전환이 승패를 가른다고 보고 지지자를 상대로 권유작업을 벌이는 사례가 벌어졌다(한겨레

의가 있는 경우에는 여론조사에 의한 경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나라당은 선거인단 규모를 2,000명 이내로 하고 당원과 일반국민의 구성 비율을 10% 대 90%로 하여 일반국민들의 참여비율을 넓혀 두었다. 그리고 선거인단 구성에 있어서 여성과 만45세 이하(농촌지역은 55세) 연령층에 50% 씩을 배정하도록 하여 대표성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마찬가지로 선거인단은 한나라당 지지자와 무당파층에서 모집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경선에서는 당원 및 유권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선거인단을 구성하고, 그 구성은 전화조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몇 가지 부작용이 나타났다. 우선 당원명부 관리가 지구당위원장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현역 위원장은 당원현황을 중앙당에 축소하여 보고하고, 결과적으로 당원 중 많은 비율이 비당원으로 분류되어 전화조사를 통하여 선거인단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하는 편법이 동원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제는 지구당도 폐지된 마당에 중앙당이나 시·도지부가 당원명부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다. 이의 대안으로 공직출마 희망자가 경선관리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⁴⁹⁾ 그리고, 이번 경선과정을 보면 구성된 선거인단조차도 투표참여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반 유권자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선 참여 절차 및 투표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투표도 현장투표와 병행하여 우편투표, 인터넷 투표 등 사전투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유권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III장에서 볼 수 있듯이 민주노동당의 경우 전 당원투표임에도 불구하고 후보선출시 거의 모든 당원이 인터넷투표를 이용하고 투표일 경선현장을 방문하여 투표하는 사례가 극히 적은 것을 보더라도 인터넷투표나 우편투표를 활용하면 선거인단의 참여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의 경우 일정비율을 여성을 선거인단으로 구성하고는 있으나, 앞으로 여성선거인단 비율을 50%정도 배

신문 2004/02/14, 5).

49) 이현출(2004년 10월),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의 활성화와 공정성 확보방안”, 중앙선관위 자료집(미간행물)

정하도록 하여 여성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후보자 경선실시 기간의 법제화

2004년 4월 15일 실시된 제17대 총선을 앞두고 3월 9일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과 선거관계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당내 경선투전자들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을 초래하였다. 무엇보다 그들은 적절한 선거운동 시간을 가지지 못하게 됨에 따라, 현역위원장이 유리한 국면을 가져오게 되었다. V장의 경선사례에서 보았듯이 경선에 참여한 여성후보의 경우 처음 도전하는 경우가 많고, 현역위원장이 적은 상황에서 프리미엄의 효과는 없었다. 뿐만 아니라 경선 선거운동 기간이 민주노동당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3~4일로 한정함으로써 경선에서부터 소진하는 양태를 보였고, 경력이 적은 여성후보나 신인정치인의 경우 더욱 한계를 느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후보선출 기간을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이 선거일전 120일부터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치신인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선거일전 60일 이후 90일 이내에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공정한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및 일정 비율 여성참여 보장

17대 총선시 각당의 경선과정에서 보았듯이 경선실시 방법, 선거인단 구성 등에 있어서 후보 진영간 갈등을 야기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본 연구의 사례에서도 현역의원이나 특정세력의 이해관계에 의해 경선의 원칙이 흔들리는 것 또한 발견되었다. 이의 극복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한 구성과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7대 총선이전의 경선제 정착을 위한 과제로는 지구당위원장의 의사가 반영되는 후보와 대의원의 선출의 극복이 과제였다. 즉, 경선 전체가 지구당위원장의 의중이 많이 작용하였다. 그러나 2004년 3월 정치관계법 개정으로 지구당이 폐지되었고, 정당은 평상시 선거구 단위에 사무소를 둘 수 없고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공직선거법 §61의2). 따라서 과거와

같이 지구당 위원장의 프리미엄 체제는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지구당이 폐지된 상황 하에서 공정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선과정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경선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들은 가능하면 지구당 운영을 전업으로 하지 않는 인사 중에서 선출하되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 선거 등에 나설 의향이 없는 인사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일정비율 여성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이들의 임기는 2년 내지 4년 정도로 하여 선거구내의 각급선거에 출마할 공직후보선출을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을 사퇴한 이후 일정기간 또는 적어도 사퇴 후 첫 번째로 치러지는 선거에는 나설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⁵⁰⁾

라. 미디어를 통한 선거운동방법 도입

당원들과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참여 비용을 줄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유권자의 선택을 위한 정보제공을 위해서 케이블 TV등을 통한 토론회나 지역신문 주최 토론회 등 매체를 통한 간접접촉을 넓혀나가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선거운동 방법도 현행 정당법 제31조의3(당내경선운동)에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방법 외에 매스미디어를 활용한 토론회 등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경선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17대 총선에서 출마한 여성후보들의 미디어 활용을 통한 선거운동이 여성에게 유리했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 대부분이다.⁵¹⁾

마. 정당내 여성정치발전기금을 통한 여성후보의 경선비용 지원

50) 이현출(2004년 10월),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의 활성화와 공정성 확보방안”, 중앙선관위 자료집(미간행물)

51) 이현출(2004년 10월),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의 활성화와 공정성 확보방안”, 중앙선관위 자료집(미간행물)

현재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후보 자격요건의 하나로 후보등록시 선거인단 선정비용, 선거공보 발송비용, 전자투표기 설치비용 등 선거관리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기탁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선거구 인구수에 따라 1,50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2,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공직선거 후보등록시 내도록한 기탁금 논란을 재연할 우려가 있고, 실재 재정력이 취약한 여성후보의 경우 주요정당 공천의 문을 두드리는데 제약이 되고 있다. 실제, IV장 여성후보의 경선 및 본선 선거과정 사례에서 살펴보면, 여성후보들은 본선보다 상당수가 경선에 내야하는 기탁금에 대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여성의 정치참여가 확대되어지도록 하기 위하여는 여성후보의 본선진출이 확대되어야 하는데, 정당이 받는 국고보조금의 10%를 여성정치발전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이 기금 중 일부를 할당하여 여성후보 경선비용으로 보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바. 여성후보에 대한 가산점 상향 조정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민주당은 여성후보자에 대한 가산점을 두고 있다. 즉, 열린우리당은 선호투표 집계과정에 여성이 최종 2인의 후보자로 남을 때까지 탈락하지 않을 경우 여성후보 득표수에 20%를 가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한나라당과 새천민주당은 여성후보 득표수에 20%를 가산하도록 하였는데, 실효성이 별로 없었다. 이의 개선을 위하여 여성후보에게 30%의 가점을 주는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 여성후보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 지원시스템 구축

여성후보들의 참여관찰 속에서 여성후보들이 겪는 가장 커다란 어려움중의 하나가 바로 자원봉사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여성후보 경선사례를 보는 가운데 여성후보들은 대부분 선거운동자원봉사자를 원했으나,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었다. 본선도 마찬가지겠으나, 대학과의 연계 또는 여

성단체와 연계하여 여성후보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여성후보 선거운동과정에서의 실효성 확보방안

가. 예비여성후보의 지역활동 지원 및 여성후보의 연대활동 강화

금번 총선이 16대 총선과 달라진 것 중의 하나는 법정선거운동기간을 17일에서 13일로 줄이고, 예비후보자제도를 신설하여 정치신인에게도 제한적이거나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현역의원 프리미엄을 제거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정치신인들은 선거운동과정에서 큰 불이익을 받는다는 이론적, 현실적 지적이 많았다.⁵²⁾ 따라서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관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그동안 법정선거운동기간 동안에만 허용하던 명함을 자신의 성명, 사진, 전화번호, 학력 등을 기재하여 직접 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메일 발송, 선거사무소 설치 및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선관위의 확인 후에 선거구 세대수의 10분의 1, 최대 2만부까지 자신의 홍보물을 우편으로 발송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현역의원이 선거운동과정에서 누리는 프리미엄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선거운동 기간 중에만 금지되었던 의정활동보고회와 출판기념회를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개최할 수 없도록 개정하였고 선거기간 중에도 읍·면·동 별로 1회씩 개최할 수 있었던 확대당직자회의를 폐지하였다.⁵³⁾ 따라서 정치신인이 많은 여성에게도 자기를 알릴 수 있는 많은 기회가 확대된 셈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17대 총선이후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여성후보가 출마

52) 다음의 자료를 참고할 것(윤종빈(2001), “16대 총선에서 나타난 현직의원의 득표율 증감분석: 지역구활동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5집 4호. 윤종빈(2002), “국회의원과 선거구민의 관계연구: 현직의원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4호. 이현출(2004), “선거운동 공평성 확보,” 『한국정당학회보』 제3권 1호.)

53) 윤종빈(2004), “정치관계법 개정과 17대 총선 : 평가와 전망”, 한국정당학회보(2004), pp.3-4.

한 수도권지역의 1000명의 남녀유권자를 대상으로 선호하는 후보를 조사해 본 결과 유권자들은 남녀후보 관계없이 평소부터 지역에서 활동하여 인지도가 높은 후보를 선택한다는 응답이 주어졌다. 17대 총선의 법정선거일은 13일로 금번 총선은 대통령탄핵의 영향이 컸던 선거로 초선후보들이 많이 당선되었지만, 4장에서 보았듯이 유권자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후보들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급선거에 출마하기를 희망하는 여성후보들의 경우 평소부터 지역구에 있는 모임 활동(예: 조기축구회, 자원봉사활동 등의 지역활동)을 통하여 이미지를 강화하고, 여성단체와의 연대활동을 통하여 지원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금번 총선에서 여성단체들은 간헐적으로 여성후보가 출마한 지역에 선거운동참모나 자원봉사자를 파견하여 여성후보를 도왔지만, 역할이 미비하였다. 현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⁵⁴⁾에 따르면, 정부에서 국고보조금을 받는 단체를 제외한 순수 목적을 가진 단체의 경우 선거운동을 부분 허용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단체

5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단체
 3.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
 5.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6.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하 이 항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이 임원으로 있거나, 후보자등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후보자등이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단체
 7.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
 8.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단체
- ②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와의 네트워크가 요구된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의 경우 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으로는 초청간담회의 개최 내지 말로써 후보를 지지·표명 또는 소속단체회원에 한하여 소식지나 전화, 인터넷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정당들은 정당에 받은 국고보조금중 10%를 여성정치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금을 활용하여 평소부터 정당 여성들의 지역구 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나. 여성후보의 방송출연비용 지원 및 여성친화적 프로그램 운영

17대 총선에서 개정선거법의 선거운동방식 변화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미디어-인터넷선거운동을 확대하고 운동장 유세를 폐지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후보자 합동연설회와 정당연설회는 동원된 청중에게 돈봉투를 제공하는 등 불법 세과시의 장으로 변질된 측면이 크다. 그동안 우리의 고비용 선거의 주된 원인 중의 하나인 자원봉사자로 가장한 동원된 인력에게 지급되는 돈봉투를 끊는 획기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대신하는 인터넷-미디어 위주의 선거운동방식이 컴퓨터에 익숙하지 못한 50·60대 유권자들을 소외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운동장유세 폐지에 대한 비판도 상당하다.

개정선거법은 미디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확대하기 위해 그동안 대통령 선거와 시·도지사선거에서만 허용되었던 신문광고와 TV·라디오광고를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도 정당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또한 중앙, 시·도, 구·시·군 선관위에 새로이 설치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여 후보자들의 TV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였고, 후보들은 개인연설회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미디어 중심의 선거운동은 선거 및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동시에 의원의 자율성을 증대시킨다는 중요한 정치제도적 기여를 한다.⁵⁵⁾ 이번 총선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TV대담·토론회나 합동방송연설회에 참석하여 토론을 한 여성후보들의 경우 대부분이 후보자의 이미지를 알리는데

55) 윤종빈(2004), 앞의 논문, pp.17-18.

방송토론회가 커다란 역할을 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방송에 참여했던 여성후보들의 경우 방송사가 주관한 개인토론회에 참석하였을 경우 그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정당내 설치된 여성정치발전기금으로 이를 경선시 여성발전기금으로 활용하는 것 이외에 방송에 출연하여 드는 비용을 보조하는 방향으로 여성정치발전기금의 운영방향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번 총선의 경우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TV대담·토론회나 합동방송연설회의 시간대를 시청률이 낮은 시간대에 배정한 경우도 많았는데, 유권자들이 많이 보고, 듣는 시간대에 방송시간을 배정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한편, 토론회 진행과 관련하여, Kahn and Goldenberg(1999)⁵⁶⁾의 연구에 의하면, 몇몇 연구들은 남성 리포터에 비해 여성 리포터가 여성 후보자를 더 진지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Women's Leadership Fund가 시행한 1999년의 연구는 “여성 저널리스트들은 남성 저널리스트들 보다 남성 후보와 여성 후보 개인적 특성 모두를 보도했으며, 또 남성 후보보다 여성 후보에 대해 더 많이 보도했다”는 것을 발견했다(Women's Leadership Fund 1999⁵⁷⁾). 이런 관찰들은 선거 캠프가 어떤 유형의 리포터들과 접촉할지에 관하여 의식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앞으로 선거에서 방송토론회가 활성화 될 경우 방송 진행자에 여성사회자를 포함시키도록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진행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후보자들이 정견을 발표하는 방식이 아니라 후보자간의 토론이 진행되도록 하는 방식과 지역주민이 함께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56) Kahn, Kim Fridkin and Edie N. Goldenberg. 1991. "Women Candidates in the News: An Examination of Gender Differences in U.S. Senate Campaigns." *Public Opinion Quarterly* 55: 180-199.

57) Women's Leadership Fund. 1999. Press Conference: "Framing Gender on the Campaign Trail: Women's Executive Leadership and the Press" New York: Women's Leadership Fund, 25, November.
(http://www.womenconnect.com/linkTo/10291999_wcds.htm)

다. 여자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여성후보의 자원봉사자 지원시스템 구축

현재 정치개혁법은 각급선거에 있어 약간명의 유급선거운동을 활용하고, 나머지는 선거운동자원봉사자를 인원의 제한없이 무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선거운동자원봉사자가 할 수 있는 일로는 첫째, 선거운동준비로서 ① 여론조사 수행 및 후보의 지지도 측정, ② 선거운동을 대비한 유권자 접촉, 안내, ③ 자료입력(선거사무소에 설치된 컴퓨터에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후원회회원, 언론계 인사, 유권자 명단 및 선거일정 등에 대한 자료입력)과 선거운동기간중의 선거운동행위로서 ① 선거사무실 업무지원(유권자와의 전화접촉, 컴퓨터를 이용한 유권자 접촉, 방문객이나 선거운동원 음료수 및 간식 접대, 선거운동원 식사준비 및 청소 등), ② 유권자 접촉행위, ③ 후보자 홍보, 여론 수집 및 상대후보 감시 활동, ④ 기타, 탁아활동 및 법률자문 등을 들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도 보았듯이 모든 선거에서의 당락은 탄핵의 영향이 컸지만 후보자와 배우자의 신념과 확신 그리고 적재적소에 맞는 자원봉사자들을 잘 모집하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식이 낮고, 현재 자원봉사진흥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으나 자원봉사자의 모집에서부터 활용에 이르기까지 경험이 없어 특히 처음 후보로 나서는 여성후보나 자금이 약한 여성후보자들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금번 총선에서 여성후보들은 한결같이 자원봉사자에 대한 어려움을 지니고 있었다. 이의 개선을 위하여 여자대학의 경우 정치학과나 관련학과에서 정치과정관련 수업이나 또는 선거가 있을 시기에 선거운동자원봉사가목을 개설하여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선거캠프의 실습생으로 파견하여 학점을 인정해주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같은 방법은 학생에게는 실제 선거과정을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여성후보들도 선거지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 당지도부의 여성후보에 대한 선거지원 강화

17대 총선에서 나타난 하나의 특징은 당대표나 선거대책본부장, 대변인 등에 여성들의 대거 진출을 들 수 있다. 아울러, 과거 보다 많은 여성후보들이 공천되어, 선거운동을 치루었다는 점이다. 여성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나타난 특징으로는 재선이면서, 조직력이 앞서있고 노사모나 씨프라이즈의 지원이 강했던 김희선 후보, 재선이면서 광명시장을 역임했던 전재희 후보, 당우세지역이었던 이혜훈 후보나 김희정 후보의 경우 조직력에 있어서 커다란 문제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상대방후보의 경쟁력이 강한 상태에서 처음으로 국회에 도전했던 여성들은 선거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의 개선을 위하여 정당지도부에서 여성후보가 출마한 지역에 여러번 방문하여 당선을 지원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마. 후보자의 비방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형량 가중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선거에 임하면 우선 당선되고 보자는 식으로 상대후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등 과열·혼탁선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제는 여성들이 정치에 나서는 것이 유권자들에게 많이 당연시 여기는 것을 느낄 수 있으나, 아직까지 여성후보가 나왔을 때, 전혀 근거 없는 남녀관계 등 흑색선전을 하여 낙선시키는 사례가 많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상 해석의 과다한 융통성의 발휘와 인력의 제한으로 인하여, 현재법상 선거비용 위반자에 대해서 형량이 3년 이하 징역이거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제대로 감시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는 선거에서 비방·허위사실 공표 등을 하는 행위에 대해, 당선 무효가 되는 100만원의 벌금 하한선을 두면서, 향후 각급 선거에서 5년간 선거출마도 금하는 등의 엄격하고 공정한 벌칙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17대 총선에서의 여성후보의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특성과 향후 과제에 대하여 정당의 여성후보 지원정책에 대하여는 정당의 당헌·당규분

석과 당직자 면접조사를 통하여 알아보았다. 그리고 선거과정으로서 경선과 본선 선거운동과정에서 나타난 특징과 향후 과제에 대하여는 조사원 참여관찰과 결과분석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결론적으로 17대 총선을 기하여 총선여성연대가 결성되어, 여성정치참여를 확대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앞으로 있을 각종 선거에서도 여성계는 연대하여, 여성친화적 선거법 개정, 후보발굴 노력, 기금마련 노력을 기울이면서, 여성후보들이 공천과정, 경선과정, 본선의 선거운동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이 증대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여성단체의 정당참여의 활성화도 요구된다. 아직 사회에는 많은 여성문제가 산적해 있고, 여성지향적 정책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여성의 정치참여는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7대 총선을 위한 여성연대 발족 기자회견 자료집
- 김원홍·김민정·김혜영·김은경(2000),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 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김원홍·이현출·김은경(2004), 『17대총선에서의 남녀유권자 정치의식과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여성부
- 뉴스메이커, 정치도 여자하기 나름, 김경은, 2004/4/2
- 민주노동당 <http://www.kdnp.org/>
- 새천년민주당 http://www.minjoo.or.kr/eMinjoo_Main.html
- 시사저널, "여성 후보여서 유리하다" 85.3%, 나권일, [754호] 2004/04/08
- 시사저널, 2004/04/01, 753호
- 시사저널, 가신과 여전사가 만났을 때, 안철홍, [665호] 2002/07/25
- 시사저널, 수도권 경기 광명을, 나권일, [753호] 2004/04/01
- 연합뉴스, <선택 4.15>—(61)경기 광명을, 김중배, 2004/04/05
- 열린우리당 <http://www.eparty.or.kr/>
- 오유석(2004/5/17), "4·15 총선과 경기도 남녀유권자 투표행태 연구", 「경기도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토론회 자료집, pp.4-10
- 우먼타임스, [선택4·15] 스포트라이트 받는 여성후보②(한명숙/전재희/김미영/박정희), 황훈영, 2004/03/16
- 우먼타임스, [선택4·15] 지역구 '여여대결' 양상 女의원증가 "글세", 황훈영, 2004/03/09
- 우먼타임스, [정치개혁 파고 속 여성정치인] ⑥전재희 한나라당 의원, 김유진, 2003/04/08
- 이현출(1997), "한국정당의 대통령후보자 선출과정의 특성과 과제," 여의도정책논단 여름·가을호
- 이현출(2004), "선거운동에서의 공정성 확보", 『한국정당학회보』 3권1호

이현출(2004/5/12), “지구당없는 선거운동: 광진 을 선거구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 춘계학술회의 발표논문

이현출(2004/10월),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의 활성화와 공정
성 확보방안”, 중앙선관위 자료집(미간행물)

자민련 <http://www.jamin.or.kr/>

주간동아, ‘펜 놓고 金 먹기’ 기자들 잇단 출사표, 김기영, 2004/02 (421호)

주간동아, 여성 뭉쳤노라 절반 해냈노라?, 2004/03 (424호)

주간한국, [광명 大결투] 전재희 VS 남궁진, 송영웅, 2002/07/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제공

중앙일보 2004/3/25일(목)(목포대 김영태 교수)

프리티안, ‘탄핵역풍’과 ‘지역아성’의 회오리, 전홍기혜, 박재한, 이지윤,
2004/04/09

한겨레, [17대총선] 당선, 온라인에 물어봐? (25%), 김미영, 2004/04/09

한겨레, [재보선] ‘전 시장 향수’나 ‘막강 경륜’이나 (76%), 박찬수 박창식,
2002/07/19

한겨레신문 2004/02/14, 5

한겨레신문 2001/12/06

한국여성개발원 제20차 여성포럼(2004/5/11)(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토론문
발췌 요약)

한국일보, [열전지역] 전재희·양기대 접전… 40대이하 70%, 박정철, 범기영,
2004/04/06 한국일보, 2004/04/06

한국정책학회,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정책공약 비교분석집」(2004년 3월 29
일)과 제17대 총선여성연대가 정당의 공약을 비교분석한 자료

한나라당 <http://www.hannara.or.kr/>

Carroll, Susan J. 1994. Women as Candidates in American Politics. 2nd ed.
Bloomington:Indiana University Press

Carroll, Susan J., Debra L. Dodson, and Ruth B. Mandel. 1991. "The
Impact of Women in Public Office: An Overview", New

- Brunswick, NJ: Center for the American Woman and Politics, Rutgers University
- Devitt, James. 1999. "Framing Gender on the Campaign Trail: Women's Executive Leadership and the Press". New York: Women's Leadership Fund
(<http://www.womensleadershipfund.org/programs/study.pdf>)
- EMILY's List. 1998. "Women Voter Fact Sheet". Washington, DC: EMILY's List
- Employment & Social Affairs(1999), Electoral system in Europe: a gender-impact assessment, pp.24-27
- Employment & Social Affairs(1999), Electoral system in Europe: a gender-impact assessment, pp.24-27.
- Flammang, Janet A. 1985. "Female Officials in the Feminist Capital: The Case of Santa Clara County." *Western Political Quarterly* 38: 94-118
- Hickman-Maslin Research. 1987. "The New Women Political Survey." Washington. DC: National Women's Political Caucus
- Joan E. Mclean, "Campaign Strategy", Susan J. Carroll ed., *Women and American Politics: New Questions, New Directio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pp. 53-71
- Kahn, Kim Fridkin and Edie N. Goldenberg. 1991. "Women Candidates in the News: An Examination of Gender Differences in U.S. Senate Campaigns." *Public Opinion Quarterly* 55: 180-199
- Kern, Montague, and Paige P. Edley. 1994. "Women Candidates Going Public: The 30-second Format." *Argumentation&Advocacy* 31:80-95
- Kirkpatrick, Jean J. 1974. *Political Woman*. New York: Basic Books
- Mandel, Ruth B. 1981. *In the Running: The New Woman Candidate*. New

York: Ticknor and Fields

McLean, Joan E. 1994. "Strategic Choices: Career Decisions of Elected Women" Ph.D.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Schlozman, Kay Lehman. 1990. "Representing Women in Washington: Sisterhood and Pressure Politics." In *Women, Politics and Change*, ed. Louise A. Tilly and Patricia Gurin.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Staton and Hughes. 1993. "To be Continued: Majority Council Summary." Washington, DC: EMILY's List

Verba, Sidney. 1990. "Women in American Politics." In *Women, Politics and Change*, ed. Louise A. Tilly and Patricia Gurin.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Witt, Linda, Karen M. Paget, and Glenna Matthews. 1994. *Running as a Woman*. New York: The Free Press

Women's Leadership Fund. 1999. Press Conference: "Framing Gender on the Campaign Trail: Women's Executive Leadership and the Press" New York: Women's Leadership Fund, 25, November (http://www.womenconnect.com/linkTo/10291999_wcds.htm)



부 록

부록 I 주요정당의 여성정책공약	167
부록 II 17대 총선 여성후보 참여관찰보고서 총괄 : 경선사례	175
부록 III 17대 총선 여성후보 참여관찰보고서 총괄 : 본선사례	197

[부록 I] 주요정당의 여성정책공약

<부록 1> 열린우리당 여성정책 공약의 주요내용

분 야	열린우리당 여성정책 공약사항	당차원의 지원정책
보육정책	국·공립보육시설확충	—
	만5세아, 장애아, 입양아에 대한 무상교육의 실시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 계층의 보육료 전액지원	—
	보육교사 자격제도의 도입 및 영아·장애아 보육서비스, 방과후 보육서비스의 활성화	—
	교사인건비지원과 민간시설의 확대지원	—
	직급 및 경력에 따른 보육교사적정임금보장	—
	기초자치단체에 보육전담인력배치 및 중앙보육정보센터 기능강화	—
모성보호 관련정책	산전 후 휴가급여 90일분의 전액 사회부담화 실현	—
	육아휴직급여를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40%수준으로 인상	—
	육아휴직 사용조건완화의 완화(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및 유아 휴직 대상자녀를 3세 미만으로의 확대	—
	임신,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중 계약해지 등 성차별적 행위 규제	—
호주제 폐지	호주제 폐지	—
양성 평등한 가족정책	부부공동재산법 제정	—
	합의 이혼시 자녀부양의무 명시 및 부양비용 선지급 및 구상권 행사	—
	한부모 가족에 대한 경제적·정서적 지원	—
	양성평등한 가족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가족정책 전담부서 설치	—
	가족돌봄노동 및 가사노동에 대한 적절한 평가 및 이를 반영하는 법·제도적 장치마련	—
	다양한 가족형태 수용하고 정책차별 해소 및 지원강화	—
	해체가정 및 한부모가정에 대한 상담 및 교육서비스 확충	—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보호정책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확대적용	—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근로감독강화, 근로감독관증원, 행정지도강화	—
여성 일자리 창출정책	사회 여러 분야에 필요한 여성인력양성을 위한 훈련투자확대	—
	여성창업지원(보육)센터 강화	—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확대 지원 및 여성취업훈련기관으로의 육성	—
	IT 등 첨단 분야 등에 여성 일자리 창출	—
	공공서비스분야의 여성일자리의 창출	—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복지시설확충 및 공공서비스분야의 여성전문직종개발	—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의 확대설치를 통한 여대생의 취업지원	—
	저소득 여성 및 편부모 가정을 위한 생계형 창업의 확대지원	—
성인지 시스템 구축	성별 분리 통계 시스템 구축	—

분야	열린우리당 여성정책 공약사항	당차원의 지원정책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 정책	-	지역구 후보 경선 시 여성에게 20% 가산점 부여
	2006년 지방자치선거에서의 여성진출의 지원 확대	정당보조금의 10%를 「여성정치발전기금」으로 조성
	-	당내의 「여성정치리더십센터」의 설치를 통한 여성지도자 양성
이주 여성 정책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
	이주여성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	-
	외국인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담소 및 쉼터 설치	-
	국제결혼여성의 이혼 시 체류권 및 자녀에 대한 권리 인정	-
여성 농민 정책	농가도우미제도 적용범위와 기간, 지원금확대	-
	여성농업인센터 확대 설치	-
여성 장애인정책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지원을 위한 가정도우미 파견	-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근절 및 피해자 지원체계 마련	-
	여성장애인 적합직종 발굴 및 훈련프로그램 개발	-
	특화된 고충상담서비스제공	-
	공단지사별로 상담실 설치 및 지정 상담원제 운영	-
여성 폭력 예방, 피해자보호 정책	성매매 피해여성보호 및 사회복지지원	-
	성매매 전담반 설치 및 수사지침 강화	-
	국무총리산하 성매매방지대책단 상설화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구축	-
	군대 내 성문화교육, 양성평등교육의 정례화	-

<부록 2> 한나라당 여성정책 공약의 주요내용

분야	한나라당 여성정책 공약사항	당차원의 지원정책
보육정책	보육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영아보육, 야간보육, 시간제보육, 24시간 보육, 휴일보육, 장애아 보육 등 보육서비스 다양화	-
	보육교사 직급 및 경력에 따른 임금체계 마련, 근무환경 개선, 모성휴가 등 지원	-
	2세 이하의 영아보육시설집중확대	-
	만5세아 및 장애아, 입양아에 대한 무상교육의 실시 및 보육비 지원	-
	직장보육시설 설치대상의 확대(여성근로자300인에서 근로자300인으로)및 보육시설평가제도의 도입	-
	주요 환승 전철역에 보육시설의 설치 및 보육시설 확충	-
	공동육아협동조합1000개소에 월500만원씩 보육비 지원	-
모성보호 관련정책	직장과 가정조화로의 사회구조변화를 통한 여성들의 부담해소	-
	사회적으로 가장친화적인 기업정책의 추진 및 지원	-
	출산휴가비용의 사회분담확대	-
	모성보호제도 적용대상 확대	-
	연금크레딧 제도	-
	유급 유·사산휴가	-
	가족간호휴직제	-
	배우자 유급출산휴가	-
	임신,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중 계약해지 등 성차별적 행위 규제	-
호주제폐지	(현행유지 고수)	-
양성 평등한 가족정책	부부공동재산법 제정	-
	합의 이혼시 자녀부양의무 명시 및 부양비용 선지급 및 구상권 행사	-
	한부모 가족에 대한 경제적·정서적 지원(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한부모 가족에 대한 한시적 지원 명시, 임대주택 제공, 주거안정 도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모자복지법을 보완하여 양육 및 교육비 지원 현실화)	-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기초연금제 도입,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병급제도 도입	-
	가족돌봄노동 및 가사노동에 대한 적절한 평가 및 이를 반영하는 법·제도적 장치 마련	-
	다양한 가족형태를 수용하고 정책차별해소·지원강화	-
	효도법 제정 및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
	이혼의무상담제 실시	-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보호정책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확대적용	-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근로감독강화, 근로감독관증원, 행정지도강화	-
	서면계약체결 의무화 및 불법 파견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유도를 위한 업체 보조금 지급	-
	특수고용 형태 근로자에게 산재보험 적용	-

분야	한나라당 여성정책 공약사항	당차원의 지원정책
여성 일자리 창출정책	간병전문인력, 보육종사자 등의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에 공공고용의 확대 및 각종 여성 적합 직종의 개발	-
	기업의 여성인력활용유도 및 고용평등실현의 지원	-
	여성창업지원(보육)센터 강화	-
	IT 등 첨단 분야 등에 여성 일자리 창출	-
성인지 시스템 구축	성별 분리 통계 시스템 구축	-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정책	여성의 정치참여의 확대	각급 선거에서의 비례직 준수 및 지역에서의 여성 30% 달성을 위한 여성후보에 20%의 가산점 부여
	여성권 향상을 위한 국가기구 확충	공천심사기구에 여성 30% 참여보장 및 가급 당직 및 위원회의 여성참여 30% 의무화 추진
	여성정치지원의 확대	정당보조금 10%를 여성정치발전기금으로의 확보 및 지방자치단체 부 단체장 1명을 여성으로 의무화
	장기적인 여성에 대한 정치교육 강화	-
이주여성정책	인신매매방지법제정	-
여성농민정책	농가도우미제도 적용범위와기간, 지원금확대	-
	여성농업인센터 확대 설치	-
여성 장애인 정책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근절 및 피해자 지원체계마련	-
	기술향상을 위한 직업교육	-
	창업자금 지원	-
	남성장애인의 취업 및 훈련참여율과 동일해 질 수 있도록 지원	-
여성폭력예방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 및 사회복지 지원	-
피해자보호정책	성매매 방지법 시행의 감독 및 방지종합대책의 추진	-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조치 강화	-

<부록 3> 민주노동당의 여성정책 공약사항

분야	민주노동당의 여성정책 공약사항	당차원의 지원정책
보육정책	보육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영아보육, 야간보육, 시간제보육, 24시간 보육, 휴일보육, 장애아보육 등 보육서비스 다양화	-
	중장기적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의 50%이상 확대(현재 7%, 농어촌 지역 영아전담보육 및 방과 후 전담교육의 국공립시설로의 확충)	-
	직장보육시설 설치대상의 확대(여성근로자300인에서 근로자300인으로)및 보육시설평가제도의 도입	-
	보육교사 근로시간 준수 및 보육교사의 모성휴가 및 교사인건비 지원	-
	영아보육비 및 유아교육비에의 소득별 차등제의 적용	-
	학부모 보육비용을 30%로 낮춤	-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을 「유아학교」로 일원화	-
	만4세와 만3세 무상교육확대	-
모성보호 관련정책	산전·후 휴가급여 사회분담 확대	-
	육아휴직급여의 상향 조정	-
	모성보호적용대상 확대	-
	임신,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중 계약해지등 성차별적 행위 규제	-
	유급출산휴가의 100일로의 확대 및 육아휴직급여의 평균임금의 50%로 인상	-
	분만수당제	-
	기초출산수당제도입	-
	생애주기별 여성건강통계의 구축을 통한 여성건강정책의 수립	-
호주제 폐지	여성건강권의 실현(여성건강전문연구센터의 설립)	-
	호주제 폐지 및 1인 1직제의 실시	-
양성 평등한 가족정책	부부공동재산법 제정	-
	협의이혼시 자녀부양의무명시 및 부양비용선지급 및 구상권행사	-
	한부모 가족에 대한 경제적·정서적 지원	-
	국민연금 피부양자 분할비율 확대(이혼한 배우자에게 가급연금수령을 인정하고 가급연금액의 분할비율을 확대)	-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보호정책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확대적용	-
	비정규직 보호입법	-
	불법파견 철폐를 위한 법 개정 및 가내노동자 보호법 개정	-
여성 일자리 창출정책	여성창업지원(보육)센터 강화	-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복지시설확충 및 공공서비스분야의 여성전문직종개발	-
	빈곤여성 친화적 자활프로그램 확대	-
	공기업 및 공공영역에서 생활보호대상자, 한부모 가정 여성, 장애인 여성 우선 채용	-
	청년의무고용제 도입을 통한 여성의 사회진출보장(여성청년 고용시 사용자에 20~30%고용 보험료 할인의 혜택 부여)	-
	남녀고용평등법 적용범위의 확대 및 간접차별 개념 확대를 통한 그에 따른 처벌요건의 강화	-
	남성과 여성의 임금 차이의 해소	-

분야	민주노동당의 여성정책 공약사항	당차원의 지원정책
성인지 시스템 구축	-	-
여성의 정치 참여확대정책	여성의 공직사회진출의 기회 확대(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의 목표치의 상향조정 및 공기업 30% 여성채용목표제의 시행)	-
	여성의 정치활동 기회 확충	정당의 각 조직체계에 30% 여성 할당제 실시 및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강화
	정당법에 여성할당조항 의무화 및 국고보조금 차등지급	-
이주 여성정책	이주여성(노동자)의 국제인신매매방지 및 국제결혼의 피해자보호의 강화	-
여성 농민정책	농가도우미제도 적용범위와기간, 지원금확대	-
	여성농업인센타 확대 설치	-
	여성농민정책 전담부서 설치 및 여성농민의 지위 보장(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실의 여성국으로의 승격 및 지방자치단체에 여성농민정책전담부서의 설치 및 공동농업경영주로서의 여성을 위한 법 개정)	-
	여성농어민 평생건강관리센터의 설립및 순회서비스, 장기건강검진서비스의 확대	-
	여성농어민 산후조리센터의 설립 및 운영	-
		-
여성 장애인 정책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지원을 위한 가정도우미 파견	-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 근절 및 피해자 지원체계 마련	-
	여성장애인의 권리보장(일자리보장, 성폭력가중처벌, 모성권 보장)	-
여성폭력예방, 피해자 보호정책	성매매 피해여성보호 및 사회복귀지원	-
	성매매 전담반 설치 및 수사지침 강화	-
	성매매 방지의 실질적인 방안 마련(정부 내 성매매방지대책위원회의 설립 및 성매매 알선자, 강요자에 대한 처벌의 강화)	-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	-
	피해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장치 마련	-
	강간죄에 있어 객체를 부녀에서 타인으로 확대	-

<부록 4> 민주당의 여성정책 공약의 주요내용

분야	민주당 여성정책 공약사항	당차원의 지원정책
보육정책	보육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영아보육, 야간보육, 시간제보육, 24시간 보육, 휴일보육, 장애아 보육 등 보육서비스 다양화	-
	보육교사 인건비 적정수준 보장	-
	국·공립보육시설확충	-
	직장보육설치근거(여성근로자 300인에서 근로자 300인으로) 확대	-
	공부방과 결식아동급식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영아반 및 장애아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5에서 1:4로 개선	-
모성보호 관련정책	산전 후 휴가급여의 부담을 사회보험 및 일반회계에서 분담(농어촌,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 가내부업, 비정규직까지 확대 적용)	-
	남녀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지원금을 임금의 50%까지 상향조정	-
	모성보호제도 적용대상 확대	-
	여성건강권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
호주제 폐지	호주제 폐지	-
양성 평등한 가족정책	부부공동재산법 제정	-
	합의 이혼시 자녀부양의무 명시 및 부양비용 선지급 및 구상권 행사	-
	한부모 가족에 대한 경제적·정서적 지원	-
	다양한 가족형태를 수용하고 정책차별해소·지원강화	-
	양성평등한 가족정책기본계획수립 및 가족정책전담부서 설치	-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보호정책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확대적용	-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근로감독강화, 근로감독관증원, 행정지도강화	-
여성 일자리 창출 정책	신기술분야의 전문여성인력의 취업 추진	-
	지역 사회복지, 공공서비스 분야의 여성전문 직종의 개발	-
	주부 재취업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지원	-
	여성창업보육센터 기능강화 및 창업지원의 확대	-
성인지 시스템 구축	성별 분리 통계 시스템 구축	-
여성의 정치 참여확대정책	-	모든 선출직에서 지역구 30% 여성 할당제 도입(2006)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위직에의 여성임용의 확대(공공부문 여성관리자 임용목표 상향조정 및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20%제고)	-

분야	민주당 여성정책 공약사항	당차원의 지원정책
이주여성 정책	인신매매방지법제정	-
	국제결혼 여성의 이혼시 체류권 및 자녀에 대한 권리 인정 또는 피해자보호 강화	-
	외국인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담소 및 쉼터 설치	-
여성농민 정책	농가도우미제도 적용범위 와 기간, 지원금 확대	-
	여성농업인센터 확대 설치	-
여성 장애인 정책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근절 및 피해자 지원체계마련	-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지원을 위한 가정도우미 파견	-
	여성장애인 상담소 확대	-
	무료직업교육	-
	자립자금 지원 확대	-
여성 폭력예방, 피해자 보호정책	성매매 피해여성보호 및 사회복귀지원	-
	성매매 전담반 설치 및 수사지침 강화	-
	여성폭력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체계화	-
	성매매방지를 위한 신고포상제	-
	국무총리산하에의 「성매매방지종합대책단」의 상설운영(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성매매방지의 종합대책 마련)	-
	「시민자경단프로그램」운용을 통한 부녀자의 보호	-
	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의 초·중·고 의무화	-
	어린이 피해예방 홍보물 제작	-

[부록 II] 17대 총선 여성후보 참여관찰보고서 총괄 : 경선사례

[경선사례 1] 송미화 후보 (열린우리당 은평 을 지역구)

- ▶ 참여관찰자 : 문 현 배 (중앙대 정치학 석사)
- ▶ 참여관찰일지
 - 2004.2.16 : 열린우리당 제3차경선 워크숍 참가
 - 2004.2.17 : 송미화 후보 면담, 일정공유, 선거공보물 기획
 - 2004.2.24 : 사무실 상주, 선거공보물 부착
 - 2004.2.26 : 사무실 상주, 선거홍보물(피켓, 플랭카드카드) 기획 및 디자인, 선거인단 명부 DB 작업
 - 2004.2.27 : 사무실 상주, 후보토론회 준비 및 참관
 - 2004.2.28 : 선거인단 대회 참관

1. 은평 을 지역구의 사회·정치·경제적 환경

가. 사회·정치·경제적 환경

(1) 인구구성 및 주민의 민도(民度)

구분	인구	남	여	인구밀도	면적	세대	세대당 인구	65세 이상 인구
	471,873 (명)	234,603 (명)	237,270 (명)	15,877 (명/km ²)	29.72 (km ²)	164,981	2.85 (명)	30,841 (명)

(가) 은평지역의 인구규모는 서울 25개 區 중 순위 8위로서 강동구 (인구: 483,004 , 남: 243,967, 여: 239,037)와 비슷한 규모임.

(나) 은평지역의 면적은 서울 25개 구 중 순위 6위로서 관악구 (면적: 29.57)와 비슷한 규모임. 또한 인구밀도는 17위로써 마포구

(15,868)와 비슷한 규모이며, 서울지역 평균 (16,978)에 못미치는 수준임.

(다) 은평지역의 세대는 서울지역 6위로써 강동구 (16,981)와 비슷한 규모이며, 세대당 인구는 서울지역 10위로써 서울지역 평균 (2.82)에 근접한 수준임.

(라) 은평지역의 65세 이상 인구는 서울지역 4위로써 강서구 (29,465)와 비슷한 수준임.

(2) 소득수준 및 경제구조

(가) 은평지역의 사업체 수는 서울지역 19위 (22,811개) 규모, 종사자 수는 23위(72,347명) 규모임.

나. 행정조직별 선거구

은평 갑	녹번, 응암1,2,3동, 신사1,2동, 증산동, 수색동
은평 을	불광1,2,3동, 갈현1,2동, 역촌1,2동, 구산동, 대조동, 진관내동, 진관외동

다. 지역의 정치성향

구 분		은평 갑	은평 을
국회의원	16대	한나라당 강인섭	한나라당 이재오
	15대	국민회의 손세일	신한국당 이재오
기초단체장 (2002. 6)		한나라당 노재홍	
광역의원	3대	한나라당 4人	
	2대	국민회의 4人	

2. 경선방식과 입후보 과정

가. 은평 을 지역구의 경선방식

- (1) 경선방식 : 개방형 국민경선제 (3후보 합의에 의한 결정)
- (2) 선거인단 구성 : 여론조사기관(중앙당 선정)을 통한 당원 및 특정정당 비 지지국민 중 무작위 선거인단 추출 (2002년도 대선 유권자 기준 0.5% 이상 필수, 남·녀/청·장년 인구구성비율 권고)을 통한 1,100명 모집
- (3) 선거인단 모집내용 : 1차 ARS 전화를 통한 당원 및 특정정당 지지여부 확인, 선거인단 대회 참여의사 확인, 1차 확인대상자 중 2차 전화면접원 (약3시간 이후)을 통한 최종 의사 확인

나. 은평 을 지역구의 경선 진행과정

(1) 지구당 창당과정

- (가) 2003. 12.3 ~ 12.6 : 지구당 창당준비위원장 모집, 총 5인의 창당준비위원장 후보 등록
- (나) 2003. 12.12 : 지구당창당심의위원회에서 후보5인에게 당원추천권 20%씩 할당, 추가 3인의 지구당 창당공동준비위원장 선출
- (다) 2004. 1. 5 : 은평 을 지구당 창당대회 개최

(2) 경선 진행과정

- (가) 2004. 2. 13 : 경선 후보 심사
 - 중앙당 공직자 자격심사위 결과 은평 을 지역을 3차 경선지역으로 확정
 - 후보 8인중 중앙당 자격심사 결과 3인 (송미화, 유병학, 최창학)으로 결정
- (나) 2004. 2. 14 : 후보 3인이 국민경선과 중앙당에서 인증한 여론기관

에 의뢰하여 선거인단을 모집하기로 합의

(다) 2004. 2.15 : 지구당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지구당 상무위원회가 개최되어 3명의 후보 3인추천, 운영위원회 5인추천, 시민단체 2인 총 10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위원장 : 임홍택)

(라) 2004. 2. 16 : 중앙당 워크숍 참가

(마) 2004. 2. 17 : 후보 예비등록 (18:00)

(바) 2004. 2. 18 : 여론조사기관 선정

(사) 2004. 2. 19 : 선거일 공고, 후보등록(18:00)

(아) 2004. 2. 21 : 선거관리위원 추가 3인 선출

(자) 2004. 2. 23 : 기호추첨 (송미화 후보만 참석하여 1번으로 배정)

(차) 2003. 2. 23 - 2.26 : 선거인단 모집

(카) 2004. 2. 26 : 선거인 명부 열람 및 교부

(타) 2004. 2. 26 - 2.28 : 선거운동

(파) 2004. 2. 27 : 선거공보 발송, 후보토론회 개최 (19:00)

(하) 2004. 2. 28 : 선거인단 대회 개최 (16:00 -)

다. 선거인단 대회

(1) 대회일정 : 2004. 2. 28 <토> 16:00 - 20:30

(2) 대회장소 : 불광초등학교 강당

(3) 시간계획

- 15:00 : 선거인증 교부
- 16:00 ~ 16:30 : 국민의례, 개회보고
- 16:30 ~ 17:30 : 합동연설회
- 17:30 : 투표개시
- 19:30 : 투표종료
- 17:30 ~ 20:00 : 개표 및 당선자 발표

(4) 투표방식 : 전자투표에 의한 선호투표 방식

(5) 대회결과

- 선거권자 : 1,100명
- 투표율 : 430명 (39%)
- 1차 개표결과 : 송미화(210표), 최창환(192표), 유병학(28표)
- 2차 개표결과 : 선호투표, 여성후보 20% 가산 반영
송미화(267.6표), 최창환(223표)

[경선사례 2-1] 김은경 후보(열린우리당 노원 을 지역구)

▶ 참여관찰자 : 문 현 배 【중앙대 정치학 석사】

▶ 참여관찰일지

- 2004.3.08 : 김은경 후보 면담, 일정공유
- 2004.3.09 : 경선 전화홍보 (당원)
- 2004.3.10 : 경선 전화홍보 (당원)
- 2004.3.11 : 피켓작업, 선거운동
- 2004.3.12 : 선거운동, 후보연설 검토
- 2004.3.13 : 선거운동, 경선 모니터

1. 노원 을 지역구의 사회·정치·경제적 환경

가. 사회·정치·경제적 환경

(1) 인구구성 및 주민의 민도(民度)

구분	인구	남	여	인구 밀도	면적	세대	세대당 인구	65세이상 인구
	633,934 (명)	313,254 (명)	320,680 (명)	18,170 (명/km ²)	35.42 (km ²)	209,251	3.06 (명)	39,010 (명)

- (가) 노원 을 지역의 인구규모는 서울 25개 區 중 순위 1위로서 송파구 (인구: 623,267 , 남: 313,254, 여: 320, 680)와 비슷한 규모임.
- (나) 노원지역의 면적은 서울 25개 구 중 순위 4위로서 송파구 (면적: 33.89)와 비슷한 규모임. 또한 인구밀도는 13위로써 성북구 (18,192)와 비슷한 규모임.
- (다) 노원지역의 세대는 서울지역 2위로써 관악구 (197,578)와 비슷한 규모이며, 세대당 인구는 서울지역 최고임.(서울평균 2.82)
- (라) 노원지역의 65세 이상 인구는 서울지역 1위로써 광진구 (19,425)의 두배 수준임. (2) 소득수준 및 경제구조
- (가) 노원지역의 사업체 수는 서울지역 17위 (23,895개) 규모, 종사자 수는 18위(94,640명) 규모임.

나. 행정조직별 선거구

노원 갑	월계 1·2·3·4동, 공릉 1·2·3동
노원 을	중계 본·1·2·3·4동, 하계 1·2동, 상계 6·7동
노원 병	상계 1·2·3·4·5·8·9·10동

다. 지역의 정치성향

구 분		노원 갑	노원 을
국회의원	16대	민주당 함승희	민주당 임채정
	15대	신한국당 백남치	민주당 임채정
기초단체장 (2002. 6)		한나라당 이기재	
광역의원	3대	한나라당 4人	
	2대	한나라당 1人, 국민회의 3人	

2. 경선방식과 입후보 과정

가. 노원 을 지역의 경선방식

- (1) 경선방식 : 개방형 국민경선제 (3후보 합의에 의한 결정)
- (2) 선거인단 구성 : 여론조사기관(현대리서치)을 통한 당원 및 특정정당 비 지지국민 중 무작위 선거인단 추출 (2002년도 대선 유권자 기준 0.5% 이상 필수, 남,녀/청,장년 인구구성비율 권고)을 통한 1,057명 모집
- (3) 선거인단 모집내용 : ARS 전화를 통한 당원 및 특정정당 지지여부 확인, 선거인단 대회 참여의사 확인, 1차 확인대상자 중 2차 전화면접원을 통한 최종 의사 확인
- (4) 선거인단 분포도

구 분		명	%
성별	남	363	34.3
	여	694	65.7
연령	40세 미만	382	36.1
	40세 이상	675	63.9

나. 노원 을 지역구의 경선 진행과정

- (1) 2004. 3. 2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중앙당 공직자 자격심사위(2월25일) 결과 경선후보 4인으로 결정
 - 지구당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후보 대리인 4명, 운영위원추천 5명, 시민단체 2인으로 선관위 구성
- (2) 2004. 3. 4 : 후보 예비등록, 기호추첨
- (3) 2004. 3. 5 : 후보등록, 선거일 공고
- (4) 2004. 3. 7 : 전자투표업체 후보자 자료제출

- 지구당 상무위원회가 개최되어 3명의 후보 3인추천, 운영위원회 5인 추천, 시민단체 2인 총 10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위원장: 임홍택)
- (5) 2004. 3. 10 : 선거 공보물 제출
- (6) 2004. 3. 11 : 선거 공보발송, 선거인 명부 열람 및 배부
- (7) 2004. 3. 11 - 13: 선거운동
- (8) 2004. 3. 13 : 선거인단 대회 개최 (18:00 -)

다. 선거인단 대회

- (1) 대회일정 : 2004. 3. 13 <토> 18:00 - 21:30
- (2) 대회장소 : 노원구민회관 강당
- (3) 시간계획
 - 17:00 : 선거인증 교부
 - 18:00 ~ 19:00 : 국민의례, 개회보고, 합동연설회
 - 19:00 : 투표개시
 - 21:00 : 투표종료
 - 21:00 - 21:30 : 개표 및 당선자 발표
- (4) 투표방식 : 전자투표에 의한 선호투표 방식
- (5) 대회결과
 - 선거권자 : 1,056명
 - 투표율 : 365명 (34.06%)
 - 개표결과

구 분	1 차	2 차	3 차
고 용 진	122	139	178
김 은 경	76	85	·
우 원 식	130	136	182
이 중 훈	32	·	·

[경선사례 2-2] 김은경 후보(열린우리당 노원 을 지역구)

▶ 참여관찰자 : 강 해 린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 참여관찰일지

- 2004.3.08 : 김은경 후보 면담, 일정공유
- 2004.3.09 : 경선 전화홍보 (당원)
- 2004.3.10 : 경선 전화홍보 (당원)
- 2004.3.11 : 피켓작업, 선거운동
- 2004.3.12 : 선거운동, 후보연설 검토
- 2004.3.13 : 선거운동, 경선 모니터

1. 노원 을 지역구의 사회·정치·경제적 환경

가. 행정조직 및 선거구

노원 을 지역구는 2월 28일 선거구 확정위원회에서 중계 본, 1, 2, 3, 4동, 하계 1, 2동, 상계 6, 7 동으로 확정되었고 3월 9일 국회 선거법 통과로 확정되었다. 이로써 노원구는 갑, 을, 병 세 구로 분구되었다.

나. 지역 경제사정 및 특성

노원을 지역인 중계동 전체와 상계, 하계 일부 동은 대부분 1980년대 이후 상·중계동 일대의 마들평야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도시 기반시설과 주민편익시설이 들어선 신홍도시 주거지역으로 중계동 한신코아, 건영옴니, 상계동 미도파백화점 등 현대식 대규모 상업·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재래시장을 대신하여 구의 상권을 주도하고 있다. 대단위 아파트에는 시영, 공공의 임대아파트가 포함되어 있으며 민영아파트 역시 2,30대 평형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주민편익시설로 노원구, 동별 각종 사회복지시설과 공원 등이 비교적 잘 조성되어 있는 편이다.

다. 지역 내 사회단체 현황

지역내 단체로는 노원시민모임(지역자치/빈민, 중계4동), 노원자원회수시설주민협의체(지역자치/빈민, 상계6동), 한국뇌성마비복지회(사회복지, 상계6동), 한국맹인노인복지회(사회복지, 상계6동), (사)한국맹인복지연합회(사회복지, 상계6동)등 주로 복지과 환경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라 . 정치적 성향

노원지역은 지난 2000년 16대 국회의원총선거의 결과로만 볼 때 민주당(2000당시) 우세 지역으로 보여진다.

(1) 노원구 16대 총선 후보자별 득표 상황

	투표 자수	후보자별득표수								계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민국당	민노당	청년당			
노원갑		최동규	함승희	백남치	정창인	이상현	박희택			
	118,631	42,772	50,745	11,491	2,422	7,931	2,184			117,545
노원을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민국당	민노당	청년당	무소속	무소속	
		장두환	임채정	박병일	이동섭	정윤광	김선욱	이달원	정선배	
	117,258	43,091	47,815	8,279	3,224	6,910	1,481	3,842	1,663	116,305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경선방식과 입후보 과정

가. 경선 일정

(1) 3월 4일(목) : 후보 예비 등록, 기호 추첨(오후 8시, 지구당사무실)

- (2) 3월 5일(금) : 선거일 공고 및 후보자 등록
- (3) 3월 7일(일)~10일(수) : 선거인단 모집 및 명부 작성
- (4) 3월 10일(수) : 선거 공보 제출
- (5) 3월 11일(목) : 선거 공보 발송, 선거인 명부 열람 및 교부
- (6) 3월 11일(목)~13일(토) : 선거운동, 합동연설회 및 선거

나. 경선 방식

- (1) 경선방식은 개방형국민경선제로 각종 경선방식에 대한 결정은 지역구 당내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선후보들간의 합의로 이루어졌다.

다 . 선거인단 모집 분석

(1) 선거인단 분석

- 성별 : 남성에 비해 여성이 약 1.9배 많이 모집되었음.
- 연령 : 40세 이상이 40세 미만 보다 약 1.8배 많이 모집되었음.
- 동별 : 동별 큰 차이는 없으나 하계1동>중계1동>상계7동 순으로 모집됨.
- 이러한 분포는 낮시간대에 통화 가능한 40세 이상 여성이 다수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보여짐.

(2) 선거인단

		조사결과(명/%)		2002년대선통계(%)	최소값	최대값
성별	남	363	34.3	48.4	38.4	58.4
	여	694	65.7	51.6	41.6	61.6
연령별	40세미만	382	36.1	48.9	38.9	58.9
	40세이상	675	63.9	51.1	41.1	61.1
동별	중계본동	111	10.5	12.3	2.3	22.3
	중계1동	145	13.7	12.9	2.9	22.9
	중계2동	83	7.9	7.8	/	17.8
	중계3동	125	11.8	12.7	2.7	22.7
	중계4동	112	10.6	10.5	0.5	20.5
	상계6동	123	11.6	9.8	/	19.8
	상계7동	56	5.3	7.5	/	17.5
	하계1동	167	15.8	14.6	4.6	24.6
	하계2동	135	12.8	11.9	1.9	21.9
계		1,057	100	100		

(2) 동별 통화분석 : call의 퍼센테이지나 통화성공률에서의 차이는 큰 의미를 찾을 수 없으나 승낙율 1,2위인 하계2동과 중계4동의 경우 이번 경선에서의 각 후보 측의 조직이나 지지자가 많은 집단일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함.

(3) 동별 통화분석

동별	총call 수	총call %	대선 유권자%	gap	통화성공	통화성공율	유효 승낙자	승낙율
중계본	3,015	11.3	12.3	-1	939	31.1	111	3.7
중계1	3,764	14.2	12.9	1.3	1,271	33.8	145	3.9
중계2	2,141	8.1	7.8	0.3	702	32.8	83	3.9
중계3	3,215	12.1	12.7	-0.6	1,016	31.6	125	3.9
중계4	2,568	9.7	10.5	-0.8	808	31.5	112	4.4
상계6	2,916	11	9.8	1.2	904	31	123	4.2
상계7	2,087	7.8	7.5	0.3	625	29.9	56	2.7
하계1	4,155	15.6	14.6	1	1,321	31.8	167	4
하계2	2,734	10.3	11.9	-1.6	935	34.2	135	4.9
총합계	26,595	100	100		8,521	32	1,057	4

[경선사례 3] 김원자 후보 (새천년민주당 전주 완산 을 지역구)

- ▶ 참여관찰자 : 김원홍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 참여관찰기간 : 2004년3월

1. 전주 완산 을 지역구의 사회·정치·경제적 환경

가. 사회·정치·경제적 환경

(1) 인구구성 및 주민의 민도(民度)

구분	인구	남	여	인구밀도	면적	세대	세대당 인구	20세이상 인구
	346,324 (명)	169,983 (명)	176,341 (명)	3,644 (명/km ²)	95.04 (km ²)	111,240	3.11 (명)	242,068 (명)

(가) 완산지역의 인구규모는 326,324명으로 전주시의 55.43%를 차지함.

(나) 완산지역의 면적은 전주시의 46.1%이며, 인구밀도는 3,644명(명/km²)으로 덕진구에 비해(2,504) 높은 편임.

(다) 완산지역의 세대당 인구는 덕진구의 세대당 인구(3.05)와 서울지역 평균(2.82)보다 다소 높음.

(라) 완산지역의 20세 이상 인구는 덕진구(197,722)에 비해 많음.

나. 행정조직별 선거구

전주 완산 갑	중앙동, 풍남동, 교동, 태평동, 중노송1,2동, 남노송동, 동완산동, 서완산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중화산1,2동, 평화1,2동
전주 완산 을	서신동, 삼천1,2,3동, 효자1,2,3,4동

다. 지역의 정치성향

구 분		완산 갑	완산 을
국회의원	16대	민주당 장영달	
	15대	국민회의 장영달	
기초단체장 (2002. 6)		민주당 김완주	
광역의원	3대	민주당 2人	
	2대	국민회의 2人	

2. 경선방식과 입후보 과정

가. 전주완산 을 지역구의 경선방식

- 후보자간 합동연설회후 여론조사 방식(후보간합의사항)
- 후보 초청간담회: 김병석(55) 전북기능대 명예학장, 김완자(48) 전 도의원, 김현중(43) 전주포럼 대표, 김희진(53) 국제변호사, 이용완(49) 전 도의원 등 총 5명의 경선후보가 효자동, 삼천동, 서신동 등 신도심 8개 동에서 후보 초청간담회를 가짐
- 합동연설회 5회
- 방송연설
- 20일 전화여론조사(일단 민주당 지지여부를 물은 후에 지지자일 때 응답가능-민주당에 불리한 후보를 선택할 우려가 존재하므로)
- 현직 시의원으로 경선관리위원회를 조직하고 이들은 합동연설회 등 일정이나 세부사항을 정함.

나. 전주완산 을 지역구의 경선 진행과정

- (1) 3월 5일: 전주 효림초등학교
- (2) 3월 6일: 전주 서곡초등학교
- (3) 3월 8일 효정중학교
- (4) 3월 11일 선플라워(서신동)
- (5) 3월 14일 화산체육관

[경선사례 4] 김선미 후보 (열린우리당 경기 안성 지역구)

▶ 경선실시 후 인터뷰 조사

1. 안성 지역구의 사회·정치·경제적 환경

가. 사회·경제적 환경

(1) 인구구성 및 주민의 민도(民度)

구분	인구	남	여	인구밀도	세대	세대당 인구	65세이상 인구
	151,522 (명)	76,690 (명)	74,832 (명)	273 (명/km ²)	53,556	2.8 (명)	7598 (명)

안성지역의 인구는 2003년 12월말 현재로 53,556세대 151,522명이고 그중 남자가 76,690명 여자 74,832명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많은 농촌지역이며 인구밀도는 273명/km²으로 경기도 평균 인구밀도 855명/km²보다는 매우 낮은 편이나 경기도의 시지역을 제외한 군지역 평균 인구밀도(159명/km²)보다는 높은 편이다. 1961년부터 시내 인구가 계속 증가하여 1966년도에 최고를 기록하다가 다음해부터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1991년 이후부터는 약간씩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구감소현상은 전형적인 농촌지역 인구의 이농현상에서 그 주된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서해안 개발시대 도로망확충과 산업단지조성 등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2.7%(매년 약4103명)씩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2) 경제구조

안성지역의 경제구조는 최근 들어 농업감소(농가호수21% 감소, 농가인구

43%감소) 제조업급증(공장수 39% 증가)이라는 현상이 말해주듯 전통적인 농업지역에서 신흥 공업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농업 내부에서도 전과 답 이용률은 감소한 반면 목장 및 과수원 비율이 각각 78.7%와 41.1%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나. 행정조직별 선거구

안성	안성1동-3동, 공도읍,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원곡면, 고삼면,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	---

다. 지역의 정치성향

구 분		안 성
국회의원	16대	민주당 심규섭 / 한나라당 이해구(2002년 보궐선거)
	15대	신한국당 이해구 (13대 무소속 출마 이후 3선)
기초단체장 (2002. 6)		한나라당 이동희
광역의원	3대	한나라당 2人
	2대	한나라당 2人

2. 경선방식과 입후보 과정

가. 안성 지역구의 경선방식

- (1) 경선방식 : 개방형 국민경선제
- (2) 선거인단 구성 : 전화면접원을 통한 참여신청자 모집 (559명)

나. 안성 지역구의 경선 진행과정

- (1) 2004. 1. 31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2) 2004. 2. 3 : 후보등록
- (3) 2004. 1. 31 - 2.4 : 선거인단 모집, 선거인 명부 열람, 공보물 발송
- (4) 2004. 2. 4 - 2.8 : 선거운동
- (5) 2004. 2. 8 : 선거인단 대회 개최 (14:00 -)

다. 선거인단 대회

- (1) 대회일정 : 2004. 2. 8 <토> 14:30 - 17:30
- (2) 대회장소 : 안성시민회관 대강당
- (3) 시간계획
 - 13:00 : 선거인증 교부
 - 14:30 ~ 15:20 : 국민의례, 개회보고, 합동연설회
 - 15:20 : 투표개시
 - 17:00 : 투표종료
 - 17:00 - 17:30 : 개표 및 당선자 발표
- (4) 투표방식 : 무기명 수기 투표방식
- (5) 대회결과
 - 선거권자 : 559명
 - 투표율 : 271명 (48%)
 - 개표결과 : 김선미 271표(여성후보 20% 가산 포함), 홍석완 91표

[경선사례 5] 김정숙 후보 (한나라당 안양시 동안 갑 지역구)

- ▶ 참여관찰자 : 기 우 택 [송실대]
- ▶ 참여관찰일지
- 2004.3.05 : 김정숙 후보 사무실 방문, 일정면담
 - 2004.3.09 : 선거인단 경선투표 참관

1. 안양 동안 갑 지역구의 사회·정치·경제적 환경

가. 사회·정치·경제적 환경

(1) 인구구성 및 주민의 민도(民度)

(2003.12월 현재)

구분	인 구									세대	세대당 인구
	총 인구	비산 1동	비산 2동	비산 3동	부흥 동	달안 동	관양 1동	관양 2동	부림 동		
	166,784 (명)	5,382 (명)	4,000 (명)	9,262 (명)	6,760 (명)	5,483 (명)	10,770 (명)	6,949 (명)	8,879 (명)		

- 안양 동안 지역의 인구규모는 안양시의 두개 구 중 하나인 만안구보다 7만 여명이 더 많음.(만안구 266,852명 동안구 337,653명)
- 안양 동안 갑 지역의 인구규모는 동안 을 지역에 비해 4,085명이 더 적음.(동안 갑 166,784명 동안 을 170,869명)
- 안양 동안 지역의 세대수는 만안구보다 17,577세대가 더 많음.(만안구 94,202세대 동안구 111,779세대)
- 안양 동안 갑 지역의 세대수는 동안 을 지역에 비해 3191세대가 더 많음.(동안 갑 57,485세대 동안 을 54,294세대)

(2) 소득수준 및 경제구조

- 안양지역의 기업체는 총 902개로서 대기업 10개, 중기업 96개, 소기업 796개임
- 안양지역의 재정규모는 5,118억원으로서 재정자립도는 82.6%임
- 안양지역의 교육기관은 81개교로서 초등학교 36개, 중학교 22개, 고등학교 19개, 대학 2개, 대학교 2개임

나. 행정조직별 선거구

동안 갑	비산 1,2,3동, 부흥동, 달안동, 관양1,2동, 부림동
동안 을	평촌동, 평안동, 귀인동, 호계1,2,3동, 범계동, 신촌동, 갈산동

다. 지역의 정치성향

구 분		동안 갑	동안 을
국회의원	16대	한나라당 심재철	
	15대	국민회의 최희준	국민회의 이석현
기초단체장 (2002. 6)		한나라당 신중대	
광역의원	3대	한나라당 3인	
	2대	한나라당 1인 국민회의 3인	

2. 경선방식과 입후보 과정

가. 안양시 동안 갑 지역구의 경선방식

- (1) 경선방식 : 국민경선제 (한나라당 중앙당 공천심사위에 의한 결정)
- (2) 선거인단 구성 : 지역구에 주거하는 당원 200명과 2003년 11월에 만들어진 한국통신 전화번호부 CD를 통한 지역구 주민 1800명을 한나

라당 중앙당에서 무작위 추출(남/녀 비율 5:5, 45세 이하 연령을 중심으로)하여 2,000명 모집

- 중복자 5명을 제외한 총 1995명을 모집함 (당원과 일반인의 중복, 주소 및 전화번호가 다르지만 동일인이 중복되는 경우 등)
- 당원 200명은 심재철 의원 지지당원 429명, 정진섭 후보 지지당원 800명, 김정숙 후보 지지당원 70명 도합 1,299명 중 남/여 비율 5:5, 45세 이상/45세 미만 비율 5:5로 컴퓨터 추첨을 통하여 선정함.

(3) 선거인단 모집내용 : 1차 ARS 전화를 통한 당원 및 한나라당 지지여부 확인(표본 추출 4,000~5,000명), 1차 확인대상자 중에서 2차 전화면접을 통해 경선 참여의사를 선택하게 하여 최종 의사 확인(1800명)

나. 안양시 동안 갑 지역구의 경선 진행과정

- (1) 공천신청 당시 안양 동안 선거구로 5명의 후보 등록
 - 김정숙 의원, 심재철 의원, 정진섭 지구당위원장, 안기영 도의원, 신보영 도의원
- (2) 공직자 후보사퇴시한 만료로 인해 안기영 도의원과 신보영 도의원은 자동 탈락
- (3) 2004.02.26 : 한나라당 중앙당으로부터 안양 동안 선거구의 분구 확정 통보받음.
- (4) 2004.02.27 : 후보 등록
 - 안양 동안 갑 김정숙 후보와 정진섭 후보의 당내경선
 - 안양 동안 을 심재철 현역의원 단수유력후보로 확정
- (5) 2004.02.27 : 지구당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7인 이내 선거관리 위원이 선임된다는 원칙에 따라 중앙당 추천 1인, 도지부 추천 2인, 양측 후보 추천 2인 등 총 5명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위원장 : 윤태현)
- (6) 2004.02.27 ~ 2004.03.03 : 선거인단 모집
- (7) 2004.03.01 : 김정숙 후보 측의 본격적인 선거운동 본부 조직

- (8) 2004.03.05 : 선거인단 명부 확정 및 통보
- (9) 2004.03.06 ~ 2004.03.09 : 선거운동
- (10) 2004.03.09 : 선거인단 투표 및 개표

다. 선거인단 투표

- (1) 대회일정 : 2004.03.09 <화> 07:00 - 18:00
- (2) 대회장소 : 안양문화센터 웨딩홀 1층
- (3) 시간계획
 - 07:00 : 투표개시
 - 08:05 : 50여명 투표
 - 09:40 : 140여명 투표
 - 10:10 : 200여명 투표
 - 13:50 : 460여명 투표
 - 16:00 : 500여명 투표
 - 16:40 : 590여명 투표
 - 18:00 : 투표종료
 - 18:00 ~ 8:45 : 개표 및 당선자 발표
- (4) 대회결과
 - 선거권자 : 1,995명
 - 투표율 : 648명 (32.5%), 유효표(645표), 무효표(3표)
 - 개표결과 : 김정숙(208표), 정진섭(437표)
 - 여성후보 20% 가산 반영 원칙에 의거 김정숙 후보 유효득표수는 249표

[부록 III] 17대 총선 여성후보 참여관찰보고서 총괄 : 본선사례

[본선사례 1] 이해훈 후보 (한나라당 서초 갑 지역구)

- ▶ 참여관찰자 : 김 은 수 [서울시립대 정치학 석사]
- ▶ 참여관찰일지
 - 2004.4.13 : 후보자 홍보물 및 관련자료
(신문기사 스크랩, 인터넷자료 등)검토
후보자 거리유세 참여, 사무국장을 비롯한 선거
운동원들 및 후보자 면담
 - 2004.4.14 : 후보자 거리유세 참여

1. 서초 갑 지역구의 정치·경제·사회적 환경

가. 기본 환경

	인구	남	여	인구 밀도	면 적	세 대	세대당 인구
구분	395,268 (명)	193,756 (명)	201,512 (명)	8,387 (명/km ²)	47.131(km ²) 서울시 605.95의 7.8% (서울시 최대) 주거지역: 서초구 전체의 36.6% 상업지역: 서초구 전체의 2.7% 녹지지역: 서초구 전체의 60.5%	144,444	2.74 (명)

2004년1월말 기준(단, 면적은 2000년8월 기준)

- 서초구는 서울시의 남부에 위치하여 동쪽으로는 강남대로를 경계로 강남구와 서쪽으로는 동작대교를 경계로 동작구와 접하고, 남쪽으로는 청

계산, 인릉산의 연봉을 경계로 과천시와 성남시, 북쪽으로는 한강을 경계로 하여 용산구와 대하고 있음.

- 서초는 청계산과 우면산, 한강으로 둘러쌓여 자연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구 전체 면적 중 50% 이상이 녹지임. 도시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인구 40여만 명 중 선거가능인구 80%이상이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중산층임. 산과 하천이 어우러진 늘 푸른 생활환경 속에 노인들이 타 지역보다 많이 살고 있음.
- 서초는 대법원이 들어서 있는 법조타운, 외교단지 등이 위치한 서울의 새로운 다운타운이자, 고속버스터미널, 남부시외버스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이 자리잡은 교통의 관문임.
- 예술의 전당, 국립국악원, 서초구민회관 등이 자리한 문화예술의 메카로 특히 노인들과 어린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임.

나. 행정조직

- 1988년 1월 1일 서초구는 강남구에서 분리되면서 행정 업무를 시작해 2001년 현재 18개 동의 지방 행정을 총괄하는 자치 행정기관.

인구 및 선거인수 (2004. 1.31 현재)

동 수	투표구수	인구수	세대수	선거인수	부재자수
18	97	395,268	144,448	302,707	8,000

선거구명	선거구역
서초구갑선거구	잠원동, 반포본동, 반포제1동, 반포제2동, 반포제3동, 반포제4동, 방배본동, 방배제1동, 방배제4동
서초구을선거구	서초제1동, 서초제2동, 서초제3동, 서초제4동, 방배제2동, 방배제3동, 양재제1동, 양재제2동, 내곡동

다. 사회단체

-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올바른 교육과 봉사활동을 통해 깨끗한 지구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 사회 봉사단체인 한국청소년국토순례단이 있으며, 생태계영상기록은 물론 환경 감시 및 환경 교육에 기여하는 무지개 세상 등이 있음.
- 주거용 주택에서 야기될 수 있는 각종 분쟁의 예방기준 및 사례선정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아파트주거문화시민운동본부가 있으며, 평생교육단체인 한국사회교육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이 있음.

서초구 동별 인구 및 세대현황

2004년 1월말기준

행정기관	계	남	여	세대수	세대당 인구
합 계	395,268	193,756	201,512	144,444	2.74
서초제1동	16,842	8,327	8,515	6,629	2.54
서초제2동	20,663	10,340	10,323	7,021	2.94
서초제3동	23,789	12,196	11,593	8,983	2.65
서초제4동	24,907	12,342	12,565	8,023	3.10
잠원동	35,108	16,765	18,343	13,852	2.53
반포본동	13,744	6,488	7,256	4,319	3.18
반포제1동	28,098	13,378	14,720	12,343	2.28
반포제2동	20,404	9,811	10,593	6,653	3.07
반포제3동	24,477	11,759	12,718	8,268	2.96
반포제4동	18,697	9,199	9,498	6,577	2.84
방배본동	17,157	8,263	8,894	6,043	2.84
방배제1동	16,861	8,295	8,566	6,227	2.71
방배제2동	31,257	15,238	16,019	11,135	2.81
방배제3동	21,957	10,913	11,044	7,450	2.95
방배제4동	22,628	10,928	11,700	8,026	2.82
양재제1동	27,615	13,613	14,002	10,523	2.62
양재제2동	23,346	11,848	11,498	9,628	2.42
내곡동	7,718	4,053	3,665	2,744	2.81

- 사회복지관련 학회 및 연구회로는 한국청소년 학회, 한국성인병예방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등이 있으며, 사회복지관련 전문가 단체로는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약사회 등이 자리하고 있음.

라. 정치성향

- 아파트촌이 밀집한 서울 서초 갑 지역은 가구 수의 45% 안팎이 영남 출신으로 구성된 중산층 거주 지역. 이 때문에 서초갑은 한나라당이 강세인 ‘강남벨트’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지역으로 꼽히지만,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열린우리당 지지도의 급상승에 따라 선거전 초반 판세는 일단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각각 내세운 30대 정치신인 간의 혼전 양상으로 진행되었음. 그러나 박근혜 바람의 영향으로 한나라당 지지 세력의 재집결을 강하게 보여주었음.

16대총선	박원홍	배선영	신은숙	최숙영
소속정당	한나라	민주	자민련	청년진보당
득표수	44,450	28,747	3,863	2,439
득표율	55.3	35.8	4.8	3.0

* 연합뉴스 2004. 4. 8 참조

15대총선	최병렬	조소현	곽일훈	김창호	곽일	도승희	배종달
소속정당	신한국	국민회의	민주당	자민련	국민연합	무소속	무소속
득표수	40,191	21,920	8,667	10,017	293	582	717
득표율	48.1	26.2	10.4	12.0	0.4	0.7	0.9

* 연합뉴스 2004. 4. 8 참조

2. 입후보 과정

가. 공천과정

- 경선은 없었고, 당내 심사위원회의 9:1의 압도적 지지로 공천받음. 참신성, 자질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서울지역 한나라당 지지텃밭의 노른자위라고 할 수 있는 서초갑에 여성이 공천된다는 것이 당내 당직자들 사이에서도 반발 유발함. 특히 현역의원이었던 박원홍 의원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켜 결국 재심까지 가는 험난한 과정을 거침.
-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강혜련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여성계가 각 당에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여성후보를 기획 공천할 것을 요구했으며, 한나라당이 이를 수용한 것이라고 밝힘.

나. 입후보과정

- 세대수의 10분의1에 해당하는 7,240부를 유권자들에게 예비홍보물로 발송(VAT별도 5백만원 소비), 이는 선거자금과는 별도상황임.
- 서초갑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따르면,
“대한민국 달라져야 합니다. 대한민국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서초의 선택, 웰빙 대한민국을 위해 능력있는 전문가 정치인이 나서야 합니다. 세계가 인정한 경제전문가-이혜훈,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국가경영형 정치’여야 합니다. 서초의 자부심이 올라갑니다.”
라는 구호 아래,
- 경제와 교육에 관심이 많은 30~40대 연령층의 거주비율이 높은 젊은 지역인 서초의 특성상 서초의 교육·환경 문제 개선을 위해 부지런히 뛰어다니겠다고 주장.
- 서초구민들이 체육시설로 쓰고 있는 공원을 학교부지로 전환하고, 지역 내 학교에 자율권을 쥐, 질 높은 교육과 다양한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 또한 스모그 등의 심각한 환경문제를 개선하여 먼지 없는 서초를 만들
것임.
- 녹지공원을 조성해 생활에 풍요로움이 찾아드는 서초를 만들것임.

3. 개표결과

2004. 4. 15 선거당일 18시 KBS 출구조사 예측

당선예상자 서초 갑 이해훈 후보

2004. 4. 15 21시 서초 갑 이해훈 후보 당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 득표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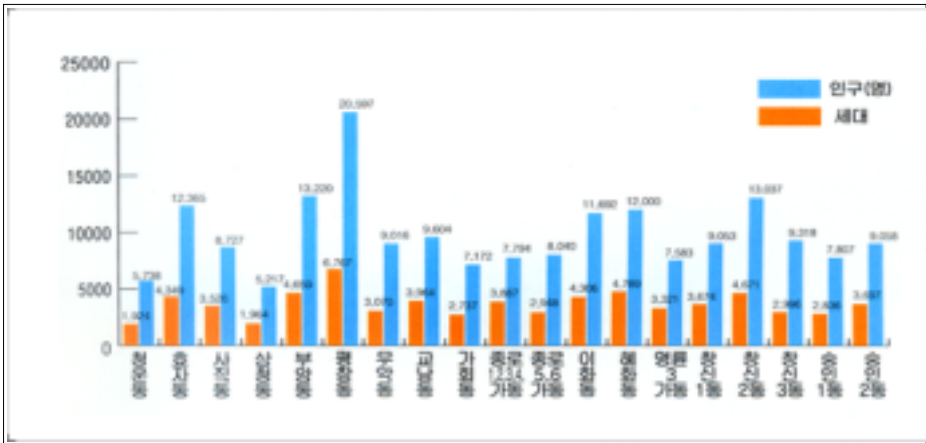
한나라	열린우리	자민련	무소속
이해훈	함종길	김우수	배선영
54,103	28,318	710	12,769
56.4	29.5	0.7	13.3

[본선사례 2] 이선희 후보 (민주노동당 서울 종로 지역구)

- ▶ 참여관찰자 : 강 영 숙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인턴]
- ▶ 참여관찰일지
 - 2004.4.10 : 동대문 신발시장. 창신동.대학로
해화동 권영길대표 지원유세현장
 - 2004.4.11 : 교남동. 명암돌리기 인사
 - 2004.4.13 : 충신시장. 성균관대학교 정문 이라크
파병 반대연설
 - 2004.4.14 : 창신동. 충신시장
 - 2004.4.15 : 17대 총선 투표의 날
 - 2004.2.16 : 열린우리당 제3차경선워크샵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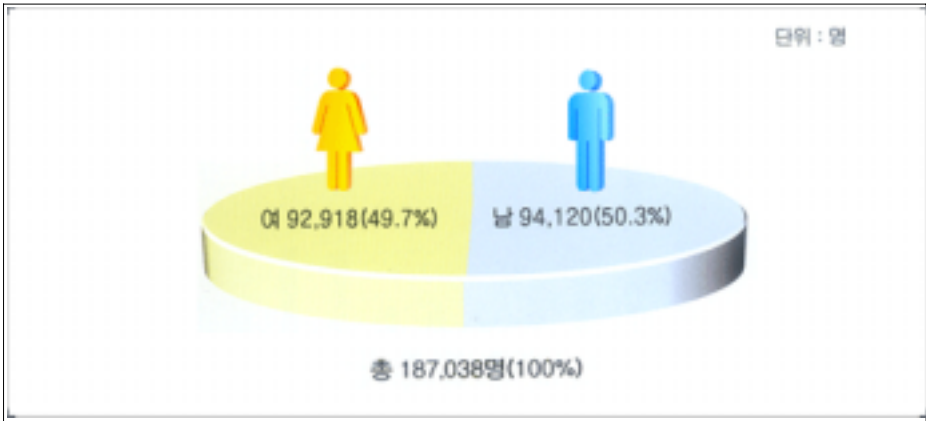
1. 지역구 정치·경제·사회적 환경

가. 동별 세대인구 및 면적



나. 남녀 인구와 연도별 변화추이

○ 남녀 인구 대비



가. 종로구 지역 특성

동쪽으로 난계로와 신설동 로터리를 경계로 동대문구가 있고 북악터널과 낙산성곽을 경계로 성북구가 있으며 의주로를 경계로 서쪽에 서대문구가 있으며 북쪽에 있는 북한산 남장대는 경기도 고양군과 경계하고 있다.

상주인구는 상업과 업무용 지역확장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주간활동 인구는 200여만명 내외이고 호적인구는 140여만명 내외로 주민등록인구 약 19만명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이다.

정조직	종로구청장- 한나라당 출신 : 김충용 16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 정인봉
사회단체 및 정부기관	YMCA, 참여연대, 여성민우회 등 청와대, 헌법재판소, 감사원, 정부종합청사, 서울시교육청 등
정치성향	타 지역에 비하여 보수적 성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종로구에는 젊음의 거리 대학로와 몇 개의 대학이 있지만, 실제 거주 주민은 중장년층이 많으며, 지역주민의 생활, 경제, 직업의 층이 매우 광범위하게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2. 입후보 과정

민노당의 당원으로서 활동사항, 인지도 등으로 후보를 선정하고 이들끼리 경선을 통해 의원후보로 출마하게 되었다.(민노당 경선과정은 본문 4장 참조)

3. 개표결과

종로구 투표자 : 87,429명

종로구 최종 투표율 : 64%

1위, 한나라당 박진후보 : 37,431표(42.8%)

2위, 열린우리당 : 김홍신후보

3위, 새천년민주당 : 정홍진후보

4위, 민노당 이선희후보 : 2,950표(3.4%)

정치 접전지 종로가 '0.7%'를 사이에 두고 피말리는 접전을 펼쳤다.

종로의 최종 선택은 한나라당 박진(47) 후보.

박진 후보가 3만7431표(42.8%)를 얻으며 3만6843표(42.1%)를 얻은 열린우리당 김홍신(56) 후보를 0.7% 차이로 앞질렀다.

민주당 정홍진(59) 후보도 9,614(11.0%)표를 얻으며

민노당 이선희(39) 후보 2,950(3.4%)선전했다.

[본선사례 3] 송미화 후보 (열린우리당 은평 을 지역구)

▶ 참여관찰자 : 장 우 윤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 참여관찰기간 : 2004.3.15 ~ 2004.4.15

I. 은평 을 선거구 지역성향

1. 지역적 특성

은평구는 서울 외곽의 대표적인 저개발 지역이고, 최근까지 그린벨트의 규제에 의한 개발 제한으로 인구규모에 비해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이다. 대표적인 저개발, 저지가, 저이사율의 특징을 갖는 지역으로써 지역토박이 비율이 높고, 지역적 인간정서 및 네트워크가 여타지역보다 강한 편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이 지역은 타지역보다 연고주의 현상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으며, 60세 이상 노년층의 인구규모도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아 보수적이고, 전통

적인 가족관계가 보다 강하게 나타나는 지역이다.

은평구는 재정자립도 면에서 최하위 수준이며, 사업체 수와 종업원 수도 인구규모에 비해 서울지역 중 가장 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은평구는 다른 지역사람들이 은평구를 찾아오게 하는 주요시설이 없다. 전문 상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종합병원, 경기장, 놀이시설, 백화점, 쇼핑센터, 대학, 방송국, 박물관 등등 어떤 주요시설이 없다. 연신내 로데오거리가 그나마 알려진 상징이 되어 주변 상가가 확장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대규모 시설 입지에서 은평구는 풍부한 녹지, 미개척 상태로 남아있는 넓은 토지와 싼 땅값, 도심으로부터 가까운 거리 등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어 발전 가능하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후보자 모두 해결해야할 주요 정책으로 삼았고, 특히 진관내외동과 관련된 은평 뉴타운, 국립보건원 부지의 재활용 방안 문제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이 은평구의 주요 현안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은평 을 선거구의 경우 현역의원의 탁월한 지역구 및 조직 관리는 전국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투표행태에 영향을 주는 지역이다.

2. 은평 을 유권자 분석

가. 연령별 분석

2004년 4월 현재 은평구의 총 유권자수는 36만1천993명으로 나타났다. 그 중 은평 을 선거구 유권자는 19만4천786명으로 남자가 9만4천940명, 여자가 9만9천846명으로 여성이 5천여명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은평 을 유권자 중 3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20대, 40대 순이다. 20-30대는 전체유권자의 48%를 점유하고 있으나, 은평 을 지역은 서울 다른 지역보다 60대 이상의 노년층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나. 지역별 분석

2004년 4월 현재 은평구의 세대수는 총 173,384세대로 갑구가 79,715세대

을구가 93,569세대이다. 은평 을 선거구는 불광1,2,3동, 갈현1,2동, 역촌1,2동, 구산동, 대조동, 진관내동, 진관외동으로,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인구수를 보이는 동은 대조동과 불광1동으로 2만4천여명과 2만3천여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구산동(21,829명), 갈현1동(20,494명), 갈현2동(20,030명) 순으로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반면 진관내동과 진관외동에는 각각 8,636명, 9,165명으로 가장 작은 인구수를 보이고 있어 유권자가 1만여명을 넘지 못했다.

다. 은평 을 투표율 분석

선 거 명	선거인수	총 투표자수	투표율
16대 국회의원선거(2000.4.13)	186,860	104,909	56.14%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02.6.13)	182,985	77,812	42.52%
제16대 대통령선거 (2002.12.19)	184,456	127,375	69.05%

전반적으로 투표율이 높지 않고, 서울의 평균 투표율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16대 총선시 투표율은 56.14%로 서울 전체 평균 투표율인 54.3%보다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지만, 제3회 지방선거에서는 42.52%의 투표율로 서울 전체 평균 투표율 45.80%보다 낮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고, 제 16대 대통령선거에서는 투표율이 69.05%로 서울 전체 투표율 71.4%와 비교할 때 역시 조금 낮은 투표율을 보여주고 있다.

라. 역대 선거결과 분석

▷ 제15대 국회의원 선거(1996.4.11)

구분	선거인수	투표자수	후보자별 득표수					계
			신한국당	국민회의	민주당	자민련	국민연합	
			이재오	이원형	이장희	노양학	김명환	
15대	189,342	112,002 (59.15)	48,146 (42.99)	39,132 (34.94)	9,785	11,180	2,106	110,349

▷ 제16대 국회의원 선거(2000.4.13)

구분	선거인수	투표자수	후보자별 득표수					계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청년진보당	무소속	
			이재오	이석형	이장희	노양학	김명환	
16대	186,860	104,969 (58.18)	53,121 (50.61)	43,555 (41.49)	2,684	3,715	1,070	104,145

역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한나라당 후보가 여유있게 승리한 지역이다. 신한국당 이재오 후보는 15대 총선에서 42.99%의 득표로 국민회의 이원형 후보를 여유있게 따돌리고 당선되었는데 당시 서울지역에 출마한 신한국당 국회의원 후보의 평균 득표율은 36.5%였다. 16대 총선에서도 한나라당 이재오 후보는 50.16%를 득표, 41.49% 득표에 그친 민주당 이석형 후보를 역시 여유있게 따돌리고 당선하였다. 16대 총선에서 서울지역에 출마한 한나라당 후보의 평균 득표율은 43.27%였다.

▷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02.6.13)

서울시장

구분	선거인수	투표자수	후보자별 득표수	
			한나라당	민주당
			이명박	김민석
서울	7,665,343	3,510,898(45.80)	1,819,057(51.81)	1,496,754(42.63)
은평갑	159,075	65,350(41.08)	31,934(48.87)	30,464(46.62)
은평을	182,985	77,812(42.52)	40,612(52.19)	33,646(43.24)

은평구청장

구분	선거인수	투표자수	후보자별 득표수	
			한나라당	민주당
			노재동	김영춘
은평갑	159,075	65,350(41.08)	33,638(51.46)	26,613(40.71)
은평을	182,985	77,812(42.52)	43,420(55.80)	28,133(36.15)
계	350,617	151,134(43.11)	80,135(53.02)	57,953(38.35)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는 상대적으로 한나라당 후보가 선전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서울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이 한나라당 출신이 당선된 지역이다.

2002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는 은평 을에서 52.19%를 득표, 서울 평균(51.81%)보다 조금 높은 득표를, 김민석 후보도 43.24%를 득표, 서울 평균(42.63%)보다 조금 높은 득표를 올렸다. 은평구청장 선거에서는 노재동 후보가 55.80%의 득표로 당선, 은평 을에서 국회의원의 후보는 은평 전체보다 낮은 득표로, 한나라당 후보는 높은 득표를 얻었다.

2. 은평 을 선거구 선거결과

선관위에 따르면, 은평구 총 유권자 361,993명(남 176,793/여 185,200)의 유권자 중 217,361명이 투표해 전국투표율 59.9%보다 조금 높은 60.05%의 투표율 가운데, 은평 을 지역은 한나라당 이재오 후보가 53,107표(45.3%)를 얻어 열린우리당 송미화 후보와 2,541표차이로 당선되었다.

득표순

- 한나라당 이재오 후보가 53,107표 (45.3%)
- 열린우리당 송미화 후보 50,566표 (43.1%)
- 새천년민주당 이성일 후보 6,064표 (5.2%)
- 민주노동당 정태연 후보 4,957표 (4.2%)
- 자유민주연합 임왕혁 후보 1,036표 (0.9%)
- 무소속 이용준 후보 774표 (0.7%)
- 민주기독교당 민 승 후보 627표 (0.5%)
- 민주공화당 김명환 후보 232표 (0.2%)

은평구 정당득표상황은 열린우리당이 40.3%, 한나라당 33.8%, 민주노동당이 12.7%, 새천년민주당 8.0%, 자유민주연합 2.2%, 민주기독교당 1.3%, 국민통

합21과 녹색사민당 각 0.4%, 가자희망2080 과 민주공화당 각 0.2%, 노년권의
보호당, 민주화합당, 사회당이 각 1%, 구국총연합 0% 순이다.

[본선사례 4] 원미정 후보
(새천년민주당 인천 동구·중구·옹진군 지역구)

- ▶ 참여관찰자 : 성 지 연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석사과정]
- ▶ 참여관찰일지
 - 2004.4.10 : 후보자 거리유세 동행, 전화유세 사전작업
 - 2004.4.11 : 사무실 상주, 선거운동원 유세참관
 - 2004.4.12 : 전화유세 작업, 사무장과의 면담
 - 2004.4.13 : 사무실 상주, 전화유세 작업
 - 2004.4.14 : 후보자 거리유세 동행, 전화유세 작업

1. 지역구의 정치·경제·사회적 환경

가. 사회·경제적 환경

(1) 선거인명부확정상황(2002.12.19)

위원회명	인구수	세대수	선거인수			선거인수 /인구수
			계	남	여	
총	2,577,364	865,775	1,824,905	906,614	918,291	70.8
중구(인천)	77,024	29,215	58,935	29,645	29,290	76.5
동구(인천)	72,962	25,874	56,412	28,224	28,188	77.3
옹진군	14,139	5,739	11,225	5,639	5,586	79.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구·동구·옹진군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인구수 비례 선거인수 비율이 높은 편이며(중앙선관위 도표 참조), 50대 이상의 노년층 인구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생활환경만족도의 영역별 백분율

단위 : % (명)

영역	매우 불만	약간 불만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합계
지역경제 여건	12(38)	43(137)	39(125)	6(20)	0(1)	100(321)
주택보급 여건	10(31)	30(96)	47(152)	12(39)	1(4)	100(322)
자연환경	25(79)	36(114)	32(101)	6(18)	1(3)	100(325)
공해	46(147)	36(116)	16(51)	1(3)	1(4)	100(321)
교육 여건	19(62)	40(127)	35(113)	5(16)	1(3)	100(321)
교통 여건	30(89)	33(104)	27(86)	11(35)	2(5)	103(319)
공공안전 및 치안	13(40)	34(106)	45(142)	8(26)	1(2)	101(316)
사회복지 시설	15(46)	42(134)	38(120)	5(17)	1(2)	101(319)
문화 및 여가생활	18(59)	33(107)	36(116)	10(32)	2(7)	99(321)

※ 인천시민들의 생활환경만족도에 관한 연구(이윤희) ※

위의 도표는 인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조사에 의한 것이다. 중구·동구 지역은 인천의 주변부로써 위의 표에서 언급한 영역들이 타 지역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편이다. 특히 주변 재래시장(신포시장)의 장기화된 침체, 동인천 지하상가 경기 악화 등으로 이곳 지역의 생활환경만족도는 인천시 평균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많은 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파트 재건축 중심의 개발이다. 재래시장 등의 상권이 극히 약화되어 있고, 대개의 상인이나 주민들이 지역개발에 매우 수동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써 새로 당선될 국회의원에게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지역발전 사업을 기대하고 있다. 옹진군 역시 섬으로만 이루어진 선거구로써 육지지역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해양관광지 개발사업에 희망을 걸고 있다.

나. 행정조직별 선거구

동구	금창동 만석동 송림 1-6동 송현 1-3동 창영동 화수 1-2동 화평동
중구	내동 답동 도원동 동인천동 북성동 송월동 신포동 신흥동 연안동 영종동 용유동 율목동
옹진군	덕적면 대청면 북도면 백령면 연평면 영흥면 자월면

다. 사회단체

- 2004 총선 시민 연대 참가 단체를 중심으로

부패, 무능정치인 유권자 심판 2004 총선인천시민연대(21)

가톨릭환경연대, 강화여성의전화, 민주개혁인천시민연대, 부평시민모임, 서구환경교통대책협의회,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노동연구원,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중교회연합, 인천빈민연합,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인천해고노동자협의회, 인천환경운동연합, 청솔의집, 통일아침,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 인천총선연대(13)

(사)내일청소년생활문화마당, 가톨릭인천교구노동자센터, 가톨릭인천교구 대학생연합회, 가톨릭인천교구부평노동사목, 가톨릭인천교구청년연대, 시민문화센터, 인천교대 총학생회, 인천대학교 총학생회, 인천여성회, 인천전문대학 총학생회, 인하대학교 총학생회, 지역정보화센터,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위에 언급된 각종 여성 단체 등에서는 이번 탄핵 정국을 규탄하며 민주당 후보들의 선거 활동 지원을 공식적으로 거부한 상태이다. 따라서 그동안 원미정 후보에게 많은 힘을 실어주었던 여성단체들의 지원이 이번 총선에서는 철회되었다.

무소속의 이세영 후보는 각종 시민단체의 낙선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선거기간동안 각 단체의 낙선운동 활동은 관찰되어지지 않았다.

다. 정치성향

- 역대 국회의원

선거구명	정당명	성명 (한자)	성별	나이	주소	학력	경력	득표수 (득표율)
16대 중구·동구· 옹진군	한나라당	서상섭 徐相燮	남	49	인천 중구 경동 224 6/4	서울대 신문대학원 2년수료	정 치 개 혁 시 민연합 기획 위원장 한국의 선택 21 사무처장	21,724 (30.4)
15대 중구·동구· 옹진군	신한국당	서정화 徐廷華	남	56	인천 동구 금곡동 58-18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신한국당 원 내총무 제12,13,14대 국회의원	40,916 (49.1)
14대 중구·동구	민자당	서정화 徐廷華	남	52	인천 동구 금창동 58-18	연세대행정 대학원졸업	민 주 정 의 당 조직국장 제12,13대 국 회의원	44,698 (45.4)

- 기초단체장

선거구명	정당명	성명 (한자)	성별	나이	주소	학력	경력	득표수 (득표율)
3회 2002. 6 중구 (인천)	민주당	김홍섭 金洪燮	남	52	인천 중구 향동7가 58-69 라이프APT 5-1008	경기대학교 사회과학부 2년 재학	인천광역시의 회의원 인천광역시 중구청 민선구청장	13,355 (50.1)
동구 (인천)	한나라당	이화용 李和容	남	51	인천 동구 화수동 79-1 영풍APT 102-2404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3년 중퇴	한나라당중.동. 옹진군지구당 사무국장 한나라당중.동. 옹진군지구당 부위원장	14,366 (51.6)
옹진군	민주당	조건호 趙健鎬	남	66	인천 옹진군 북도면 시도리 321-2 (5/4)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 과 4년 졸업	(현) 옹진군수 경기도 부천시장, 경기도기획관 리실장	5,468 (63.8)

- 광역의원(시의원)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1998. 06.) 광역의원

선거구명	정당명	성명 (한자)	성별	선거구명	정당명	성명 (한자)	성별
중구제1	자민련	김홍섭 金洪燮	남	동구제2	국민회의	원미정 元美貞	여
중구제2	국민회의	이복식 李福植	남	용진군제1	무소속	김성호 金成鎬	남
동구제1	국민회의	김영주 金永柱	남	용진군제2	국민회의	장윤의 張允義	남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02. 06.) 광역의원

선거구명	정당명	성명 (한자)	성별	선거구명	정당명	성명 (한자)	성별
중구(인천) 제1선거구	한나라당	안병배 安炳培	남	동구 (인천)제2 선거구	한나라당	윤태길 尹泰吉	남
중구(인천) 제2선거구	한나라당	이규원 李揆元	남	용진군제1 선거구	민주당	김성호 金成鎬	남
동구(인천) 제1선거구	한나라당	황인성 黃仁成	남	용진군제2 선거구	무소속	김필우 金弼雨	남

노인 인구층이 두터운 지역으로 대체적으로 여당의 손을 들어주는 보수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 1·2회 광역의원(시의원)선거에서 민주당 여성후보인 원미정후보가 당선되었던 사실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받고 있다. 탄핵정국 이후 대통령에 대한 동정심과 야당에 대한 반발로 열린우리당에 대한 호응이 높았다. 그러나 최근 문제가 된 우리당 정동영 의장의 '노인 폄하 발언' 이후 급랭하기 시작했다. 50대 이상의 연령층이 두터운 지역이다 보니 정 의장의 발언이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무장과의 인터뷰를 통한 정보에 의하면 주민들이 정치수준은 평균 이하인 것으로 보여진다. 과거의 돈선거에 익숙하고 그것에 우호적인 유권자가 많으며, 실제로 후보들에게 금품(밥, 술 등)을 요구하는 유권자도 존재했다. 또, 지역에 필요한 현실적인 정책을 제시하거나 특정분야에 전문가인 후보보다는 지역 토박이로써 오랜 기간 동안 지역 사업에 많은 투자와 주민들에게 인심을 베풀어 온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즉, 후보 선택에 있어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정서지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 입후보 과정

- 정당들의 공천과정 (기호 순으로)

정당	
한나라	공천심사위원회 심사로 대부분 결정, 일부지역만 여론조사와 대의원 투표를 통한 경선
민주	공천심사위원회 심사, 또는 공천심사후 전당원 경선 또는 여론조사 경선
열린우리	전화여론조사를 통한 국민참여경선으로 대부분 결정, 일부지역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자민련	총청권 일부 경합 지역만 경선, 대부분 단일 후보
민주노동	당원직선으로 경합지역은 경선실시, 단일후보지역은 찬반투표
무소속	

- 후보들의 입후보과정 (기호 순으로)

후보자명	
서상섭	ICN 인천방송이 조사한 공천후보 지지율에서는 이세영후보(22.6%) 보다 8.9%뒤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2월 26일 한나라당 공천심사를 통해 공천우세후보로 선출
원미정	ICN 인천방송 조사에서 16.6%의 지지율로 김영주 후보(8.2%)와 강승훈 후보(7.1%)에 비해 크게 앞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후 당내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2위와 2배 이상의 지지율 차이를 보이며 후보로 선출
한강원	ICN 인천방송 조사에 의하면, 권기식 후보가 13.3%로 선두를 달렸으며, 정춘근 후보(8.0%)와 한광원 후보(6.2%)가 그 뒤를 이었지만 경선 후보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유권자가 72.5%에 달해 실제 경선에서 역전하여 선출
이수일	단독 입후보 당내 공천으로 선출
문성진	당내 공천으로 선출(단독 입후보 예상)
이세영	무소속 단독 입후보

3. 총선 결과

정당지지율(비례대표)

(단위: %)

광역/정당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민주노동당	기타
전국	35.3	7.0	37.7	2.8	12.9	3.0
인천	34.2	5.3	39.0	2.1	15.1	3.1

득표상황

순위	기호	후 보 자	정 당		비 고
1	3	한광원	열린우리당	29,005명(35.6%)	
2	1	서상섭	한나라당	25,873명(31.8%)	
3	6	이세영	무소속	13,435명(16.5%)	
4	5	문성진	민주노동당	7,021명(8.6%)	
5	2	원미정	민주당	5,327명(6.5%)	
6	4	이수일	자민련	822명(1.0%)	

중구·동구·옹진군 유권자수는 141,411명으로 투표율은 58.3%를 기록했다. 인천 전체지역 투표율(57.46%)보다 조금 높았다. 인천지역은 지난 16대 총선보다 4.07% 투표율이 상승했지만 전국 광역단체별 투표율과 비교할 때 충남에 이어 꼴찌에서 두 번째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참고로 전국 투표율은 60.2%였다.

[본선사례 5] 한명숙 후보
(열린우리당 경기 일산 갑 지역구)

- ▶ 참여관찰자 : 오 광 민 (건국대학교)
- ▶ 참여관찰일지
- 2004.4.12 : 길거리 유세 참여
 - 2004.4.13 : 길거리 유세참여, 유세차 유세참여
 - 2004.4.14 : 길거리 유세 참여

1. 일산 갑 지역구의 정치·경제·사회적 환경

가. 사회·경제적 환경

- 인구 (유권자)

유 권 자	남	여	계
20-30대	30,706	36,052	66,758
40대	22,049	21,058	43,107
50대	7,985	7,430	15,415
60대이상	8,983	12,486	21,469
계	69,723	77,026	146,749

나. 행정조직별 선거구

일산구를 일산 갑과 일산 을 두곳으로 나눔

다. 지역의 정치성향

한나라당이 전통적으로 강세이며 구청장 및 시의원들 다수가 한나라당16
대 국회의원은 민주당 정범구 의원

2. 입후보 과정

- 2004.2.27 한나라당 홍사덕 후보 공천 확정
- 2004.3. 3 열린우리당 한명숙 후보 공천 확정

3. 선거 결과

- 기호 1번 한나라당 홍사덕 후보 45,936표 46.6%
- 기호 2번 새천년민주당 박태우 후보 3,473표 3.5%
- 기호 3번 열린우리당 한명숙 후보 48,286표 49.0% 당선
- 기호 4번 무소속 최윤기 후보 840표 0.9%

[본선사례 6] 박금자 후보 (새천년민주당 서울 영등포 을 지역구)

- ▶ 참여관찰자 : 장 윤 선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
- ▶ 참여관찰일지
- 2004.4.09 : 선거사무실 방문, 선거보좌관 및 사무원과 면담
 - 2004.4.10 : 선거사무실 자원봉사
(전화 홍보 ; 지역주민들의 반응관찰)
 - 2004.4.11 : 후보자의 여의도 지역 거리유세 참관, 사무실의 선거
관련 사무보조
 - 2004.4.12 : 후보자의 영등포<을>전지역 거리유세 참관 후보자와
면담, 선관위 공무서 작성
 - 2004.4.13 : 선거사무실의 선거관련 사무보조, 전화 홍보 및 자원
봉사자들과의 면담, 후보의 홈페이지 관리, 투표 참관
인 교육 보조
 - 2004.4.14 : 선거보좌관과 면담(지역구 관리와 관련), 전화 홍보 결
과 정리, 신길·대림지역 재래시장 연설 및 유세 참관

1. 서울 영등포 을 지역구의 정치·경제·사회적 환경

가. 선거구 해당지역

영등포 갑	영등포1·2·3동, 당산1·2동, 도림1·2동, 문래1·2동, 양평1·2동, 신길2·3동
영등포 을	여의도동, 신길 1·4·5·6·7동, 대림 1·2·3동

나. 인구 구성(2002년 기준)

(1) 인구추이 ; 남(209,174), 여(202,978) = 합계 (412152)

(가) 동별 세대 및 인구 ; (영등포 을)

구 분	세대수	남	여	합계
여의도동	9724	14775	15840	30115
신길1동	9328	11718	10810	23458
신길4동	6717	7999	7758	15757
신길5동	7334	10112	9613	19725
신길6동	9118	12736	12452	25188
신길7동	7739	11376	11061	22436
대림1동	7493	10443	10160	20603
대림2동	8781	11380	11000	22380
대림3동	11865	17422	16594	33926

(나) 연령별 · 성별 인구 ; (영등포구 전체)

연 령	전체(구성비)	여 (구성비)	남 (구성비)
20~24	35553(8.70)	17776(4.35)	17777(4.35)
25~29	43488(10.64)	21499(5.26)	21989(5.38)
30~34	46610(11.40)	21778(5.33)	24832(6.08)
35~39	35441(8.67)	16408(4.01)	19033(4.66)
40~44	35542(8.70)	17523(4.29)	18019(4.41)
45~49	29986(7.34)	15174(3.71)	14812(3.62)
50~54	23646(5.78)	12028(2.94)	11618(2.84)
55~59	19279(4.72)	9601(2.35)	9578(2.37)
60~64	16812(4.11)	8469(2.07)	8343(2.04)
65~69	10999(2.69)	5845(1.43)	5154(1.26)
70~74	6273(1.53)	3750(0.92)	2523(0.62)
75~79	3959(0.97)	2585(0.63)	1374(0.34)
80~84	2324(0.57)	1578(0.39)	746(0.18)
85 이상	1310(0.32)	1001(0.24)	309(0.08)

다. 경제

(1)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지 역	인 구 수	가 구 수
여의도동	15	10
신길1동	401	231
신길4동	308	156
신길5동	409	223
신길6동	221	147
신길7동	195	110
대림1동	348	202
대림2동	353	174
대림3동	392	199
영등포<을>	2642	1452

(2) 소비생활의 형태

재래시장

지 역	개 수	부지면적	건물면적
신길 1동	1	4509	4509
신길 3동	3	20618	20618
대림 1동	1	5001	2314
대림 3동	1	2314	6214

쇼핑센터

지 역	개 수	부지면적	건물면적
여의도동	1	5776	11009
대림1동	1	5500	1047

대형점 : 여의도동 / 1 / 3054 / 3084/

도매센터 : 無.

다. 정치성향 - 역대선거결과

구 분		영등포 갑	영등포 을
국회의원	15대	신한국당 김명섭	국민회의 김민석
	16대	민주당 김명섭 (45.9%)	민주당 김민석 (60.4%) * 보궐선거(2002.8.) - 한나라당 권영세
기초단체장	2002. 6	한나라당 김용일	
광역의원	2002. 6	한나라당 허만섭 한나라당 권영하 한나라당 김춘수 한나라당 이일희	

2. 입후보 과정

(1) 한나라당 권영세 후보

- 한나라당의 영등포<을>지역구의 경우 현역의원인 권영세 의원만이 공천을 신청해 사실상 본선후보로 결정.

(2) 민주당 박금자 후보

- 민주당의 영등포<을>지역에는 박금자 국회의원, 조경철 박사, 김민석 전 국회의원(비공개) 등이 공천 신청. (김민석 전의원은 대선 당시 탈당하였다가 민주당으로의 복당을 신청했다. 중앙당에서 일부는 찬성했지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영등포<을> 지역의 민주당 비대위에서 투표결과 94%가 김 전의원의 복당에 찬성하였다.)
- 민주당의 영등포 <을> 지역구의 공천은 사실상 박금자 의원과 김민석 전의원의 양자 구도(민주당 내에서는 박금자 의원 지지파와 김민석 전 의원 복당파로 양분)

- 박금자 국회의원은 여성정치인의 역할과 전문성을 부각, 김민석 전 의원은 지역의 인지도와 정치감각 강조
- 당내 공천심사를 통해 김민석 전 의원이 영등포 <갑> 지역구로 수평 이동하고 <을>에서는 박금자 의원이 후보로 등록.

(3) 열린우리당 김종구 후보

- 열린우리당의 영등포<을> 후보공천은 영등포 최초로 국민경선을 실시함.
- 고영로(영등포의 오늘) 대표, 이재경(영등포열린우리광장) 대표, 조재일(한겨레미디어넷) 차장 등 1차 공천자 3명과 김종구 전 시의원 등 2차 공천신청
- 경선 투표율은 45.5%를 비교적 낮음.
- 결과는 김종구 후보가 291표(65.5%)를 얻어, 127표를 얻은 이재경 후보를 앞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결정.

(4) 자민련 이중식 후보

자민련의 이중식 후보는 다른 후보와의 경쟁 없이 자민련 후보로 총선에 출마.

3. 개표 결과

(1) 영등포 을

한나라당 권영세	민주당 박금자	열린우리당 김종구	자민련 이중식
41,432	12,674	39,798	1,594
43.4%	13.3%	41.7%	1.7%

(2) 영등포 갑

한나라당 고진화	민주당 김민석	열린우리당 김명섭	자민련 손석모	민노당 홍승하
37,230	21,033	35,584	915	5,963
37.0%	20.9%	35.3%	0.9%	5.9%

[본선사례 7] 김희선 후보 (열린우리당 서울 동대문 갑 지역구)

- ▶ 참여관찰자 : 기 우 택 [송실대]
- ▶ 참여관찰일지
 - 2004.4.10 : 김희선 후보 사무실 방문, 일정 면담, 명동에서의 지원 유세 참관
 - 2004.4.11 : 사무실 상주, 메일수신자 명단 DB작업
 - 2004.4.12 : 사무실 상주, 메일수신자 명단 DB작업
 - 2004.4.13 : 사무실 상주, 지역유권자에게 지지메일 발송작업 (합법적)
 - 2004.4.14 : 사무실 상주, 막판 선거운동 지원업무

1. 서울시 동대문 갑 지역구의 사회·정치·경제적 환경

가. 사회·정치·경제적 환경

(1) 인구구성 및 주민의 민도(民度)

(2003.12.31 현재 유권자 수)

	인구수(명)			인구 비율(%)		
	남	여	합 계	남	여	합 계
신설동	3,550	3,319	6,869	2.21	2.06	4.27
용두1동	5,606	5,086	10,692	3.49	3.16	6.65
용두2동	4,176	4,014	8,190	2.60	2.50	5.09
제기1동	5,957	5,809	11,766	3.71	3.61	7.32
제기2동	6,424	6,005	12,429	4.00	3.74	7.73
청량1동	6,189	6,279	12,468	3.85	3.91	7.76
청량2동	4,398	4,447	8,845	2.74	2.77	5.50
회기동	4,723	4,975	9,698	2.94	3.09	6.03
휘경1동	7,346	7,490	14,836	4.57	4.66	9.23
휘경2동	9,587	9,769	19,356	5.96	6.08	12.04
이문1동	6,123	6,393	12,516	3.81	3.98	7.79
이문2동	7,287	7,441	14,728	4.53	4.63	9.16
이문3동	9,124	9,246	18,370	5.68	5.75	11.43
합 계	80,490	80,273	160,763	50.07	49.93	100.00

- 동대문구의 인구 규모는 서울시 25개 區 중 순위 16위로서 광진구(인구: 388,478)와 비슷한 규모임
- 동대문구의 세대수는 143,014세대로서 서울지역 13위이며 세대수는 마포구(142,790)과 비슷한 규모임
- 동대문구의 인구밀도는 27.029로서 서울지역 2위로서 인구밀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며 인구밀도는 양천구(27,951)와 비슷한 규모임
- 동대문구의 면적은 14.22km²이며 서울시의 2.35%임

- 동대문구의 주택은 87.142호로서 주택보급률 59.5%임
- 동대문구의 기간시설은 도로율 21%, 공원 점유율 6%, 도시가스 보급률 90%, 상하수도 보급률 100%임

(2) 경제구조

- 동대문구의 교육기관은 48개교로서 초등학교 20개, 중학교 16개, 고등학교 9개, 대학교는 서울시립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경희대학교 3개교임
- 동대문구의 예산편성 규모는 총 201,694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168,500백만원, 특별회계 33,194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재정자립도는 36.4%임
- 동대문구의 주요 시설은 복지관 5개소, 종합대학 3개교, 종합병원 5개소, 시장 및 대형할인마트 18개소가 있음

나. 행정조직별 선거구

동대문 갑	신설동, 용두1,2동, 제기1,2동, 청량리1,2동, 휘경1,2동, 회기동, 이문1,2,3동
동대문 을	전농1,2,3,4동, 답십리1,2,3,4,5동, 장안1,2,3,4동

다. 지역의 정치성향

구 분		동대문 갑	동대문 을
국회의원	16대	민주당 김희선	민주당 허인회
	15대	신한국당 노승우	신한국당 김영구
기초단체장 (2002. 6)		한나라당 홍사립	
광역의원	3대	한나라당 4人	
	2대	국민회의 1人, 자민련 1人	국민회의 2人

2. 입후보 과정 및 유세 일정

가. 열린우리당 동대문 갑 지역구 김희선 후보의 경선 과정

- 김희선 후보는 동대문 갑 지역구의 16대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프리미엄과 16대 회기 중 명성과 청렴한 이미지가 높이 평가됨
- 이에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해당 지역구의 유력후보라는 이유로 단수공천으로 지정함
- 이는 동대문 갑 지역구의 열린우리당 경선에 후보로 출마할 경쟁자가 없었다는 것도 단수공천에 큰 작용을 했던 것으로 판단됨

나. 동대문 갑 지역구 후보 등록 과정

- 2004.03.20 : 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등록
- 2004.03.31 : 17대 총선 후보 등록
- 2004.04.02 : 본격 선거운동 시작

다. 김희선 후보의 유세일정

날짜	일 정
2004.04.10	04:30 새벽기도
	06:20 제기역 출근인사
	10:30 제기한신아파트, 새마을동네 유세 및 순방
	14:00 제기1동 진성순대 주변 순방
	15:00 제기1동 새마을금고 맞은편 순방
	16:00 삼성 홈플러스 인사방문
	17:00 서울시 중구 열린우리당 정호준 후보 유세지원차 명동에서 정동영 의장과 지원유세 - 참관
	19:30 신설동 신동아아파트 정문 순방
	20:30 신선동 동사무소 주변 순방
	21:30 제기2동 선농단 주변 순방

날짜	일 정
2004.04.11	05:00 동도교회 새벽기도 06:30 홍릉근린공원 아침운동지 방문 07:00 용두1동 용일축구회 방문 09:30 휘경교회 부활절 예배 11:00 동원교회 부활절 예배 13:00 이문2동사무소 주변 순방 14:00 이문2동 예수재림교회 주변 순방 15:00 삼성 홈플러스 인사 19:00 이문2동 삼성래미안아파트 유세 및 순방 20:00 이문3동 대우아파트, 현대아파트 순방
2004.04.12	05:00 성은교회 새벽기도 06:00 중랑천 둔치 체육공원 방문 10:00 동부시립병원 뒤 순방 11:00 신설동 파출소 옆 순방 11:30 동대문신문사 뒤 순방 13:00 제기파출소~철송약업사 사거리~성일중학교 순방 15:30 동부아파트 앞 순방 19:00 신이문역(북부) 퇴근인사 20:00 이문3동 삼익아파트 순방 21:00 이문1동 중앙하이츠빌 순방
2004.04.13	00:00 열린우리당 긴급기자회견 및 단식농성 06:30 신이문역(북부) 출근인사 08:00 열린우리당의원 대국민호소 긴급기자회견 10:00 신설동 신동아아파트 정문유세 10:30 용두2동 용두시장 유세 11:00 제기 벽산아파트 후문 유세 11:30 제기 한신아파트 정문 유세 13:30 이문1동 이문동교회 뒤편 순방 15:00 회기동 신현대아파트 정문 유세 17:00 휘경 주공아파트, 서울가든아파트 유세 19:00 이문3동 대우아파트, 쌍용아파트 유세 및 순방

날짜	일 정
2004.04.14	04:30 새벽예배
	07:00 청량1동 미주상가 앞 출근인사
	10:00 신설동 신동아아파트 정문 유세
	11:00 용두1동 백합탕 앞 유세
	11:30 제기 한신아파트 정문 유세
	13:30 청량1동 한신아파트 정문 유세
	14:00 제기1동 새마을금고 앞 유세
	14:30 경희대 삼거리 앞 유세
	15:00 이문2동 유마트 앞 유세
	15:30 이문3동 대림아파트 내 유세
	16:00 이문1동 이경시장 앞 축협사거리 합동유세 - 참관
	17:30 휘경2동 휘경 주공아파트 후문 유세
	18:00 휘경2동 동성하이츠빌라 앞 유세
	18:30 휘경2동 위생병원 앞 유세
	19:00 회기역 기업은행 앞 퇴근인사
	20:00 청량리경찰서 사거리 유세 - 노사모 회원들의 지원
	20:30 청량리로타리 기업은행 앞 합동유세

3. 선거 결과

가. 김희선 후보의 승리

후보자별 득표결과			
1. 장광근	한나라당	40,210표	41.0%
2. 지용호	새천년민주당	6,136표	6.3%
3. 김희선	열린우리당	43,228표	44.1%
4. 김영환	자민련	804표	0.8%
5. 김영준	민주노동당	4,310표	4.4%
6. 이경희	무소속	934표	1.0%
7. 한승민	무소속	2,444표	2.5%

[8] 전재희 (한나라당 경기 광명 을 지역구)

▶ 참여관찰자 : 배 진 숙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석사]

1. 경기 광명 을 지역구의 사회·정치·경제적 환경

가. 사회·경제적 환경

(1) 인구 구성 및 주민의 민도

구분	인구	남	여	인구 밀도	면적	세대	세대당 인구	65세 이상 인구
	341,671 (명)	171,181 (명)	170,436 (명)	8,758 (명/km ²)	38.51 (km ²)	116,021	3.0 (명)	19,141 (명)

* note: 2002년 기준, 출처: <http://gm.go.kr/statistics-gwangmyong/>

(2) 관련 신문 기사

광명은 전형적인 베드타운으로 전체 유권자 11만2,000여 명 중 40대 이하가 70%를 차지할 만큼 젊은 층이 두텁고 유동 인구가 많은 게 특징이다. (한국일보, 2004/04/06)

유권자 11만 명인 광명을 지역구는 서울로 출근하는 30~40대 아파트 주민들 표심이 선거를 좌우한다. 하지만 충청과 호남 출신이 50%를 차지해 지역 표도 무시할 수 없다. (시사저널, 2004/04/01 753호)

(3) 광명시 관련 정보

(출처, <http://100.naver.com/100.php?where=100&id=18683>)

(가) 산업

광명시의 산업별 취업구조변화를 보면 1985년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전체

산업별 취업자 수의 50.7%를 차지하였으나, 1999년에는 85%가 넘는다. 시로 승격된 직후인 1982년의 경우 총경지 면적이 1,371ha로 논이 888ha, 밭이 483ha였다. 그 후 경지면적과 논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에 밭은 오히려 증가되어 1999년에는 총경지 면적 864ha 가운데 논이 322ha, 밭이 542ha가 되었다. 2001년 현재 총경지 면적 805ha 중 논은 293ha, 밭은 512ha이다.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 수는 1960년에는 1,445가구로 전체가구의 64.6%를 점유했고, 농업인구가 8,942명으로 전체인구의 70%를 차지하여 농촌지역의 특성을 보였다. 그 후 시로 승격된 이듬해인 1982년 광명시의 농가 수는 836가구로 격감하였으며, 2001년에는 농가 수 633가구, 농업인구 2,616명으로 감소하였다. 공업은 업종별로 보면 조립금속과 기계장비 제조업이 전체 제조업체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섬유공업, 화학석유공업의 순으로 나타난다.

(나) 교통관광

시의 서쪽을 종단하는 351번 지방도로가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와 반월공업단지를 잇는 산업도로로 이용된다. 서울의 남부순환도로가 시의 북단을 지나며, 서울과는 시내버스와 좌석버스 등으로 연결된다. 최근에는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되어 서울은 물론 수도권에 있는 다른 시와 교통이 편해졌다. 철산동·하안동 아파트단지는 안양천의 철산교를 넘어 구로공단과 연결되며, 광명동 주택단지는 목감천의 개봉교를 넘어 개봉동과 연결된다. 시흥대교와 광명교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승용차들이 주로 이용하며, 병목현상이 심한 광명교와 오리로는 출·퇴근 시간에 교통적체 현상이 매우 심하다. 2001년 현재 도로 총연장은 159.5km로 포장률은 100%이다.

(다) 사회문화

광명시는 도시규모가 커지고 인구가 대규모로 증가되면서 학교수·학급수·학생수·교직원수 등 교육관련지표도 크게 증가하였다. 1981년 광명시에는 20개교의 학교에 2만 3488명의 학생들이 있었다. 학생수는 매년 늘어나 1983년 3만 960명으로 증가하였고 1999년에는 6만 2059명으로 늘어났다가, 2001년

현재 5만 9252명을 기록하였다. 교육기관으로는 2001년 현재 유치원 45개, 초등학교 21개교,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9개교가 있다. 광명시에는 시민회관·시민체육공원·시민운동장 등의 문화시설을 갖추고 있다. 시 중앙을 남북으로 걸친 구름산과 도덕산은 휴식공간과 역사교육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나. 행정조직

광명시 갑	광명 1,2,3,4,5,6,7동, 철산 1,2,4동
광명시 을	철산3동, 하안1,2,3,4동, 소하1,2동, 학온동

다. 정치 성향

선거	투표율	후보자	정당	득표율
95년 지방 선거	60.5%	전재희	신한국당	43.6%
		김태수	민주당	38.0%
96년 총선	64.3%	손학규	신한국당	41.9%
		김은호	국민회의	28.2%
97년 대선	83.8%	이회창	한나라당	36.4%
		김대중	국민회의	44.1%
98년 지방 선거	48.8%	손학규	한나라당	49.0%
		임창렬	국민회의	49.9%

* 관련 신문 기사

광명은 1997년 대통령 선거 때 김대중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 지역이다.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여러 당에서 당선자가 났다. 13대 때는 공화당 김병용 의원, 14대 때는 국민당 윤항렬 의원, 15대 때는 국민회의 남궁진 의원(광명 갑)과 한나라당 손학규 의원(광명 을)이 당선되었다. 지난 지방 선거 때는 한나라당이 도의원을 싹쓸이한 반면 시장은 민주당이 차지했다. 광명 주민들은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시사저널, 2002/07/25 665호)

과거 광명갑 선거구였던 구시가지 쪽은 민주당 성향이, 그리고 최근 신홍아파트촌이 형성된 광명을 선거구 신시가지 쪽은 한나라당 성향이 다소 강한 편이다. 이런 이분법적인 지역 성향으로 6·13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인 광명시장에는 민주당 백재현 전시장의 당선됐고, 광역의원에는 한나라당 출신 3명이 제1~3선거구를 모두 차지하는 힘의 균형이 이뤄졌다. 광명시는 아직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상당수 시민들이 지지 후보를 결정하고 있을 정도로 정치 수준이 높다. (주간 한국, 2002/07/19)

2. 선거방식과 입후보 과정

한나라당의 경우 지역구 후보가 경선을 통해서 결정되지만, 이번 제 17대 총선에서 광명을 지역구의 경우는 전재희 후보가 단독 후보였던 관계로 공식 경선 없이 총선에 입후보하게 되었다.

3. 제17대 총선 광명 을 최종 집계

광명 을	한나라당	전재희	36,029명	47.2%
"	새천년민주당	박정희	3,793명	5.0%
"	열린우리당	양기대	32,713명	42.8%
"	민주노동당	김연환	3,835명	5.0%

2004 연구보고서 210-11

제17대 총선에서의 여성후보
선거과정과 향후 과제

2004년 12월 27일 인쇄
2004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 서 명 선

발행처 : 한 국 여 성 개 발 원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1-363
전화 / 3156-7000 (代)

인쇄처 : 도서출판 한 학 문 화
전화 / 313-7593 (代)

<정가 7,500원>

ISBN 89-8491-121-6 93330